

'97 新進研究者  
北韓與統一關聯 論文集

# 統一教育·弘報 (V)



統 一 院

본 논문집은 '97년도 북한 및 신진 연구자(학자) 연구지원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5권의 책으로 편집·발간한 것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통일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收錄論文 目次〉

1. 統一 對備 學校 統一教育의 方法 模型 開發 ..... 1  
秋 秉 完(서울大)
2. 價値教育技法을 活用한 統一教育 教授프로그램 開發 ..... 55  
金 岱 君(慶尙大)
3. 인터넷과 PC通信을 통한 統一政策의 積極的 弘報方案 ..... 113  
李 眞 根(慶尙專門大)
4. 統一後 北韓 住民 再教育을 爲한 인터넷 상의 假想大學 構築 方案 ..... 169  
權 奇 泰(江陵大)
5. 南北韓 義務教育法制 統一案 마련을 위한 基礎研究 ..... 223  
金 容 逸(韓國海洋大)
6. 脫北住民의 社會適應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研究 ..... 289  
金 鎭 潤(韓國政治發展研究院)  
尹 汝 常(韓國政治發展研究院)

## 【요약문】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지상 최대의 과제이며, 통일교육은 그러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한국인은 거의 없을 정도로 적어도 우리는 통일 및 통일교육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하나의 합의를 이루며 살아 왔다. 하지만, 그러한 통일 및 통일교육의 방법을 둘러싸고 남북한간에 그리고 대내적으로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통일을 지체시키는 중대한 잘못을 범해 왔다. 특히 통일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남북한의 현격한 시각 차이는 단순한 사상적 대립을 넘어 서서 동족간의 감정적 대립을 초래하는 남북한 이질화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으며, 통일교육에 대한 대내적인 시각 차이는 명확한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에 대한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오늘날 우리가 통일교육을 중시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통일이라는 현실적이고도 당위적인 민족적 과제 해결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시에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온갖 고통과 갈등, 그리고 혼란의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이미 독일의 사례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 제도상의 통일에 병행하는 정신문화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독일인들 스스로가 ‘마음의 통일’을 이룩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더 소요될 것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문화의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일교육 특히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입시 위주의 주지주의적 교육 풍토 속에서 명확한 자리 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지적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가장 매력 없는 교육 영역의 하나로 전락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 통일교육이 급변하고 있는 통일 환경의 동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채, 늘 시대 변화를 뒤쫓아가는 일변도의 통일교육의 지체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통일교육이 명확한 교육학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한 정책상의 고려 혹은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에 의해 실시됨으로써 일관된 틀이나 이론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통일교육이 실시되어 왔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1. 서론

## 1.1 연구 목적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지상 최대의 과제이며, 통일교육은 그러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한국인은 거의 없을 정도로 적어도 우리는 통일 및 통일교육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며 살아 왔다. 하지만, 그러한 통일 및 통일교육의 방법을 둘러싸고 남북한간에 그리고 대내적으로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통일을 지체시키는 중대한 잘못을 범해 왔다. 특히 통일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남북한의 현격한 시각 차이는 단순한 사상적 대립을 넘어 서서 동족간의 감정적 대립을 초래하는 남북한 이질화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으며, 통일교육에 대한 대내적인 시각 차이는 명확한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에 대한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오늘날 우리가 통일교육을 중시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통일이라는 현실적이고도 당위적인 민족적 과제 해결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시에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온갖 고통과 갈등, 그리고 혼란의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이미 독일의 사례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 제도상의 통일에 병행하는 정신문화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독일인들 스스로가 '마음의 통일'을 이룩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더 소요될 것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문화의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일교육 특히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입시 위주의 주지주의적 교육 풍토 속에서 명확한 자리 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지적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가장 매력 없는 교육 영역의 하나로 전락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 통일교육이 급변하고 있는 통일 환경의 동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채, 늘 시대 변화를 뒤쫓아가는 일변도의 통일교육의 지체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통일교육이 명확한 교육학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한 정책상의 고려 혹은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에 의해 실시됨으로써 일관된 틀이나 이론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통일교육이 실시되어 왔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존의 학교 통일교육이 학생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의 각종 여론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구조 속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통일 문제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박성화, 1992; 추병완, 1992c; 한만길, 1997). 또한, 분단 이후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수혜자였던 일반인들도 통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무능력감을 드러내고 있고, 통일 후의 사회가 겪게 될 다양한 형태의 갈등들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좌절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도태·이경화, 1997).

그렇다면,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학교 통일교육은 어떤 형태로 실행되어야 하는가?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 통일교육의 올바른 전개 방향을 설정하고, 그러한 방향에 부응하는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통일교육의 이론적 체계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통일 대비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획 연구이며,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방법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 및 연구의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통일교육의 올바른 전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각종 난행본 및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학교 통일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기 위하여 초·중·고 도덕 교과서에 제시된 통일교육 내용들을 분석하였으며, 학교 통일교육의 대상인 청소년들의 통일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연구 기관에서 실시한 연구물과 학위 논문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학교 통일교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담당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설명형, 탐구형, 활동형, 시범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구체

적인 지도상의 유의점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도 방법은 각각의 유형이 지닌 주요 목적, 교사·학생의 역할, 학습 자료의 사용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기존의 각종 통일 교육 방법들을 네 가지 유형 속에 모두 범주화함과 동시에,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어야 할 효과적인 지도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연구는 어디까지나 통일 대비를 위한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법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 추구 연구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성과와 관련지어 이 연구에서 제기된 방법들의 즉각적인 효과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이 연구의 성격과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 2.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조사

통일 대비를 위한 학교 통일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이 당혹스러운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얻기 위한 기초 조사로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통일교육 관련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통일관 실태, 교육과정상의 통일교육 변천 과정, 현행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이미 통일을 이룬 바 있는 독일과 예멘의 통일교육 정책을 분석하였다.

### 2.1 청소년들의 통일관 실태

통일 대비를 위한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통일교육에서는 청소년들의 의식구조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여기서는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학생들의 통일관을 추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통일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지 않다.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통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49.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상태 유지' 13.3%, '상관없음' 8.5%,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만길, 1997). 학년이 올라갈수록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체계적인 학교 통일교육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초·중·고교의 학생들은 통일 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북한 동포들에 대하여 동족으로서의 따뜻한 친근감을 지니고 있지 않다. 북한의 청소년들이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은 불과 5.8%인 반면에 대체로 혹은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무려 65.8%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좋아하는 나라의 대상에서는 0.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싫어하는 나라의 대상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방송, 1991). 그런가 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북한 동포 및 북한 사회를 '민족의 일부'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북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민족이라는 생각(2.7%)보다는 주로 공산당의 통제와 감시 속에서 자유가 없는 억압적이고 패쇄적인 생활 혹은 험벗고 굶주리고 비인간적인 생활(16.6%)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희, 1992). 특히, 1992년과 1996년에 전국의 고등학생 1천 2백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주민(청소년)들에 대해 같은 민족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13.3% 줄어든 반면에, 다른 나라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응답이 2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1997년 4월 8일자).

셋째,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통일 의지는 매우 높으나 다소 감상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통일 의지에 있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주적 통일, 반공보다는 민주나 자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잘 살게 된다면 공산주의어도 괜찮다는 학생이 21.7%나 되고, 무력이나 폭력에 의해서라도 통일을 위해서라면 괜찮다고 반응한 학생도 16.2%나 되고 있다 (차우규, 1990). 특히,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은 맹목적으로 통일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알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틀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학생이 68.9%,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학생이 무려 9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통일의 당위성 근거를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적 당위성 논리에 두고 있는 학생들은 매우 소수인데 비하여(33.5%), 대부분의 학생들이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불행과 고통의 해소(34.8%)’ 또는 ‘민족 번영의 기쁨(30.3%)’ 등 현실적인 욕구에 보다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희, 1992).

넷째,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은 현재의 통일교육 방식이 매우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북한에 관한 교육 내용이 실제 북한의 현실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47.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은 현재의 통일교육 내용을 상당히 불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문화방송, 1991). 청소년들은 특히 현재 학교에서 다루는 통일교육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더 많은 내용들이 다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만길, 1997). 청소년들은 통일 문제 가운데 ‘통일 이후의 상황’과 ‘북한 사회의 실상’에 대하여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들의 통일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추론해 볼 때, 통일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고양시켜 주는 교육, 같은 민족이라는 일체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길러 주는 교육,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확고한 통일 의지를 길러 주는 교육, 풍부하고도 다양한 통일 관련 내용들을 제공해 주는 통일교육이 실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2.2 교육과정상의 통일교육 변천 과정

해방 및 민족의 분단 이후 우리 나라가 추구해 온 통일교육의 변천 과정을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의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다(교육부, 1993). 즉, 교육 내용의 강조점 추세로 보아 반공교육기, 통일·안보교육기, 통일교육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통일교육의 핵심 교과라 할 수 있는 ‘도덕’ 및 ‘윤리’ 교과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송병순, 1994; 윤건영, 1995; 최은수, 1997; 통일원, 1992).

## 2.2.1 반공교육기

반공교육기는 미군정기로부터 제4차 교육과정기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우리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반공교육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미군정기에는 군정청 학무국이 ‘일반 명령 제4호’를 발표하여 교육 방침을 시달렸는데, 이것을 근거로 일제 시대의 ‘修身科’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한 公民科를 설치하였다. 처음 개설된 공민과에서는 주로 국가 생활 영역의 애국심, 민족애, 국가 발전에의 협력 등의 요소들이 특히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반공에 관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으며, 다만 국제 우호에 관한 내용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다.

교수요목기에는 정부가 수립된 이후 미수복 지구인 북한을 통일시킨다는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추진하면서 반공교육을 실시하였지만, 6.25 전쟁을 겪고 난 뒤에는 체험적인 반공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북한 공산 집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반공교육과 전쟁 이후 붕괴된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이 동시에 강조되었다. 이것이 분단 이후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과 내용이 형성되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반공교육이 더욱 강화된 것은 한국 전쟁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전쟁으로 인해 수반된 도덕성 타락과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의 도덕교육 시간을 특설하는 등 도덕교육을 강화하게 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반공교육이 제도화되면서, 반공교육과 도덕교육이 일원화되었고, ‘道義教育 要項’에 반공·방일의 항목이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1956년에 고등학교, 1957년에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도덕 교과서를 국정으로 개발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기에는 국민학교 및 중학교에서 반공도덕 생활이 교육과정으로 신설되어, 교육과정의 영역이 교과 활동, 반공도덕 생활, 특별 활동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고등학교에서는 도덕의 이수 단위가 4단위로 조정되고, ‘국민윤리’라는 새 이름으로 개칭되면서 사회과의 한 과목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1969년에는 문교부령 제 251호에 의거하여 ‘반공 및 국민윤리’로 불리게 되고, 이수 단위가 4단위에서 6단위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에 추가된 반공교육의 일반 목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게 하고 공산주의 침략을 격렬함으로써 통일을 이룩하고 나아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는 것이었다.

제3차 교육과정기에는 반공도덕 생활 영역으로 지도하던 것을 교과 활동에 포함시켜 ‘道德科’라는 독립된 교과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국민윤리’가 사회과로부터 독립하여 필수 교과가 되었으며, 교과서는 ‘국민윤리’와 ‘자유 수호의 길’로 나뉘어져 있다가 1979년에 다시 ‘국민윤리’로 통합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기에는 국민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공산주의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역량을 길러 민주적 평화통일의 신념을 굳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렇듯, 반공교육기에는 통일이 매우 소극적 입장에서 강조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서서히 우위를 점하여 가게 됨에 따라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미약하나마 점차 강조되기 시작함을 엿볼 수 있다.

## 2.2.2 통일안보교육기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반공교육을 통일안보교육으로 개정하였는데, 이처럼 그 명칭을 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통일안보교육이란 말은 반공교육이 가진 이데올로기적 편향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② 통일안보교육이란 말은 반공교육이 갖는 의미와는 달리 북한 동포에 대한 친밀감 및 ‘언젠가는 합쳐야 할 반쪽’이라는 인식의 지평을 열어 주며, ③ 반공교육이란 남쪽에서 할 일만을 연상시킴에 반하여 통일안보교육은 남과 북이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도록 하며, ④ 통일안보교육은 우리 나라 체제와 생존 및 통일을 위협하는 것 일체에 대한 경계를 뜻하므로 오히려 반공보다 더 포괄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 (송병순, 1994).

이에 따라 반공생활 영역의 내용에 공산 체제 및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민주시민 정신 고취 등의 내용이 보강되었다. 특히, 고등학교 ‘國民倫理’ 내용에서는 북한은 우리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반쪽으로서 언젠가는 합쳐서 같이 살아야 할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현재 우리에게 위협적인 실체인 동시에 살길을 함께 모색해야 할 형제라는 이중성을 띤 대상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처럼 통일안보교육은 기존 반공교육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차원의 통일교육을 제안하였으나, 그러한 취지가 완전히 달성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남북 관계의 이중적인 상황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민주화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한 국내적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 2.2.3 통일교육기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통일 환경은 숨가쁘게 변했으며, 이에 따라 통일교육도 그 모습을 점차 달리 하게 되었다.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개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 왔던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적지않은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제6차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중점 교육 분야로 도덕교육, 환경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진로교육, 성교육 등과 더불어 통일교육을 중점 강조하였으며, 그 명칭도 ‘통일교육’으로 개칭하였다. 6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은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분단 극복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통일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통일 이후의 민족공동체의 삶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시기의 통일교육은 단순히 남북 통일 정책이나 북한의 실상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도 병행하는 등 그 과제나 범위 면에서 더욱 심화·확대되었다. 또한, 기존의 안보교육을 통일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설정함으로써, 통일과 안보에 대한 균형 감각을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1993년 3월 ‘통일교육 지도자료’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함으로써, 새로운 통일교육의 요체를 교사들에게 인식시키고자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통일원은 통일교육이란 “우리 민족의 한결 같은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국가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모든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면서 새로운 통일교육의 기본 전제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통일원, 1992, p. 4). 특히 통일원의 통일교육 지침서에서는 “통일교육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통일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내용도 함께 다루어야만 하고, 동시에 우리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 그리고 통일 성취에 대한 현실적 장애와 위협 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가르쳐서 모든 국민이 균형

있고 합리적인 통일관을 형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행동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통일원, 1992, p. 4). 통일원은 27개 항목에 걸친 통일교육의 기본 전제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행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할 기본 관점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다.

지금까지 논의된 통일교육의 변천 과정을 도덕 교과와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그 목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 2.3 현행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교육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그나마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국가안보교육, 국민정신교육, 민주시민교육, 반공정신교육, 통일안보교육 등의 다양한 명칭 아래 통일교육을 실시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에 그것은 오히려 분단 고착화를 조장하는 교육 혹은 지나치게 수세적인 안보 논리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교육과정의 취지가 일선 교육 현장에 제대로 스며들지 못했기 때문이며, 담당 교사들 또한 동태적인 환경 변화에 신속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구태의연한 방식을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지금도 통일교육이 반공교육의 명칭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경한 것으로 여기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남북한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단 이후 공히 냉전 논리와 대결 논리에 입각한 상호 불신과 부정, 공격 일변도의 교육을 실시해 왔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유, 민주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북한은 사회주의 우월성을 강조하여 상호 대립적인 이데올로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종전의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냉철한 비판적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김도태·이경화, 1997; 최은수, 1997; 추병완, 1992a; 1992b; 1992c; 한만길, 1997).

## <표 1>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통일교육 목표의 변화

### <초등학교>

교수요목기: 반공·별승의 신념을 배양하고 전국(全局)과 국제 집단 안전보장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한다.

1차 교육과정: 투철한 반공정신 고취와 세계 시민으로서 자유 우방과 교류한다.

2차 교육과정: 공산주의의 그릇됨과 민주주의의 우월함을 깨닫고, 애국애족하는 마음과 태도를 기른다.

3차 교육과정: 민주주의의 우월함과 공산주의의 그릇됨을 알고, 국토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기른다.

4차 교육과정: 북한 공산당의 그릇됨과 침략성을 경계하고,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이해하여 평화통일의 신념을 가지게 한다.

5차 교육과정: 국토분단의 현실과 북한 공산 집단의 실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및 우월성을 알아,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신념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

6차 교육과정: 민족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올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 <중학교>

교수요목기: 반공 사상 함양, 정신 부장.

1차 교육과정: 애국애족 사상 고취, 반공·방일 정신 배양.

2차 교육과정: 국가 민족에 대한 자량과 사랑을 간직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게 하여 공산 침략주의를 격멸함으로써, 민주국가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굳게 한다.

3차 교육과정: 공산주의의 모순과 허구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주의의 우월함을 깨달아 공산주의의 침략 분쇄의 결의를 굳게 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려는 국민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게 한다.

4차 교육과정: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북한 공산 집단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게 한다.

5차 교육과정: 국토분단의 비극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깨달아 조국의 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게 하며 북한 공산 집단의 실상과 공산주의 이념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게 한다.

6차 교육과정: 국가, 민족, 분화를 사랑하고, 국토와 민족 분단의 현실 및 남북한의 통일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과 통일국가의 실현 의지를 가지게 한다.

### <고등학교>

교수요목기: 북한 공산 집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반공교육의 필요성 대두.

1차 교육과정: 애국·애족 사상 고취, 반공·방일 정신 배양.

2차 교육과정: 공산주의의 모순과 허구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주의의 우월함을 깨달아 공산주의의 침략 분쇄의 결의를 굳게 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려는 국민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게 한다.

3차 교육과정: 공산주의의 허구성, 기만성, 침략성 등을 이론과 실제 면에서 분석·비판하게 함으로써 공산주의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능력을 길러 평화적 승공 민주통일의 신념을 굳게 한다.

4차 교육과정: 공산주의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역량을 길러 민주적 평화통일의 신념을 굳게 한다.

5차 교육과정: 조국통일의 당위성과 제반 문제를 이해하고 북한 공산 체제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민주 평화 통일의 실현을 위한 신념을 가지게 한다.

6차 교육과정: 통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과 통일 이후의 비람직한 한국인상을 이해하고, 통일 과업의 달성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려는 굳은 의지를 지니게 한다.

첫째,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통일교육의 명확한 지침이나 계획,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지도 방법, 평가 그리고 통일교육의 지원·관리체제 등이 일관된 패러다임에 의해 실시되지 못하고, 그때 그때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가는 임기응변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교육부와 통일원이 선정한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과목표가 있어 왔지만, 그것들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는 실패함으로써 총론은 있되, 각론이 부실한 양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또, 기존의 통일교육에서는 한민족공동체의 이념과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이 밀도 있게 유기적으로 학습되는 기회가 거의 배제된 채 통일의 당위성만 강조하거나 민족동질성 회복의 중요성만 맹목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에 한정되었다. 나아가 통일교육은 범교과적, 교과 통합적, 가치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일교육은 도덕 교과나 사회 교과와 같은 특정 교과목에만 편중되어 실시됨으로써 기대하는 만족한 성과를 가져오기에는 애초부터 역부족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교육 내용을 다루는 특정 교과목들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대부분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에 집중되어 있어 학년이 거의 끝나 갈 무렵에나 다루어지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학습 평가가 종료되는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어 시험에 다루어지는 것에만 민감해져 있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더구나 국영수 위주의 주지 교과만이 파행적으로 중시되는 현재의 교육 풍토에서 도덕과나 사회과가 학생들에게 단순한 암기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도 통일교육의 성과가 미진한 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분단국의 현실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교과목이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행적인 입시 제도가 노정된 주지 교과 위주의 학교 교육풍토 속에서 통일교육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은 논리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종래의 통일교육은 지나치게 감상주의적이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오라’는 노래를 부르게 하고, ‘공산당’이라는 뜻도 모르는 어린 학생들에게 ‘북한 공산당을 몰아내자’는 내용을 각종의 글짓기, 포스터, 응변대회, 이야기 대회 등을 통해 되풀이하게

하였다. 또, 학교의 빈 교실 하나를 개조하여 북한의 각종 만행과 도발상을 전시해 놓고 전교생이 관람하게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통일교육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동기 유발을 하지 못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만을 심어 줌으로써 반통일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설마 그럴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수업 내용에 대해 담당 교사를 불신하는 풍조까지 생겨날 소지가 다분히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통일에 대한 합리적 사고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통일 문제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민주사회적 기능들이 도외시된 채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감정에 호소하려는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오히려 참다운 민족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장애가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통일교육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존의 통일교육에서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는 식의 지극히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현실성을 결여하게 되었다. 또, 이념과 체제, 사상과 제도와 같은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어 왔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단순히 암기하도록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학습 내용은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유리되어 있는 단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학생들의 체험의 대상이나 실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지극히 추상적인 것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통일이라는 문제를 막연하고도 거창한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교육이 주류를 이루으로써 우리의 통일교육은 현실성을 결여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다.

셋째, 종래의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통일교육의 주된 내용은 우리의 통일 정책, 안보 문제, 북한의 실상 등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교과서에는 새 정부의 통일 정책과 업적이 장황하게 기술되고 학생들은 이를 무조건 암기해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담당 교사들은 본의 아니게 정부의 홍보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는 많은 교사들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가져다주었다. 즉 교과서적으로 가르치기에는 너무나 양심에 저촉되고, 그렇다고 진실을 얘기하자니 실정법에 저촉됨으로써 우리의 통일교육은 가르치는 담당 교사들마저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급기야 교사들의



수업 접근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이를테면,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교사들과 급진적인 성향을 지닌 교사들간의 수업 방식에서의 차이), 이에 따라 배우는 학생들의 가치관만 혼란시키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또한 우리의 통일 정책은 무조건 옳고 북한의 정책이나 실상은 무조건 나쁘고 잘못되었다는 방식의 우월성 논리는 민족 동질성의 회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질화를 부채질하는 통일교육으로 전락하게 하였다.

모름지기 통일교육은 반세기에 걸쳐 누적된 남북한이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통일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참다운 민족화합과 민족공동체의식 형성에 기여하게 함은 물론 통일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도록 하는 진취적이고도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일교육은 편협한 냉전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폐쇄적이고도 소극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넷째, 통일교육의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한 채 지나치게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교육의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함은 특히 '북한의 실상'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의 현실 가운데 김일성 및 김정일 개인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을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의 실상을 제시할 때는 마땅히 북한의 지도층과 주민들을 구별해야 하고, 통제된 국민들 간에도 상당한 사회적 이탈이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해야지, 마치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로봇과 같은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고 있다는 식으로 기술해서는 안된다. 이렇듯 북한을 지나치게 천편일률적인 사회로 본다든지 또는 북한 지도층이 요구하는 주장과 실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는 점, 북한의 사회제도나 생활 방식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것은 통일교육의 객관성을 저해함은 물론 오히려 민족 이질감을 부추기는 것이므로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지나치게 규범적인 접근에 입각해 왔다 (한만길, 1996). 규범적 접근의 특징은 북한 사회에 대한 일정한 시각과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의 방향과 방법을 미리 규정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규범적 접근은 통일의 가치와 방향, 그리고 통일 의지를 학생들에게 확고하게 심어 주는 것이 통일교육의 주된 목표와 내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나아가, 규범적 접근은 북한은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형제"라든가

혹은 “북한 동포는 못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등의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 접근 위주의 통일교육은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시각과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해와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을 다분히 안고 있다. 즉,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을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통일 문제를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통일 교육에 있어서 규범적 접근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통일교육에 있어서 규범적인 접근은 반드시 견지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통일은 그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야 하는 민족사적 과제이고 그러한 노력은 이미 일정한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여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교육은 규범적 접근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 반대의 측이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한 양상을 보여 왔다. 다시 말해, 북한 사회의 실상과 변화하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한반도 주변의 역동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려면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왔던 것이다.

끝으로, 담당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소신과 자질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교육함에 있어서는 난색을 표하는 것이 거의 관례화 되어 있다. 통일교육과 관련된 자율적인 연수 활동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자신의 전공 교과가 없는 초등학교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뜻있는 교사들에 의하여 소신 있고 객관적인 통일교육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의 경우 통일교육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명료한 지도 방법을 지니지 못한 채 구태의연한 사실 전달이나 개념 설명 방식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통일교육 담당 교사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각종 자료의 보급이나 연수 활동의 부족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는 바, 통일교육의 지원 및 관리 체제가 너무나도 허술하여 모든 것을 교사에게만 책임 지우는 풍토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덧붙여 통일 문제에 대하여 담당 교사들이 자신의 소신 있는 명확한 판단이나 가치를 유보한 채 단순히 교과서 내용을 요약해 주고 그 내용을 이해시켜 주는 차

원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상상력,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 방식과 논의 절차, 남북한의 현실에 대한 균형 감각, 통일 방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적 안목의 형성, 통일 조국의 미래상에 대한 확신과 긍지의 형성에는 매우 소홀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 2.4. 서독 및 예멘의 통일교육 정책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이미 통일 국가를 형성한 국가들의 통일교육 사례들을 분석하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통일 국가를 형성한 독일과 예멘의 경우를 중심으로 통일교육 정책의 대강을 살펴보고자 한다.

### 2.4.1 서독의 통일교육 정책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은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통일을 촉진시킨 요인은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대내적 요인은 서독 국내 정치의 안정과 주변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서독 정부의 외교 역량이었으며, 대외적 요인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동유럽권의 대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독일의 통일은 1985년 소련에 고르바초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추진된 개혁과 개방 정책에 영향을 받은 동서간의 긴장 완화 및 동독을 포함한 동부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탈공산주의를 포함하는 과감한 정치 개혁과 같은 국제적 여건의 변화에 힘입은 바 크다. 이에 덧붙여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를 독일 통일에 보다 유리하게 능동적으로 접목시킨 서독 정부의 뛰어난 정치적 능력과 민주적인 정치 발전 역량 그리고 서독 정부의 경제력의 축적 등이 통독 과정을 촉진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요인들 못지 않게, 서독 정부에 의해 끊임없이 추진되어 온 통일교육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분단 이후 서독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확고한 통일 의식을 고취시키며 동시에 통일 이후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통일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

한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독일에서의 정치교육은 독일 사회의 탈나치화, 민주화, 동질화 촉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통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독이 독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그 동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따한 교육적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통일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서독에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실시된 것은 1978년 11월 23일 KMK(독일 연방공화국 주 교육부 장관 상설 회의)에서 학교에서의 독일 문제에 관한 교육 지침을 결정하여 발표한 이후이다. KMK의 이 지침은 서독의 각급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통일교육의 교육과정 구성상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송일, 1993; 박상봉, 1997).

이 지침서의 전문에서는, '독일의 단일성에 대한 의식과 평화와 자유 속의 통일에 대한 의지는 개발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독일의 다른 부분, 그들의 주민과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발전에 대하여 아는 일은 필수적인 전제이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동독과 동독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이 통일교육의 핵심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본 입장 아래 제1장에서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적 활동의 기준으로서 서독의 기본법 및 동서독 관계에 대한 기본 조약 등 여러 가지 협정이나 규정 등이 제시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과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학교는 독일 문제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이라는 종합적 맥락에서 독일 국가의 단일성에 대한 의식과 평화와 자유 속에 자결을 바탕으로 하는 독일 민족의 통합에 대한 의식을 불러 일으켜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서독이 지향했었던 통일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독일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민족적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책임 의식과 참여 정신을 고취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3장에서는 수업에서 고려되어야 할 15가지의 유의점들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제4장에서는 실제 수업 장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 및 그와 관련된 교과목들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서독의 각급 학교에서 실시했었던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분단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그것으로 야기된 분단 동독의 실상을 정확히 알게 함으로써, 공동 책임 의식 속에 상호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며, 단일 국민의 일체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통독 이후 동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치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4분야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① 서독 헌법 체제의 기본 질서를 이루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 ② 서독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의 헌법적 지위와 정치적 지위, ③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 ④ 동독 헌법 질서와 상반되는 서독의 연방구조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즉, 동독 지역에 대한 교육 개혁은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동독 지역 주민을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에 적응하게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동독 지역의 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교육의 일환으로 개인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키는 한편, 새로운 전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서독 정부의 동독 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의 내용은 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이라는 문제가 만약 한반도에서도 독일과 같은 흡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여 우리가 실시해야 할 정치교육 내용으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들도 평소에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사회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및 통일 이후의 과정에 대비하는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에 대한 교육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국가의 이념이 민주 국가의 건설에 있는 한, 통일교육에서 민주시민적 자질을 육성하려는 계획적인 노력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2.4.2 예멘의 통일교육 정책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지향적이었던 서독의 교육 제도를 축으로 하여 동독 교육제도

가 신속하게 개편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 의식의 통합에 있어서 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범위가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예멘은 정치적 타결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 부문이 해야 할 일의 범위가 얼마 되지 않았고, 통일 후에도 교육이 국민 통합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매우 협소했다고 볼 수 있다 (박재윤, 1997).

1960년대 말까지 남북 예멘 정부는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연방 형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1970년 북예멘에서 공화파와 왕정파가 연립정부를 수립하고 남예멘에서 좌파 세력이 득세하게 되면서 남북 예멘은 각기 자기들만이 예멘인의 민족적 열망을 대표하고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북예멘 정부의 통일에 대한 기본 입장은 북예멘이 역사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고, 인구와 경제력에서 우월하므로 남예멘은 즉각 정부를 해체하고 북예멘의 한 지역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북예멘이 반봉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견해를 지닌 남예멘 사회주의자들의 통일에 대한 기본 입장은 북예멘에 대한 적화통일이었다 (박재윤, 1997).

1990년 5월 22일 남북 예멘은 통일을 선포하였는 바, 장기간 반복되어 온 남북 예멘의 통일 협상이 결실을 맺게 된 데에는 국제 환경의 변화와 남북 예멘의 석유 개발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 정책에 따라 남예멘에 대한 소련의 개입이 철회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 예멘에 대한 사우디 아라비아의 간섭도 배제되었다. 한편, 남북 예멘은 석유 개발로 인하여 통일을 이루면 양측 모두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 환경의 변화와 아울러 상호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남북 예멘 지도자들의 통일 협상을 통하여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예멘의 통일은 남북 예멘 정부에 동등한 비중을 주고 통합된 대등적 통합이었으며, 구동독이 독일 연방에 새로 가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일종의 기계적인 합병 방식이었다. 이러한 관계로 발미얌아 정치, 경제, 교육 등 여러 부분의 체제가 통일 후에도 병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예멘은 결국 통일후 재분단의 과정을 거쳐 전면적인 내전을 겪고 나서야 통일 정부가 수립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남북 예멘은 본래 단일 민족으로서 아랍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이슬람에 기초한 강한 민족 의식을 지니 왔으며, 바로 이 점이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념적

으로 분열되어 전쟁을 겪으며 군사적 대치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예멘 통일에 있어서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권장희, 1997).

독일과 예멘의 사례는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준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점이다. 그러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었던 독일이나 예멘의 경우는 우리에게 매우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독일의 체계적인 통일교육, 예멘의 종교교육을 통한 민족 의식 형성 등은 통일교육을 통하여 민족공동체적 삶의 원리를 내면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일깨워 주고 있다.

### 3. 새로운 학교 통일교육의 전개 방향

이렇듯 분단 시대의 통일교육은 분단 고착화 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통일교육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단순한 응급치료법으로 오인되거나, 혹은 통일이 한반도에 있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수용되는 그릇된 분위기를 창출함으로써, 정태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띠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통일교육은 동태적인 통일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지님과 동시에 한민족 전체의 공동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주고 삶의 질을 고양시켜 줄 수 있는 통일 이념에 대한 헌신몰입과 곧 도래할 통일국가에서 책임 있는 민주시민적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고 고무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이며 체계성을 갖춘 교육이 되어야 한다. 라일(G. Ryle)이 지적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통일교육에 관한 하나의 논리적 지도(logical map)를 갖추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제안들이 있어 왔다. 일례로, 최은수(1996)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체제 외적인 측면, 체제 내적인 측면, 교육 내용의 측면, 교육 방법 및 지원 체제의 측면에서 제시한 바 있으며, 손풍삼(1996)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 내용의 조직 방향을 전통적 윤리 의식의 측면, 민족주의의 측면, 평화교육의 측면, 민주시민교육의 측면에서 제시한 바 있다. 또, 정건영(1993)은 통일교육의 성격을 정치교육과 평화

교육으로 설정하고, 통일 대비 교육의 과제로서 민주화 교육, 민족화 교육, 인간화 교육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김도태와 이경화(1997, p. 15)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통일교육에 대한 구패러다임과 신패러다임을 다음과 같이 비교한 바 있다.

<표 2>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신구 패러다임 비교)

	구패러다임	신패러다임
교육 목표	정치제도적 통일 지향	사회문화적 동질화 지향
주체	정부 중심	정부, 민간
방법	문화보편적 접근	문화특수적 접근
내용	이념교육	생활교육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이 논문에서는 연구자의 기존 입장을 새로이 정리하여 학교 통일교육의 전개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원칙을 설정하였다 (추병완, 1992a; 1992b; 1992c; 1993).

### 3.1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교육

그간 우리의 통일교육은 일관된 틀이나 패러다임을 상실한 무원칙적인 교육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일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지닌 민족 성원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분단 현실을 타개하려는 민족의 대통합 운동이다. 따라서 통일은 단순한 감상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체제가 맞물려서 추진되는 상호작용적 메카니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통일교육은 바로 이러한 통일 문제의 특성에 부합하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여야만 한다 (추병완, 1993).

#### 3.1.1 균형성의 원칙

학교 통일교육은 균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통일에 “관한(about)” 교육, 통일을 “위한 (for)” 교육, 통일 “내의(in)” 교육이 균형을 이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 문제에 대하여 아는 것,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을 균형 있게 지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통일에 “관한” 교육이란 통일 문제에 관련된 제반 사실이나 가치를 다루는 교육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분단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의 연결 고리인 동질성 회복의 필요성, 북한의 실상, 한반도의 통일 여건과 현실적 장애 요인, 남북한의 통일 정책에 대한 상세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통일을 “위한” 교육이란 남북한 통일을 위하여 학생으로서 그리고 민족의 한 성원으로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결단을 촉구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통일 문제를 자신의 삶의 중요한 문제로 삼아 심사숙고하려는 태도와 경향성, 실천 의지를 함양시켜 주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끝으로, 통일 “내의” 교육이란 통일이라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의미 속에 내재된 복잡 다난한 문제들에 대한 사고 기능과 판단력을 증진시키려는 교육을 말한다. 통일과 관련된 문제들 이룰테면 안보 문제, 통일 국가의 지향 이념, 통일 국가가 당면하게 될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추론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현실적이고 가능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지적 기능을 신장시키려는 교육을 말한다.

그러므로 학교 통일교육의 핵심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판단 능력을 배우고 이것을 일상 생활에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1.2 통합성의 원칙

학교 통일교육은 통합성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 문제를 민족 전체 성원의 삶의 문제라는 총체적 인식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범교과적인 지식과 방법 그리고 지적 기능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통일교육이 통합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특수 교과 차원의 통일교육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통일교육은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교과외 활동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하며, 학교 통일교육과 사회 통일교육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견지하여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전통적인 교과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다학문적이고 종합학문적인 틀을 견지해야만 한

다. 통일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접근법으로서는 크게 보아, 가치에 관한 학생들의 자발적 탐구 과정과 문제해결력을 중시하는 가치탐구적 접근법, 사회화와 반사회화를 중시하는 민주시민교육적 접근법, 가치 지향적이며 조작적인 성격을 중요시하는 정책과학적 접근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법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교육의 절대적인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교육의 다양한 접근법들과 내용 영역들을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그러한 구조화가 가치합리성과 목적합리성을 지닐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만 한다.

### 3.1.3 계속성의 원칙

통일교육은 계속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모든 학생,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계속성의 원칙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범위와 계열성이 뚜렷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교육에서의 통일교육이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상당수의 대학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교과목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더구나 중·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의해 통일교육이 철저히 봉쇄 당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지나치게 감상주의적인 통일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각 교육 대상의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교육내용과 활동이 체계화되어야 하며, 학교급별 사이에 내용의 연계성 및 차별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3.2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는 교육

새로운 통일교육은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은 선동적인 구호나 맹목적인 열정에 의해 주어지는 것 혹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닌 우리가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관은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시각이요 체계화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통일관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바람직한 통일관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추병완, 1993).

첫째, 올바른 통일관은 다음과 같은 지식(knowledge) 요소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① 조국 분단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틀(a frame of understanding)을 갖추고 있다; ②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임을 알고 있다; ③ 조국 통일의 민족사적 당위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④ 북한의 실상에 대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이해의 틀을 갖추고 있다.

둘째, 올바른 통일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skill) 요소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① 남북한 체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상호 비교할 수 있으며, 양체제의 상호 보완과 수렴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② 통일 문제에 대한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통일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다; ③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남북한 및 국제적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④ 통일 국가 형성의 과정 및 통일 이후에 직면하게 될 많은 대내외적 과제들을 추론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올바른 통일관은 다음과 같은 정의적(affective) 요소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① 인간의 존엄성 및 민족의 동질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편견과 적대감보다는 이해와 수용의 관용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다; ② 통일과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균형 감각을 지니고 있다; ③ 감상주의적, 통일지상주의적, 맹목적 통일관을 경계하는 가운데, 한민족공동체의 공동 번영을 위한 하나의 통일 국가 실현에 대한 열망과 의지 및 확실한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④ 편협한 민족애에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조화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넷째, 올바른 통일관은 다음과 같은 행동적(active) 요소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① 민족 동질성 회복이 통일 축진의 원동력임을 깨달아 일상 생활에서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정신과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일상 생활 속에서 민주적인 규범과 법규를 존중하며, 이의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③ 통일 국가의 완성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④ 통일 논의의 실행 과정에 있어서 양보와 타협의 한계를 분명하게 실행할 수 있다.

### 3.3 민족공동체 윤리 의식을 형성하는 교육

새로운 통일교육은 민족공동체 윤리 의식을 형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특히 새 통일 방안에서의 민족공동체는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적극적인 교류·협력·개방을 통하여 사회·문화·경제 부문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해 가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공동체까지 만들어 통일을 이룬다는 통일 이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민족공동체라는 말은 통일의 중간 단계인 동시에 우리가 이룩하려는 최종 단계도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공동체는 한민족(韓民族)이라는 자아의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민족 성원 각 개인에 의해 준수되는 하나의 규범 체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규범 체계로서의 민족공동체는 각 성원들이 믿고 따라야 할 이념과 생활 윤리를 제공하고 그것을 준수할 것을 각 성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이러한 규범을 지킬 때에만 민족공동체는 존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단과 냉전 구조에 의해 우리는 이러한 규범의 준수를 포기하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통일교육에서는 단순히 민족동질성 고양의 중요성만 언급했을 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내용은 배제되어 왔다. 여기서 민족공동체 윤리의식의 형성을 통일교육의 한 방식으로 설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민족 동질성 고양의 구체적인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 상태로의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한민족공동체의 창조적인 변형을 기약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교육 현장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규범 체계로서의 민족공동체가 요구하는 행위 규범들을 일상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가르침으로써, 북한의 학생들을 적대감이 아닌 우정과 신뢰로 대하며, 그들을 편견과 차별 없이 고유한 인격체로 존중함과 동시에 모든 문제를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 원칙의 틀 속에서 해결하려는 '새로운 한국인'으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민족공동체의 윤리는 우리의 뿌리깊은 삶 속에 내재해 온 정신적 에토스와 서구의 시민사회에서 발전되어 온 민주적 시민성(democratic citizenship)이 우리 고유의 '한'의 현묘지도에 의해 변증법적으로 조화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공존성, 통합성, 생존성, 발전성 등의 가치가 될 것이다. 통일교육에서 이러한 민족공동체의 윤리를 강

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첫 단계인 도덕공동체 혹은 문화공동체를 실현하려는 사려 깊은 시도인 동시에 통일 이후의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한민족 전체 성원의 이상적인 행동 양식을 실천해 나가려는 창조적인 가치 추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3.4 통일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주는 교육

새로운 통일교육은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확신과 자긍심을 심어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추병완, 1992c).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복고적인 통일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세계 속의 한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는 것이니 만큼, 그러한 새로운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의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려는 행위 성향을 북돋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국가의 이상적인 모습들-예를 들면, 통일 국가의 정치이념, 경제제도, 정의구현의 문제 등-과 더불어 향후 통일국가가 겪게 될 대내외적인 혼란과 시련 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러한 고난을 주체적 문화 역량에 의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길러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즉 새로운 통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의 통일국가가 당면하는 제반 문제들을 자발적·협동적·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위기 관리적기능(*skills of crisis management*)과 태도를 신장시킴으로써 그들 스스로 통일조국의 미래를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하나의 도덕적 훈육(*moral discipline*)이 되어야 할 것이다.

### 3.5 적극적인 평화 의식을 계발하는 교육

새로운 통일교육은 적극적인 평화 의식을 계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손풍삼, 1996; 정영수, 1993; 최은수, 1997; 추병완, 1992c). 우리 한민족공동체가 지향하는 궁극적 이념은 평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때의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 많은 평화학자들이 제시하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평화라고 할 수 있다. 갈통(J.Galtung)에 의하면,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갈등과 분쟁을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인간 공동체를 창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갈등에게 있어서의 평화는 어디까지나 사랑과 인도주의에 기초를 둔 사회 조화(社會調和)를 위한 열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바 이츠제커(C. F. V. Weizsacker) 역시 평화의 의미를 적극적인 의미로 파악하면서, 평화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상태라고 규정하였다. 그러한 삶의 조건들 이란 전쟁으로부터의 해방, 기근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무지로 부터의 해방, 비참한 주거 생활로부터의 해방, 자연환경의 보호,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를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공동체의 이념은 한마디로 말해 ‘적극적인 평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민족의 자주성, 참된 평등주의의 구현, 정의와 민족주의의 구현, 세계에의 고양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첫째, 민족의 자주성이란 한반도가 냉전구조에서 완전히 탈피함과 동시에 우리 민족 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지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반만년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속에 개별인으로서의 자유와 공동체로서 의 집단 목표 구현에 헌신진력하는 민족의 지력을 오늘에 되살려 서로 돕고 서로 신뢰 하는 풍조를 조성, 완전한 민족적 자아를 구현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참된 평등주의의 구현이란 남과 북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한 민족으로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모든 성원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와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부여받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세계를 물려 주는 실천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정의와 민족주의의 구현이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줄 수 있는 정의의 원 칙이 구현되고 모든 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가운데 전체 민족 성원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7천만 겨레의 삶의 질이 고양되며, 사 회의 모든 부문에서 참된 정의의 원칙이 구현됨으로써 민족 전체 성원들의 참다운 만 남(encounter)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끝으로, 세계에 혹은 인류애의 고양이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구공동체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참여 정신을 지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폐쇄적인 자민족중심주의가 아니라 열린 민족주의(open nationalism)를 지향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통일교육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전체 구성원의 노력에 의하여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창조적 과정임을 일깨워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구조'로서의 평화를 다지기 위한 통일교육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민족공동체의 구성원 각자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내용으로서의 평화'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 즉,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냉전 시대를 체험한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적색 공포증을 통일 후계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비판적 성찰 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주입하려는 전통적 교육 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평화 의식을 개발하는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과감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 3.6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교육

새로운 통일교육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안보 위주의 통일교육으로 인한 북한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의 결여, 지나친 국가 사회적 교육목표 추구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된 국제 관계에서의 편견, 그리고 국내적 차원의 지역주의, 일상 생활 속에서의 각종 차별의식 등 넓고 깊은 휴머니티에 어긋나는 각종 편견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자들에 의하면, 고정관념(stereotype)은 실제의 세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세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가상의 세계(pseudo-environment)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매스미디어에 의해 주로 형성되어진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특히 북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고정관념 속에서 형성되어짐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란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 가상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실제의 세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직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상의 세계로서의 북한은 학자들의 주장처럼 매스 미디어에

의해 형성되어져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반공교육에 의해 더욱 많이 학습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학습을 통한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12세경에 대부분의 아동들은 인종이나 종교적 집단에 대한 완전한 고정관념을 갖게 되므로, 그 시기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최후 시기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편견 해소의 유일한 두 방식은 학생들의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과 여러 다양한 차이점들 속의 공통점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편견 해소 교육은 사실상 중학교 교육이 최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편견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식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함양함과 동시에 다양한 이질성 속에서 동질성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교육 현실을 돌이켜보면, 비판적 사고의 함양은 거의 배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북한 공산 정권의 모순이나 실상을 비판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도는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비판적으로 사고하라고만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생들은 능동적인 입장에서 북한 정권이나 공산주의 이념의 오류를 비판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봉쇄 당한 채, 오직 교사 또는 교과서가 요구하는 문제의 구조화된 위계에 부합하여 대답하도록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민족의 동질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학습 내용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각종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러한 편견 해소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고 동질성을 확인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통일교육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보편성의 원칙과 훌륭한 한국인을 육성한다는 특수성의 원칙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넓고 깊은 휴머니티를 지닌 인간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 3.7. 민주시민적 자질을 육성하는 교육

새로운 통일교육은 민주시민적 자질을 육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손풍삼, 1996;



정영수, 1993; 조영달, 1995; 황병무, 1996).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해 온 사람들이 새롭고 신비스러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가운데 진실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생활 규범이 체질화되어 있어야만 한다. 즉,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어떤 방법과 수단에 의해 공통의 합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고, 통일의 과정이나 절차가 모든 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 결정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고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통일교육의 대상인 동시에 장차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통일국가 속에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인간으로 육성하는 것은 통일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시민적 자질의 함양을 통해 통일로 향하는 제반 절차와 과정 속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제반 갈등과 고통들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통일교육에서는 생활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교육의 내용인 동시에 교육의 원리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 4.1 통일교육의 지도 방법

본래 지도 방법이란 교육의 과정을 구성하고, 수업 자료를 구안하며, 학급이나 다른 사태에서의 교수·학습을 안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종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Joyce & Weil, 1980). 그리고, 본래 수업이란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각자의 세계관을 표명하면서 일련의 가치와 신념을 포함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에, 모든 사태에 전부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지도 방법이란 사실상 있을 수 없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① 학생들의 학습 양식에 따른 접근, ② 교사의 목적과 관심에의 부합,

③ 학생들이 처리해 낼 수 있는 구조화의 양(量)이라는 세 가지 기준 아래 통일교육

의 지도 방법을 ① 설명형 지도 방법, ② 탐구형 지도 방법, ③ 시범형 지도 방법, ④ 활동형 지도 방법의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이 지닌 주요 목적, 교사·학생의 역할, 학습 자료의 사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장점을 논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나아가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통일교육의 제반 지도 방법을 네 가지 유형 속에 범주화함과 더불어, 앞으로 통일교육 현장에서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수업 방법을 첨가하여 제시하였다.

#### 4.1.1 설명형 지도 방법 (The Expository Mode)

설명형 지도 방법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설명(exposition)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업의 맥락에서 볼 때, 설명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실과 아이디어 그리고 다른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① 주요 목적

설명형 지도 방법의 주요 목적은 명확하게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일례로, 분단의 역사적 배경이나 남북한의 통일 방안을 이해시키려고 할 때, 설명형 지도 방법만큼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설명의 목적은 교육과정의 요구에 의하여 상세화된 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며, 통일교육 현장에서는 주요 개념이나 용어의 설명에 매우 유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통일과 통합의 차이점, 민족공동체의 개념, 연방과 연합의 차이,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평화·민족 대단결 등의 개념 분석 등에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 ② 교사와 학생의 역할

설명형 지도 방법은 교사의 구두에 의한 지식과 정보로 구성되는 메시지의 전달이기에 학생들이 그것을 어떻게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교사 자신은 중요한 資料源이고, 수업 자료와 학습자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인적 요소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이 설명하는 내용을 가능한 한 구조화하여야 하며, 내용의 제시자임과 동시에 인간 모형(human model)으로서의 신뢰감과 매력을 줄 수 있도록 논리

적이고 열성적이어야 한다. 한편, 설명형 지도 방법에서 학생들은 교사에 의해 설정되어 요구되어지는 학습을 하도록 기대된다. 즉, 학생들은 교사에 의해 요구되는 자료를 읽고, 부과된 질문에 대답하고, 제시된 주제와 문제를 토론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을 나타내 보이는 일 등을 행해야 한다.

### ③ 학습 자료의 사용

설명형 지도 방법에서 학생들은 학습 자료로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정보와 기능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설명형 지도 방법에서의 학습 자료는 학생들의 경험보다는 언어적 학습을 강조하는 것, 즉 정보원(sources of information)에서 제시된 해석과 요약물 찾아 학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현행 통일교육의 지도 방법 가운데 설명형 지도 방법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는 전통적인 교사의 강의, 녹음 기록 들려주기, 슬라이드 혹은 기록 영화를 보면서 설명을 보충하는 방식, 교과서를 읽고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 패도를 보고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 관련된 문헌 자료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 등이 있다.

설명형 지도 방법 가운데 널리 권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비교 분석 방법을 들 수 있다. 현재 통일교육에 관련된 내용 가운데에는 남북한의 각종 분야와 요소들에 대한 비교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 시간에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남북한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은 기존의 단순한 설명 방법에 비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더욱 고양할 수 있으며, 학습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비교의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학습 내용의 신뢰성이 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의 사례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남북한의 정치 현실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이 념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주체 표방)
체 제	복수정당제, 3권분립	1당독재, 당의 권력 장악
입법권	국회의 독자적 권한	당의 결정에 대한 추인
사법권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당과 국가의 지도·감독
행정권	행정부의 독립적 집행권	당 정책의 집행 역할
선 거	선거·피선거권 보장	1인의 당후보·찬반투표

또한, 분단의 과정과 관련된 수업에서는 전후 한반도 문제가 국제 회담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가를 학생들이 관련 자료들을 보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회담의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설명형 지도 방법을 활용함에 있어서 교사는 학생들의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통일에 대한 상상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하여 유추(analogy)를 이용한 다양한 발문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유추 질문들을 활용할 수 있다: “독일의 통일 과정과 우리 나라의 향후 통일 과정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반도 통일 환경에 있어서 분단 직후와 지금의 상황은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상이한가?”;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는 독일과 비교하여 볼 때,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상이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 있는 피자와 남북한 통일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삼국 통일과 남북한 통일은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상이한가?”; “부모님의 이혼과 남북 분단은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상이한가?”; “퍼즐 맞추기와 남북 통일은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상이한가?”

#### 4.1.2 탐구형 지도 방법 (The Inquiry Mode)

탐구형 지도 방법은 어떤 고정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탐구 영역 속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지식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즉, 학생들은 탐색되어야 할 아이디어와 질문을 마련하고, 검증되어야 할 가설들을 제시하고, 그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들을 모으고 조직하며,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탐구형 지도 방법에서는 학생들이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탐색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Hoge, 1996).

##### ① 주요 목적

탐구형 지도 방법의 주요 목적은 학생들이 반성적 사고 과정에 관련된 지적 기능을 발달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탐구라는 과학적 방법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으며, 스스로 어떤 것을 찾아내는 활동을 하는 가운데

자아가치(self-value)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에 카펜터(H. M. Carpenter, 1967)는 “탐구는 아동이 다소간 독립적으로 주변 환경의 요인들 사이에 또는 이전에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아이디어들 사이에서 그 관계를 知覺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갈파했던 것이다. 한편, 호기(Hoge, 1996)는 일반적인 탐구형 지도 방법의 절차를 다음과 같은 6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학생들을 문제 혹은 질문에 직면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제나 질문들에 직면하여, 가능한 답변들을 생각해 보고, 이전에 그들이 갖고 있던 지식들을 재정리해 보게 된다.

둘째 단계는 용어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사전이나 그밖의 전문적인 자료원들을 이용하여 핵심 용어들의 의미를 정의함으로써, 자신들의 탐구 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합의된 용어의 의미에 도달하게 된다.

셋째 단계는 연구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그들이 처음에 지녔던 의문이나 문제를 정련하여 “만약...이라면, ...할 것이다”라는 형태로 된 연구 가설을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가설들과 명확한 핵심 용어들의 의미를 사용하여 학생들은 자신들의 탐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넷째 단계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료 수집 절차를 설정하고 그에 입각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다섯째 단계는 자료를 수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수집한 자료들을 부호화하거나 그래프로 만들거나, 차트를 만들거나, 통계적으로 요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상세하게 분석하게 된다.

여섯째 단계는 결론을 제시하고 일반화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료 분석을 통하여 결론을 이끌어내고, 그러한 결론을 유사한 사례나 현상에 일반화해 보며, 자신들의 탐구 활동이 지닌 제한점을 분명하게 명시하게 된다.

## ② 교사와 학생의 역할

탐구형 지도 방법은 학습자 중심이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은 제기된 의문과 문제를 확인하도록 학생들을 돕고 학생들의 학습을 촉구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이다. 반면에 학생들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교사에 의해 제기된 질문

그러나 지역 사회의 다양한 단체와 행사 등에 대한 참여는 적응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그리고 개개인의 적응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선별적으로 유도하는 이유는 적응수준과 지역사회 행사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⑬ 심화과정

심리적 갈등 해소기에 실시한 적응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분야별 심화과정을 운용한다. 심화과정은 희망자와 심사위원회의 권고자가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구체적 교과내용은 대상자들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둔다. 심화과정의 교과내용은 크게 기본생활교육(관공서, 교통, 우편, 통신, 금융, 교육체계, 가치관, 언론, 에티켓, 생활체육, 여가생활 등의 내용과 이용법 등), 동질성 회복(역사, 언어, 전통문화, 국가의 상징 등), 민주시민교육(자유민주주의 이념, 제도, 실태 등), 자본주의 생활양식(화폐가치, 재산관리, 소비행태 등), 정치제도(선거, 정당, 국회, 법원, 경찰, 감사원 등), 심리적 안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효과는 어떠한 교육방법과 소재를 사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독일은 시청각 교재의 활용으로 큰 효과를 보았다. 한국의 경우에도 문화적 이질성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서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TV드라마는 현재 남한주민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남한사회의 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시청각 교재로 사용될 수 있다.

### ⑭ 종교생활

종교선택은 자유이지만 탈북주민의 적응력 제고에 종교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종교생활을 권장한다. 또한 종교단체와 각 탈북주민간의 결연을 추진하여 탈북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안정도 갖도록 한다.

---

민 20명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적 과정이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면 이러한 기관에 위탁 교육을 의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단계는 탐구의 계획 수립 단계이다. 이 단계는 ① 탐구 집단 조직에 관한 계획, ② 탐구할 질문에 대한 하위의 토의 주제 나열하기, ③ 정보 수집에 필요한 자원 및 정보의 출처를 계획하기, ④ 탐구 결과를 발표하는 방법의 결정, ⑤ 개인이 책임지게 될 과제의 할당 등의 구체적인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다. 학생들은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의 원인, 실태, 해결 방안 등으로 탐구할 주제를 세분화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셋째 단계는 탐구 활동의 전개이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탐구 과제에 대해 실제적인 탐구 활동을 벌이게 된다. 예를 들어,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실태에 대해 조사하기로 되어 있는 학생은 각종 문헌 분석 및 자원 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언어 이질화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넷째 단계는 탐구 결과의 정리 및 발표이다. 개별 과제를 통해 해결된 과제를 종합하여 하나의 자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체 학급 구성원들 앞에서 발표하고, 그에 대한 토의를 전개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탐구 활동에 대한 평가 단계이다. 학급 구성원들이 내린 결론에 대해 숙고하여 보고, 혹은 그 과정에서 오류는 없었는지를 성찰해 보는 단계이다. 이 때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교사의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협동학습 방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도 탐구형 지도 방법으로서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래 협동학습이란 이질적인 학생들로 구성된 소규모의 집단을 수업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개개인의 학업 성취와 더불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게끔 만드는 하나의 구조화된 학습 양식을 의미한다. 협동학습의 여러 기법은 학생들 상호간의 협동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학급 구성원들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교육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여러 기법들 가운데 지그조우(Jigsaw)와 집단조사 활동(group investigations)만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에의 적용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Ellis & Whalen, 1990).

지그조우 방법은 미국의 애론슨(Elliot Aronson) 교수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서, 통상 6명이 하나의 팀을 이루게 된다. 지그조우 방법에서 핵심을 이루는 세 가지 개념들은 바로 학습 과제의 분담, 홈팀(home team), 전문가팀(expert team)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 과제의 분담은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 과제들을 몇 가지의 하위 요소들로 분할하

는 것이다. 예를 들어, 6·25 전쟁에 대하여 학습할 때 교사는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전쟁의 원인, 북한의 침략 준비, 주요 전투, 유엔군 참전, 휴전 협정, 전쟁의 교훈 등과 같은 여섯 가지의 하위 요소들로 세분할 수 있다. 원래 학생들이 속해 있는 팀을 홈팀이라고 부르며, 각 홈팀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이 여섯 가지의 주제들 가운데 각자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다. 즉, ‘전쟁의 원인’에 대한 부분을 할당받은 학생은 6·25 전쟁의 원인에 대한 내용만을 전문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각 팀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루어진 집단이 바로 전문가팀이다. 그러므로, ‘전쟁의 원인’에 대하여 조사한 학생들만이 모여 전문가팀을 이루고, 그들은 각자가 조사한 것을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 더욱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된다. 각 학생들은 전문가팀에서 논의하거나 새롭게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홈팀에 다시 돌아와서 다른 학생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사전에 학생들의 홈팀 구성과 과제 제시를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한다.

한편, 집단조사 활동은 이스라엘의 샤란(Shlomo Sharan) 교수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서, 이 기법은 2-6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학습 집단을 이루어 협동적 탐구, 집단 토의, 협동적 기획 및 프로젝트 등을 실행하는 것이다. 각 집단은 자기 집단에게 부여된 과제를 세분화하여 개별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교사는 ‘북한의 언어 생활’에 관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때 각 집단의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과제를 세분화하여 개별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어느 집단에서는 북한의 외래어 표기법, 북한에서의 표준어,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 북한에서의 은어 등으로 학습과제를 세분하였다고 가정해보자. 개별 학생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그 집단의 전체 보고서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은어’를 조사하기로 되어 있는 학생은 각종 자료들을 활용하여 북한의 은어에 관한 개별 보고서를 만들어 낸으로써, 집단의 보고서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 각 학습 집단은 그 집단의 전체 보고서와 개별 보고서를 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각 집단의 전체 보고서가 완성된 후에는 전체 학급 구성원들에서 발표 및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앞에 언급한 집단탐구 수업 방법과 유사하기도 하지만, 평가와 관련하여 개별 책임과 집단 책임을 분명하게 구별함으로써, 집단 활동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일부 학생들의 무임 승차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 4.1.3 시범형 지도 방법 (The Demonstration Mode)

흔히 시범은 교사가 구두 설명으로는 충분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제한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적어도 두 가지의 교육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첫째는, 학생들에게 아이디어·개념·원리 등을 예시하고 극적으로 제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학생들의 지적 기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델의 관찰을 통해서 학생들은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시각화하고 관찰함으로써 동감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것은 바람직한 행동의 성취를 강화하여 준다. 예를 들어, 북한의 실상을 가르치는 경우, 교사의 열 마디 말보다는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이나 실제로 최근에 북한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 자원 인사의 강연을 직접 듣게 하거나 혹은 북한의 최근 모습을 담은 영상 자료를 실제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 ① 주요 목적

시범형 지도 방법의 주요 목적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행해지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떤 것이 행해지지 않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즉, 언어적인 설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실패의 가능성이 있을 때 혹은 오해의 가능성이 클 때, 시범형 지도 방법은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 ② 교사와 학생의 역할

시범형 지도 방법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습되어야 하는 중심 개념이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전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시범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실시하는 것이다. 만약 필름이나 슬라이드 등이 필요하다면 이것들을 준비하고,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하여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반면에 학생들은 시범에 의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그리고 집중해서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③ 학습 자료의 사용

시범형 지도 방법에서의 학습 자료의 사용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교육 공학의 발달, 정부의 북한 자료 개방화 움직임에 따라 많은 정보 매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 자료를 사실적·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단계적인 계열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통일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도 방법 가운데 시범형 지도 방법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귀순자 초빙 강연, 북한에 관한 슬라이드 및 VTR 시청, 북한관 진학, 게시물 관람 등이 있다. 이 방법은 통일교육에서 앞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들을 녹화하여 두었다가 활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또는 학생들로 하여금 어느 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일정 기간 동안 모니터 한 후에 그 느낌을 발표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북한 기행문이나 수기들, 통일교육 관련 동화들이 많이 발간 되었으므로,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실제 인물 시범이나 문학 작품 속의 시범, 영상 매체 속의 시범 등을 다채롭게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는데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 4.1.4 활동형 지도 방법(The Activity Mode)

활동형 지도 방법은 학생들이 학습하는 주제에 의미 있게 관련된 것을 실제 행함으로써 학생들을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행동하는 프로젝트에 활발하게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통일 의지를 내면화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스스로의 통찰과 경험에 근거한 활동형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주요 목적

활동형 지도 방법의 목적은 학생들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을 믿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통일교육이 아직 생활 훈련의 수준에는 미흡한 점이 비추어 볼 때, 학교 학습을 통합된 상태로 이해

하고 감지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이다.

### ② 교사와 학생의 역할

활동형 지도 방법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흥미, 필요, 재능, 성격, 그리고 동기를 기반으로 하여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학생들은 활동을 주도하고 그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질 것이 기대된다. 즉, 학생들의 주도적이고 책임성 있는 활동이 활동형 지도 방법에 있어서 학습자 역할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 ③ 학습 자료의 사용

이 방법은 폭넓고 다양한 여러 종류의 학습 자료를 필요로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구성하고, 탐색하고, 조작하게 하는 모든 것이 적절한 학습 자료일 수 있다. 즉, 풍부하고 자극적인 환경이 활동형 지도 방법의 성공에 필수적 조건이 된다. 현재 통일 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도 방법 가운데 활동형 지도 방법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는, 웅변 대회, 글짓기·표어·포스터 대회 등의 행사 교육, 명상의 시간, 통일 관련 도서 읽기, 역할놀이, 전적지 순례, 북한 자료 및 신문 기사 스크랩 활동 등이 있으며, 주로 교과외 활동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규 수업을 통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활동형 지도 방법으로는 역할놀이(role-play)를 들 수 있다. 남북 회담을 소재로 한 역할놀이를 통해 남북한의 시각 차이를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경험해 보게 할 수도 있다. 또, 언어 이질화의 실태를 역할놀이를 통해 재연해 봄으로써 그 심각성을 공감하게 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입장 차이를 역할놀이를 통해 생생하게 느껴 보게 할 수도 있다.

학생들의 통일 의지를 심화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학생들에게 백지도를 나누어 준 후에, 남북 고속 전철을 어떻게 건설하는 것이 좋은지 각자 설계해 보게 할 수도 있다.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남북 공통어를 찾아보게 할 수도 있다. 나아가 변화하는 한반도 통일 환경 및 통일 문제 자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통일 관련 기사들을 스크랩하거나 모니터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서에서 다루는 학습 내용들과 관련된 자신의 학습 활동을 토

대로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제작해 보게 할 수도 있다. 일례로, 6·25 전쟁에 관한 학습 활동의 경우에 있어서 학생들은 참전 용사와의 인터뷰, 전쟁 기념관 방문록, 전쟁과 관련된 각종 도표 및 사진, 전쟁과 관련된 자신의 느낌과 각오 등 학습 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포트폴리오로 제작해 볼 수 있다.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학습 상황에 대한 진정한 자기 평가(self-evaluation)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무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활동형 지도 방법 가운데 학생들의 교과 학습과 실생활 경험을 연계시켜줄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봉사 활동 학습(service learning)과 놀이 학습(play learning)을 지적할 수 있다. 일례로, 북한의 실상에 관한 학습 내용을 유기적으로 학생들과 삶과 연결시켜 주기 위하여 교사는 다양한 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북한 동포를 위한 모금 활동 및 가두 캠페인 실시, 북한 동포의 식량난을 소개하는 학급 신문을 제작하여 지역 사회에 홍보하는 활동, 온가족 한끼 단식 체험 등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또한, 교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통일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각종 놀이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한반도 지도를 그려 놓고 통일 족구 하기, 통일 윷놀이,<sup>1)</sup> 강강술래 등은 가장 대표적인 통일교육 관련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지도 방법을 설명형, 탐구형, 시범형, 활동형으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각각의 지도 방법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특정의 가치관과 신념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며, 학습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하나의 준거 체제 혹은 조희 체제를 제시하여 주는 것이지, 절대적인 방법은 분명히 아니다. 따라서 담당 교사들은 통일교육의 목표나 내용,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절한 지도 방법을 선정하든지 또는 둘 혹은 그 이상으로 각각의 지도 방법의 세부 유형들을 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2 통일교육 지도상의 유의점

통일교육의 내용은 국내외 정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동태적인 민감한 문제들

1) 이 놀이는 기존의 윷놀이를 약간 변형한 것으로서, 말판의 중간 중간에 걸림돌들을 배치해 놓고 걸림돌에 걸리면 후퇴를 하게 되고, 단결이나 화합에서는 앞으로 전진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나갈 때에는 다같이 통일 노래를 부르도록 되어 있다.

도 다루게 되고, 어느 특정한 교과나 교사만이 지도하도록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교과적으로 전교사가 지도하도록 되어 있어, 그 지도에 있어서 특별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통일교육의 지도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통일교육은 현행 교육과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덕 교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지도하되, 범교과적으로 그리고 훈화, 행사, 시사·계기교육, 환경 계기교육, 특별활동 등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써야 한다.

② 통일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개방된 논의는 바람직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 논의에 있어서 우리 체제의 기본 가치와 규범마저 무시되어서는 안되므로, 교사는 이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③ 북한이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일방적 매도나 감정적 적대 의식의 표현을 자제해야 하며, 남과 북 혹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실상을 비교할 때에는 그 비교의 관점이나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한다.

④ 통일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을 이룬 후에 우리 민족이 경험하게 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대내외적인 문제들을 개관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 해결 방안을 논의케 해야 하고, 나아가 세계사 속의 새로운 통일 조국의 위상을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단순한 이상이 아닌 현실로서의 통일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⑤ 통일교육에서 안보의식의 함양은 통일의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양측면의 균형 있는 지도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중적 특수 상황 즉 북한을 상대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면서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주된 대상으로 북한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단 상황하의 남북 관계가 띠고 있는 특수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⑥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신문, 잡지, 영상 자료, 관련 서적 등 생생한 시사 자료를 수집하여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지도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내용의 구성 취지를 벗어나거나 편향된 주장을 가지고 교육 내용을 재구성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의 개인적 관심과 주관적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다

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이 사회가 교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파악해서 지도해야 한다.

⑦ 통일교육은 일방적 강의 방식보다는 탐구, 시뮬, 활동 등의 다양한 지도 방법을 통하여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분위기는 개방적이고 탐색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해당 문제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 혹은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 배경과 의미를 충분히 파악해야 하며 우리와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⑧ 통일교육은 학생들이 북한 실상을 바로 알고, 통일을 향한 마음 자세를 가다듬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지나친 적대감을 유발하거나, 북한을 실제 이상으로 과장되게 표현하여 동경심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 특히 북한 영상 자료를 수업에 활용할 경우 비판적 기능이 강한 우리의 언론과는 달리 북한 TV 자료들은 주민들에 대한 계도성과 선전성이 강하므로 자료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북한의 실상에 대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⑨ 학생들에게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논의의 결론이나 해석을 그대로 외우게 하거나 주입시키기보다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과 대안적인 관점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도록 지도한다. 즉, 북한이나 공산주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을 제시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결론을 지지하는 근거나 까닭을 사실대로 소개·인용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근거에 입각하여 결론을 내리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⑩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을 조장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내용과 소재는 가급적 학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 문화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지도한다. 학생들은 북한의 가정 생활, 의식주 생활, 가족 관계, 생활 풍습 등에 대하여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생활 문화를 소재로 한 통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 사람들을 낯선 사람들이 아닌 한 민족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⑪ 북한이나 통일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개인, 집단, 국가의 각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기되고 전충·다협되며, 마침내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게 되는지를 직·간접으로 체험토록 하여 이러한 절충 과정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행동 규범을 습

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⑫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지적 탐구와 문제 해결 노력을 적극 격려한다. 다양한 주장과 개방적인 논의들을 허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고무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자생력의 배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⑬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남북 관계의 전개 상황하에서 공식적 교육과정의 적시 개편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른 지도 지침의 제시는 사실상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통일 관련 서적과 정부 또는 연구 기관들의 자료를 충분히 습득하여 바람직하며 합리적인 지도 관점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⑭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신념과 열의를 가지고 지도에 임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우리가 실질적인 마음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면서도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교육적 투자라는 생각을 갖고 지도에 임해야 한다.

⑮ 통일교육은 학생들이 교실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단순한 지식으로 암기하는 차원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다양한 학습 및 실천 기회의 부여를 통해 통일 의지의 내면화로 유도해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 올바른 이념과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통일 의지를 지닐 수 있도록 독후감 쓰기에서부터 북한관 견학에 이르기까지, 교과 학습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활용하고 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기회 및 학습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5. 결 론

통일교육은 단순한 지리적·정치적인 의미에서의 통합이 아닌 실질적인 마음의 통합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통일교육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지 못했다. 그러나, 통독 과정과 통독 이후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지켜 본 사람들은 누구나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문화의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통일원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종래의 반공교육 및 통일안보교육에서 탈피하여 통일

교육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경주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냉전 시대의 분단 고착화 교육의 형태를 완전하게 탈피하지 못한 채 감상적·규범적·추상적·현상유지적 차원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으므로 통일교육의 본래 취지와 의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더구나 남북한은 통일교육을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로 간주하여 왔기 때문에, 객관적·현실적·미래지향적·합리적인 통일교육을 도외사하여 왔다. 즉,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신장시켜 주는 교육이 자기 체제의 안전에 절대적으로 위협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한 쪽에서 그러한 교육을 실행하여 보았자 별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타산적 계산을 해 왔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 분단 고착화를 심화시키는 길을 택해 왔던 것이며, 그 결과 상호간에 뿌리 깊은 불신감만 심화시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통일교육은 불신과 대립의 냉전 구조 속에서 반세기를 살아 온 남북한 그리고 해외 동포들의 마음속의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생동감 있고 탄력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만 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①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는 교육, ② 민족공동체 윤리 의식을 심어 주는 교육, ③ 통일 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주는 교육, ④ 적극적인 평화 의식을 계발하는 교육, ⑤ 민주시민적 자질을 육성하는 교육, ⑥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교육, ⑦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이 논문에서는 통일교육이 통일 분제에 대한 지식과 이론의 체계, 통일 문화 창조를 위한 삶의 훈련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통일은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가꾸고 만들어 가야 할 자교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 부응하는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을 설명형, 탐구형, 시범형, 활동형으로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실행 방법들과 지도상의 유의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민족의 공동선으로서의 통일의 길은 멀고도 험난한 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그 길을 걷어가는냐에 따라서 통일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 남북한 통합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상실된 민족의 동질적 기반을 회복해 나가려는 통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통일교육 또한 이러한 방식의 테두리 안에



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학교 통일교육은 우리가 실질적인 마음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파급 효과가 큰 확실한 교육적 투자라는 가치관을 지니고 통일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장희, “에멘통일과 이슬람교육,”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제8호, 1997.
- 교육부, 통일교육 지도자료, 서울: 교육부, 1993.
- 김도태·이경화, “통일교육 개선 방향: 사회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6(1), 1997: 1-22.
- 김송일, “독일의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 「교육학연구」, 28(3), 1990. 「동아일보」, 1997년 4월 8일자.
- 문화방송, 「91 MBC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방송, 1991.
- 박상봉, “독일의 교육통합: 통일조약 37조, 동·서독 교육통합의 기초,” 「새교육」, 통권 513호, 1997.
- 박성희,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 박재윤, “에멘의 교육통합: 한동안 남·북 교육제도 병존, 국민통합 기능 미비,” 「새교육」, 통권 513호, 1997.
- 서제진, “북한 사회의 변화 전망과 통일교육의 방향,” 교육부, 「교육월보」, 15(6), 1996: 38-41.
- 손봉삼, “남·북한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도산학술논총」, 5, 1996: 319-343.
- 송병순, “남북한 통일교육의 현실과 과제,” 한국교육연구소, 「한국교육연구」, 1, 1994: 24-46.
- 윤건영, “통일교육의 교수 학습 준거 설정에 관한 연구,” 통일원, 「'95 북한 및 통일 연구 논문집(VI: 통일 환경 및 통일교육 분야)」, 1995: 285-361.
- 정건영, “통일 대비 교육의 방향,” 「교육학연구」, 31(4), 1993: 221-234.
- 조영달 (1995), “통일시대의 민주시민교육,”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사회와 교육」, 1995: 20, 23-50.
- 차우규, “중고등학생들의 윤리관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최은수, “초·중등학교 통일교육의 내용과 통일과정에서의 심리적 문제,”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6(1), 1997: 23-47.
- 추병완, “청소년 통일교육의 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연구」, 제9호. 1992.
- 추병완,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중학교 도덕 교과서 체제 개선 및 편찬 방향 연구,”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3호. 1992.
- 추병완,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새교육」, 통권 452호. 1992.
- 추병완, “민족 통합을 위한 학교 통일교육의 전개 방향,” 「민주문화논총」, 4(4). 1993.
- 최은수,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도산학술논총」, 6, 1996: 85-110.
- 통일원, 「남북한 화해 협력 시대의 통일교육 기본 방향」, 서울: 통일원. 1992.
- 한만길, “변화하는 시대의 ‘열린’ 통일교육,” 교육부, 「교육월보」, 15(6), 1996: 33-37.
- 한만길, “학생의 건전한 통일관 형성을 위한 교육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105, 1997: 101-105.
- 황병무, “남북 평화 체제 구축과 통일교육의 과제,” 교육부, 「교육월보」, 15(6), 1996: 28-32.
- Carpenter H. M., The role of skills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Social Education*, 51(2). 1967.
- Ellis S. S., & Whalen S. F., *Cooperative learning*, New York: Scholastic Inc.
- Hoge J. D., *Effective elementary social studies*,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0.
- Joyce B., & Weil M., *Models of teach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0.

## 【요약문】

본 논문은 통일교육이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에 따른 적절한 교수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치교육 기법을 활용해서 통일교육에 적절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실제 통일교수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내용이 조직되고, 교육내용에 따라 적절한 교수방법이 교수자에 의해서 선택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다고 보고, 정치교육의 관점에서 보다는 가치교육의 관점에서 교수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가치교육적 접근은 통일에 대한 자세와 의지를 배양하려는 정의적 특성에 중심을 두고 가치관 태도형성에 중점을 두는 것을 말한다. 사실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이후를 대비하려면 통일교육이 여러 학문영역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서 통일에 대한 감정적인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통일교육은 추상적인 교육에 머물고 말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가치교육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기존의 정치교육보다는 가치교육에 의해서 동질화의 내용과 방향을 학습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치판단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자리잡아야 할것이다. 이러한 가치교육적 접근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도 적절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도 가장 작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가치교육의 과정으로서 통일교육을 인식하고, 먼저 가치교육의 교수방법들과 원리를 검토하고, 통일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치갈등모형, 가치명료화 모형, 가치분석모형을 원용하여 통일교육 내용을 주제로 해서 교수학습프로그램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가치갈등 수업모형의 활용은 학습자들의 사회적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해주고, 특히 정치문제에 대한 인식, 사회가치의 적용,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스스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가치의 다원적인 생각을 일깨워주

며 타인의 역할을 인정해줄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점을 존중할 줄 알게 해준다. 통일교육에 있어서 가치갈등 수업은 특히 남북한의 이질화를 생각해볼때 다양한 주제를 도입하여 동질성회복을 위한 수업절차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치명료화 수업모형은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수업과는 달리 우리 생활세계의 기본적인 대화의 틀 안에서 서로의 생각과 지식 그리고 심정을 교류해봄으로서 의사소통기술이 발달하게 한다. 특히 학습자들로 하여금 관심있는 여러 대안들과 직면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가치문제에 대한 호기심도 커지고 해결과정에서 문제해결능력도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프로그램도 기본틀로서 학습대상과 교수내용에 따라 적절히 적용함으로써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치분석 수업모형은 기본적인 가치개념들을 분석해봄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가치원리를 터득해 가게 돕는 활동이다. 통일교육으로서 민주시민 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자유와 복지 및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성 함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치분석모형은 민주적 기본 가치들을 수용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모델이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치분석 프로그램도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인간의 존엄, 책임, 정의 등 다양한 민주적 가치를 습득하게 하는데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에 따라 한시간에서 여러시간에 걸쳐서 수업은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교수방법이 그렇듯이 가치탐구식 수업도 단점이 있고, 주입식 수업도 장점이 있지만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주입식 수업은 더 많은 단점과 교육효과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교육 현실에서는 주입식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좀더 다양한 교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통일교육의 다양한 주제에 따라 적절한 교수방법을 채택하여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치명료화, 가치갈등, 가치분석의 교수모형을 틀로 해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했지만 그 운용은 주제에 따라, 학습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가치주입식 수업기법과 가치탐구식 수업기법외에도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기법들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교

육도 다양한 교수기법의 도입과 프로그램의 개발로 재미있는 수업과 느낌있는 수업, 학습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문제해결 능력을 증가시키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 서론

본 연구는 가치교육 기법을 활용해서 통일교육에 적절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통일교수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일교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통일교육의 방향이나 목적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으나, 교수방법에 있어서는 당위를 제시하거나 일반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큰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에 따른 보다 적절한 교수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교수방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내용이 조직되고, 교육내용에 따라 적절한 교수방법이 교수자에 의해서 선택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다고 보고, 정치교육의 관점에서 보다는 가치교육의 관점에서 교수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치교육이 중요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지금까지 남북한의 교육은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자국중심의 정치교육에 치우쳐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켜주기 보다는 적대의식을 공고히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가치교육에 의해서 동질화의 내용과 방향을 학습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치판단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가치교육적 접근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도 적절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도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가치교육의 과정으로서 통일교육을 인식하고, 통일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교수방법을 구안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줄 수 있는 여러가지 교수방법들을 논하겠지만, 교수프로그램의 제시는 가치명료화 이론 및 가치분석, 가치갈등수업의 모형으로 제한할 것이다.

연구방법은 교수이론들을 다루고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이다. 통일교육의 교수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 통일교육의 목표를 2장에서 도출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통일교육은 통일준비교육임으로 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국민

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목표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민주시민의 양성의 의의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3장에서는 통일교육과 관련되는 교수방법들을 살펴볼 것이다. 수업현장에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습득케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수 방법으로는, 교수활동중심의 주입식 교수방법과 학생활동중심의 탐구식 교수방법들로 양분해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탐구식 교수방법의 의의를 부각시킬 것이다.

4장에서는 탐구식 교수기법들을 활용한 구체적인 교수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한다. 탐구식 교수기법들 중에서 통일교육의 목표를 성취하기에 직접하게 여겨지는 가치명료화, 가치분석, 가치갈등 모형의 틀을 활용하여 제시할 것이다.

## 2.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은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통일준비교육과 통일이후에 예측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통일국가 대비교육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통일교육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세계속에서 한민족이 번영할 수 있는 통일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국민교육으로<sup>1)</sup>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교육의 방향이 우선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정책자문회의에서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2)</sup> 첫째,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합의기반 확충을 위한 정치, 사회적 제반 환경의 조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한다. 둘째, 통일역량 증대와 통일된 이후의 삶의 질에 핵심적 관건이 되는 민주시민적 자질과 품성을 통일교육의 중요 내용으로 도입한다. 셋째, 통일교육은 민족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민주주의적 삶과 제도의 정착을 통한 일관성 있는 원리하에 추진해야 한다. 넷째, 각급학교 학생들의 발달 수준이나 교육기관 수준에 맞는 통일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내용과 방법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이은숙 외 지음, 「남북한 사회통합론」(서울: 삶과꿈, 1997), pp.68-70.

2) 교육정책자문회의,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 1990.9. p.vii



통일원 자료<sup>3)</sup>에서는 통일교육을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국민들 사이에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보고 기본방향을 여덟 개의 장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sup>4)</sup>의 핵심은 통일의 당위성을 체득케 하는 교육,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며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통일국가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방향은 결국 통일국가를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통일이후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자하는 통일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것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이루는 핵심이 되는 것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민주시민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2.1 민족의 동질성 회복

민족의 동질성회복이 통일교육의 기본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까닭은 국토가 분단된 1945년 이래로 남북한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역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질화가 심화되어 왔기 때문에 통일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면에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경제적으로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를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 양극적인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불행히도 남북이 분단된 이후 서로 다른 체제속에 살아오는 동안 이질화가 심화되었음은 물론이고 주적으로 여길만큼 적대감이 크게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이제는 민족공동체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동질성회복 교육을 강화해야 할 때다. 이는 한민족은 단군의 자손으로서 민족의 역사의 공통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한반도에서 오직 단일 민족국가를 이룩해야 한다는 분단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의지를 가질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대체로 통일은 그동안 인류가 창출한 이념적 보

3) 통일원,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서울 : 통일원, 1995).

4) 통일연수원, 「통일문제이해」(서울 : 통일원 통일연수원, 1996). pp.216-221. ; 이경희, “민족공동체형성을 위한 사회통일교육방안의 모색”, 통일원, ‘96북한 및 통일 연구 논문집(II), (1996). pp.41- 96. ; 김승일,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이용필교수 화갑기념논문집(1993). pp.491-505. ; 박성수, “남북상황에 부응하는 전후세대 통일교육의 통합프로그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논총」(1995). pp.79-81.

편성과 한국의 민족주의적 특수성을 조화롭게 결합시키는 틀 속에서 탐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sup>5)</sup>

남한에서도 “갈라진 민족이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사는 통일된 조국”을 이상으로 삼고 “어떤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으며 어떤 이념이나 이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sup>6)</sup> 북한에서도 이점에 공감을 하고 있다.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건, 민족주의자건, 무산자건, 유산자건, 무신론자건, 유신론자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해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sup>7)</sup>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민족국가를 염원하는 남북간에는 단일민족으로서 오랜기간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여 왔기 때문에 동질적인 요소도 많이 있다. 이질성을 심화시킨 지난 반세기는 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해온 시기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시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족국가의 역사적 전통속에서 동질성을 찾으려는 노력여하에 따라 동질성회복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동질성을 찾아내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sup>8)</sup> 첫째, 과거의 민족적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일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동질성회복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다. 민족동질성의 기본적인 요건은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혈연, 역사, 전통, 언어, 문화, 관습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민족의 과거 역사적인 뿌리를 바탕으로 하여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기본요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족의 동질성을 남북한의 현실사회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남북한의 사회문화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이질적인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동질성, 가족문화의 동질성, 민족주의, 유교적 문화, 동양적 사고 방식, 인정주의 등을 민족적 동질성이 존재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sup>9)</sup> 이런 점에서 교육, 언론, 학술, 문학, 예술 등을 망라한 모든 분야에서 화해와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셋째, 통일국가의

5) 정용진, “통일국가의 정치제도”, 국가정보인수원,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모형」, 국가정보학술회의 자료집 (1997), p.6.

6)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1993.2. 25.)

7)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진행(3) :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평양 : 1993.4.7.)

8) 한만길,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충북교육」, 1995년 6월호, p.19.

9) 이은숙 외 지음, 「남북한 사회통합론」 (서울 : 숲과꿈, 1997), pp.158-161.

미래상을 통일교육의 이상적인 방향으로 삼고 동질성회복을 추진해볼 수 있다. 통일한국의 이념적 지향은 민족주의와 복지주의로 남북이 공감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향에서 구상함으로써 남북한간의 민족동질성을 회복해갈 수 있다.

민족의 동질성은 과거속에서도, 이질화된 현실속에서도, 우리민족의 미래상에서도 찾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치교육적인 측면에서 통일교육은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내용구성과 교육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남북한 간의 민족동질성을 확인, 회복하여 분단문화의 극복을 지향하는 가운데 민족화합은 서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단의식과 그로 인한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통일지향적인 가치와 규범에 관여하는 가치교육으로서 통일교육의 역할이 주어질 수 있다. 통일교육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통일을 지향하고 민족공동체를 열망하는 가치체계와 행동양식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2.2 민주시민의 양성

민주시민의 양성이 통일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통일한국이 민주국가여야 하는 당위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다. 한반도에 있어서 통합된 민족국가 이념의 구현을 위한 최적의 정치적 질서는 자유민주주의<sup>10)</sup>라는 확신하에 통합된 민족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격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민주시민으로 보는 것이다.

민주시민의 육성은 우리 국민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민주국가 건설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환경속에서 성장해온 사람들이 통일이 되어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가운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생활규범이 체질화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 공통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알게하고, 통일의 과정이나 절차가 자발적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해시키고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고양하는 것이 현상황에서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교육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은 두가지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한다.<sup>11)</sup> 하

10) 정용길, "통일국가의 정치제도", 국가정보연수원,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모형」(1997), pp.5-7.

나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들과 가치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원칙들과 가치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직, 과정 및 행태 등을 형성하고 체질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sup>12)</sup> ① 건전한 시민성 ② 합리적 판단능력 ③ 토론과 타협 ④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능력 ⑤ 권리와 의무 ⑥ 환경에 대한 책임 ⑦ 대중매체의 중요성 ⑧ 인간에 대한 존엄성 ⑨ 자유와 평등 ⑩ 자발적 참여의식 ⑪ 공동체의식 ⑫ 적극적인 평화의식 등이다. 이러한 시민성함양 교육은 사회를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성숙한 민주적 공동체로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다.

그런데 시민성의 의미를 규정함에 있어서나 민주시민적 자질 육성을 위한 교육적 과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취급되는 요소는 가치도덕성이다. 서독이 일찍이 동독에 대한 통일정책과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역작용을 피하고, 통일의 기반구축을 다지는데 힘써왔다. 서독은 분단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정치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도덕과 윤리가 강조된 질서를 준수하는 관습과 공공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통하여 짧은 시간에 민주국가건설에 성공하였는데, 그것이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sup>13)</sup>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적 자질육성을 위한 교육적 노력과정에 주로 민주주의와 관련된 기본가치와 도덕적 자질특성을 선정하고, 선정된 덕목들의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는 일에 주력해왔다.

따라서 민주시민적 자질의 함양을 통해 통일로 향하는 제반절차와 과정속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에 예상되는 제반 갈등과 고통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이상적인 통일국가를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통일교육도 가치교육적 접근에 의해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11) 신정현, 신용철, 권오정 공저, 「통일시대의 민주시민교육론」, (서울 : 탐구당, 1994), p.311.

12) 전복주, 김수근, 요르코 분포 (공편),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서울 : 학문사, 1994), ; 신정현, 신용철, 권오정 공저, 앞의 책, pp.311-21.

13) 엄제호, “통일과 시민교육”,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평화연구」 제20집, 1995, p.11.

### 3. 통일교육의 교수모형

통일교육은 접근 방법에 따라 크게 사회과학적 접근과 가치교육적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과학적 접근은 북한의 현실과 통일문제를 사회과학적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의 실상과 통일 문제에 관한 지식과 정보에 기초하여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과학분야에서 추구하는 인지적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가치교육적 접근은 통일에 대한 자세와 의지를 배양하려는 정의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가치관 태도형성에 중점을 두는 것을 말한다.

사실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이후를 대비하려면 통일교육이 여러 학문영역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서 통일에 대한 감정적인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통일교육은 추상적인 교육에 머물고 말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가치교육이라 할 수 있다.<sup>14)</sup>

가치교육이 현실적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있으나 대체로 가치교육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학교라는 공식기관을 통한 가치교육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sup>15)</sup>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치교육은 정교한 교수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이 시행될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통일과 관련된 가치교육도 특정 교과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통일교육을 가치교육 측면에서 시행할때 활용할 수 있는 교수방법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3.1. 주입식 교수방법의 원리

가치교육의 주입식 방안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피교육자에게 주입시키려는 것으로 교육내용이 정해져 있고 이것을 최대한 피교육자가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주입식 교육의 정당성은 첫째, 가치를 결정할 만큼 충분히 지적능력이나 판단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올바른 가치를 제시하고 주입시키는 것이 바

14) 엄재호, "통일과 시민교육",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평화연구」 제20집

15) Barry Chazan, 이구재, 강민석 역, 「현대도덕교육방법론」(서울 : 법문사, 1990), p.179

랍적하다는 것이다. 둘째, 올바른 가치에 스스로 접근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낭비가 많으므로 최선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빠르고 쉽다는 것이다.

가치를 주입하는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설득이나 모형제시, 세뇌, 규칙 및 규정 정하기, 선택을 제한하기, 예술 및 문학작품의 활용, 문화적 또는 종교적 교의를 제시, 양심에 호소하기 등 긍정적인 방법과 부정적인 방법들이 있다.<sup>16)</sup>

‘설득’은 가치교육에서 교화의 수준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가치들에 대해서는 논증이나 근거를 제시하고, 다른 가치들은 오류나 함정을 지적함으로써 설득시킨다.

‘모형제시’는 받아들여야 할 이상적인 상황이나 조건, 인물을 제시함으로써 피교육자가 모방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는 가르치는 교사의 말과 행동이 학생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모형제시에서는 어떤 모델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시된다.<sup>17)</sup> 교사자신이 모델이 될 수도 있지만 역사, 문학, 전설, 시사 등에서 모형의 예를 찾아내어 피교육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수용하도록 하기도 한다. 시청각 자료의 폭넓은 활용도 성과를 돕게 된다.

‘세뇌’(brainwashing)는 강제로 개인의 견해를 재구성하여 이전에 지녔던 신념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세뇌는 결국 이전에 거짓이라고 거부하던 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전에 진실이라고 믿던 것을 거짓이라고 믿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뇌를 위한 수단들은 신체적 억압이나 정신적 파괴를 이용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수단이다.

‘선택을 제한하기’는 학습자에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가치중에서만 선택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세금을 내거나 부역을 하는것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또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가치와 아무도 받아들일 것간지 않은 가치중에서 선택하게 한다. 예를 들면 학습자에게 진실을 말하든가 아니면 우리와 다시는 얘기하지 말것 중 하나를 택하라는 식이다.

‘규칙과 규율을 정하기’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상과 벌을 이용해서 부

16) L. E. 래즈, M. 하이먼, S. B.싸이본 공저, 장천심, 조성만 공역,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 철학과 현실사, 1994), pp.63-64.

17) Mark J. Tierno, "Teaching as Modeling : The Impact of Teacher Behaviors upon Student Character Formation", *The Educational forum*, Volum 60, Winter 1996, p.176.

의식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일 때까지 행동을 억제하고 형성시키려는 것이다.

‘예술과 문학을 이용하기’는 단지 지식을 넓히는데 이용하는 것 뿐 아니라 언제나 그 래왔던것 또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정신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할 것을 조장할 수 있다.<sup>18)</sup> 많은 문학작품은 여러 인물들을 제시함으로써 인격 의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게된다.<sup>19)</sup>

‘문화적 또는 종교적 신조를 이용하기’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지혜나 원리를 제시하 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양심에 호소하기’는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다. 어떤 사람의 양심이 옳은 방법을 제시하는데 실패하였을 때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킨 다.

이상과 같은 가치를 주입하는 기법들에는 옳은 가치가 이미 정해져 있으며, 선전, 설 득, 강요가 작용하게된다.<sup>20)</sup> 그러나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 설득을 통해 훈련받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도덕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입의 효과는 의문스럽다.<sup>21)</sup>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선호되고 있는 교수방법이다.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한 주입식 교수방 법으로서 대표적인 형태는 강의식과 시청각매체나 첨단 매체를 활용한 방법들이 있다.

### 3.1.1 강의식 수업 원리

#### (1) 강의식 수업의 특징

강의식 수업은 지식이나 기능을 교수자가 설명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이해 시키는 교수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교수자 중심의 학습법이기에 때문에 학습자가 능동적 으로 참여할 수 없고 주의집중이 어렵고 지루하다는 점 때문에 여러가지 비판을 받아

18) David Carr, "Towards a Distinctive Conception of Spiritual Education", *Oxford Review of Education*, Vol. 21, No. 1, (1995), p.96.

19) James L. Jarrett, *The Teaching of Values* (New York : Chapman and Hall, Inc., 1991), p.168.

20) 남궁달화, 「가치탐구교육론」(서울 : 철학과 현실사, 1994), p.121.

21) Herlinde Pauer-Studer ed., *Norms, Values, and Society* (Dordrecht :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4), p.17.

왔으나 내집단 수업에서 가장 보편적인 교수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다.<sup>22)</sup>

강의식 수업은 중요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교수자의 말로서 학습자에게 전달하도록 설계된 수업모형이다.<sup>23)</sup> 교양교육을 실시할때,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이나 지향하는 가치를 주입하는 방법으로서 강의법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강의식 수업의 장점은 ① 단시간에 다양한 지식과 가치를 많은 학생들에게 동시에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다. ② 교재의 내용을 보충, 첨가, 삭제하는데 편리하다. ③ 교수자의 표현능력에 따라 학습자를 쉽게 동기화시킬 수 있다. ④ 교수자가 해설이나 설명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므로 교수자의 마음대로 학습환경을 바꿀 수 있다. ⑤ 수업시간이나 학습량 등을 교수자의 의지대로 조절 하기 쉽다. ⑥ 강의가 훌륭하게 수행되었을 경우 어떤 교수방법 못지않게 효과가 있으면서 교수자나 학생들이 모두 편리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강의식 수업의 단점은 ① 어쩔 수 없이 교수자 한개인의 강의능력 및 기술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② 학습자의 개성과 능력이 무시되기 쉽다. ③ 설명식 수업이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습자에게는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다. ④ 학습자들은 완전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강의를 듣거나 노트를 하며, 의견의 상호교환이 거의 없어 개별화, 사회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자들의 주의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강의식 수업이 최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사람은 물론 교수자가 강의의 제한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강의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매체, 교수보조물 등을 사용하고 발문을 통한 학습자의 동기유발을 시도하는 동시에 설명기법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 (2) 강의식 수업모형

교수자가 자신의 설명을 매개로 해서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것으로 강의법과 맥을 같이하는 수업방법에는 설명식 수업(expository instruction)과 유의미 언어학습(meaningful

22) John D. McNeill, Jon Wiles, *The Essentials of Teaching-Decisions, Plans, Methods*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0), p.202.

23) D. R. Cruickshank, D. L. Bainer & K. K. Metcalf, *The Act of Teaching* 3rd ed.(New York : McGraw-Hill, 1995).



verbal learning) 등이 있다.

설명식수업모형은 강의를 세단계나 다섯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크게 세단계로 나누었을 때, 도입부에서는 이어질 내용의 이해를 돕기위한 명확하고 해설적인 일반개념구조가 도입되도록 하고, 전개단계에서는 도입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풍부하고 구체적인 학습자료를 이용한 수업활동이 전개되도록 하며, 결말부분에서는 학습자들이 강의시간을 통하여 새로이 획득한 정보의 확충과 일반화를 위하여 보충과제가 제시되도록 마무리하면 된다.<sup>24)</sup>

다섯단계로 나누어보면 처음 셋째단계까지는 교수중심으로 이끌어 가고, 마지막 두 단계에서는 학습자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한다. 첫째단계에서는 교수자가 학습할 내용이나 개념을 제시하고 명확히 한다. 둘째단계에서 제시된 개념과 관련되는 보다 상위개념을 연관시키게 된다. 셋째단계에서는 제시된 개념과 관련되는 다양한 실례들을 든다. 넷째단계에서 학습자는 교사가 제시한 다양한 예들을 분류하고 자신들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또 다른 예를 찾아봄으로서 수업을 마무리하게 한다.<sup>25)</sup>

설명식 수업으로 대표되는 유의미학습에서는 학습자에게 먼저 설명을 통해 포괄적 아이디어를 제시한 다음 점점 단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크게 세단계로 나누어 첫째단계에서는 수업목표를 명확히하고 학습할 의욕을 고취시킨다. 둘째단계에서는 학습과제 및 자료가 제시되는데 여기에서 학습과제는 유의미가를 가져야만이 학습자의 인지구조에 의미있게 관련지워진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을 먼저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세부적이고 상세한 것으로 분화시켜 나가게 된다. 세번째 단계는 수업의 마무리 단계로서 수업시간에 배운 학습내용이 학습자의 인지구조에 의미있게 관련되었다는 가정하에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요점을 정리해 준다.<sup>26)</sup>

이상에서 강의식 수업모형으로 세단계와 다섯단계로 나눈 설명식 수업과 유의미언어

24) J. D. W. Andrews, "Discovery and Expository Learning Compared : Their Effects on Independent and Dependent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8, pp.80-89.

25) 변영계, 김영환 공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 학지사, 1997), p.131.

26) D. P. Ausubel, "The Facilitation of Meaningful Verbal Learning in the Classroom, *Educational Psychology*, 12, pp.162-178.

학습의 틀을 살펴보았는데, 종합해 보면 강의식 수업에서 첫단계는 학습문제 파악단계로 볼 수 있다. 강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습자와 친화관계를 형성하고 전시학습을 기억을 통해서 유발시키고 학습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둘째단계는 학습문제를 해결하기는 단계로서, 관련되는 개념, 법칙, 원리 등을 설명해나간다. 학습자들의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CD 타이틀 등의 시청각 자료등을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도 좋다.<sup>27)</sup> 셋째단계는 일반화단계로서 문제해결과정을 통하여 획득된 개념이나 기능을 적용하고 연습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학습내용을 정리해주고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주면서 예제를 제시하게 된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필요한 부분은 심화하여 설명해준다. 자시예고를 해줌으로써 학습의 지속성을 유지하게 된다.

그런데 강의식 수업의 모형은 단순하게 제시될 수 밖에 없다. 교수자에게 전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방식임으로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자유자재로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강의식 수업의 성패는 학습내용을 설명이나 해설에 의해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교수자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명은 논리적으로 조직되어 제시되어야 하고, 발문은 학습자들의 학습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야 하고, 예는 적절하게 드는 것이 중요하다.

### 3.1.2 시청각매체 활용의 원리

#### (1) 시청각매체의 특성

시청각매체는 넓은 의미로 시각매체와 청각매체를 통틀어 말 하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시각과 청각이 함께 사용되는 매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시각에 의존하는 그림, 사진, TP, 슬라이드 등의 시각매체나 청각에만 의존하는 오디오 같은 청각매체와 구분된다. 그리고 시청각매체는 컴퓨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나 상호작용 비디오 등과는 달리 역동적인 상호작용성이 없다는 점에서 상호작용매체와는 구별되며, 시청각 자료의 활용은 교수자에 의해서 취사선택된다는 점에서 수업식 교육의 범주에 포함시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시청각 매체는 주로 비디오 카메라에 의해 제작되고 VTR에 의해 시청되는

27) John D. McNeill, Jon Wiles, *The Essentials of Teaching-Decisions, Plans, Methods*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0), p.216.

비디오 자료, 영화제작용 카메라에 의해 제작되고 영사기를 통해 활용되는 영화, 그리고 방송국에서 카메라로 제작, 송출되어 TV나 VTR을 통해 활용되는 교육방송, 컴퓨터에 의해 제작되어 컴퓨터로 활용될 수 있는 CD, DVD(digital video disk) 자료 등이 있다.

시청각매체가 갖는 특성은 ① 녹화와 시청의 즉시성을 들 수 있다. ② 내용표현방식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비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시청각매체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반복사용을 들 수 있다. 비디오 테이프나 CD, DVD에 입력된 자료는 적절히 보관하고 운용한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다. ④ 사실성을 들 수 있다. 시청각 매체에 의해 녹화된 자료는 현실적이고 사실과 관련성이 높은 정보의 제공으로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고 학습의 전이가 쉬울 뿐만 아니라 학습된 내용을 실제상황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⑤ 교수 학습내용의 표준화를 들 수 있다. 시청각자료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에 따른 개인차를 줄일 수 있다. ⑥ 개별적 수업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교수-학습내용의 표준화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제작되는 시청각매체는 교수자 없이 실시되는 개별적 학습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sup>28)</sup>

시청각매체의 장점은 강의로 일관된 코스에 다양성을 불어넣어주고 토의와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가 있다.<sup>29)</sup> 우선 시청각 매체를 이용하면 아주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이용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해 문제가 되는 상황이나 과제를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으며, 이러한 현장감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것은 나중에 실제상황에서의 전이와 적용을 빠르게 해준다. 둘째, 시청각 매체의 활용은 정의적 영역의 학습에 큰도움을 줄 수 있다. 가치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교육에서는 지적으로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보여주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동적인 자료의 제시는 중요한 장점이 된다. 셋째, 학습자가 동질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일정시간 같은 영화나 비디오를 보게되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28) 박병학 편저, 「매개적 수업기술」(서울 : 교육과학사, 1994), pp.144-148.

29) 허운나, 「교육방법과 교육공학」(서울 : 정민사, 1986), p.135.

생겨 동질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넷째, 시청각매체는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게 하는데 장점이 있다. 영화나 비디오는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어서 특히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불론 시청각 매체의 활용도 단점이 있다. 첫째로 많은 준비가 요구되며 비용이 크다. 둘째, 시청각자료는 많지만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많지않아 개발과 보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시청각자료의 선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잘못된 가치를 주입시킬 수 있다. 시청각자료는 객관성을 지닌 것으로 착각을 하게 하여 가치를 오도할 수 있다. 넷째, 시청각자료가 교수방법으로 활용되기보다 단지 편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의를 내치하기 위해 남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지만 시청각 자료의 활용은 강의식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통일교육에서 처럼 다른 체제의 문화와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시청각자료의 활용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 중심의 교사주도적 주입식 강의가 주가 되고 있는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통해 현실감각을 높임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가치관과 판단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2) 시청각 매체활용 모형

수업에 활용할 매체와 자료를 선정하는 것은 수업의 목표와 수업방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매체나 다른 자료를 선정하는 것은 수업방법의 선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수업방법의 선정은 수업목표와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방법, 매체, 그리고 자료를 선정하는 것은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활동은 다음의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sup>30)</sup>

① 수업방법의 선정 : 매체의 선정에 앞서서 결정되어야 할 것은 바로 수업방법의 선정이다. 수업방법의 선정은 수업내용의 특성과 수업목표를 잘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 수업에 적합한 교수매체의 선정 : 교수매체의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선정된 수업방법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나 역할에 맞는

30) 변영계, 김영환 공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 학지사, 1997), pp.254-256.

매체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비투사자료, 시각매체-유인물, 비디오자료, 슬라이드 각종 설명서와 안내서 등, 청각매체-오디오 등, 시청각자료- 비디오, 영화, 교육방송, 멀티미디어, CD-i 등). 여기서도 역시 수업목표의 성격과 수업내용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크기(대집단, 소집단, 개별학습), 선수학습능력(문자해독능력), 수업목표의 성격(지적영역,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등을 고려한다.

③ 선정된 교수매체에 적합한 자료의 선정, 수정, 또는 설계 : 교수매체를 선정하고 나면 그 매체를 활용하기 위한 자료 즉 소프트웨어를 선정하여야 한다. VTR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남은 문제는 어떤 비디오 테이프를 고를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반대로 자료가 먼저 선정되고 다음에 매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수업방법과 교수매체와 자료의 선정이나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수업설계가 형성되게 된다. 수업상황에서 시청각매체를 활용한다는 것은 강의식 수업보다 더욱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시청각매체 자체가 반드시 학습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획이 철저해야 한다. 수업설계는 시청전 사전점검, 시청활동, 시청후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1단계 : 시청전 점검

미리 매체를 시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봐야 한다. ① 학습목표의 달성에 도움을 주는가? (효과성) ② 학습목표의 달성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가? (효율성) ③ 학습자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내용과 구조인가? (매력성) ④ 학습자들에게 도덕적으로 안전한 내용인가? (안정성) ⑤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며 사용된 언어는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한가? (선수학습면) ⑥ 화질과 음질은 양호한가? (기술성) ⑦ 활용하는 장비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설비면) ⑧ 활용하는데 필요한 환경은 구성되어 있는가? (환경면) ⑨ 학습자들의 주의를 집중하기에 충분한가? (주의집중성) ⑩ 최신의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가? (시사성)

### 2단계 : 시청활동

교수자는 시청하기 직전에 프로그램의 개요와 특징, 그리고 선행조직자를 제시하고 특히 주의해서 보아야 할 요소와 부분을 지적해준다. 프로그램의 시청은 교수자와 학습

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 좋으며 시청중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청도중 학습자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는지,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한다. ② 보충설명이나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메모한다. ③ TV나 스크린에 확대되어 제시된 결론이나 사건의 인상에 대한 오해나 착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보충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

### 3단계 : 시청후 활동

시청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간단한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청시간이 길었다고 생각되면 꼭 정리하도록 하며, 시청중에 한 메모를 토대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설명을 한다. 또한 시청내용에 직접해보는 활동이 요구되는 것이면 함께 해보도록 한다.

이상으로 시청각매체활용 수업모형을 3단계로 나누어 제시했는데 시청각매체활용 수업은 강의식 수업과 병행해서 시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청각 자료의 사용시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체수업시간의 1/3을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넘겨야 할 경우에는 중간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또한 프로그램의 특정부분만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음을 주목해야 한다. 결국 시청각매체의 활용수업도 교수자가 중심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시청각자료의 홍보, 시청각교재의 개발, 운용하는 교수자의 능력과 무관하지 않다.

## 3.1.3 멀티미디어와 인터넷 활용의 원리

### (1) 컴퓨터의 교육적 특징

컴퓨터를 활용한 동화상과 소리들의 시청각적 내용이 제시되는 멀티미디어, 수신자와 송신자가 동시에 보내고 받아볼 수 있는 화상통신 등도 넓은 의미에서 시청각매체에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상호작용 매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청각매체와 구분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멀티미디어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림, 필름 등의 동화상과 만화, 글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반응에 따라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이 교수매체중심의 수업이 되거나 교수보조자료로서 역할을 하거나 개별화학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건 간

에 일정한 가치를 내포하고 학습자들에게 제시된다는 점에서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치주입식 수업도구로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의 장점은 컴퓨터가 가지는 다양한 기능의 활용에서 꼽을 수 있다. 컴퓨터는 대량의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고 모뎀 등 각종 통신 시스템을 이용하므로 정보와 데이터의 송수신이 자유롭다는 점 등이 컴퓨터가 가지는 장점이다. 그러므로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프로그램도 여러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① 프로그램에 활용된 동화상, 그림, 음향효과 등은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학습동기를 높인다. 특히 멀티미디어의 시각정보와 청각정보의 적절한 결합은 학습효과를 높인다. 시각정보와 청각정보의 동조성에 대한 연구들은 이들이 적절히 동조되었을 때 학습효과를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sup>31)</sup> ② 개별학습자의 요구나 반응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서 학습의 개별화 효과를 높인다. ③ CD-ROM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어서 정보의 수집과 분류, 정리를 통한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 ④ 개별학습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저장하고 분류하며, 빠른 시간내에 분석이 가능하여 개별적 처치를 용이하게 해준다. 이런 기록은 추후지도와 복습 등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의 단점은 ① 수업목적에 맞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②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③ 인터넷을 이용한 수업을 할 때 음란물이나 폭력물 등의 비교육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방법이 아직 없다. ④ 프로그램의 제작과정과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⑤ 교수자들의 첨단매체에 대한 부적응과 학습자들의 기능우선주의로 인한 교육의 본질이 호도될 수 있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은 미래의 교수방법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up>32)</sup>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은 학업성취도의 향상과 학습시간의 절감 면에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sup>33)</sup> 컴퓨터 보조수업

31) J. Barnard, "Multimedia and the Future of Distance Learning Technology", *EMI*, 29(3), 1992. pp.139-144.

32) John D. McNeill, Jon Wiles, *The Essentials of Teaching-Decisions, Plans, Methods*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0), p.225.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 CAI)이나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활용,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은 가치주입식 교육방식으로서 교육효과 증진뿐만 아니라 학습의 개별화와 상호작용성으로 인하여 창의성과 종합적인 사고를 배양하는데도 큰 몫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의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첨단매체에 대한 적응력을 갖도록 개인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2) 컴퓨터 활용 교육의 원리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CAI)의 유형에는 개별교수형, 반복연습형, 게임형, 모의실험형, 발견학습형, 문제해결형, 자료제시형 등이 있다.<sup>34)</sup> 각 유형별 활용기준과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의 유형과 특성

유형	활용	교사의 역할	컴퓨터의 역할	학습자의 역할
반복 학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배운 내용의 반복연습</li> <li>· 기본적인 사실이나 정보복습</li> <li>· 수업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반복 연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된 내용의 수업을 먼저 제시</li> <li>· CAI분제의 수준확인</li> <li>· 학습자 진도의 확인과 조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제시</li> <li>· 즉각적 피드백 제시</li> <li>· 학습자의 진도를 디스크에 저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에 대답</li> <li>· 답의 정오답 여부를 확인 및 피드백을 통한 반복학습</li> </ul>
개인 지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학습내용의 제시</li> <li>· 개별지도가 많이 필요한 내용의 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학습자의 진도 확인 및 관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내용 제시</li> <li>· 학습내용에 대한 질문, 정답 확인 및 도움 제시, 피드백 제공, 요약제시, 학습경험 및 성취도 저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학습함</li> <li>· 질문에 대답</li> <li>· 필요시 질문이나 도움사용</li> <li>· 피드백을 통한 학습</li> </ul>

33) M. C. Lim, "The Art of Multimedia and the State of Education", *Educational Researcher*, Jan.-Feb., pp.30-33.

34) 변영계, 김영환 공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서울 : 학지사, 1997), pp.358-359.



유형	활용	교사의 역할	컴퓨터의 역할	학습자의 역할
게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습용</li> <li>·동기를 높일 필요가 있을 때</li> <li>·개별적 또는 소집단간의 경쟁을 통해 동기를 높일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시간의 제한</li> <li>·진도의 관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자, 심판, 또는 점수기록자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실, 전략, 기능들의 학습</li> <li>·자신의 선택에 대한 평가</li> <li>·컴퓨터나 동료와의 경쟁</li> </ul>
모의 실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제상황과 유사한 상황의 제시가 필요할 때</li> <li>·학습활동이 위험하거나 수행에 따른 비용이 비쌀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제시</li> <li>·배경과 규칙의 설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할분담</li> <li>·상황의 규칙, 데이터 그리고 학습자의 결정에 따른 결과의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결정 연습</li> <li>·선택</li> <li>·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 분석 및 평가</li> </ul>
발견 학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설검증</li> <li>·시행착오를 통한 학습</li> <li>·데이터 탐색</li> <li>·귀납적 접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문제의 제시</li> <li>·학습진도 관찰 및 조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 및 자료의 탐색기능 제시</li> <li>·학습자의 탐색 활동 기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설의 설정 및 확인을 통한 원리나 규칙을 발견</li> </ul>
게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습용</li> <li>·동기를 높일 필요가 있을 때</li> <li>·개별적 또는 소집단간의 경쟁을 통해 동기를 높일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시간의 제한</li> <li>·진도의 관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자, 심판, 또는 점수기록자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실, 전략, 기능들의 학습</li> <li>·자신의 선택에 대한 평가</li> <li>·컴퓨터나 동료와의 경쟁</li> </ul>
모의 실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제상황과 유사한 상황의 제시가 필요할 때</li> <li>·학습활동이 위험하거나 수행에 따른 비용이 비쌀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제시</li> <li>·배경과 규칙의 설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할분담</li> <li>·상황의 규칙, 데이터 그리고 학습자의 결정에 따른 결과의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결정 연습</li> <li>·선택</li> <li>·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 분석 및 평가</li> </ul>

유형	활용	교사의 역할	컴퓨터의 역할	학습자의 역할
발견 학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설검증</li> <li>·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li> <li>· 데이터 탐색</li> <li>· 귀납적 접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분제의 제시</li> <li>· 학습진도 관찰 및 조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및 자료의 탐색기능 제시</li> <li>· 학습자의 탐색 활동 기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설의 설정 및 확인을 통한 원리나 규칙을 발견</li> </ul>
문제 해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설정</li> <li>· 가설진술</li> <li>· 데이터검증</li> <li>· 해결책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설정</li> <li>· 학습자 배정</li> <li>· 해결책의 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제시</li> <li>· 데이터 조작</li> <li>· 데이터 관리</li> <li>· 피드백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의 규명</li> <li>· 해결책 제시</li> <li>· 독립변인들의 조작</li> </ul>
자료 제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검색</li> <li>· 자율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색방법 제시</li> <li>· 특징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제시</li> <li>· 필요에 따라 사용자용 노트와 프린트 기능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의 탐색, 수집, 비교, 분석, 정리</li> </ul>

이상과 같은 CAI의 여러 유형중 주입식 교수법으로 가장 적합한 형태는 개인 지도형이라 할 수 있다. 개인지도형의 구조와 절차는 다섯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단계는 개요부문이다. 개인지도형의 첫머리가 되는 개요부문은 대체로 목표제시, 선행학습의 상기, 학습자들의 학습순서선택 및 사전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단계는 정보제시 단계다. 정보는 일반문자나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을 여러가지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정보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보만을 포함시키고,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는 분명히 구분해주며, 일관성있고 대상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셋째 단계는 질문과 응답의 단계이다. 개인지도형에서는 학습자들에게 빈번히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을 던지는 주된 목적은 학습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자에게 연습을 강요하여 학습참여도를 높이고, 학습자들이 정보를 얼마나 잘 기억하고 이해하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에 어떤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넷째 단계는 응답에 대한 판단단계이다. 학습자들에게 피드백을 제시하고, 다음 학습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결정내리고, 학습자들의 학업성취에 관한 자료를 저장하

기 위해 응답의 적합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반응은 정확한 반응, 부정확한 반응, 부분적으로 정확한 반응 및 적당하지 않은 반응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다.

다섯번째 단계는 피드백과 수정의 단계이다. 학습자의 응답이 정확한 경우에는 격려의 피드백을 해준다. 응답이 적합하지 않을 때도 피드백은 긍정적이며, 교정적인 것이 좋다. 시간적으로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바람직하나 지연된 피드백이 사용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끝맺음 단계인데 학습의 종료는 학습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개인지도법에 의한 학습이 완전히 끝난 경우에는 그 단원의 주요 내용을 향하는 것이 좋다. 종료후에는 컴퓨터 기록에 의해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며, 앞으로의 계속학습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 3.2 탐구식 교수방법의 원리

앞절에서 살펴본 주입식 교수방법과는 달리 탐구식 수업방법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이해력을 개발하도록 하며, 교수자는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 학습자들이 발견을 경험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방법이 탐구학습의 기본적인 가정이다.

특히 가치탐구(values exploration)는 가치교육의 한 접근법이다. 가치탐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개인 자신의 자아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다.<sup>35)</sup> 가치탐구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결정된 가치들을 주입시키기 보다는 학습자 자신의 가치들을 명료화 확인하는 방법이나 과정들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다.<sup>36)</sup>

탐구학습이라고 해서 이 수업방식이 학습자들에게 주는 교수자의 정보전달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교수자는 수업목표를 깊이 숙고해야 하며, 수업활동에 적당한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을 설명해줄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탐구수업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수자가 활용할 수 있는 수업기법에는 질문, 토론, 문제해결, 역할극 등이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학습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고, 합리적으로

35) 남궁달화, 「가치탐구교육론」 (서울 : 철학과 현실사, 1994), p.134.

36) 김종문, 「대화학습의 도덕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1995), pp.93-95.

사고하고 관계를 파악하고, 지적 기술을 개발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탐구학습의 시원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나 루소의 이동중심 교육사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 현대적 원천은 반성적 사고를 강조한 듀이의 사상과 브루너의 발견학습, 마시알라스의 사회탐구모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가치탐구의 학습모형들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가치명료화모형, 가치갈등모형, 가치분석모형, 의사결정모형, 가치탐구모형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몇가지 가치탐구모형들의 수업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3.2.1 가치명료화 수업원리

#### (1) 가치의 준거

가치명료화(value clarification) 모형은 가치화과정(valuing process)을 통해 가치혼란을 감소시키고, 일관된 가치체계를 형성하도록 학습자들을 도우려는 시도이다. 가치화과정이란 하나의 가치가 개인에게 내면화되는 과정(선택되어서 행동 패턴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데, 가치가 될 수 있는 일곱가지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sup>37)</sup>

① 가치는 자유롭게 선택되는 것이다. 가치가 정말로 개인에 의해 가치가 되려면 자유롭게 선택되어져야 한다. 자유로이 가치를 선택했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람은 더욱 더 그 가치가 자기자신에게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다.

② 가치는 대안들 가운데서 선택되는 것이다. 선택을 해야 할 사람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인식했을때 어떤 것을 가치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야할 상황에서 대안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가치롭다고 여기는 것을 발견하기가 더욱 쉬울 것이다.

③ 가치는 각각의 대안의 결과에 대해 사려깊은 고려가 있고난 후에 선택되는 것이다. 충동적이거나 사려없는 선택은 가치가 되지 못한다. 각각의 대안의 결과가 분명히 이해될 경우에만 지성적 선택이 가능하다. 여기에 중요한 인지적 요소가 있다. 각 대안에서 나오는 결과를 알면 알수록 사실에 바탕을 둔 선택, 즉 충분한 지혜로부터 나온 선택을 더욱 잘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혜를 최대한 이용하지 않은 선택들은 가치

37) L. E. 레쓰, M.하이먼, S. B. 싸이본 공저, 정선삼, 조성민 공역,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 천학과 현실사, 1994), pp.45-48.

라는 용어에서 제외시키도록 한다.

④ 가치는 자랑스럽고 소중한 것이다. 어떤 것을 가치라고 할 때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자유로이 사려깊게 선택했을지라도 선택을 하는데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쟁에서 싸우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선택을 타당하게 만드는 상황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 여기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가치는 기쁘게 선택한 것으로부터 나온다.

⑤ 가치는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각자는 그의 가치를 기꺼이 공언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할 때는 그의 가치를 기꺼이 옹호할 수도 있어야 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가 선택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여긴다면, 합당하게 요구되었을 때 자신의 가치입장을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가치의 문제가 아닌 다른 것일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공언하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선택들은 가치라는 용어에서 제외시키도록 한다.

⑥ 가치는 선택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가치가 존재할 수 있으려면 삶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가치가 실제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가치일 수 없는 것이다. 실제생활에서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결코 가치가 될 수 없다. 어떤 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말대로 전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⑦ 가치는 반복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어떤 것이 가치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 속에서 여러 경우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가치는 여러 상황에서, 그리고 상이한 경우에 나타나게 된다. 일생에 단 한번 행동에 나타난 것을 가치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가치란 지속성이 있기 마련이다. 가치는 생활의 어떤 양식으로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준거들은 가치탐구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일련의 절차와 방법이다. 어떤 것이 가치가 될 수 있으려면 이들 준거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sup>38)</sup> 일곱가지 준거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가치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가치탐구 과정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가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일곱단계의 과정을 적용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다.

38) R. C. Hawley & I. L. Hawley, *Human Values in the Classroom : A Handbook for Teachers* (New York : Hart Publishing Co. Inc., 1975), p.33

## (2) 가치명료화 교수기법

### 1) 명료화 반응

이것은 학습자들이 생활속에서 선택하고, 존중하고, 실행하는 일의 종류에 대해서 성찰을 나타내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이것을 나타내는 반응양식이다. 반응을 명료화하는 기본적인 의도는 학습자들이 그들의 행동과 아이디어를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참가치가 무엇인가를 명료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예) 교실토론에서 한 학습자가 자신의 정치적 관점에 있어서 자유주의자라는 것을 명료화하고 있다.

교수자 :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너는 자유주의자라고 말했지?

학습자 : 네.

교수자 : 어디서 그런 생각을 얻었지?

학습자 : 아마 대부분 저의 부모님에게서요.

교수자 : 다른 입장에 대해서도 알고 있니 ?

학습자 : 그럴거예요.

교수자 : 알겠다.

### 2) 가치지

가치지는 학습자들이 성찰하고, 쓰거나 이야기하도록 하는 가치시사가 담긴 사고를 자극하는 이야기, 진술, 또는 질문을 담은 종이이다. 질문들의 목적은 그 문제에서 학습자 하나하나를 가치명료화 과정으로 이끌어가는데 있다.

예)

가치지. 시민의 자유

다음의 글을 읽고 당신의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때까지 이 글안에 있는 말들을 고치시오. 고친과정은 나중에 소집단 토론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유는 민주사회의 존재의 기초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허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계내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순서정하기

이 기법은 학습자에게 선과 악의 상대적인 입장에 비추어 대안들을 변별하도록 요구하며, 우선순위에 비추어 선호를 명료화하고 검토하기를 요구한다. 학습자에게 제시된 선택들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까지, 아주 사소한 종류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것으로 배열할 수 있다.

예) 아래에 열거된 장소앞 빈줄에 당신이 방문하고 싶은 순서대로 번호를 쓰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생각해두시오.

---칠레 ---호주 ---러시아 ---일본 ---미국---북한 ---이스라엘 ---이집트 ---브라질 ---  
프랑스 ---중국 ---쿠바 ---영국 ---덴마크

### 4) 미완성문장

이것은 미완성된 질문을 제작하여 학습자들에게 완성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미완성 질문은 학습자들이 그들의 활동, 태도, 믿음, 또는 다른 가치징표들을 언제든지 명료화하고 같이 생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 통일이 1년후에 이루어진다면 나는 .....을 하고 싶다.

### 5) 5분 발언대

학습자들의 생각, 또는 감정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해진 5분동안 자유롭게 연설을 하게 하는 것이다. 아무런 논평없이 하는 5분발언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공언할 수 있는 시간이다. 여기서 쫓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연설하는 사람의 결점을 찾아낸다거나 공격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가치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언하는데 있다.

### 6) 조작된 사건

이 기법은 마음의 문을 열고 통찰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고안해내서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선택될 수 있다. 조작된 사건의 목적은 학습자들에게 실제 느낌이나 경험 또는 지식을 줄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비슷하게 극적으로 흉내내는 것이다.

예) 『1984』년이라는 오웰의 소설을 공부하기 전에, 교수자는 교실에 들어가서 지금

몸도 아프고 학습자들의 수업태도에 짜증이 난다고 말한다. 그 교수자는 학습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것과 아주 유사한 새로운 규칙을 정한다. 명료화를 실시해서 난폭한 분위기는 수그러들게 되고, 비록 조작되었지만, 직접 경험에 의해 전체주의에 대한 많은 통찰을 하게 된다.

7) 가치연속선

이 연습은 학습자들에게 양극단으로 언장되어 있는 문제의 선상에 그들의 입장을 표시하게 하여 특정한 주제나 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나중에 학습자들에게 필요하다면 그들의 입장을 택한 이유를 서로 교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한다.

예) 남북한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	:	:	:	:	:
즉시 통합에 대찬성.		경제적 통합에만 찬성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8) 둘중 하나 선택하기

이것은 학습자들에게 두개의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말로 나타내거나 글로 쓰게 한다. 선택한 것이 반대되는 경우 견해차의 이유를 토론하기 위해 두사람씩 짝을 짓거나 그룹을 짓는다.

예) 북한에 대한 사적인 송금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금지되어야 하는가?

9) 브레인 스토밍(brainstorming)

이 기법은 제한된 시간내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문제해결방안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수업참여자의 의견의 합치에 도달하게 하는 가장 질질한 방법이다. 브레인 스토밍은 많은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하여 아이디어의 발단, 반쪽자리 아이디어도 격려한다. 또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예) 북한 동포에게 사랑을 전하는 방법(제한시간 : 7분)

통일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방법 (제한시간 10분)



이상에서 살펴본 기법들외에도 가치명료화기법들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며<sup>39)</sup> 앞으로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법들은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업중에 활용할 수 있다. 가치명료화 기법은 3가지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sup>40)</sup> 첫째, 매주 혹은 매일, 담당교수자가 일정시간을 특별히 할애하여 이 기법을 적용해보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교수자가 주요 시사문제를 학습자들의 토론에 붙여보는 경우와 유사하다. 둘째, 가치명료화를 학교에 도입하는 또다른 접근법은 그것을 교과교육과 관련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과내용은 사실, 개념, 그리고 가치 수준에서 가르쳐질 수 있다.

셋째, 지식에 대한 탐구와 가치에 대한 탐구의 진보를 위해서 교과학습과 기술학습에 가치명료화전략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렇듯 수업내외적으로 가치명료화기법은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

### 3.2.2 가치분석 수업원리

#### (1) 이론적 근거와 교수전략

가치분석접근(value analysis approach) 이론은 개인이 특수한 가치를 선택할 때에 논리성과 이유를 충분히 밝히고 가능하다면 증거도 제시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가치관 확립을 도우려는 방법이다.<sup>41)</sup> 가치명료화와 비슷한 데가 있지만 약간 다르다. 가치명료화는 가치를 명백히 하려고 하나 선택하는 가치의 논리성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치분석은 가치의 논리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는 것을 중요시한다. 가치의 논리성이나 정당성이라는 것은 왜 자기 자신이 그 가치를 선택했는가의 이유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분석접근은 분석윤리학의 방법을 직접 가치교육에 적용한 것으로서 특히 헤어(R.M.Hare) 싱어(M.G.Singer) 등과 같이 일상언어 분석에 입각한 윤리학 장르의 학설을

39) Louis E. Raths, Merrill Harmin, and Sidney B. Simon, *Values and Teaching*, 2nd ed. (Columbus :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 1978), : Sidney B. Simon, Leland Howe, and Harold Kirschenbaum, *Values Clarification : A Handbook of Practical Strategies for Teachers and Students* (New York : Hart Publishing Co., 1972).

40) 문용린, 「도덕과교육」(서울 : 갑을출판사, 1988), pp.243-244.

41) 차경수, 「현대의 사회과 교육」(서울 : 학문사, 1996), pp. 298-299.

그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가치판단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타당성을 갖는다는 입장에 반대하며, 또한 가치판단을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의 표현으로 보는 입장에 반대한다. 그리고 가치판단을 사실판단으로 환원하여 사실판단의 참 또는 거짓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의 참 또는 거짓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는 직관주의 윤리설에 대하여도 반대한다. 또한 가치판단을 판단자의 주관적인 선호감정이나 태도의 표현으로 보는 정의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이들은 가치판단이 사실판단처럼 객관적으로 참 또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가치분석이론은 이처럼 분석윤리학자들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사회적 문제나 가치에 관한 선택으로 나아가는 비교적 개인적인 접근이다. 가치분석은 학습자들이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도와주며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비교적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가치 문제에 대해 지적, 개인적, 사회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sup>42)</sup>

가치교육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학습자들에게 일련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최선임에 틀림없는 방식으로 학습자들이 자신의 미래를 지향할 수 있게 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치분석을 수행하는 길은 여섯가지 과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가능하다.

첫째로 가치문제를 확인하고 명료화하는 것이다. 가치문제가 가끔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 그러한 문제는 평가대상을 어떤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판단해야 할 평가대상을 명료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치문제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가치질문이 불분명한 때는 가치문제에 대한 논쟁이나 토론이 갈팡질팡 혼돈을 일으키고 실패하기 쉽다. 그래서 가치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용어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거나 용어가 언급하는 것과 언급하지 않는 예를 제시함으로써 명료화 할 수 있다.

둘째로 사실들을 수집하고 조직하는 것이다. 모든 가치판단은 어떤 사실적 근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것은 모든 가치분석 교수전략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가치판단과

42) Carl Ubbelohde and Jack R. Fraenkel, eds., *Values of the American Heritage : Challenges, Case Studies and Teaching Strategies* (Washington :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1976), p.150.

관련된 사실들을 수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수집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다음을 확실히 해야한다. ① 가치주장을 관련된 사실들의 일부만으로 잘못 수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② 문제의 평가대상을 판단하는데 관련된 사실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도록 한다. ③ 학습자들이 사실자료의 복잡함에 당황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실수집을 하도록 한다.

셋째로 사실주장을 평가하는 것이다. 가치분석의 사실수집단계에서는 많은 가능성 사실 진술들이 수집될 것이다. 만약 학습자들이 믿을 만한 가치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그 결정은 참이거나 증거에 의해 충분히 증명된 사실진술에 근거를 두어야만 한다. 이것은 교수자가 학습자들이 채택한 사실주장에 대하여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로 사실의 관련성을 명료화하는 것이다. 사실들로 구성된 전제와 가치원리라는 또 다른 전제가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즉 사실들이 판단될 가치대상에 관한 것인지, 판단자가 자신의 관점으로부터 그 사실들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값을 부여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다섯째로 임시적으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상의 네단계를 거친후 교수자는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가치판단을 내리도록 한다. 만일 가치 판단자가 이전의 단계들, 특히 사실을 수집하는 단계를 충실히 수행해왔다면, 그는 이미 임시적인 가치결정의 준비가 된 상태이다. 사실 수집에 있어서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규칙들은 평가자로 하여금 가치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섯째로 원리의 수용가능성을 검사하기다. 학습자들이 행한 가치판단 속에 포함된 가치원리를 전적으로 판단자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검사하는 단계이다. 평가자가 가치원리의 수용성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새로운 사례검사 : 새로운 사례검사는 두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가치원리를 명백하게 구성한다. 둘째, 판단자는 가치원리와 논리적으로 관계있는 다른 경우들에 가치원리를 적용한 결과로서 귀결되는 가치판단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 포섭검사 : 이 검사는 검사해야 할 가치원리가 그 가치원리보다 더 일반적인 가치원리의 하위원리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정당화하는 방법이다.

③ 역할 교환검사 : 이 검사는 가치원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가상에 의해 취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자신의 가치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④ 보편적 결과검사 : 판단자가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는 가치원리를 보편적으로 적용한 결과를 상상한 후 계속 자신의 가치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 (2) 가치분석과정

가치분석의 교수전략은 몇가지 기본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sup>43)</sup> 본질적으로 가치분석 전략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연구에 학습자들이 단계적으로 몰입하도록 한다. 즉 ① 가치부과된 상황이나 딜레마를 지닌 사실들 ② 이용가능한 대안적 선택들 ③ 각 대안들에 대한 결과들 ④ 자료와 추론의 측면에서 이러한 결과들이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증거들 등이 그것이다. 가치분석 전략에서 학습자들은 최선의 행위나 자신이 선호하는 행위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견문이 넓은 판단을 반영하는 선택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수정도표나 가치에 대한 논점들을 검토하는 문제들을 사용할 수 있다.<sup>44)</sup> 연구 검토된 논점들은 본질적으로는 개인적인 것일 수 있으며 학습자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혹은 이러한 논점들은 그 지향에 있어 좀 더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다.

가치분석의 과정은 여러가지로 표현되지만 널리 알려지고 유용한 것은 뱅크(James A. Banks)와 프렌켈(Jack R. Fraenkel)의 모델을 들 수 있다.

뱅크는 가치선택의 정당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아홉단계를 거쳐야한다고 본다.<sup>45)</sup> ① 가치문제를 정의를 인식한다. : 관찰-분별 ② 가치와 관련된 행동을 기술한다. : 기술-분별 ③ 기술한 행동이 예증하는 가치를 명명한다. : 동일시-기술, 가설설정

43) Barry K. Beyer, 한면희 외 공역, 「사회과 탐구논리」(서울 : 교육과학사, 1988), p.384.

44) Carl Ubbelohde and Jack R. Fraenkel, eds., *Values of American Heritage : Challenges, Case Studies and Teaching Strategies* (Washington :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1976), pp.171-208.

45) James A. Banks, 최병모 외 공역, 「사회과 교수법과 교재연구」(서울 : 교육과학사, 1993), p.448.

④ 기술한 행동에서 상충되는 가치들을 분석한다. : 동일시-분석 ⑤ 분석된 가치원천에 대하여 가설을 세운다. : 가설설정 (가설을 옹호하는 데이터 인용) ⑥ 관찰된 행동이 보여주는 대안이 되는 가치를 명명 : 회상 ⑦ 분석된 가치들로 야기되는 예상되는 결과들에 대해 가설을 수립한다. : 예측, 비교, 대조 ⑧ 가치의 선호를 표명한다 : 선택 ⑨ 가치선호의 이유, 원천, 예상되는 결론들을 이야기한다. : 정당화, 가설설정, 예측.

이와 같이 아홉단계이기는 하지만 크게보면 문제의 제기, 가치문제 및 가치갈등의 확인, 대안의 검토와 결과 예측, 가치의 선택과 행동 등 네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처럼 대안의 제시와 그 결과에 대한 예측, 그런 것으로부터 학습자 자신이 특수한 가치를 선택하고 그 선택의 논리적 정당성을 발견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에서 가치의 내면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프랜켈은 가치분석 과정으로서 7단계를 제시한다.<sup>46)</sup> ① 딜레마 또는 논점 : 무엇이 문제이며 논점인가? ② 대안적 행위 또는 선택들 :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③ 가능한 결과 탐색 : 만약 이와같은 일이 행해진다면 결과로서 무엇이 발생할 수 있는가? ④ 결과의 가능한 결과들 : 만약 이와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그외의 어떤 것이 발생할 수 있는가? ⑤ 증거 :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는 곳에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⑥ 평가 : 어떤 결과가 바람직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⑦ 결정 또는 선택 : 어떤 것이 결정되거나 선택되어질 수 있는가? 이렇게 가치분석전략은 학습자들이 어떤 대안들이 선택되어져야만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끝마무리를 짓는다.

이러한 가치분석 전략에서는 학습자들은 예견되는 결론이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나 자신들의 선택의 효능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정도, 또는 연구되고 있는 논점이나 딜레마 속에포함된 가치의 개념을 넓힐 수 있는 정도 등을 결정하는 실제의 삶이나 실험적인 상황에 자신들의 결정을 쉽게 적용시킬 수 있다. 학습자들은 선택된 각각의 대안들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는 가정된 결과들을 개인이나 집단의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제시된 대안들을 평가해야만 하면 또한 그것이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미학적이든 정치적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개인이 그 논점을 보는 견해를 통해 다양한 관점들에 의해 제시된 대안들을 평가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 전략은 대단히 신중한 지적 분석과정

46) Carl Ubbelohde and Jack R. Fraenkel, eds., *Values of American Heritage : Challenges, Case Studies and Teaching Strategies* (Washington :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1976), p.204.

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학습자들의 특정가치에 대한 이해를 정의할 뿐 아니라 학습자들의 사고기능이나 탐구기능의 발달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가치분석전략의 기본틀을 중심으로 수업의 수준에 적절하게 모델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치분석은 학습자들이 중심이 되는 논점이나 사회적 중요성을 가진 논점, 또는 연구되고 있는 어떤 사회과 영역에서 나온 논점 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와같은 분석은 도덕적, 법적, 미학적, 논리적, 경제적, 또는 여타 차원을 가지는 논점들로 나아갈 수 있다. 여기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가치분석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가치분석수업은 학습자중심의 수업이고 교수자는 여러가지 준거와 원리를 형식화할 수 있고, 규범적 구조와 반대되는 준거와 원리를 선택하도록 자율성을 허용하거나 조장할 수 있다.

### 3.2.3 가치갈등 수업원리

#### (1) 이론적 배경

가치갈등의 해결을 위한 수업은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면화한 규범들이 실제의 생활장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인 사례와 더불어 검토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치갈등 수업모형은 민주사회에서 학습자들에게 공공문제를 분석하고 자기입장을 취하도록 돕기 위해 개발된 수업전략의 하나이다.<sup>47)</sup> 현대인은 어떤 공공문제에 봉착하면 자기 다른 입장을 견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논의의 전개가 필요하다. 민주사회에서는 공공문제에 대하여 자기 다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갈등이 야기되지만 그 갈등을 취급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민주시민의 육성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과에서의 가치갈등 수업은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는데<sup>48)</sup> 올라비와 웨이버가 교실에서 공공문제를 교수하는 모형을 체계화함으로써<sup>49)</sup> 오늘날까지 논쟁문제 교수모

47) B. Joyce & M. Weil, *Models of Teaching* (Engle wood-Cliffs,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1972), p.48.

48) R. H. Muessig, *Controversial Issues in Social Studies : A Contemporary Perspective* (Washington, D. C. :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1975), pp.22-25.

49) Donald Oliver & James P. Shaver, *Teaching Public Issues in the High School* ( Boston : Houghton

형의 전형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논쟁문제 교수의 목적은 다원주의사회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의 기본가치를 더욱 공공화 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기본가치 그 자체는 대안모색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기보다 가치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가치갈등수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가정하고 있다.<sup>50)</sup> 첫째로 현대생활에서 사람들은 사회를 보는 관점이나 가치의 우선 순위를 가름하는데 있어 개개인마다 다양한 점과 각각의 사회적 가치들이 합법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생산적인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복잡하고 논의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셋째로 현대인은 공공문제에 직면하여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때에는 민주사회의 근본 가치개념인 정의와 자아 실현, 자유, 타인에 대한 사랑과 이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존엄성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다.<sup>51)</sup>

가치갈등을 일으키는 논쟁문제를 교수하기 위해서는 주제나 문제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조직하며, 자료를 구성해야 하는데 교재에는 논쟁문제가 충분히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딜레마를 제작하거나 일상적인 대화나 신문, 텔레비전 등의 대중매체나 시사문제에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딜레마의 제작은 크게 주제접근법, 역사적 위기 접근법, 문제중심접근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52)</sup> 주제접근법은 민주화정도, 자유와 평등 등 여러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다. 역사적 위기접근법은 역사상의 여러가지 위기를 중심으로 논쟁문제를 조직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문제중심접근법은 오늘날의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가장 많은 문제를 구성할 수 있고, 실제로도 논쟁문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논쟁문제의 구성의 기준은 관심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뉴먼과 올

---

Mifflin Company, 1966).

50) B. Joyce & M. Weil, *Models of Teaching* (Engle wood-Cliffs,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1972), pp. 261-262.

51) Donald Oliver & James P. Shaver, *Teaching Public Issues in the High School* (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1966), pp.19-30.

52) Donald Oliver & James P. Shaver, *Teaching Public Issues in the High School* (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1966), pp.137-145.

리버는 평등, 복지와 안전, 정의, 재산의 다섯가지 문제를 논쟁문제의 구성요소로 들었다.<sup>53)</sup> 넬슨과 마이클스는 권력과 법, 경제문제, 만족주의와 애국심, 사회계급, 종교와 도덕, 인종과 소수민족, 성과 결혼 등 여덟가지를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sup>54)</sup> 뱅크스는 인권, 지구촌사회, 핵문제, 인종문제, 안권, 성차별, 신체장애자차별, 법질서 등 여덟가지를 구성요소로 제기했다.<sup>55)</sup>

가치갈등의 주제가 결정되면 상세한 부분에서는 교수자가 다양한 가치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논쟁문제에 관해서 다양한 시각을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은 학습자들의 자주적인 사고를 격려하면서 교수자가 교육적으로 학습자를 지도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2) 교수단계

교수단계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논쟁문제를 학습하기 위하여 전개하는 활동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크고 작은 수많은 이러한 활동을 몇개의 단계로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며, 또 학자와 학습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유형을 정형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교수단계의 제시는 교수활동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sup>56)</sup> 학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갈등수업은 크게 여섯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sup>57)</sup>

첫째 단계는 대부분의 교수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제기하는 도입단계이다. 여기서는 일차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그 문제가 제기하는 중요메시지, 문제가 제기된 배경, 문제와 관련된 이론과 주장 등을 검토한다.

둘째 단계는 가치문제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가치갈등 문제의 확인, 토론문

53) F. M. Newmann & D. W. Oliver, *Clarifying Public Controversy : An Approach to Teaching Social Studies*(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970).

54) J. L. Nelson & J. U. Michaelis, *Secondary Social Studies : Instruction, Curriculum, Evaluation*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80), pp.213-215.

55) J. A. Banks,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New York : Longman, 1990), pp.207-230.

56) 차경수, 「현대의 사회과 교육」(서울 : 학문사, 1996), p.233.

57) B. Joyce & M. Weil, *Models of Teaching* (Engle wood-Cliffs,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1972), p. 270.



제선정, 관련 사실과 가치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논쟁문제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실과 가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혼동하면 논쟁은 계속되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단계는 자기입장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문제사태를 보고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자기입장을 지지하는 다른 규범이나 덕목을 찾고, 자기입장을 자기언어로 진술하고 그 일관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택한 입장 혹은 태도를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한다는 것을 발표하게 한다. 사실상 자신이 택한 행위방식에 아무런 엄격한 근거의 제시도 사고도 하지 않는 습관은 도덕적 생활을 합리적으로 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

넷째 단계는 자기입장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가치가 갈등된 점을 입증한다. 자기입장의 소망스런 결과나 소망스럽지 않은 결과에 대해 확인한다. 관련된 규범들의 각각을 하나만 선택했을 때 그 결과를 예상해보도록 한다. 각 규범을 하나만 택했을 때의 결과를 예상해 보는 것은 관련된 규범들의 경중을 비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다섯째 단계는 자기입장을 수정,보완하는 단계이다. 문제사태와 비슷한 다른 사태를 찾아보고 자기의 입장을 새로운 사태에 비추어 보게 한다. 자기입장과 그 입장의 근거이유를 진술하게 하고 유사한 상황들을 검증한다. 그리고 입장을 수정한다.

여섯째 단계는 선택 및 결론을 내리는 단계이다. 가설적으로 제시된 여러개의 대안과 그 결과 중에서 원하는 가치와 대안을 선택하고 정당화 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이다.

이러한 수업은 결국 두가지 형태 중 어느 하나로 끝날 수 밖에 없다. 즉 하나는 모두가 합의하는 결론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팽팽히 맞선 주장으로 인하여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것이어서 그 결론을 보류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이러한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학습자는 자기가 선택한 입장을 명백하게 하면서 왜 그러한 입장을 선택했는지 그 정당성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자기가 선택한 가치의 원천, 그 결과 앞으로서의 행동 등을 예측하고 선택한 판단과 앞으로의 행동사이에 반복적으로 일관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여섯단계는 크게 분석과 토론의 차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분석의 차원은 문

제규명, 자기입장표명 단계를 말할 수 있으며, 이때는 주로 가치나 문제 등을 확인하며 문제점을 분석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토론 부분은 앞단계에서 분석된 것을 통해 확실한 자기입장을 취하고 수정보완해 나가는 차원이라 할 수 있다.

## 4. 통일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실제

### 4.1 가치갈등모형의 적용

(1) 학습주제 : 민족의 동질성회복

(2) 학습대상 : 중1(학습내용의 난이도를 조절함으로써 대상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음)

(3) 학습목표

- ①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한민족으로서 우리민족임을 설명할 수 있다.(지적)
- ② 분단되어 있지만 북한땅도 우리의 국토임을 알고 통일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정의적)
- ③ 남북분단이 우리민족 모두의 아픔임을 알고 북한돕기운동에 참여한다.(행동적)

(4) 수업준비물

- ① 자료 : 이산가족 화보, 이산가족상봉 비디오테이프, 우리나라 지도
- ② 실문지 : 북한의 땅을 우리 국토라고 볼 수 있는가?
- ③ 조사해올 내용 :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상황

## (5) 학습활동전개

단계	지도요소	교수활동	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문 제 의 식	* 갈등사태의 제시 -남북한의 입장을 간략하게 제시해준다	*우리나라 지도를 제시하고 북한이 우리의 국토인지 문제제기를 한다.  * 의견이 같은 학 생들을 모아 양 쪽으로 나누어 앉게 한다.	* 각자의 생각대로 대답한다.  * 각자의 생각에 따라 나누어 앉 는다.	* 설문지에 간략 하게 입장제시 의 이유를 적 어 대답하게 한다.  * 생각을 쉽게 하도록 북한에 두고 온 재산 이 있을 경우 통일이 되면 찾을 수 있을 지 생각해보게 한다.
	* 학습문제 확인	* 북한이 과연 우리의 국토일까?		
문 제 의 심 화 및 추 구	* 개인별 사고  * 자기입장의 선택	* 북한 땅이 우리 나라의 국토라 고 생각하는 사 람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각각 의견을 발표하게 한다.	* 각자의 생각을 발표한다.	* 자기 입장을 지지하는 규범 이나 덕목을 찾아보게 한다.
	* 문제해결을 위 한 갈등의 논 리적 추구(소 집단토의)	*북한이 우리나라 의 국토라고 생 각하는 분단과 아니라고 생각하 는 분단에서 각 각 그렇게 생각 하는 이유를 토의 해서 한 사람이 발표하게 한다.	* 분단별로 토의해 서 주장하는 바의 근거를 제시한다.	* 집단적인 사고 는 개인적인 사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 는 기회를 준 다.

단계	지도요소	교수활동	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문제의 심화 및 추구	* 자기입장의 일관성 검토(전체토의)	* 북한이 우리국토가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북한이 우리국토라면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	* 원래 한 민족, 한 나라였던 북한이 다른 나라가 됨으로써 생기게 되는 고통을 찾아본다.  * 남북이 서로 가까워짐으로써 얻게되는 것들을 생각하며 토의에 참가한다.	* 전체토의에 있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겠지만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토론을 유도할 필요는 있다.  *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비디오제시를 전체토의후 제시한다.
	* 자기입장의 수정	* 처음의 생각과 달라진 생각이 있으면 발표하게 한다.	* 북한이 우리 국토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일어나 달라진 생각을 발표한다.	* 전쟁으로 인한 피해상황과 그 후 대립으로 인한 손실을 발표하게 하거나 제시해줄 수 있다.
실천의욕	* 가치감동의 결과 가치확인(대안찾기)	* 북한이 우리의 국토가 아니고 생각할 때 예측되는 결과를 제시해준다.	* 북한도 우리국토라는 생각을 갖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개인별 실천계획  * 실천의욕강화	*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발표하게 한다.	* 통일이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맡은 일에 충실히 하고, 북한 돕기 운동에 동참한다.	* 학습자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게 한다.

## (6) 가치갈등 수업의 효과

가치갈등수업모형의 활용은 학습자들의 사회적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준거들을 제공해주고, 특히 정치문제에 대한 인식, 사회가치의 적용,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그리하여 스스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사회행동에 대한 욕구를 일으키게 한다. 또한 가치의 다원적인 생각을 일깨워주며 타인의 역할을 인정해줄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점을 존중할 줄 알게 해준다.

통일교육에 있어서 가치갈등 수업은 남북한의 이질화를 생각해볼때 다양한 주제를 도입하여 동질성회복을 위한 수업절차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4.2 가치명료화 모형의 적용

### (1) 학습주제 : 민족의 동질성회복

(2) 학습대상 : 고1(학습내용의 난이도를 조절함으로써 대상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음)

### (3) 학습목표

- ①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지적)
- ②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을 열거할 수 있다.(지적)
- ③ 남북한 주민들이 한 민족인을 알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정의적)

### (4) 수업준비물

- ① 자료 : 휴전선 모습 사진이나 필름, 북한의 주요 관광지
- ② 학습지 : 16절지 2장(개인준비물), 32절지 2장(교수자료)

학습지 ①

통일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 한가지를 정하여, 그 해결방법을 생각해 보시오.

1. 이산가족문제
2. 전쟁의 두려움
3. 주요관광지를 방문할 수 없음
4. 북한의 불우이웃을 도울 수 없음
5. 북한의 자원을 활용할 수 없음
6. ( )

학습지 ②

선택한 문제점 ( )	(해결방법)  1.남북회담을 자주한다. 2.물품교환을 한다. 3.통신교류를 한다. 4.( ) 5.( )  (개인적 각오) 1.( ) 2.( )
----------------	---

## (5) 학습활동전개

단계	지도요소	교수활동	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사 고 하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유발</li> <li>* 상황제시 및 문제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제시 -북한어린이들의 기아상태를 알려 주는 비디오를 보여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음미 -지식, 경험 상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경제실상을 알 수 있는 비디오자료 제시</li> <li>* 사례들은 시사성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적절하다.</li> </ul>
느 끼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분석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에서 문제사태를 찾아내게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아상태의 요인을 탐색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심화시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자들의 증가현상의 원인을 찾아보게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자의 관점을 학습지에 간략하게 적어 토의 관점을 찾는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인식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에서 느낀점을 찾아보게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감정을 인식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에 감정이입을 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론적 근거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와 수업주제와 관련시킨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의 기아현상이 남북분단으로 인해 생긴 결과임을 파악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이론이 없을 경우, 사실에 근거해서 현상을 파악하도록 한다.</li> </ul>
선 택 하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입장 선택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분단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세가지만 찾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점을 생각하여 학습지에 적는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치명료화기법 중 '순서정하기'를 활용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입장의 합리적 근거찾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가지 순서를 정한 이유를 찾게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서를 정하게된 이유를 찾아 생각해 둔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론적 근거를 찾기 힘들 경우에는 스스로의 관점을 정리하게 한다.</li> </ul>

단계	지도요소	교수활동	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의사선택하기	* 자기입장 밝히기	* 학습지 ①을 제시하고 질문에 대하여 발표하게 한다.	* 학습지 ①을 보고 문제해결방법을 생각하고 토의에 참가한다.	* 학습지 ①을 제공한다. * 발표순자와 토론시간은 교수자가 적절하게 통제한다.
	* 남의 입장 생각하기	* 다른 사람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보게 한다.	* 상대방의 의견들에서 옳고 그른 점을 정리해본다.	* 자료제시 휴전선 모습이냐 북한의 주요관광지를 담은 사진이나 비디오 자료를 제시해준다.
	* 자기입장 검토하기	* 자기입장을 상대방의 입장과 비교검토하게 한다.	* 자기입장의 근거가 합리적이었는가를 검토한다.	
	* 자기입장 존중하기	* 자기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한다.	* 토론에서 얻은 해결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을 찾아 기뻐한다.	* 학습지 ②에 자기입장을 기록한다.
	* 공적으로 확인하기	* 타인들 앞에서 학습지 ②를 기꺼이 발표하게 한다.	* 학습지 ②를 발표함으로써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지를 보인다.	* 시간제약으로 인하여 발표하지 못한 학생의 학습지 ②는 게시판에 붙여 모두가 알 수 있게 한다.
행동하기	* 반복하여 행동하기	*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권장한다.	* 공적으로 확인한 것에 이긋나지 않도록 수업 이후에도 노력을 한다.	* 행동하기 단계는 실제수업의 범위밖의 문제이다.



### (6) 가치명료화 기법의 효과

위의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수준을 대상으로 한 모형개발이다. 그러나 그것은 토론학습형태의 일반적 절차를 연구한 것이므로 초등, 중등 대학 및 일반 연수기관에 까지 응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가치명료화기법은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수업과는 달리 우리 생활세계의 기본적인 대화의 틀안에서 서로의 생각과 지식 그리고 심정을 교류해봄으로서 의사소통기술이 발달하게 한다. 특히 학습자들로 하여금 관심있는 여러 대안들과 직면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가치문제에 대한 호기심도 커지고 해결과정에서 문제해결능력도 발전하게 된다.

위에서 제시한 교수프로그램도 기본틀로서 학습대상과 교수내용에 따라 적절히 적용함으로써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4.3 가치분석 모형의 적용

(1) 학습주제 : 민주시민의 자질

(2) 학습대상 : 대학1(학습내용의 난이도를 조절함으로써 대상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음)

(3) 학습목표

- ① 자유와 평등의 참뜻을 설명할 수 있다.(지적)
- ②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생활한다.(행동적).

(4) 수업준비물

- ① 자료 : 증거카드

자유와 평등의 침해는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지지증거	반대증거

② 설문지 : 타인의 행동을 자율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를 온정주의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가?

(5) 학습활동전개

단계	지도요소	교수활동	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분 제 의 식	* 가치질문을 확인하고 명료화하기	*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어야 하는데 자유와 평등의 의미는 무엇인가?	* 자유의 두개념으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음을 이해한다.  * 평등의 기본개념으로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구분됨을 이해한다.	* 롤즈의 정의의 원칙을 조사해 오게 한다.
	* 학습문제 확인	* 결과의 평등개념은 기회의 평등개념과는 달리 명백하게 자유의 관념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단계	지도요소	교수활동	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문 제 의 심 화 및 추 구	* 가능한 사실들을 수집하기	* 자유와 평등이 침해되는 사례를 수집해보게 한다.	* 자유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의 역사적 예를 모아볼 수 있다.	* 사실수집의 체계화를 위한 도표를 나누어 준다. * 시사자료(신문, 잡지, TV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 가능한 사실들의 참을 평가하기	* 학생들이 채택한 사실주장에 대하여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발표하게 한다.	* 수집된 사실주장들을 공식기록, 증인설명, 전문가의 증언에 의존해서 평가해본다.	* 북한의 자유와 평등과 관련된 사례는 귀순자들의 증언을 듣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 사실들의 관련성을 명료화하기	* 자유의 침해가 평등의 실현에도 해가 됨을 알게한다.	* 자유가 억압된 사회에서도, 소극적 자유가 주장되는 사회에서도 평등이 실현될 수 없음을 이해한다.	* 관련성을 명료화하기 위해 증거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
	* 잠정적 가치결정을 내리기	* 최대한의 자유가 허용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자유가 주어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가치결정을 내린다.	* 정의로운 사회에서 보장되는 자유와 평등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잠정적 가치결정에 공감한다.	* 모든 학습자들이 이 결론에 공감하는지를 확인하고, 반대사례가 있는 경우 토론해볼 수 있다.

단계	지도요소	교수활동	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실천의욕	* 가치결정에 합추되어 있는 가치원리 검사하기	* 논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른 사례에 원리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가치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생각해보기 한다.(새로운 사례검사)	* 탈북자들의 행동을 자유와 평등의 원리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사회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 가치원리를 검사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사례에 적용시켜봄으로써 실천의욕을 높일 수 있다.

#### (6) 가치분석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가치분석 모형은 기본적인 가치개념들을 분석해봄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가치원리를 터득해 가게 돕는 활동이다.

통일교육으로서 민주시민 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자유와 복지 및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성 함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치분석모형은 민주적 기본 가치들을 수용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가치분석 프로그램도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인간의 존엄, 책임, 정의 등 다양한 민주적 가치를 습득하게 하는데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에 따라 한시간에서 여러시간에 걸쳐서 수업은 이루어질 수 있다. 수업의 성공을 위해서 재구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수자의 몫이라고 볼 수 있다.

## 5. 결 론

본 논문은 통일교육이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에 따른 적절한 교수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통일교육의 내용이나 범위는 공식적으

로 제시해줄 수 있고, 자료나 교재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다. 그래서 통일교육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내용에 따른 교수방법의 제시는 현실적으로 거의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교수방법은 교수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교수방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수내용의 재구성과 교수방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교수자는 교수내용에 따른 적절한 교수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교수자들은 단지 설명식이나 강의식 수업같은 주입식 수업형태의 범주내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든 교수방법이 그렇듯이 주입식 수업도 장점이 있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많은 단점과 교육효과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수방법을 다양하게 운용하지 못하고 주입식 위주의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 책임은 교수자보다도 적절한 교수방법의 개발이 미진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한 교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통일교육의 다양한 주제에 따라 적절한 교수방법을 채택하여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본논문은 통일교육의 교수방법에 관심을 갖고, 통일교육은 내용영역에 있어서는 종합학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수방법에 있어서는 가치교육방법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해왔다. 통일교육의 목적은 지식 보다는 가치태도의 형성교육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통일교육의 목적으로서 민족의 동질성과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가치교육의 다양한 기법과 원리들을 찾아보았다. 다만 가치주입식 교육보다는 가치탐구교육에 대한 연구가 현실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수프로그램은 가치탐구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교수프로그램의 작성은 교수과정을 글로서 표현하는 것인데, 실제상황을 글로서 옮긴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교수과정이 단순화되어 나타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수프로그램은 교수자들에게 교수단계를 제시해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교수내용의 재구성이나 교수자료의 활용에 관심을 둘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교수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단순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기본 틀이기 때문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수업의 성패는 교수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교수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가치명료화, 가치갈등, 가치분석의 교수모형을 틀로 해서 교수프로그램을 제시했지만 그 운용은 주제에 따라, 학습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가치주입식 수업기법과 가치탐구식 수업기법외에도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기법들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사교육 프로그램이나, 친사회적 행동모형, 지구촌 상호의존 모형 등도 통일교육 내용과 관련시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통일교육과 통일대비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통일교육도 다양한 교수기법의 도입과 프로그램의 개발로 재미있는 수업과 감동적인 수업,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제해결 능력을 증가시키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통일교육담당자들의 교수기법에 대한 관심과 교수운용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통일교육의 교육적 효과도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송일,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이용필교수 화갑기념논문집(1993).
- 김종문, 「대화학습의 도덕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1995.
- 남궁달화, 「가치탐구교육론」. 서울 : 철학과 현실사, 1994.
- 노정식 외 공저, 「사회과교육」. 서울 : 형설출판사, 1996.
- L. E. 래쓰, M. 하아민, S. B. 싸이몬 공저, 정선심·조성민 공역,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 철학과 현실사, 1994.
- 문용린, 「도덕과교육」. 서울 : 갑을출판사, 1988.
- 박병학 편저, 「매개적 수업기술」. 서울 : 교육과학사, 1994.
- 박성수, “남북상황에 부응하는 전후세대 통일교육의 통합프로그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논총」(1995).
- James A. Banks저, 최병모 외 공역, 「사회과 교수법과 교재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1993.
- 변영계, 김영환 공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 학지사, 1997.
- 신정현, 신용철, 권오정 공저, 「통일시대의 민주시민교육론」. 서울 : 탐구당, 1994.
- 엄재호, “통일과 시민교육”,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평화연구」 제20집.
- 이경희, “민족공동체형성을 위한 사회통일교육방안의 모색”, 통일원, 「'96 북한 및 통일 연구 논문집(II)」, (1996).
- 이은죽 외 지음, 「남북한 사회통합론」. 서울 : 삶과꿈, 1997.
- 전득주, 김수근, 요르크 볼프 (공편),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서울 : 학문사, 1994.
- 정용길, “통일국가의 정치제도”,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모형」 국가정보학술회의 자료집, 국가정보연수원, 1997.
- Chazan Barry저, 이구재, 강민석 역, 「현대도덕교육방법론」. 서울 : 법문사, 1990.
- 차경수, 「현대의 사회과 교육」. 서울 : 학문사, 1996.
-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진행(3) :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평양 : 1993.4.7.

통일원,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서울 : 통일원, 1995.

통일연수원, 「통일문제이해」. 서울 : 통일원 통일연수원, 1996.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지도론」. 서울 : 시원, 1993.

한만길,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충북교육」 1995년 6월호, p.19.

허은나, 「교육방법과 교육공학」. 서울 : 정민사, 1986.

Ausubel D. P., “The Facilitation of Meaningful Verbal Learning in the Classroom, *Educational Psychology*, 12, (1977).

Andrews J. D. W., “Discovery and Expository Learning Compared : Their Effects on Independent and Dependent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8,(1984).

Banks J. A.,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New York : Longman, 1990.

Barnard J., “Multimedia and the Future of Distance Learning Technology”, *EMI*, 29(3), 1992.

Carr David, “Towards a Distinctive Conception of Spiritual Education”, *Oxford Review of Education*, Vol. 21, No. 1, (1995).

Cruickshank D. R., Bainer D. L., & Metcalf K. K., *The Act of Teaching* 3rd ed. New York : McGraw-Hill, 1995.

Hawley R. C. & Hawley I. L., *Human Values in the Classroom : A Handbook for Teachers* New York : Hart Publishing Co. Inc., 1975.

Jarrett James L., *The Teaching of Values* New York : Chapman and Hall, Inc., 1991.

Joyce B., & Weil M., *Models of Teaching* Englewood-Cliffs,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1972.

Linn M. C., “The Art of Multimedia and the State of Education”, *Educational Researcher*, Jan.-Feb.,(1992).

McNeill John D., & Wiles Jon, *The Essentials of Teaching-Decisions, Plans, Methods*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0.

Nelson J. L. & Michaelis J. U., *Secondary Social Studies : Instruction, Curriculum, Evaluation*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80.

Newmam F. M. & Oliver D. W., *Clarifying Public Controversy : An Approach to Teaching Social Studies*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970.

Oliver Danald & Shaver James P., *Teaching Public Issues in the High School*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1966.

Pauer-Studer Herlinde ed., *Norms, Values, and Society* Dordrecht :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4.

Raths Louis E., Harmin Merrill, and Simon Sidney B., *Values and Teaching*, 2nd ed. Columbus :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 1978.

Simon Sidney B., Howe Leland and Kirschenbaum Harold, *Values Clarification : A Handbook of Practical Strategies for Teachers and Students* New York : Hart Publishing Co., 1972.

Tierno Mark J., "Teaching as Modeling : The Impact of Teacher Behaviors upon Student Character Formation", *The Educational forum*, Volum 60, Winter 1996.

Thomas Laurie, Clift Renee T., & Sugimoto Taku, "Telecommunication, Student Teaching, and Methods Instruction:An Expl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May-June 1996, Vol. 46, No.3.

Ubbelohde Carl and Fraenkel Jack R. eds., *Values of the American Heritage : Challenges, Case Studies and Teaching Strategies* Washington :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1976.

## 【요약문】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을 통한 홍보는 많은 비용이 투하되는 반면,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많은 컴퓨터 이용자들이 고가의 전화비와 사용료를 내고 접속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용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취득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컴퓨터 통신의 이용자들이 통일원과 같은 정부의 정책이나, 특정회사의 홍보란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통일정책의 홍보는 결국 통일정책을 컴퓨터에 올려 놓고, 그저 사람들이 와주기만을 기다리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홍보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홍보나 광고 등에 소극적인 컴퓨터 이용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더 나아가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내외 여론을 선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과 컴퓨터통신을 통해 통일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적극적 유인요소를 탐색하여 그 홍보의 기대효과를 상승시키고, 최대화할 수 있다.

둘째, 큰 비용이 투자되는 인터넷과 컴퓨터통신의 홍보에 비해 미리 홍보대상자의 속성과 계층 등을 파악하고, 유인함으로써 상대적인 홍보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셋째,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의 이용자들을 계층별로 분류하고, 그들의 관심도를 측정하여, 각 계층에 맞는 통일정책내지 통일원의 홍보를 차별화시킬 수 있다.

넷째, 이 연구결과는 통일원뿐만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의 정책홍보나 기업의 광고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통일원의 홍보정책은 그 홍보대상자를 잘 이해하고, 그들의 관심을 파악하여 이루어졌을 때,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특히 'Unikorea'를 주관하는 부서의 모든 담당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대상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20대와 30대의 청장년층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관심을 파악해야 하고, 기존 정책홍보 중심에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유인가능한 홍보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1. 들어가는 말

최근에 들어 연구/학술망으로만 이용되던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이 여러종류의 조직체에서 홍보나 수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수익의 획득이나 홍보의 효과성은 일반적인 기대에는 실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몇몇 정보제공(IP) 사업자에게는 다소의 이익을 안겨주고 있지만, 통일원과 같은 정부기관의 홍보는 특히 일반인들에게 외면당하기 쉽상이다.

그나마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회사들은 컴퓨터관련 업체로써 A/S차원의 서비스 제공이나 제품판매에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려면 컴퓨터 사용자가 주 대상이기 때문에 마케팅의 대상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성인마당등과 같은 성인전용 사이트도 나름대로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개인이 비밀스럽게 타인의 간섭없이 자신의 관심분야를 탐색할 수 있다는 컴퓨터통신의 특성 때문에 사용자들의 비밀스러운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많은 투자를 하여 인터넷을 통한 최첨단 방식의 홍보를 하더라도 가치있거나 흥미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많은 컴퓨터 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은 비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TV나 라디오 등과 같은 다른 매체들의 홍보 수용자는 홍보내용을 보기 위해 많은 비용을 스스로 충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의 사용자들은 아직까지도 스스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사이버 공간에 접속하기 때문에 특정기업이나 조직체, 특히 정부기관에서 광고나 홍보만을 위한 인터넷사이트나 포럼을 구축한다면 외면하기 십상인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통일원의 통일정책 홍보는 결국 통일정책을 컴퓨터에 올려 놓고 그저 사람들이 와주기만을 기다리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홍보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하지만 많은 영역에서 인터넷 사용이 증가되고 있고,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의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컴퓨터가 각 가정과 사무실에 보급되어 있고, 그들을 연결하는 통신망 역시 날로 고속화되고, 저렴화되고 있

다. 여러 가지 홍보매체들과 비교해 볼 때 전달되는 정보량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하여 미래에 더욱 더 유익한 홍보매체가 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기존 홍보활동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잘 살려 나갈수 있다면 통일정책의 인터넷 홍보활동이 오히려 홍보뿐만아니라 정보탐색, 전략수립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외적인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 제안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대내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논외로 하고,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진행된다. 본문에서 1. 홍보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단점의 보완책과 장점의 부양책을 고찰한다. 2. 컴퓨터의 사용인구 및 홍보대상을 탐색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성전략과 통일정책의 수용가능 인구 및 내용전략의 토대로 삼는다. 3.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 이용자들의 각 사이트 및 포럼 접속이유를 설문지 등을 통해 분석하고 1차적 유인방법을 탐색한다. 4. 외국 정부기관의 인터넷사례를 홍보내용 수용자의 유인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대체안 및 통일정책의 홍보에 대한 응용방법을 찾아본다. 5. 통일원 홈페이지에 대해 설문지 조사 및 평가설문을 통해 현재 홈페이지의 유인방법을 중심으로 평가해보고 앞에서 고찰한 여러사례를 중심으로 새로운 홍보방법을 제안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인터넷 및 PC통신을 통한 통일정책의 적극적 홍보방안에 대한 제안을 요약·정리한다.

## 2. 홍보매체로서 인터넷의 현황과 특징

1960년대말부터 군사목적으로 구축된 전산망에서부터 출발한 인터넷은 학술·연구망으로 발전하였고, 1990년대에 개인컴퓨터의 가격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폭락하면서 그 이용이 급증하였고, 정보통신료의 하락과 World Wide Web(WWW)의 등장으로 문자뿐만아니라 화상, 음성, 동화상 등의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이 대중화되었고, 이제는 상업적 활용도 본격화되고 있다.

인터넷이 WWW의 등장과 더불어 새로운 미디어로 자리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생겨나고, 뉴미디어에 의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정보화사회, 뉴미디어사회, 글로벌지구촌사회, 탈산업화사회는 이런 새로운 매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를 대변해주는 단어들이다. 인간의 정보활동이나 정보행동은 생활과 매우 밀접한 커뮤니케이션 공간 안에서 이용가능한 미디어와 정보를 이용하는 형태로서 비로소 여러 가치관이 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사회는 단순히 뉴미디어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 이래의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존속, 변형되면서 상호영향을 주는 가장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사회이다.<sup>1)</sup>

우리가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홍보할 때 우선 이해해야 할 것은 뉴미디어로써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의 특징, 그 이용자의 범위가 홍보대상자와 일치여부와 새로운 미디어 단점의 보완방법 등을 잘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2.1 인터넷의 일반적인 특성

기존의 매체와는 상대적으로 다른 인터넷 고유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sup>2)</sup>

첫째, 실시간, 양방향의 멀티미디어 네트워크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문자나 음성정보 외에 동화상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고, 지역과 호스트 기종에 상관없이 상호간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하며 엄청난 양의 다양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개방적인 네트워크라는 점이다. 인터넷은 세계적인 규모의 개방성으로 인해 광대한 정보의 바다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조직내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즉 모뎀과 PC에 설치된 통신용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하거나 전용회선을 통해 조직내에서 네트워크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소유자나 운영자가 없는 무정부 네트워크라는 점이다. 단지 네트워크에 연결된 각 컴퓨터가 일정한 규칙에 의해 주소를 갖도록 유도하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표준을 제시하는 등 일부 관리기관만 존재한다는 점이다.

넷째, 대중적인 네트워크라는 점이다. 모뎀이나 전화선과 같이 컴퓨터 통신을 위한

1) 박계환, 매체환경 변화의 의미, 언론과 정보 창간호, 1995. p. 10

2) 삼성경제연구소, "인터넷 시대의 기업", 1996.3.14, p.3

간단한 장치와 통신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시내전화요금 수준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검색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로 영어해독만 가능하면 더욱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용도가 무한한 가능성의 네트워크라는 점이다. 디지털 통신 및 멀티미디어 단말기의 발달로 인터넷 성능의 고도화가 지속되고 정보고속도로, 분산형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연결되며 네트워크가 지능화함에 따라서 인공지능 및 학습기능의 추가가 기대된다.

## 2.2 홍보매체로서의 인터넷의 특성

홍보매체로서 인터넷은 다른 매체와 비교했을 때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리지 못한다면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은 큰 성과없이 많은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그 장점들을 나열하면서 홈페이지 내용과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지, 다른 매체와 어떤 차이가 있는 지 비교해보고자 한다.

첫째, 홍보비용이 저렴하다.

인터넷은 초기에 장비구입 및 홈페이지 구성 등 초기투자비용과 유지비용, 그리고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홍보방법인 TV, 라디오, 잡지 등을 통한 홍보에 비하면 그 비용이 그다지 큰 비용이 아니다. 특히 이하에서 갖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고려했을 때, 일방적으로 잠시 보여주기만 하는 홍보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하여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둘째, 상호작용적인(interactive)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일반매체와는 다르게 인터넷은 홍보대상인 수용자(受容者)와 홍보자간의 상호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홍보에 적극적 관심을 갖는 수용자로부터 홍보에 대한 새로운 의견제시나 홍보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게 된다. 아마 다른 매체가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인터넷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홍보활동에 공간적 제약이 없으므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이 가능하다.

다른 홍보매체는 지역적으로 나름대로의 제한을 받는다. 특히 한 매체를 가지고 국내

와 국외에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경우는 인터넷외에는 거의 전무한 것 같다. 그러나 외국까지 대상으로 한 경우 홈페이지의 영문화뿐만 아니라, 외국 통신이용자들에게 자신의 홈페이지를 알릴 수 있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넷째, 홍보대상인 인터넷 이용자가 적극적일 경우 다른 매체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장시간동안 홍보에 노출시킬 수 있다.

인터넷의 수용자는 다른 매체의 수용자와는 달리 한 번 자신이 그 내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시간에 제한없이 수용자를 홍보에 노출시킬 수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접근한 사람이 그 홈페이지에 흥미를 잃는다면 몇 초이상 노출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 내용구성 및 디자인시 주 사용자들이 관심을 갖는 정보내지 흥미내용을 충분히 보여주고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데이터베이스를 연관하여 구축할 경우 정보수용자를 분석가능하게 하고, 다른 홍보전략에도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 홈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램이 서로 연관되어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정보가 분석되고, 그 결과 다음 홍보활동이 홈페이지 구성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설문지 조사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잘 이용하는 포럼의 이유분석등 다양하게 분석에 이용되고 있다.

여섯째, 시간과 홍보활동의 절차를 감소시켜 준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홍보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자료를 매체에 전달하고, 다시 수정하는 등 일체의 모든 작업을 담당자가 직접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일곱째, 홍보효과의 측정이 용이하다.

일반적인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경우 그 홍보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완전한 효과측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접속자 수를 파악하거나 설문지 조사등을 통해 그 효과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일반 다른 매체에 비해 훨씬수월하다.

여덟째, 홍보활동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

잡지의 경우는 보통 홍보시간이 한달, 신문은 하루, 방송은 30초, 1분 등으로 제한을 받지만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시간의 제한이 없다. 어느 시간대라도 접속자가 있으면

항시 홍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계속적인 홍보대상자 유인을 위해 새로운 정보로 계속적인 갱신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홉째, 홍보분량의 제한이 없다.

다른 매체와는 달리 홍보분량이 3페이지가 되던지, 20페이지가 되던지 그 분량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지 홈페이지 구성을 위한 서버의 하드디스크 용량에만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거의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열번째, 차별화전략이 용이하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이 흥미거리에 관심을 갖느냐, 연구내용들에 관심을 갖느냐 등 수용자가 관심을 보이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대상자에 맞는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2.3 인터넷을 홍보매체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

이상과 같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 주로 이 논문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홍보대상자가 자기 스스로 비용을 투자하여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인의 어려움이 있다.(표1 참조)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경우 홍보대상자가 그 매체를 이용하는 비용은 매우 저렴하거나 거의 무료이다. 그러나 PC통신이나 인터넷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각 나라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체별 접속료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적게는 9달러에서 많게는 34달러까지 많은 비용을 매달 내야 하고, 전화비와 접속장비 등을 포함하면 개인의 경우는 아직도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자신 부담하는 만큼의 정보가치나 흥미거리를 찾아 다니게 되므로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에서는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적 성격의 정보나 흥미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홍보대상자가 컴퓨터의 사용이 가능한 자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한 홍보는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아직도 시기상



와 국외에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경우는 인터넷외에는 거의 전무한 것 같다. 그러나 외국까지 대상으로 한 경우 홈페이지의 영문화뿐만 아니라, 외국 통신이용자들에게 자신의 홈페이지를 알릴 수 있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넷째, 홍보대상인 인터넷 이용자가 적극적일 경우 다른 매체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장 시간동안 홍보에 노출시킬 수 있다.

인터넷의 수용자는 다른 매체의 수용자와는 달리 한 번 자신이 그 내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시간에 제한없이 수용자를 홍보에 노출시킬 수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접근한 사람이 그 홈페이지에 흥미를 잃는다면 몇 초이상 노출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 내용구성 및 디자인시 주 사용자들이 관심을 갖는 정보내지 흥미내용을 충분히 보여주고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데이터베이스를 연관하여 구축할 경우 정보수용자를 분석가능하게 하고, 다른 홍보전략에도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 홈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램이 서로 연관되어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정보가 분석되고, 그 결과 다음 홍보활동이 홈페이지 구성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설문지 조사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잘 이용하는 포럼의 이유분석등 다양하게 분석에 이용되고 있다.

여섯째, 시간과 홍보활동의 절차를 감소시켜 준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홍보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자료를 매체에 전달하고, 다시 수정하는 등 일체의 모든 작업을 담당자가 직접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일곱째, 홍보효과의 측정이 용이하다.

일반적인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경우 그 홍보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완전한 효과측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접속자 수를 파악하거나 설문지 조사등을 통해 그 효과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일반 다른 매체에 비해 훨씬수월하다.

여덟째, 홍보활동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

잡지의 경우는 보통 홍보시간이 한달, 신문은 하루, 방송은 30초, 1분 등으로 제한을 받지만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시간의 제한이 없다. 어느 시간대라도 접속자가 있으면

항시 홍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홍보대상자 유인을 위해 새로운 정보로 계속적인 갱신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홉째, 홍보분량의 제한이 없다.

다른 매체와는 달리 홍보분량이 3페이지가 되든지, 20페이지가 되든지 그 분량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지 홈페이지 구성을 위한 서버의 하드디스크 용량에만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거의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열번째, 차별화전략이 용이하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이 흥미거리에 관심을 갖느냐, 연구내용들에 관심을 갖느냐 등 수용자가 관심을 보이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대상자에 맞는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2.3 인터넷을 홍보매체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

이상과 같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 주로 이 논문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홍보대상자가 자기 스스로 비용을 투자하여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인의 어려움이 있다.(표1 참조)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경우 홍보대상자가 그 매체를 이용하는 비용은 매우 저렴하거나 거의 무료이다. 그러나 PC통신이나 인터넷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각 나라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체별 접속료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적게는 9달러에서 많게는 34달러까지 많은 비용을 매달 내야 하고, 전화비와 접속장비 등을 포함하면 개인의 경우는 아직도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자신 부담하는 만큼의 정보가치나 흥미거리를 찾아 다니게 되므로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에서는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적 성격의 정보나 흥미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홍보대상자가 컴퓨터의 사용이 가능한 자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한 홍보는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아직도 사기상

조이다. 다음에 설명할 PC 보급율이나 컴퓨터 사용자 현황에서는 많은 증가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하여튼 컴퓨터를 이용해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홍보대상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자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의 사용은 특별한 기능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고, 앞으로 있을 케이블 TV 선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지면 일반 가정에도 쉽게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활동이 용이해질 것이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보활동의 공간적 제약이 없어서 전세계적인 홍보가 가능하다고 볼 때, 홍보가능대상자의 수는 전세계 컴퓨터 사용 인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1997년 말까지 인터넷에 접속된 전 세계의 PC의 수가 지난해보다 2배이상 증가하여 8천2백만 대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미국의 컴퓨터관련 시장조사기관이 데이터퀘스트가 전망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업무분야에서의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데이터퀘스트는 오는 2001년까지는 무려 2억6천8백만대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접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 가능자로 폭이 좁아졌지만, 실제 홍보가능대상자는 더욱 늘어 났고, 국외 홍보도 용이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홍보전략이 가능하다.

<표1> 각국의 인터넷 접속료(조선일보 96.8.10)

나라 명	서비스업체명	인터넷 접속료
일본	베코아메사	9.40
이탈리아	인터랙티브 일렉트로닉	17.00
싱가포르	퍼시픽 인터넷	17.60
인도네시아	인도넷	18.00
프랑스	Alexnet	18.00
영국	콜로퀴움	18.00
홍콩	HKNet	19.50
네델란드	바트인터넷서비스	19.60
남 아프리카	아즈텍서비스	19.86
미국	AT&T 월드넷	19.95
말레이시아	자링넷	20.00

나라 명	서비스업체명	인터넷 접속료
호주	밀린	22.22
대만	WOWNET	22.22
독일	ARANEA	23.60
폴란드	매그넬	24.00
러시아	Peterlink	25.00
한국	데이콤보라넷	25.00
브라질	칼레스에이	25.00
벨기에	링크라인	32.00
스위스	CNL	33.33
체코	체코넷	34.00
이스라엘	엑트콤	3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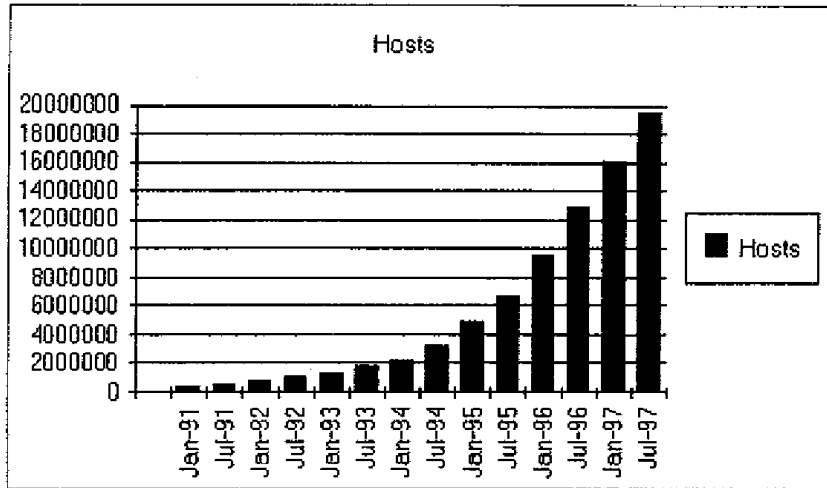
## 2.4 현재 인터넷의 현황

### 2.4.1 세계 인터넷의 현황

인터넷에 연결된 호스트의 수는 1997년 7월 현재, 미국 Network Wizard사의 발표에 의하면 약 1천 954만대에 달한다.(그림1 참조) 이 숫자는 1995년도에 비해 거의3배에 달하고 작년에 비해서는 2배정도 되는 급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제정보망센터(InterNIC)에 등록된 도메인의 수도 130만 1천대 정도로 이 숫자도 전년도에 비해 약 3배이상이 증가한 것이다.<sup>3)</sup>(그림2 참조) 세계 전체의 호스트중에서 미국이 64%, 독일과 영국이 5%,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권이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도메인의 분포현황은 기업 또는 상업기관이 26%, 학교 및 교육단체가 19%, 정부기관, 비영리기관, 군사기관 등이 각각 3%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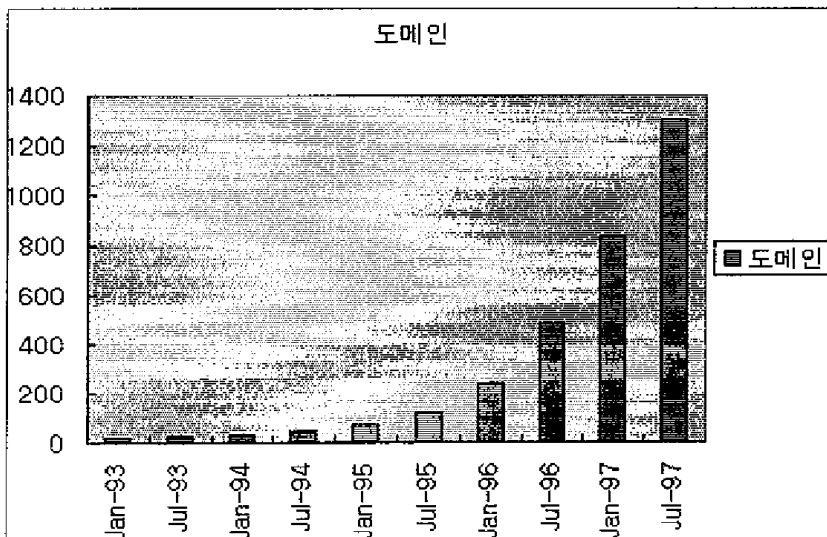
3) <http://www.nw.com/zone/www/report.html>, 1997.9.15

<그림 1> 전세계 인터넷 호스트 현황(Network Wizard사 제공)



인터넷에 가입한 사람의 숫자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표기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이 발표되는 수치가 4000만이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5000만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2> 전세계 인터넷 도메인 증가 추세(Network Wizard사 제공)



또한 인터넷의 활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의 숫자가 하루에도 수천명씩 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그룹'은 전세계를 통틀어 PC사용자 2억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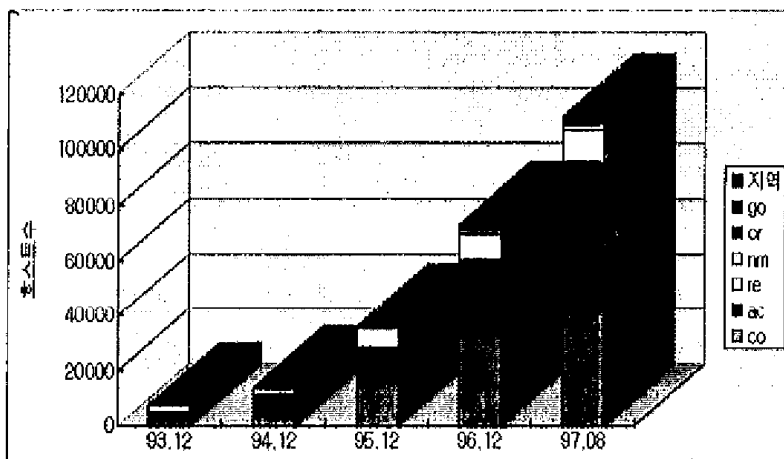
천만명 가운데 인터넷 사용자는 12%에 불과 하지만 98년에는 1억을 돌파하고, 2000년에는 2억 이상이 사용하리라는 예측을 발표하고 있다.<sup>4)</sup> 이러한 인터넷의 급성장은 광통신의 속도에 관련된 기술의 발전과 최근 언론매체의 홍보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는 1992년 멀티미디어를 지원하는 WWW의 개발 후 급증하여 매년 2배의 성장을 하고 있다.<sup>5)</sup> 나라별로는 컴퓨터의 보급과 영어권인지의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이 1위이고, 다음으로는 덴마크,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네덜란드 순 등이다. 한국의 경우 약 20위 정도로 최근 들어 더욱 급성장하고 있다.

### 2.4.2 한국의 인터넷 현황

우리나라 호스트현황(그림3 참조)은 1997년 8월 현재 총 112,303개로 전년도에 비해 2배정도 성장하였고, 호스트들 중 약 37%는 상업회사, 48%가 학교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호스트의 단순 숫자면에서는 학교기관이 우세하지만 도메인면에서 상업회사가 무려 80%이상을 차지한다.(그림4,5 참조)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주 홍보대상은 회사원과 교직원, 학생들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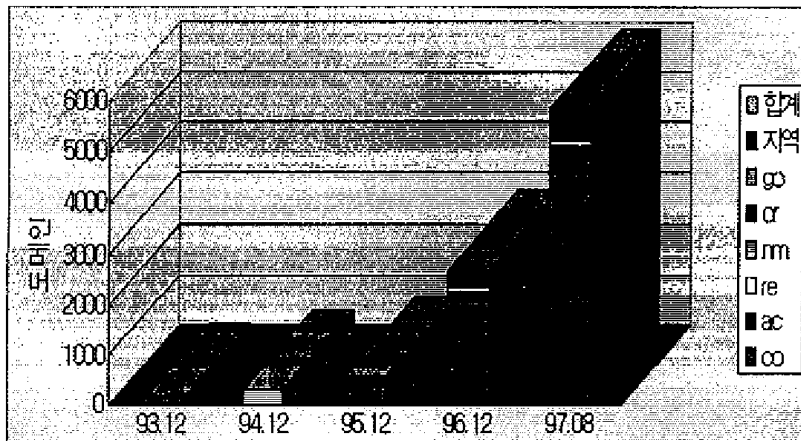
<그림 3> 국내 인터넷 호스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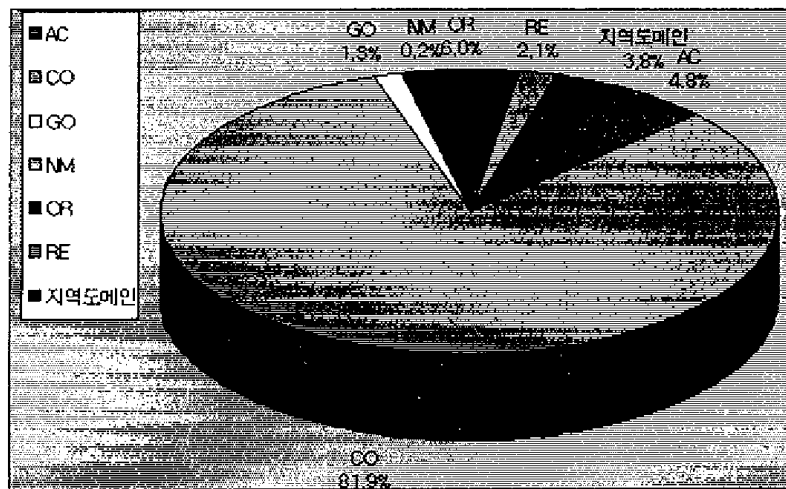
4) <http://www.korealink.co.kr/computer/32-2/cc216.htm>, 1996.10.2

5) <http://www.nw.com/zone/www/dist-by-num.html>, 1997.9.15

<그림 4> 국내인터넷 도메인 현황(자료: 한국인터넷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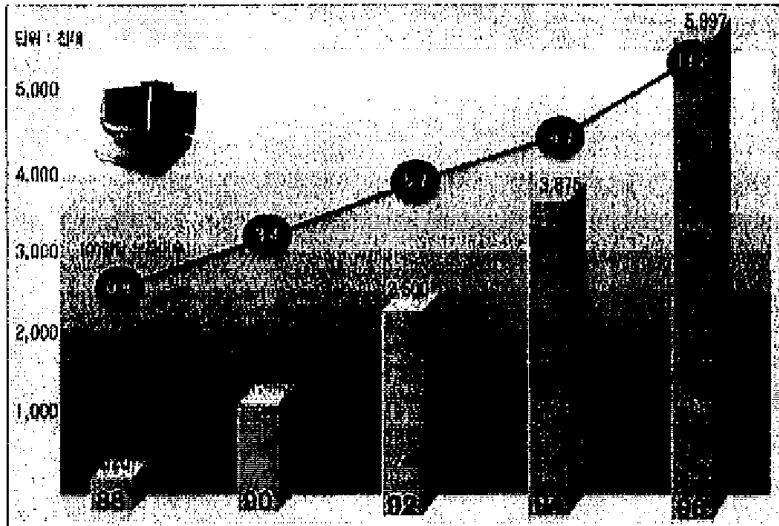
<그림 5> 국내 도메인별 구성비율(자료:한국인터넷정보센터)



호스트의 급증과 더불어 PC보급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96년 현재로 약 600만 대 가까운 숫자가 각 가정, 회사, 학교 등에 보급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림6 참조) 100명당 보급율도 13.2%로 적어도 10명당 한 명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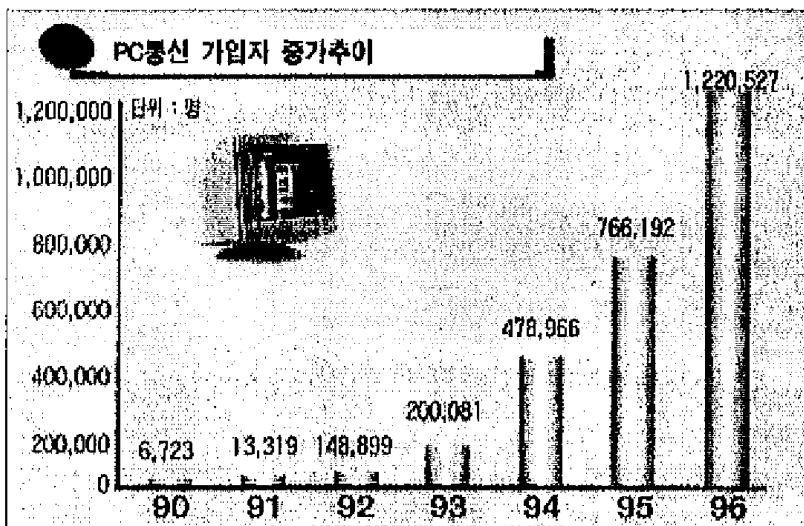
국내 PC통신 가입자의 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96년 현재 122만명 정도가 PC통신을 사용하고 있다.(그림7 참조)

<그림 6> 국내 PC 보급현황(자료:한국정보산업연합회)



\*재인용: <http://arom.etri.re.kr>

<그림 7> PC 통신가입자 추이(자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재인용 <http://arom.etri.re.kr>

PC통신의 경우, 서비스별 이용도를 보면 아직도 정보탐색보다는 오락, 친목 등의 서비스를 아직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3. 컴퓨터 사용인구 및 홍보대상의 탐색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의 대상은 항상 컴퓨터 사용자, 동시에 컴퓨터 통신으로 인터넷의 접속이 가능한 자로 제한 된다. 이 장에서는 현재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홍보전략의 지침을 삼으려고 한다. 기존의 많은 기관들의 설문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의 전문설문을 통하지 않고 기존의 설문들의 결과를 요약정리하여 그 특성을 살펴게 된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설문조사는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전자신문, 중앙일보, 매일경제, 인터넷, 조선일보 등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 3.1. 인터넷 사용인구

최근 「포천」지가 아시아지역의 인터넷 사용실태를 조사, 보도하면서 일본은 165만명,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17만5천명으로 집계하고 한국은 그 다음 순위라고 발표하였다. 한국은 17만명 이하로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발표기관마다 계산방법이 달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상당한 오차인 것 같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통계서비스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사용자 수는 개인 가입자 수만 2백36만명에 이른다. 여기에 전용선 가입자 수를 합치면 무려 3백만이 넘는 숫자이다. 물론 이 수치도 각 인터넷 제공업체(ISP)들이 제공한 가입자 통계수치를 근거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오차가 있다.

보통 정확한 인터넷 사용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위자드 등 세계적인 인터넷 통계 서비스 조사기관이 사용하는 기법은 루빈스키 방법을 토대로 한다. 이 방법은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호스트의 숫자에 10을 곱한 것으로, 1997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호스트 수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 11만2천3백3개로서 이를 토대로 한 인터넷 사용인구는 약 110만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네트워크 위자드사의 통계에 의하면 1997년 7월 현재 전 세계 호스트의 수는 약 1천954만대로, 전세계 인터넷 사용인구의 수는 약 1억9천만명 정도로 추산할 수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을 중심으로 영어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은 호스트 수를 토대로 했을 때, 약 20위정도에 머물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라면 내년 말까지는 국내 인터넷 사용인구는 2백50만명

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6)</sup> SK텔레콤, LG인터넷 등 인터넷 기반의 PC 통신서비스가 등장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조짐이어서 기하급수적인 증가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3.2 인터넷의 사용실태

인터넷의 사용실태는 각 조사기관의 설문문을 통해 이미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대략적 평균치 사용하여 재정리한다. 주로 한겨레신문<sup>7)</sup>, 전자신문<sup>8)</sup> 등의 발표자료를 이용하였다.

### 3.2.1 인터넷 사용자의 일반적 특성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사용자의 남녀 성별을 보면 남자가 압도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한다. 수치상으로 비교하면 남자가 평균 약80%, 여자가 20% 정도선이다. 갈수록 여성사용자의 숫자가 늘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 차이가 매우 크다. 특히 여성중 가장 대표적 홍보 대상인 가정주부들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고, 주로 회사에서 남자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이 22%, 20대 후반이 38%, 30대가 약 25% 정도로 주로 대학생과 회사원 계층이 주 대상으로 파악된다.(그림8 참조)

직업별로 살펴보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23%, 사무직이 37.8%, 기술직이 18.7%로 나타났고, 월수입면에서는 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사이가 22.7%, 200만원에서 300만원사이가 37.8%, 그 이상이 18.7%로 중산층이상의 집단이 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이 31%, 경기도가 11.9%, 대도시가 20.8%로 주로 서울지역과 대도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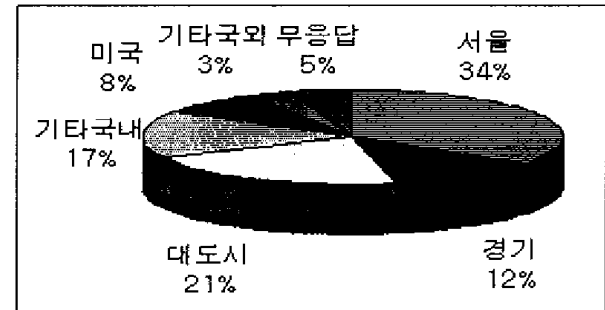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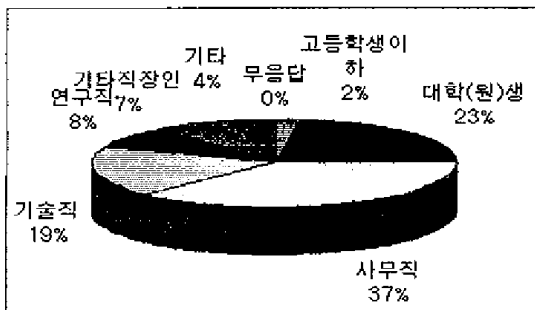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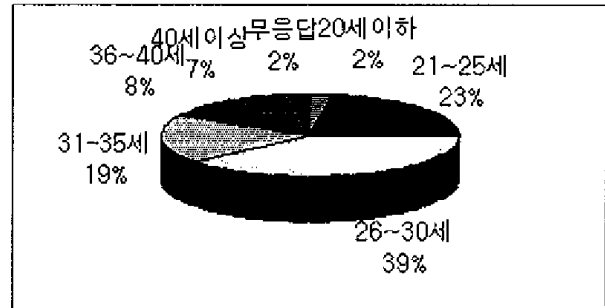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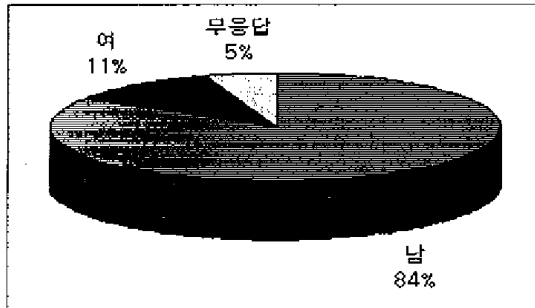
정리하면 인터넷의 주이용층은 20대 남자 대학(원)생이나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20, 30대의 직장인이고, 이들 중 다사용층(Heavy User)은 20대 남자 대학(원)생과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20대 남자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졸이상의 학력을 갖는 30대 직장인은 준다사용층(Semi-Heavy User)이라고 볼 수 있다.

6) 「전자신문」, 1997.8.11

7) <http://www.hani.co.kr/report/res.html>, 1997.9.18

8) [http://www.etnews.co.kr/etnews/etnews\\_content?199707150110](http://www.etnews.co.kr/etnews/etnews_content?199707150110), 1997.9.18

&lt;그림 8&gt; 인터넷 사용자 특성: 1)성별 2)연령별 3)직업별 4)지역별



&lt;자료 한겨레신문, 1997.9.3&gt;

미국 Graphic, Visualization, & Usability Center(GVU)에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sup>9)</sup>에서도 사용자의 연령층은 평균 31세이고, 여성사용자가 30%, 남성사용자가 70%로 나타났다. 컴퓨터 업계 종사자가 21.9%, 교육분야 종사자가 30.9%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문분야 종사자가 19.9%, 관리자가 10.2%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육분야의 성장률이 급증하였고, 사용자는 컴퓨터업계에 국한되지 않고 대중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들의 연평균 수입도 63,000달러로 중산층이상의 집단이 대부분이고, 이들 중 78.6%가 인터넷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초고소득층은 거의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흥미로운 결과이다.

GVU조사결과를 정리하면 인터넷 사용자는 30대 초반의 남성이 주사용자이고, 소가

9)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친 인터넷 관련 설문조사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현재 6회 설문조사가 마감중에 있다. 1회부터 국제WWW 컨퍼런스에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3회 국제 WWW 컨퍼런스에서는 설문에 대한 공로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족규모, 고소득, 고학력, 교육계 또는 첨단업계 종사자라는 점이다.

### 3.2.2 인터넷의 이용상 특성

서비스 선호도는 학생의 경우 ①뉴스 ②학술정보 ③전자메일 ④S/W다운로드 ⑤스포츠, 연예, 게임 순이고, 직장인의 경우는 ①뉴스 ②업무관련 정보수집 ③전자메일 ④학술정보 ⑤S/W다운로드 순으로 조사되었다.(그림9 참조)

주로 사용하는 웹브라우저는 넷스케이프가 80%정도를 차지하여 15%를 차지한 익스플로러를 크게 앞서고 있다. 최근에 붐을 이루고 있는 한글 검색엔진의 경우 50% 이상이 심마니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다음은 까치네, 미스나찾니, 유니파인더 순으로 나타났다. 영문검색엔진은 야후(50.5%)가 알타비스타(42%)를 근소차로 앞서고 있고, 라이코스나 웹크롤러 등은 한자리 미만의 저조한 이용률을 보였다.

인터넷의 주이용장소는 직장과 학교가 70%이상으로 자택(23.4%)보다 상당히 큰 비율을 보이고, 하루 1번이상의 접속이 약 84%이고, 한번 접속으로 1시간이상 이용하는 사람이 약 58%정도이다. 특이한 것은 과반수 이상이 인터넷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직장과 학교에서 주로 LAN을 통해 사용하기 때문이고, 인터넷의 개인적 사용료의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 중 80% 이상이 국내사이트보다는 국외사이트를 찾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사이트의 보강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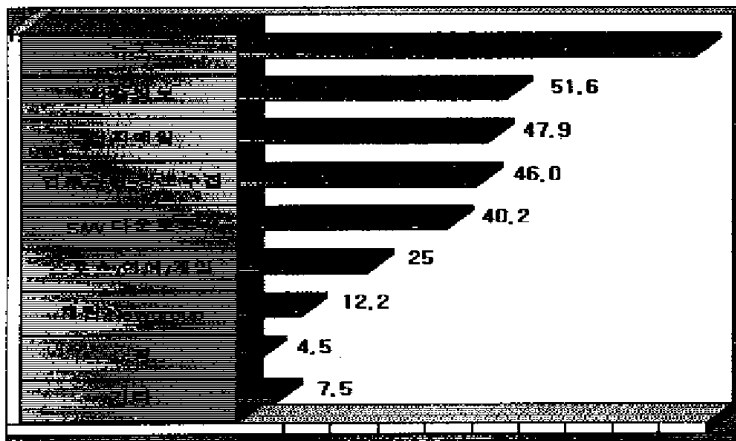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경로는 ① 검색엔진을 통하는 경우 ② 신문·잡지 ③ 다른 웹페이지에서 링크를 이용하여 ④ 주위의 소개 ⑤ PC통신을 통해 ⑥ Banner광고를 통해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동기는 주로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가 34%정도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연예·오락(10%), 스포츠, 쇼핑 순이다. 그러나 그 만족도는 9%정도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인터넷사용자들의 절대 다수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지만 “회선 정제”에 따른 짜증과 “원하는 정보의 부재”, “정보검색의 어려움”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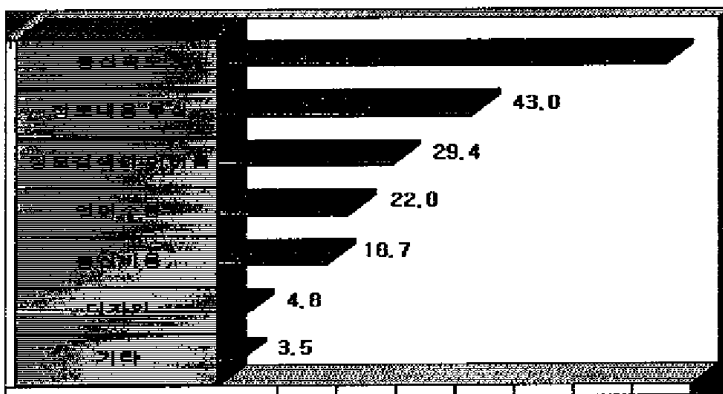
그러나 회선정제는 정부차원에서 해결이 있을 것 같다. 정보통신부는 세계 표준 정보

통신 네트워크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초고속국가망사업을 인터넷과 연계하여 인터넷 회선의 고속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sup>10)</sup> 그래서 일반 국민은 물론 국가기관, 기업, 교육기관들의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회선의 고속화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00년까지 총 9천5백여개 초, 중, 고교에 근거리 통신망(LAN) 환경을 구축, 이를 초국가망에 연결시킴으로써 각급 교육기관에도 고속의 인터넷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보의부재와 검색의 어려움은 각 웹사이트별로 풍부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자체검색엔진 등을 이용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림 9> 웹사이트 선호도(자료: 한겨레신문; <http://news.hani.co.kr/report/inter3.html>)



<그림 10> 웹사용의 불만요소(자료: 한겨레 신문)



10) 「전자신문」, 1997.3.26

## 4. 인터넷 사용자들의 각 사이트 및 포럼 접속이유의 분석

### 4.1 설문조사의 진행과정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자신들이 자주 접속하게 되는 어떤 사이트에 대해 “그 사이트 왜 자주 접속하게 되는가?” 라는 단순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한 후, 그 인터뷰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는 두가지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목적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정 사이트에 어떤 이유로 접속하는가에 대한 순수한 접속목적에 파악하기 위해서이고, 이는 이용자들의 인터넷 접속시 각 홈페이지들의 유인요소를 1차적으로 판단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목적은 1차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접속목적 중에 이용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을 다시 조사하고, 그 요소들을 이용하여 ‘UNIKOREA’의 홈페이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통일원의 홈페이지를 평가하는 이유는 ‘UNIKOREA’가 갖고 있지 못한 유인요소들을 찾아 내어 제시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특정 웹사이트를 선호하는 각종 요인을 분석하여 ‘UNIKOREA’ 사용형태와 비교, ‘UNIKOREA’의 접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설문지 구성을 위한 인터뷰에는 총8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1차설문조사는 1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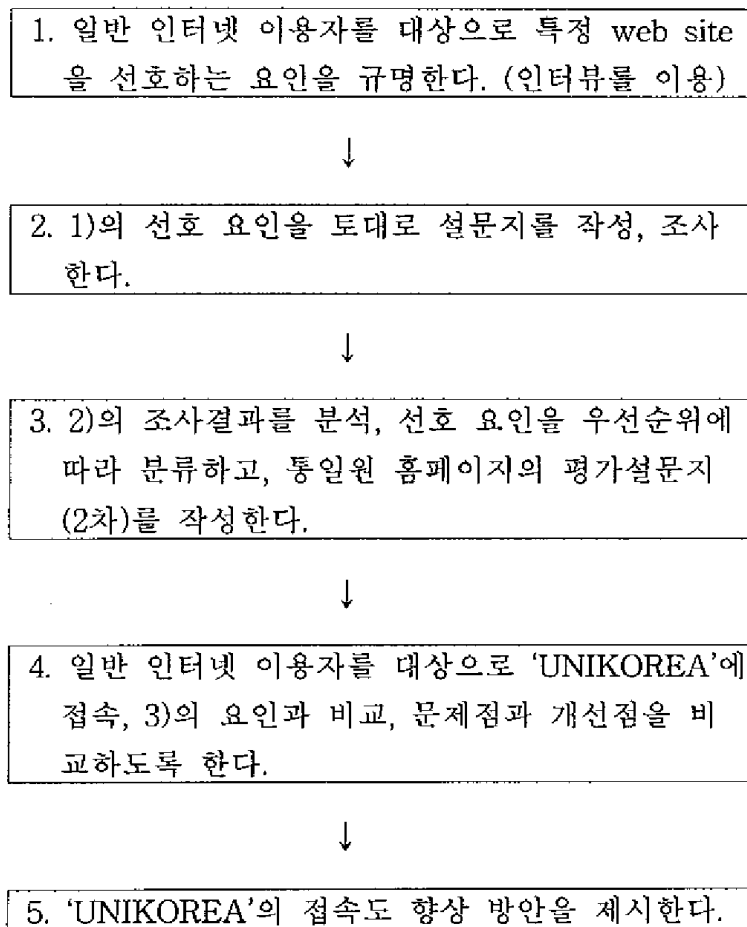
1차 설문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한 인터뷰는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89명(광운대학교의 학부생, 대학원생 및 교직원 33명, 경민전문대학의 재학생과 교직원 56명)을 대상으로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을 무작위로 인터뷰하여 정리하였다.

조사결과 나타난 요인들중 몇가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전공이나 업무관련 자료(정보)가 많아서,
- 웹사이트 접속과 자료의 다운로드(download)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 흥미있는 코너가 많아 시간보내기가 좋다(killing time).
- 자료검색이 용이하기 때문에,
- 시사정보가 빠르게 제공되고 있다(update).

- 주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여 신뢰가 간다.
- 관련 사이트로 곧바로 접속하기가 편리해서,

조사과정을 흐름도(flowchart)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상과 같은 일반 인터넷 사용자의 특정 홈페이지에 대한 선호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기술적 요인(4가지), 내용적 요인(3가지), 사용자 개인적 요인(6가지)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그 요인들을 토대로 5점척도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 4.2 1차설문지 결과

1차 설문지 조사대상자는 인터넷 사용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남성이 106명(88.3%), 여성이 10명(8.3%)으로 전체 116명이다.

조사대상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20대가 62명(51.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52명(43.3%)으로 20-30대가 전체 95%를 차지한다. 그것은 인터넷의 사용 연령이 대체로 20대와 30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배 경	구 분	응답자수	비율(%)	표준편차
성별	남성	106	88.3	1.068
	여성	10	8.3	
연령	20세 미만	0	0	0.538
	21 - 30세	62	51.6	
	31 - 40세	52	43.3	
	40세 이상	2	1.7	
학력	고졸	4	3.3	0.918
	대학재학	46	38.3	
	대학졸	30	25.0	
	대학원졸	38	31.7	
직업	대학생	36	30.0	1.247
	공무원	16	13.3	
	회사원	26	21.7	
	기타	40	33.3	
인터넷사용경력	1년	38	31.7	1.206
	2년	16	24.2	
	3년	10	8.3	
	4년 이상	2	1.7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의 학력은 대학재학생이나 대학 졸업자 76명으로 전체 64%에 해당되며, 직업은 대학생이 36명(30%), 공무원이 16(13.3%), 회사원이 26명(21.7%)이고, 기타는 대학교 행정직원, 교수,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인터넷 사용경력은 2년미만이 64명으로 전체 56%에 해당되었다.

다음으로 설문지 내용을 요인별로 범주화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이 특정 홈페이지를 선호하는 기술적 요인은 대체로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그 내용중 기술적 요인에 해당되는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응답토록 한 결과, 자료검색 기능( $\mu = 3.898$ ), 링크(Link) 기능( $\mu = 3.610$ ), 접속 및 다운로드



드(download)의 속도( $\mu= 3.220$ ), 및 홈페이지의 편리성( $\mu= 2.915$ )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둘째, 특정 웹사이트의 내용적 선호 요인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이 전문적, 업무상 관련 자료(정보)( $\mu= 3.898$ ), 최신정보의 빠른 제공( $\mu= 3.712$ ), 그리고 흥미있는 자료( $\mu= 3.559$ )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표 3 > 웹사이트 선호의 기술적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

설문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접속, 다운로드 속도	3.220	1.247
홈페이지 편리성	2.915	1.005
자료검색 기능	3.898	1.045
링크(Link) 기능	3.610	1.000

<표 4 > 웹사이트 선호의 내용적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

설문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문 자료(정보)	3.898	1.094
흥미있는 자료(정보)	3.559	1.236
최신정보 Update	3.712	1.204

셋째,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개인적 선호 요인들에 대해서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기억하기 편리하여’( $\mu=3.153$ ),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측의 이미지 신뢰하여’( $\mu=3.017$ ) 이외에는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선호정도가 낮았다.

<표 5> 웹사이트 선호의 개인적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

설문 항목	평균	표준편차
사이트제공측 신뢰	3.017	1.239
주변인들의 선호	2.847	1.257
첫접속후 습관적 이용	2.897	1.266
홈사이트의 빈번접속	2.678	1.058
경품이나 퀴즈 제공	2.220	1.175
웹주소의 기억 용이성	3.153	1.031

### 4.3 'UNIKOREA' 평가설문지의 구성(2차 설문조사)

이상의 세가지 변주의 요인들에 대한 결과중에서 평균이 3.0 이하인 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을 토대로 7점 척도의 두 번째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였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역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의 특정 홈페이지 선호 요인, 즉 두 번째 질문조사서를 토대로 통일원 홈페이지인 'UNIKOREA'의 사용실태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이 결과 작성된 두 번째 설문조사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 접속하는 시간이나 자료를 다운받는 시간이 양호한 편이다.
- 홈페이지가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기에 편리하다.
- 관련 홈페이지로 접속(Link)하기가 편리하다.
- 원하는 자료가 많이 제공되고 있다.
-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아 시간보내기에 좋다.
- 최신정보가 많이 제공(update)되어 있다.
- 'UNIKOREA'에 접속한 다음 통일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
- 'UNIKOREA'는 통일원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웹주소이다.
- 'UNIKOREA'는 통일원을 연상시켜 기억하기가 쉽다.
- 앞으로 자주 'UNIKOREA'를 이용할 생각이다.
- 가까운 사람들에게 'UNIKOREA'를 권유할 생각이다.

### 4.4 2차 평가설문지 결과

2차 설문조사는 학생, 회사원, 공무원 등 총 24명을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UNIKOREA'의 홈페이지를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다음 작성토록 하였다. 한 곳에 모여 하는 실험실 분석을 통하지 않고, 자신들의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평상시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홈페이지들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된 2차설문지의 총 12 항목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Unikorea 홈페이지의 기술적요인 대한 조사결과(표 6 참조)에서 홈페이지의 편리성

과 링크기능은 만족도 높은 편이지만 자료 검색 기능이나 특히 접속과 다운 로드의 속도는 매우 느리다고 느끼는 사용자가 많았다.

<표 6> Unikorea의 기술적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

설문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접속, 다운로드 속도	2.500	2.000
홈페이지 편리성	4.625	1.685
자료검색 기능	3.875	1.642
링크(Link) 기능	4.625	1.685

Unikorea의 내용적 요인에 대한 결과는 이용자들의 접속빈도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큰 이유가 내용적 요인에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7>에서 보듯이 7점 포인트의 평균인 4점을 넘는 요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특히 일반인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보요소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표 7> Unikorea의 내용적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

설문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전문 자료(정보)	3.625	1.506
흥미있는 자료(정보)	2.500	1.069
최신정보 Update	3.500	1.604

Unikorea의 홈페이지를 통한 통일원 이미지 및 'UNIKOREA' 웹주소의 이미지, 연상 정도를 묻는 질문(표8 참조)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통일원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통일원 홈페이지를 접속한 후 통일원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한 것은 'UNIKOREA'가 홍보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UNIKOREA'의 웹주소에 대한 이미지가 그 연상기억의 정도가 상당히 좋아서 한번 접속한 사람이 재접속을 시도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어 보인다.

&lt;표 8&gt; Unikorea의 개인적 평가에 대한 조사결과

설문 항목	평균	표준편차
통일원의 이미지	4.625	1.302
웹주소(Unikorea) 이미지	4.875	1.246
웹주소의 연상 기억 정도	4.375	1.922

Unikorea를 접속한 후 태도를 평가한 문항(표9 참조)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지 못했다.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특히 좋지 않은데, <표 7>에서 나타난 내용적 요인에 대한 불만이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권유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특이한 태도인데, 아마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나름대로 교육적 의미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lt;표 9&gt; Unikorea를 접속한 후의 태도 조사결과

설문 항목	평균	표준편차
앞으로 자주 이용정도	3.750	1.035
다른 이용자에게 사용권유	4.125	0.991

## 5. 인터넷을 통한 외국정부기관 및 국내 대기업 홈페이지 홍보의 분석: 유인방법을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외국정부기관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홍보하는 방법을 분석하고, 각 사이트에서 홍보대상자를 유인하는 요소를 정리하여 통일원 사이트의 홈페이지 홍보에 이용하려 한다. 외국정부기관의 홈페이지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아이디어가 집약된 것이기 때문에 통일원의 홈페이지 전략구성에도 도움이 되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 참고가 될 것이다. 분석에서 약간의 제한이 있는데, 외국의 홈페이지가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 국내 컴퓨터로는 접근해도 그 내용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논의되는 외국정부기관 홈페이지는 주로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최근에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홍보와는 차이가 있지만, 홍보대상자들을 유인하는 전략을 어느 외국정부의 전략보다 뛰어나다. 주로 우리나라 대기업을 위주로 홍보대상자를 유인하는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통일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 5.1 외국정부기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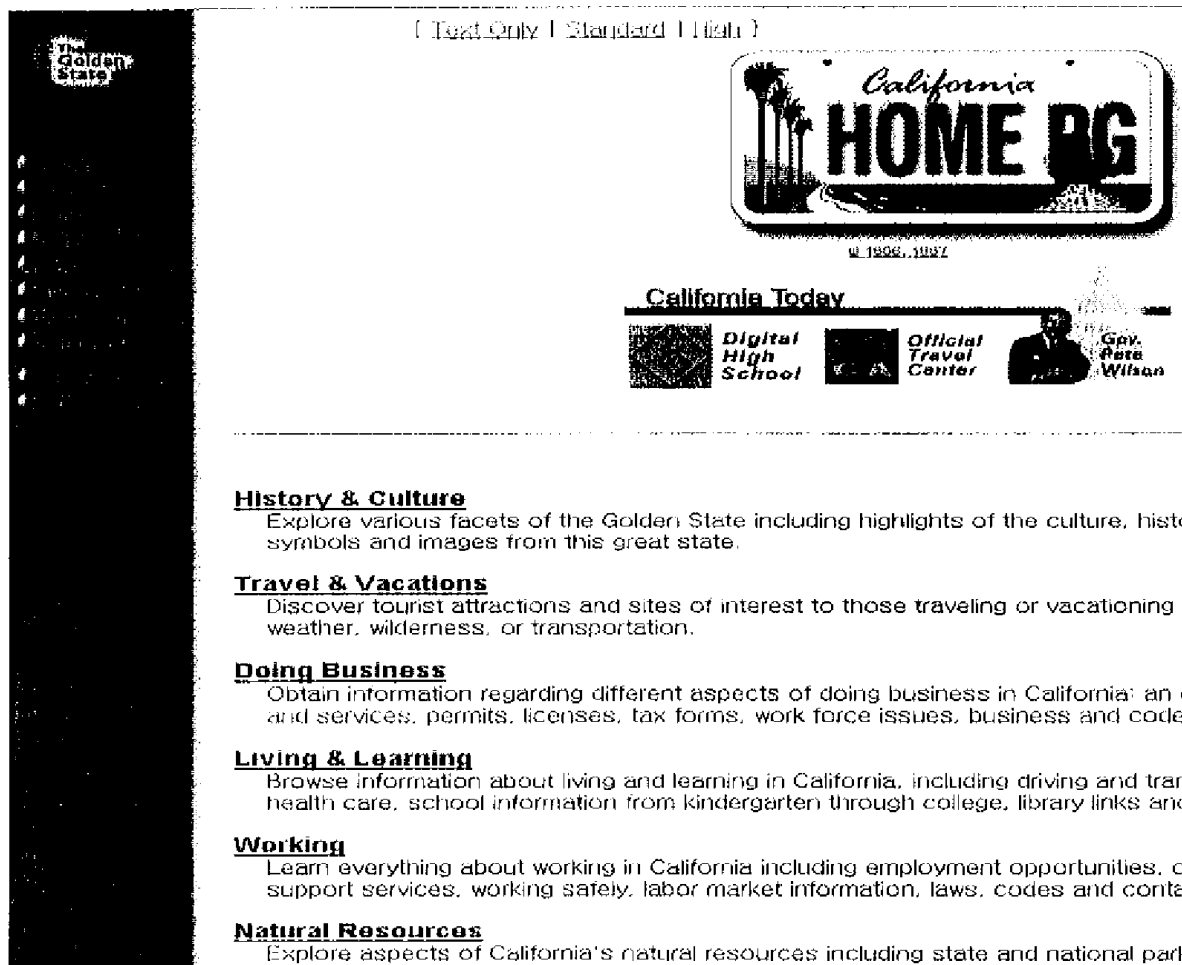
### 5.1.1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정부의 홈페이지(그림11)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최첨단 컴퓨터 단지를 보유하고, 원거리 교육 시스템 등 미국내에서도 가장 정보화가 여러방면에서 앞선 주이다.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메인 홈페이지는 상당히 적은 수의 그림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다. 그 그림들마저 매우 작은 크기의 그림들이 대부분이고, 백그라운드 그림마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초고속통신망 등 여러 가지 정보통신에 관련된 사회간접투자가 세계 최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홍보대상자들을 위한 최대한의 보이지 않는 배려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배려는 바로 통신속도의 향상이다. 작은 그림과 백그라운드 그림을 삭제시킴으로써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단순해 보이지만, 텍스트를 많이 사용하므로써 물리적 통신속도를 향상시켜 줌으로써 홍보대상자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홈페이지를 탐색하고 있을 때, 전혀 지루함을 주지 않게 만들었다.

통신속도의 향상을 위한 그래픽의 자제와 더불어 홈페이지 맨 위쪽의 [Text only | Standard | High ]를 선택하게 하여 이용자의 모뎀이나 회선용량을 고려할 수 있게 하여, 최근 인터넷 사용자의 가장 큰 불만요소인 회선정체와 통신속도의 저하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대부분의 광고, 홍보용 홈페이지가 그래픽과 음성, 동화상과 같은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디자인과 기술위주로 인터넷 홍보대상을 유인하는 것과는 달리 특이한 홈페이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홈페이지의 디자인 마음에 들어서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그런 디자인과 멀티미디어 기술이 통신속도를 떨어뜨리고 있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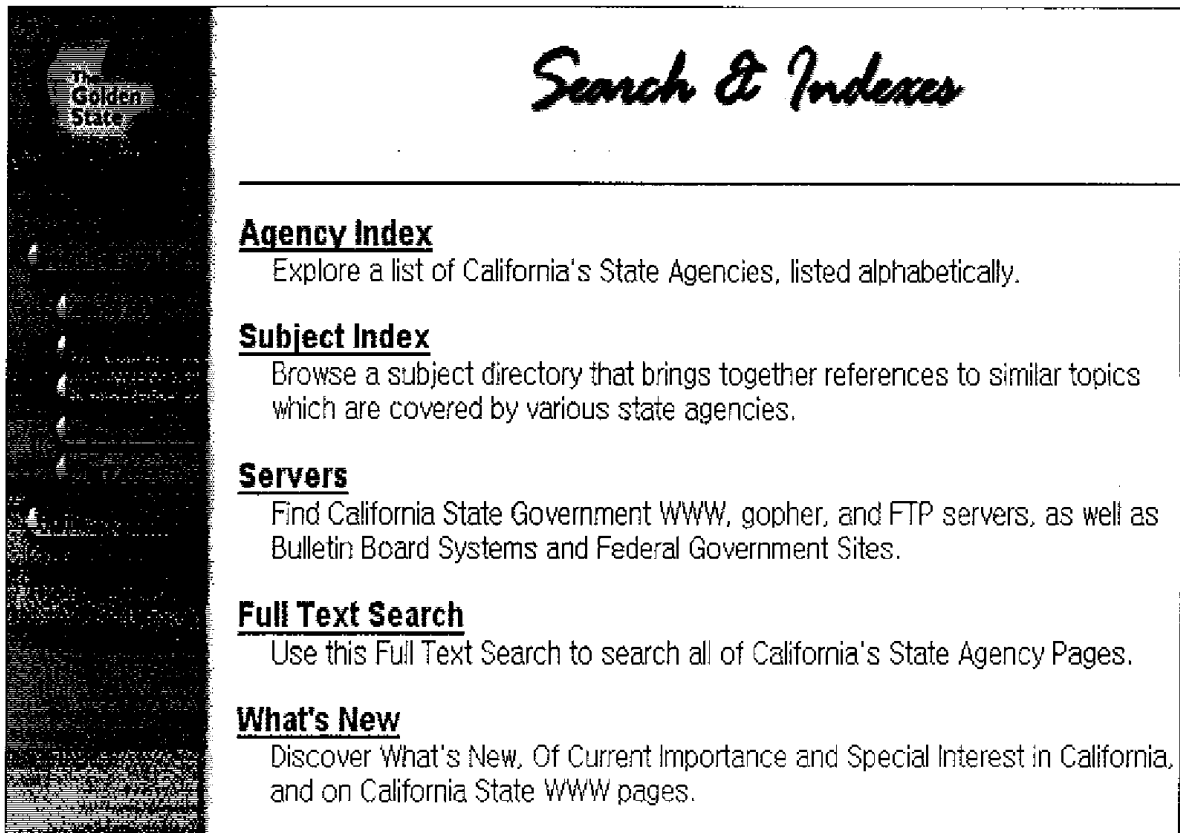
주지한다면 디자인 개념이 아주 없어서는 곤란하겠지만 단순하면서도 텍스트위주로 더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인터넷 접속자들에게는 오히려 더욱 유용하다는 의미이다.

<그림 11> 캘리포니아 주 정부 홈페이지(<http://www.state.ca.us/>)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홈페이지는 서브 페이지로 History & Culture, Travel & Vacations, Doing Business, Living & Learning, Working, Natural Resources, Your Government, Emergency Relief, Search & Indexes 등 총 9개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이 목록을 수직 프레임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은 보통의 기법이고, 여기서 한 가지 홈페이지 사용자를 위한 또 한가지의 배려를 알 수 있다. 바로 Search & Indexes 인데, 이는 이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치엔진과 인덱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많은 내용을 보여주는 매우 큰 분량의 홈페이지를

&lt;그림 12&gt; 캘리포니아 주정부 서치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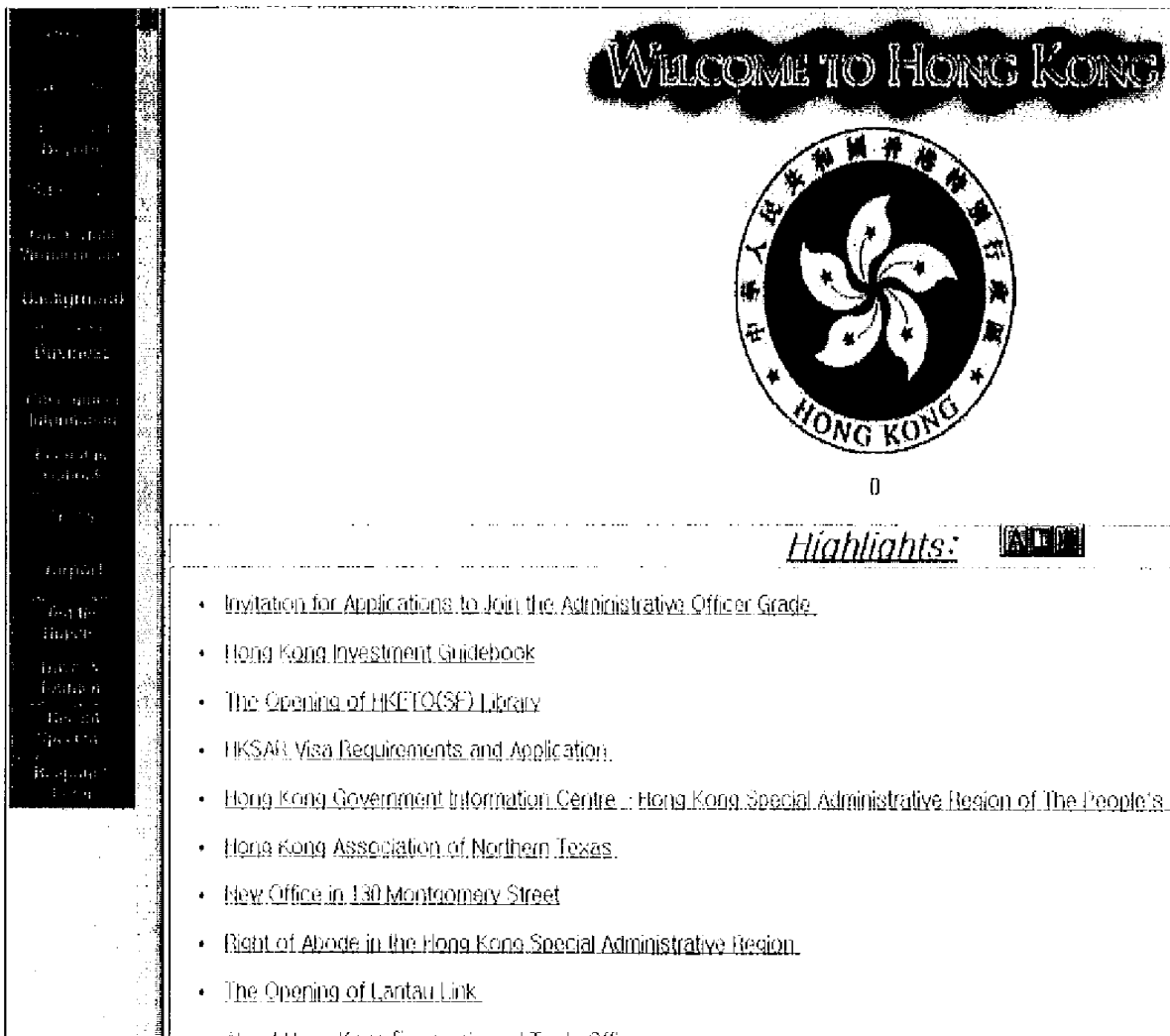
무료하게 찾아 돌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사용자들이 매우 편리하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인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서치엔진의 경우 신문사 등과 같은 몇몇 언론기관이나 전자도서관 등에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고, 점차 개별기업이나 공공기관 사이트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서치엔진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두는 이유는 홍보대상자가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그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페이지를 검색하다고, 지루함을 느끼고 접속을 종료하는 것을 막고, 그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줌으로써 정보취득의 인터넷 사용목적을 충족시켜주는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12 참조)

### 5.1.2 홍콩정부 홈페이지(그림 13)

홍콩의 경우는 앞에서 소개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텍스트 위주로 단순한 홈페이지와는 상대적인 대조적인 홈페이지로, 상당한 수준의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홈페이지 방문자들을 붙잡고 있다. 홍콩 정부의 정보화 작업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회선용량도 충분한 관계로 상당히 큰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기술이 홈페이지에 가미되어도, 그렇게 전송속도의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래픽들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홈페이지의 구성이 갑갑해 보이고, 메인 홈페이지의 전체 내용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13> 홍콩 정부 메인 홈페이지(<http://www.hongkong.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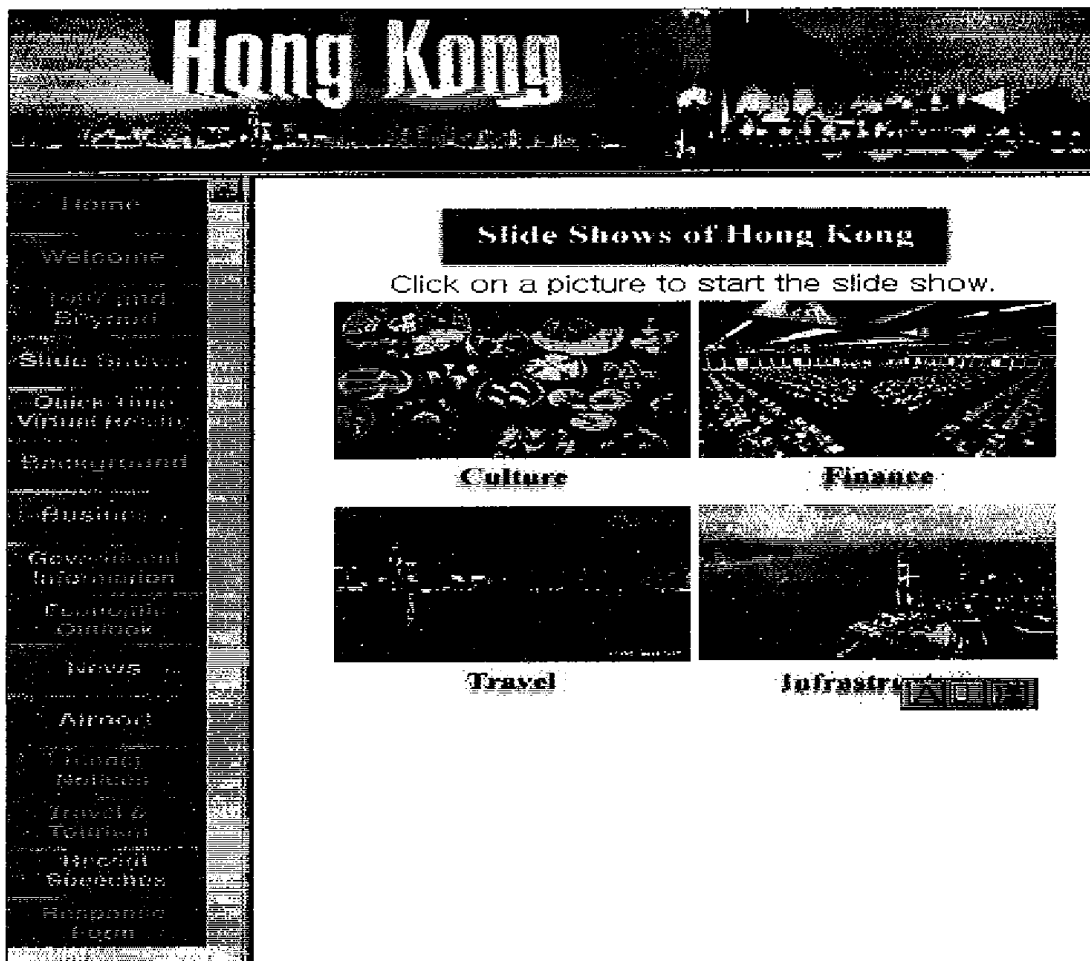




3개의 프레임으로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왼쪽 프레임에 포함된 서브 홈페이지의 숫자가 무려 15개 정도나 되면서 이것마저도 한페이지에 보이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답답한 느낌을 주고 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는 “Highlights”라는 제목에서 주로 새로운 홍콩의 뉴스나 관심사를 텍스트로 보여주는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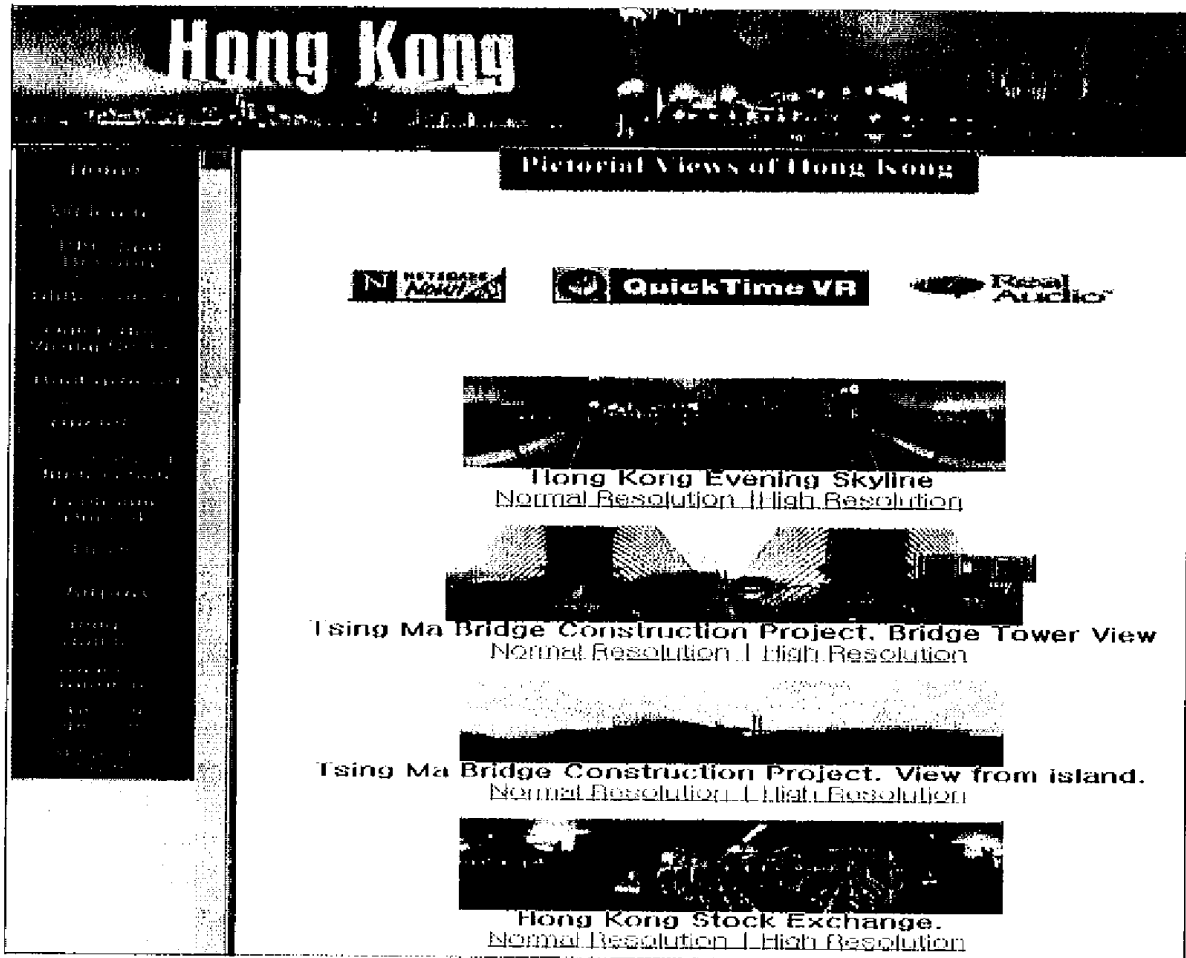
홍콩의 홈페이지에서 첫 번째, 주목할 만한 것은 “Slide Shows”라는 서브 홈페이지이다. 여기서는 문화(Culture), 금융(Finance), 여행(Travel),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등 4개의 슬라이드 쇼가 준비되어 있어서 관심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관련된 슬라이드 쇼를 보여준다. 처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다소 지연되지만, 나름대로 관광도시 홍콩을 보여주는 적절한 도구로 이용된다.(그림 14 참조)

<그림 14> 홍콩정부 홈페이지의 슬라이드쇼



두 번째, 특이한 부분은 “Quick Time Virtual Reality”이다.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홍콩을 소개하는 서브 홈페이지이다. 여기는 “Hong Kong Evening Skyline”과 “Hong Kong Stock Exchange” 등을 비롯하여 총 8개의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는데, 주로 관광도시로서의 홍콩, 국제경제도시로서의 홍콩을 부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네스케이프 3.0이상의 버전과 Apple사의 QTVR과 Real Audio’s Sound 프로그램 등의 플러그인(plugin)이 요구된다. 물론 홍콩의 홈페이지에서 이런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직접 다운받을 수 있게 그 프로그램이 있는 곳과 연계(link)를 시켜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속의 통신장비를 이용하거나 이런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이 절차는 오히려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그림 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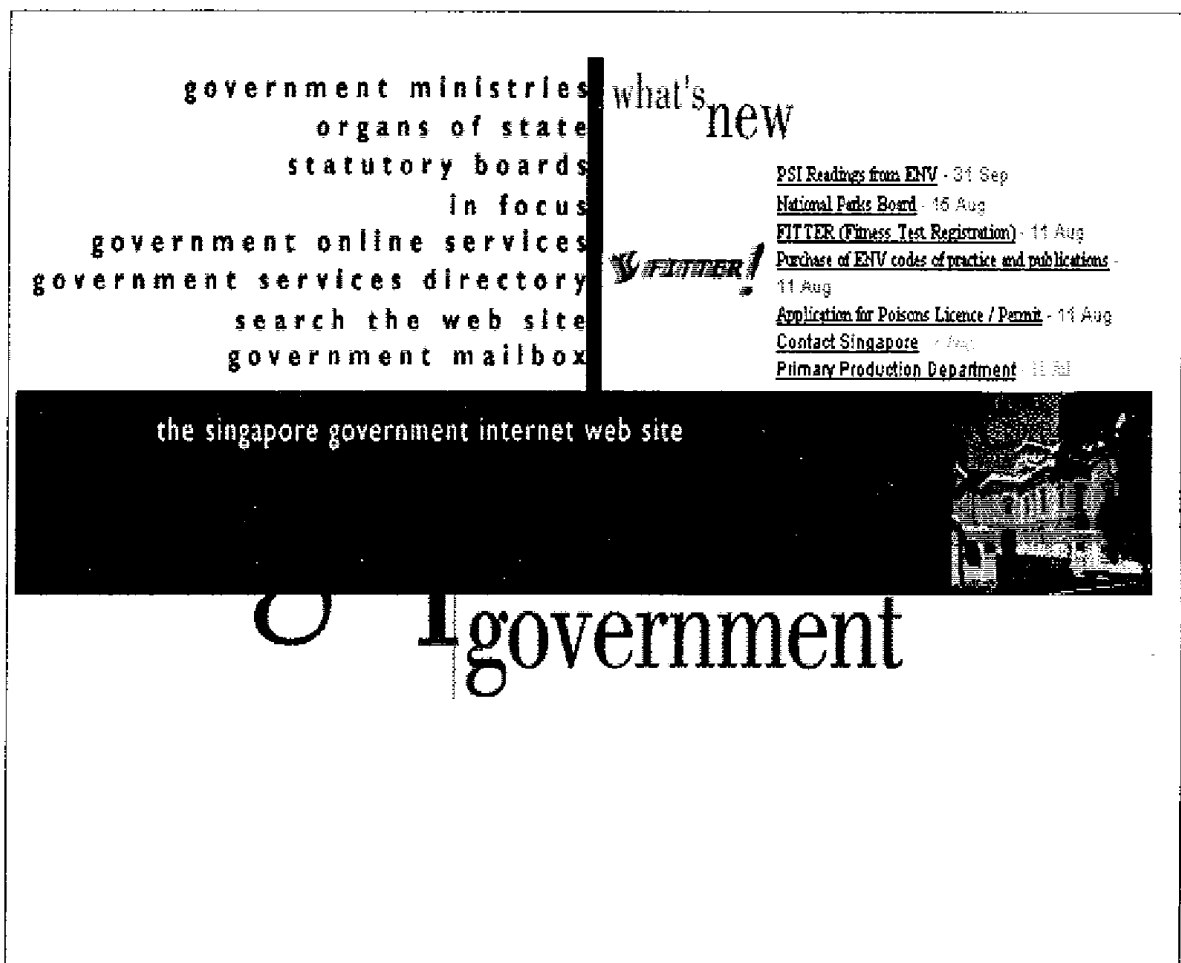
<그림 15 > 홍콩정부의 가상현실 장면



마지막으로 홍콩정부의 이벤트로 1997년 이후의 홍콩을 철저하게 관광상품으로 이용하려는 부분이 "1997 and Beyond"이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금세기 최대의 역사적 사건을 정부차원에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이다.

홍콩정부의 홈페이지를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그래픽이나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철저하게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와는 다르게 통신속도에 약간의 문제를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홈페이지 이용 목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관광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슬라이드 쇼나 가상 현실과 같은 최고 멀티미디어 기술이 돋보이고, 자신들 고유의 이벤트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도 홈페이지의 주제와 일관되게 보여 진다.

<그림 16> 싱가포르 정부의 메인 홈페이지(<http://www.gov.sg/>)



### 5.1.3. 싱가포르정부(그림16)

싱가폴의 경우도 홍콩과 마찬가지로, 정보화가 상당히 앞선 나라 중 하나이다. 싱가포르의 메인 홈페이지는 매우 간단하고, 한 페이지에 전체 내용이 다 보일 정도로 짧은 메시지만을 담고 있다. 그래픽이 작고, 간단하여 접속은 빠르지만 적혀진 텍스트들이 너무 작아 홈페이지 이용자가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단점이라 하겠다.

서브 페이지의 목록으로는 “government ministries”, “organs of state” 등 총 8개의 목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프레임 기법을 이용하지 않고, 메인 홈페이지 좌측 상단부에 마치 하나의 소제목처럼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가장 장점이라 여겨지는 것은 “What’s new”부분에 표현 최신자료의 갱신날짜를 상세히 기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디자인보다는 정보의 내용과 그 가치, 그리고 정보의 적절한 갱신(update)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갱신날짜를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정보의 최신화에 대한 신뢰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단지 흠이라면, 글자체가 전반적으로 작기 때문에 다소 싫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싱가포르 홈페이지의 장점은 “government online services”라는 이름의 서브 홈페이지로 온라인 상으로 제공가능한 대부분의 정부기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 구인란에서부터 교육서비스, 아동보호소 정보 등 아주 다양한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5.1.4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그림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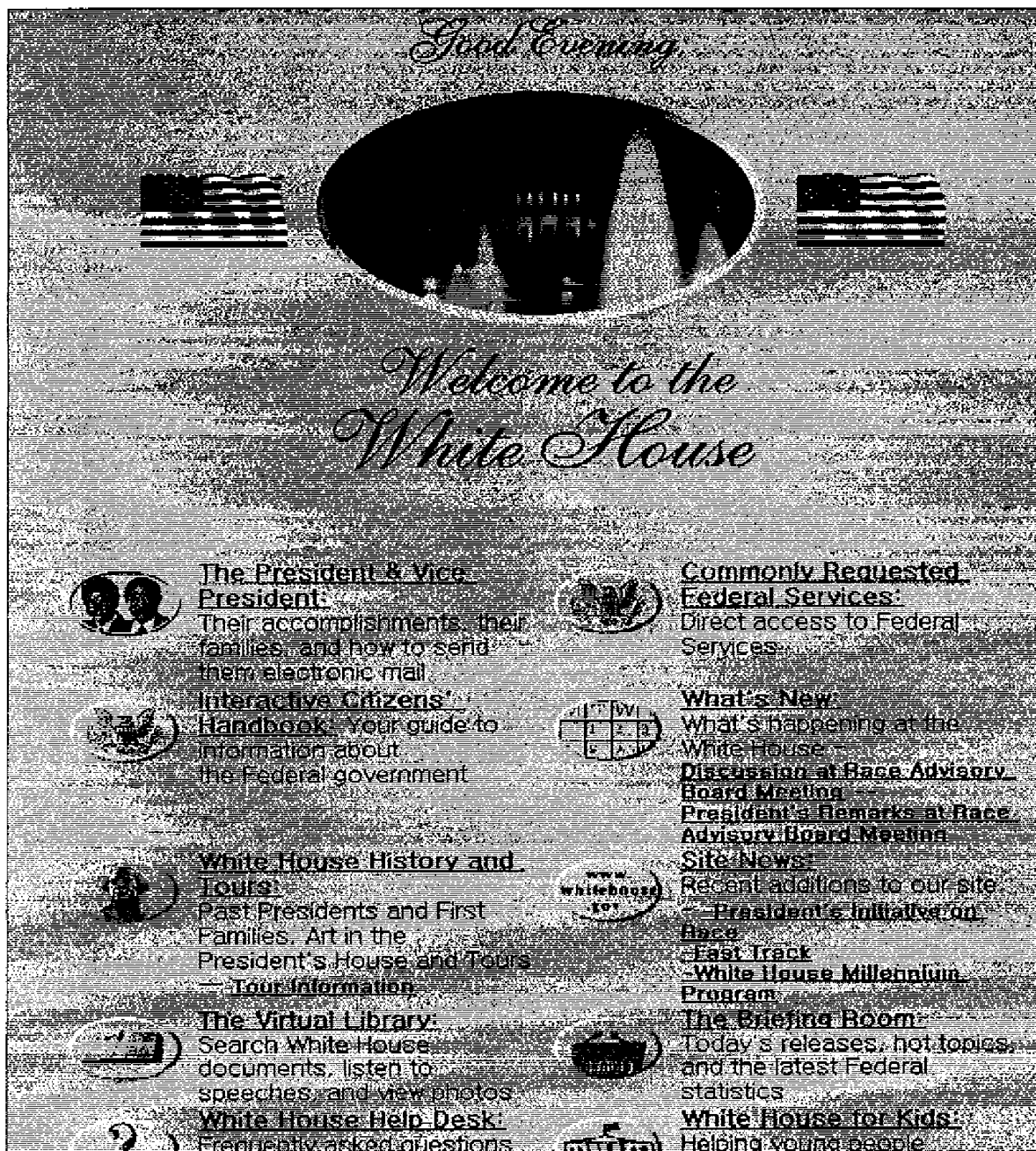
외국 정부기관의 마지막 홈페이지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는 자본주의 최고의 국가답게 대표적 정부기관인 백악관마저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대통령의 집무처인 백악관의 이미지를 최대한 실려 역사적 내용과 관광요소를 소개하는 서브 홈페이지가 눈여겨 볼 수 있는 장점 중 하나이다. 특히 가상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백악관 문서, 연설, 역사적 사진 등과 연결되어 홈페이지에도 관광자원적 요소를 한껏 가미하였다.

두 번째 장점은 마지막 서브 홈페이지에 구성되어 있는 “White House for Kids”라는 명칭의 서브 홈페이지이다.(그림 18 참조) 정치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어린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간접적 정치경험, 역사적 미국 정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이다. 처음에 소개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홈페이지에도 “Digital School”이라는 서브 홈페이지에서 교육기관의 소개와 더불어 연계(link)를 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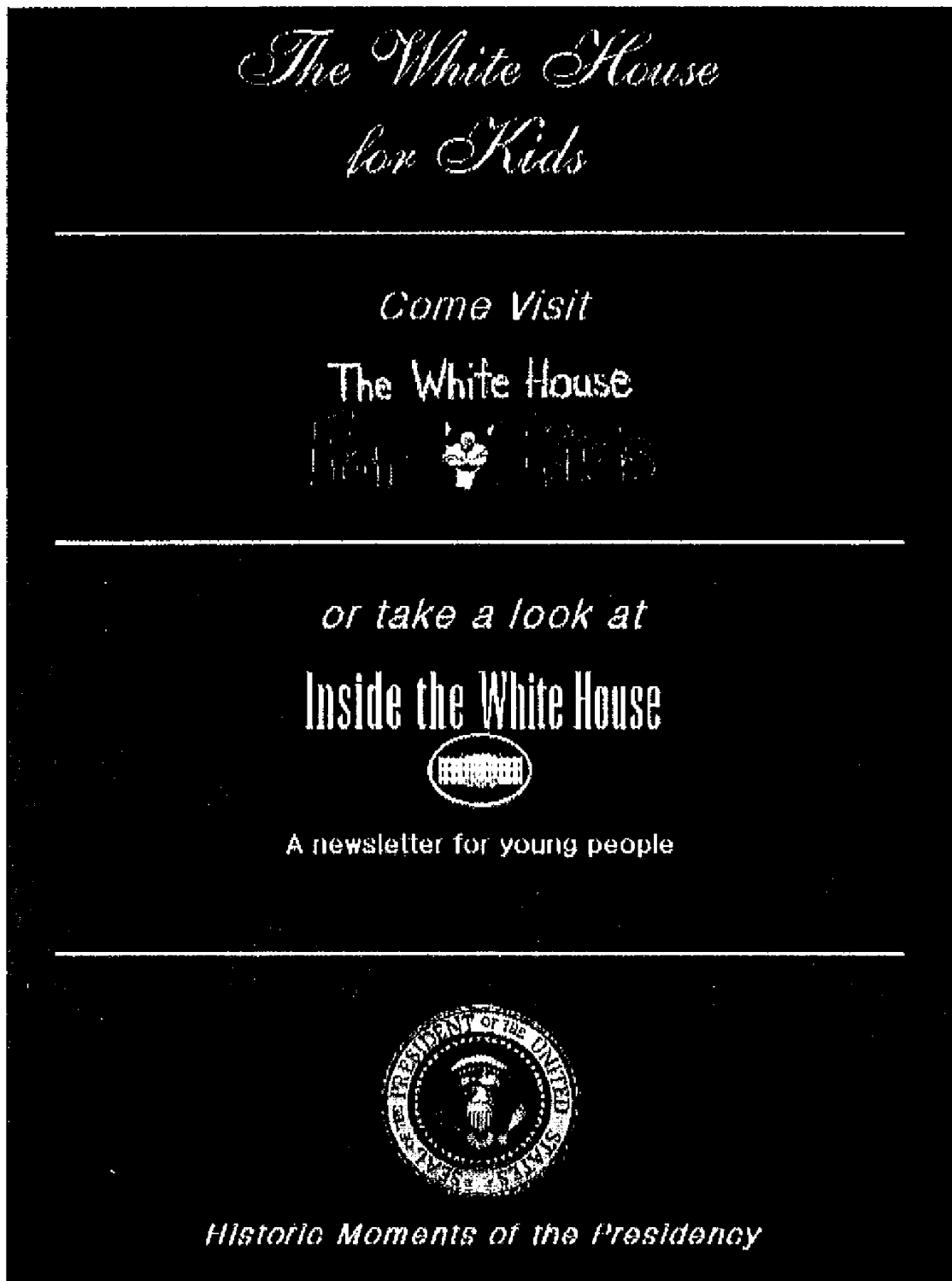
우를 보았는데, 정부기관이 어린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치교육, 홍보 등 여러 차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되도록 작은 그림을 사용하여 디자인하고, 텍스트 위주의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 통신속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Text version]을 따로 두고 있어 저속모뎀을 사용하는 사람도 편리하게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그림 17> 미국 백악관의 메인 홈페이지(<http://www.whitehouse.gov>)



<그림 18> 미국 백악관의 어린이를 위한 홈페이지



## 5.2 국내 대기업 홈페이지

### 5.2.1 LG(그림 19, 20)

<그림 19> LG의 초기 홈페이지 (<http://www.lg.co.kr>)



LG의 첫 번째 홈페이지는 단순히 LG의 로고와 함께 “we put people first”라는 한 문장의 글이 등장하면서 단지 5개 국어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처음 LG 홈페이지에 연결했을 때, 첫 페이지의 전송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용자들이 연결속도에 불만을 전혀 느낄 수 없다. 또한 무려 5개국어로 작성된 홈페이지는 전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이고, 대단한 노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다분히 LG에 대한 국외홍보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첫 페이지의 단순함은 상당히 특이한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전반적인 홈페이지의 내용에서도 상당히 상업적이고, 마케팅적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홍보대상자를 유인하는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홈페이지 다음에 메인 홈페이지가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정보가 텍스트 형식 이면서 다양한 컬러의 텍스트를 적용하여 나름대로 디자인을 만들면서도 전송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LG 홈페이지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엔진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이용자는 물론 LG의 직원들도 내부정보를 충분히 검색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다.

<그림 20> LG의 메인 홈페이지

The screenshot shows the LG main homepage with a navigation menu on the left and main content on the right. The navigation menu includes: LG인상, LG의 회사용, 채용마당, 신제품, 줄거리, 전자메일, LG CI, LG PRESS NET, and INDEX.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nguage selector (ENGLISH, CHINESE, RUSSIAN, SPANISH), a '뉴스' section with news items, a '시제품' section with product highlights, and a '이벤트' section. There are also illustrations of people and a 'Web Changes' section.

**ENGLISH CHINESE RUSSIAN SPANISH** Copyright (C) 1997 LG. All Right reserved

**뉴스**

- ▶ LG텔레콤, PCS사용서비스 개시와 더불어 첨단이동통신사업 세계진출 본격 추진: LG텔레콤 홈페이지도 링크(~10.1)
- ▶ LG생활건강, 獨 Merck社와 생명공학 의약품 전략적 제휴: LG화학 홈페이지도 링크(~9.30)
- ▶ LG유통, 전화요금 10월 1일부터 편의점 (LG 25)에 납부 가능(~9.29)
- ▶ LG증권, 삼가플 사무소 개설(~9.25)
- ▶ [공고] LG하니웰 제어시스템 전문업체 모집(~9.2)

**We Put People First**

(이렇게 하는 미래의 열매)

**미래의 열매**

**시제품**

- ▶ LG유통, 중국주세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10.15)
- ▶ LG종합기술원 기술경력 인재모집(~10.31)
- ▶ LG소프트 경력사원 모집(~9.30)
- ▶ LG종합기술원 환경연구소 인재모집

**신제품**

- ▶ LG생활건강, 헐리우빅터 진단시약 EZ-H.P.
- ▶ LG전자, 컬러모니터 북 조작용 채용 볼륨이 세탁기
- ▶ LG전자, 멀티미디어 세계를 즐길 수 있는 DVD롬 드라이브

**이벤트**

- ▶ LG홈워드 에쁜문서 공모전!!
- ▶ LG소프트 홈페이지로 링크(~10.15)

**Web Changes**

- ▶ 마흔다음을 감마 올린 꿈꾸는 데지, 오스타리아 \*11\*
- ▶ [건강카페] 커피가 잘 나는 마이 \*11\*
- ▶ 벤처가인 경영마인드 7계명
- ▶ 웹진 세리의 일출, 개신교
- ▶ 필교야 다모여라~
- ▶ [특집] PCS란 무엇인가?

**LG 019 PCS**

**TWINPIA**



특히 “만화로 배우는 테이블 매너”, “이벤트 모음방”, “LG 스포츠” 등 이용자들의 흥미거리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고, “경품 대잔치”, “The Wall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 형식의 텍스트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 홈페이지 하나에서만도 상당한 내용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것도 큰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동아일보와 연결(link)하여 “국제만화페스티벌”에 대한 이벤트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 대우의 이벤트용 홈페이지(<http://www.seoul.co.kr/ad/daewoo/>)

www.admin@seoul.co.kr'."/&gt;

### 5.2.2 대우(그림 21)

대우의 홈페이지는 첫페이지에서 상당히 큰 그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송속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대우 홈페이지에 하나의 흥미거리나 이벤트형식으로 보여주는 “현장체험”은 이용자들을 유인하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세계경영 만화기행과 경제 현장 경험담 등을 접근할 수 있는데, 세계경영 낱말 맞추기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어서 유익함뿐만아니라 재미도 만들어 주고 있다. 여기에 “세계 경영 퍼즐게임”이나 “세계 경영 나라이름 찾기” 등을 통한 게임도 있어 당침자를 발표하여 정품까지 제공하고 있다.

### 5.2.3 삼성(그림 22, 23)

삼성의 메인 홈페이지는 영문과 한글비전으로 작성되어 있다. 서버 홈페이지의 제목만을 표현하는 목록들을 왼쪽에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삼성 자신들에 대한 뉴스를 텍스트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송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느껴진다. 자신들의 웹주소도 [www.samsung.com](http://www.samsung.com)과 [www.samsung.co.kr](http://www.samsung.co.kr) 두가지 모두를 이용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쉽게 기억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자신들의 정보를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치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요소는 “Free down load”이다. 이 서버 홈페이지는 “screen saver”, “wall paper”, “icon” 등 3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게 하고 있다. 새로운 자료인 경우는 아래쪽에 다시 표현하여 자료 갱신에 대한 신뢰감도 주고 있다.

또한 삼성 자체내에서 FTP 서버, 즉 완전히 자료만을 제공하는 서버를 소개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한 것이 다른 회사의 홈페이지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여겨진다.

<그림 22> 삼성의 홈페이지(http://www.samsung.com)

Welcome to Samsung

- about samsung
- products
- our companies
- recruiting
- news
- social activities
- sports activities
- CI
- magazine
- fun


site guide

contact

korean version

click here!

97 SAMSUNG Let's run together



challenge

Make your first step with us

**News**


**An updated statement from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Samsung America Inc. and SAILAhead in response to a series of e-mail messages distributed beginning July 19. (September. 3, 97)**

**Samsung Heavy Industries Gets an Order for World's Largest Drillship**  
 Reading & Bates Corp., the world's largest company specializing in deep sea oil field development, has ordered a new 103,000DWT ultra deepwater dynamically positioned drillship, the largest of its kind, from Samsung Heavy Industries Co. (SHI). (October. 2, 97)

**Samsung Engineering Wins US\$70 Million Gas Processing Plant Project**  
 Samsung Engineering Co. announced today that it has received an order from Petrovietnam to build a gas processing plant worth US\$70 million on a turn-key basis in Vietnam. (September. 18, 97)

**Samsung Engineering Exports Waste Management Technology to the US**  
 Samsung Engineering Co. announced today that it has signed a marketing and licensing contract for its sewage and wastewater treatment and biological nutrient technology with O'Brien & Gere Engineers Inc. of the U.S. (September. 9, 97)

**Chairman Lee as an IOC member**


 As a member of the IOC, he likes to share, in these pages, some of his thought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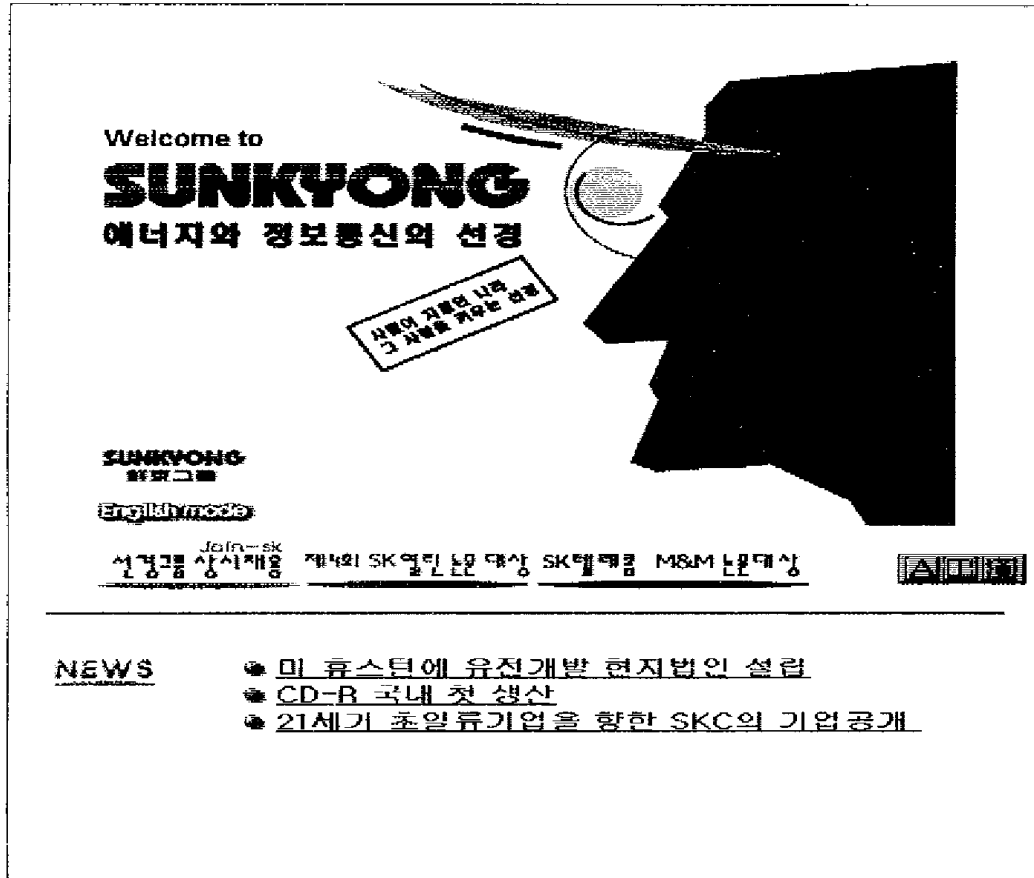
&lt;그림 23&gt; 삼성의 서치엔진과 FTP사이트

The screenshot shows a web page with a dark sidebar on the left containing a 'Fun Samsung' logo. The main content area has a navigation bar with 'screen saver', 'wall paper', and 'icon' buttons. Below this is a large text box titled 'Samsung Group anonymous FTP site Now Opened' with a 'Domestic' label. The text inside the box explains the FTP service, mentioning the URL 'ftp://ftp.samsung.co.kr' and the ID 'anonymous'. It also states that the service is currently only available for screen saver sites as of August 26, with a scheduled expansion for September 12. Below the text box, there are sections for 'Free screensavers, icons, and wallpaper files!', a note that all files are free of charge, and a 'This week's HOT download' section. At the bottom, there is a 'Download' button and a 'Message Now (Screen Saver)' section with a description of a message-entering function.

#### 5.2.4 선정(그림 24)

선정의 경우는 다른 회사의 홈페이지와는 달리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주로 기업자체내 직원들을 위한 뉴스와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외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한 홍보는 거의 불가능한 홈페이지라 할 수 있다. 여기서도 영문과 한글로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텍스트는 적고 그림은 큰 그래픽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송속도도 다소 떨어지는 느낌이다.

<그림 24> 선경의 홈페이지(http://www.sk.co.kr)



## 6. 분석결과에 따른 홍보방안(제언)

지금까지 정보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홍보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통일원의 홈페이지 'Unikorea'에 필요한 홍보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6.1 디자인보다 내용적 요소에 더욱 충실하여야 한다.

국내 대부분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외국의 홈페이지들도 너무 디자인 개념에만 치중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컴퓨터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홈페이지에 도입을 하게 되면, 통신속도를 상대적으로 떨어 뜨리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들이 원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는데, 지루함을 느끼고 접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Unikorea'의 경우 멀티미디어 기능은 덜 하지만, 대부분이 이미지 맵등을 이용한 그

그래픽이 전체적인 화면을 구성하기 때문에 초기화면의 전송속도가 다소 떨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보통 이미지 맵은 메인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거나 일부 한 페이지 정도를 사용하는데, 'Unikorea'는 서브 홈페이지들마저도 이미지 맵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래픽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홈페이지의 구성이 너무 디자인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본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 연구에서도 인터넷 이용자들은 디자인이 좋아서 접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접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의 존재와 그 정보에 대한 신속한 검색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이유를 1) 디자인 요소, 2) 내용적 요소, 3) 기술적 요소 등 세가지 요소로 검토하였다. 이 요소들 중에서 내용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고, 내용적 요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1) 전문적이거나 업무상 자료의 존재여부였고, 2) 최신정보의 신속제공 즉, 자료의 빈번한 갱신여부가 그 다음으로 중요시 되는 요소였다. 내용적 요소중 3) 흥미로운 내용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다. 그 다음 기술적 요소에서 홈페이지상의 4) 자료검색 도구가 있는지의 여부였고, 기술적 요소중에서 5) 관련 사이트와의 연계기능도 매우 중요시되는 요소였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홈페이지의 접속이유를 묻는 1차 설문에서는 '내용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Unikorea'의 평가설문인 2차 설문에서는 '내용적 요소'가 가장 불만요인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요소는 첫 번째 설문에서조차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인터뷰 진행결과, 디자인 때문에 접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디자인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있는 정보의 존재여부와 검색의 편리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디자인 개념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큰 그래픽을 자제하여 디자인하자는 것이고, 홈페이지의 편의를 돕는 디자인 개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 6.2 홍보가능 대상집단의 정확한 인식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일원의 홍보대상과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홍보대상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홍보매체의 홍보대상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그 홍보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일원의 통일정책 홍보대상은 전 국민이라 할 수 있다. 조금 세분화해서 표현하면 1) 북한관련 연구집단, 2) 교육적 홍보대상, 3) 실향민, 4) 해외홍보: 재외한국인, 외국인 5) 통일원 내부(정보획득 목적) 등이다. 그러나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통일정책의 홍보대상은 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의 속성을 잘 이해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차별화된 홍보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홍보대상을 표현하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컴퓨터통신과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자로 한정지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 대상인구는 현재 약 1억에 가까운 숫자이고, 2000년 정도에는 약 2억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100만명 정도를 컴퓨터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의 수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남성의 비율이 많아서 약 80%를 차지하고, 여성의 경우는 20% 정도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이 22%, 20대 후반이 38%, 30대가 약 25% 정도로 주로 대학생과 대졸 출신 이상의 회사원 주 계층 대상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주로 중산층 이상의 생활수준을 가지고 있고, 초고소득층의 경우는 오히려 인터넷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홈페이지 사이트는 뉴스가 가장 많았고, 학술정보, 전자메일,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오락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주 이용장소도 각 가정보다는 직장과 학교가 약 70%이상을 차지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용자의 대부분이 국내 사이트보다는 국외사이트를 찾는 경우가 많아서 국내사이트들의 가치있는 정보의 보유실태가 매우 낮게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첫째가 회선정체이고, 원하는 정보의 부재, 정보검색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적인 홍보대상을 넓게 목표로 삼는 것보다는 20대와 30대 남성위주로,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홍보를 하고, 그들의 관심을 파악하여 유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6.3 인터넷을 통한 통일원의 적극적 홍보의 필요

‘Unikorea’를 통한 홈페이지 홍보는 단순히 보여주는 형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되어

야 한다. 기존의 매체를 통한 통일원의 홍보는 범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을 통일원의 홍보에 노출시킬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의 가장 큰 장점은 장시간 이용자를 홍보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 대부분의 인터넷이용자나 국민들이 통일원의 사이트인 'Unikorea'의 웹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통일원이 그런 홍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통일정책의 홍보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일반 매체를 통한 홍보는 서로 병행되고, 'Unikorea'를 알리는 보완적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Unikorea'를 알리는 홍보방법의 세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망과의 연계: 지금 현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Ednet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망으로 구성되어 이용되고 있고, 정보통신부의 초고속통신망 계획중에 전국의 모든 초중고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하려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네트워크나 각 초중고, 대학교 홈페이지에 'Unikorea'의 링크를 마련하는 협조를 구해 모든 교육망과 연계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교육부와 협조가 된다면 가능할 것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험하지 못한 국가적 현실을 이해시키는 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관광적 요소의 부각: 분단된 조국은 우리 국민에게 뼈아픈 현실이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마지막 분단국가라는 현실 자체가 호기심의 대상일 수 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통일정책에 직접적인 관심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고,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관광적요소를 적극 개발하여 우회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과 정책을 알리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Unikorea'의 영문버전에 비무장지대 주변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포럼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관광관련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월드웹과 같이 세계적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이벤트 홈페이지에 링크를 마련한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Unikorea'에 관심을 주게 될 것이다.

3) 유명 검색엔진의 광고식 홍보: 아직까지는 정부기관이 야후나 알타비스타와 같은



유명 검색엔진에 자신의 웹사이트를 광고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의 경우는 이미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광고하기 시작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2억에 가까운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 광고를 보기 때문에 광고, 홍보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도 이제는 홍보개념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고,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기로 하였다면 유명 검색엔진에 'Unikorea'의 주소와 전 세계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홍보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그런 검색엔진의 광고비용이 그다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위해서는 국내의 유명 검색엔진에 그와 유사한 광고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News Group의 적극적 활용: 인터넷에는 www뿐만아니라 텍스트형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몇가지 있다. 그 중에서 유즈넷 뉴스(Usenet News)라는 전문게시판이 있어서 서로 관심있는 주제를 올려 놓고 질문과 답변을 이용자들간에 교환하는 서비스가 있다. 여기에는 여러 게시판이 있어서 이 게시판 하나하나를 뉴스그룹이라 한다. 이러한 뉴스그룹을 이용하여 남북한관계에 대한 주제를 설정할 수도 있고, 'Unikorea'의 주소를 홍보하는 방법도 있다. 대부분의 게시판이 영문위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외국에 대한 홍보에 주로 이용이 가능하고, 국내 이용자들에게는 han으로 시작하는 한글 전용 뉴스그룹에 홍보가 가능하다.

5) IP사업자 및 컴퓨터통신사업자의 활용: 국내에는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등 대규모의 컴퓨터통신사업자와 수많은 IP사업자 국내 컴퓨터 정보를 다루고,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통신사업자와 IP사업자와 협조를 통해 'Unikorea'를 홍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대부분의 개인적 인터넷 사용자는 컴퓨터통신 사업자들의 호스트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기 때문에 각각의 인터넷 포럼에 'Unikorea'에 대한 홍보를 하고, 가능하다면 직접 연결하는 방법도 효과가 클 것이다. 특히 IP사업자들은 전문적으로 컴퓨터 통신에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통일원의 홍보내용 중 국가비밀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내용들은 하청계약 등을 통해 IP사업자들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정책적 요소를 직접 표현하기 보다는 이용자

들의 호기심, 흥미 등을 유발시켜 유인하여 간접적으로 정책적 요소를 표현하기에는 민간 IP사업자를 통한 정보제공방법이 더욱 효과적인 수 있가 때문이다. 또한 그만큼 인력적 부담도 덜어지기 때문에 'Unikorea' 홈페이지가 더욱 자주 정보가 갱신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

6) 각종 정보사냥대회의 활용: 최근에 하나의 이벤트로, 심지어는 EBS에서는 정기적인 TV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마련하고 있다. 탐색할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빨리 그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는 사람에게 점수를 주어 승자를 가리는 대회이다. 이런 프로그램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사이고, 특히 대학생들 위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의 주이용자인 대학생층에 'Unikorea'를 홍보하기에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주어지는 문제중에 'Unikore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물론 주최측과 문제제공을 하는 업체측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6.4 이벤트요소를 구상하자

일반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Unikorea'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처음 접속하고자 할 때, 실제로 통일원의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북한의 실상, 북한 주민 생활에 대한 호기심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내용의 단순한 나열은 그다지 큰 호기심을 유인하기 어렵고, 좀 더 계획적인 이벤트 요소를 발견하고, 탐색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몇가지 든다면, 첫 번째는 북한관련 사진전을 구성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Unikorea'에 북한 갤러리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히 보여주는 것보다는 갤러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북한의 명산을 주제로 한 그림카드에 'Unikorea'를 홍보하는 사이트 주소등을 담아 보내주는 이벤트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예로는 이산가족 찾기 등의 이벤트를 'Unikorea'에서 실시할 수도 있다. 물론 한국전쟁 당시의 세대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족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 하나의 이벤트로 다른 언론기관이나, 특히 한글검색엔

진 등과 협조하여 이런 이벤트를 구상하면 그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세 번째로 귀순자들의 생활을 소개하는 포럼을 마련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대국적인 정책보다는 이런 소소한 생활에 더욱 관심을 갖기 쉽기 때문이다. 그들이 귀순한 후 잘 정착하여 행복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등을 시리즈 형식으로 구성하여 보여주는 것은 우리 국민의 호기심과 관심을 만족시키고, 외국에 대한 국가적 홍보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다음 귀순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전략적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국민들의 북한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사진, 동화상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필자가 과거에 귀순자들의 강연을 여러 다른 동료들과 들을 기회가 몇번 있었다. 대부분 동료들의 귀순자에 대한 관심은 그 귀순자의 아주 개인적인 내용과 북한주민 소소한 일상생활에 더욱 있었고, 질문하는 내용들 대부분이 귀순자가 당황할 정도로 사소한 개인생활들에 관한 것이었다. 너무 오랜 동안 서로 단절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소한 가정생활, 학교생활, 연애관 등 일상적인 것에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호기심과 관심을 만족시킬 정보를 'Unikorea'에서 재구성하여 제공한다면 더욱 많은 이용자가 'Unikorea'에 관심을 갖고, 자연스러운 통일정책의 홍보가 가능할 것이다.

## 6.5 북한관련 전문정보도 제공하자

최근에 북한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북한과의 교역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의 다른 기업도 북한 정보에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그 절차나 기업관련정보가 일반기업이 제공받기엔 사실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다. 또한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집단이 학계를 비롯하여 많이 있지만 그 정보를 구하기도 쉬운 것은 아니다. 물론 아직도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수준의 정보까지는 'Unikorea'를 통해 제공하므로써 'Unikorea'의 북한정보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만약 정보의 비밀성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허락받은 연구자나 기업에게 별도의 ID나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가능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면 'Unikorea'의 효용성이 더욱 커지고, 이용자들도 그 편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암호체제와 방

화벽(firewall)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각종 해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는 제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아직까지 잘 가동되지 않았던 'Unikorea' 자체 검색엔진을 빠른 시일내에 가동시켜 정보를 탐색하는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검색엔진의 가동이 여의치 않으면 목록형식의 관련사이트 연계 및 관련자료의 위치를 구성하여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검색엔진이나 검색목록의 구성은 통일원 내부에서 정보를 얻고자 할 때도 자신이 찾는 정보의 위치를 파악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7. 맺는 말

인터넷은 사이버 공간을 대표하는 시스템중 하나이다. 통일원이 정책홍보를 위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사이버 공간의 이용자들의 특성도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 홍보의 효과성이 최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그런 인터넷과 그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Unikorea'의 새로운 통일정책 홍보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수동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를 기다리는 홍보가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통일원의 홈페이지를 이용자들이 알리는 방법을 찾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런 연구자체가 과거에 거의 없었던 연구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가 없어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결론을 내리기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 따라서 어떤 검증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여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Unikorea'의 활성화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제안점들을 모으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과 컴퓨터통신을 통해 통일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적극적 유인요소를 탐색하여 그 홍보의 기대효과를 상승시키고, 최대화할 수 있다.

둘째, 큰 비용이 투자되는 인터넷과 컴퓨터통신의 홍보에 비해 미리 홍보대상자의 속성과 계층 등을 파악하고, 유인함으로써 상대적인 홍보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셋째,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의 이용자들을 계층별로 분류하고, 그들의 관심도를 측정하여, 각 계층에 맞는 통일정책내지 통일원의 홍보를 차별화시킬 수 있다.

넷째, 이 연구결과는 통일원뿐만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의 정책홍보나 기업의 광고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통일원의 홍보정책은 그 홍보대상자를 잘 이해하고, 그들의 관심을 파악하여 이루어졌을 때,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특히 'Unikorea'를 주관하는 부서의 모든 담당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대상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20대와 30대의 청장년층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관심을 파악해야 하고, 기존 정책홍보 중심에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유인가능한 홍보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강창훈, 「인터넷을 삼킨 나우누리」, 나우누리, 1996.
- 김경태, 박대철, 손정영 역, 「멀티미디어 통신」, 한빛미디어, 1995.
- 김석훈, 「受容者の 社會的 屬性과 매스 미디어 接觸度」, 신문연구소학보, 제6호, 1969.
- 류지창, 정길락, 「Internet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 1995.
- 박화만, 「인터넷을 이용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방혜경, “인터넷 월드와이드웹을 활용한 기업의 사이버마케팅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서정우, 「국제커뮤니케이션론」, 나남, 1988.
- 손동욱, 「정보통신의 이해」, 생능, 1995.
- 이종찬, 「정보통신과 PC활용」, 대림, 1993.
- 조성주, 「윈도우95에서 인터넷 사로잡기」, 라인리그, 1996.
- 최종수, 「매스커뮤니케이션 理論」, 전에원, 1986.
- 한국PC통신, 「HiTEL 길라잡이」, 한국PC통신, 1993.
- Bryan Pfaffenberger, Internet, MIS press, 1994.
- Emery Vince How to Grow Your Business on the Internet, Coriolis Group Books, 1995.
- Fred N. Kerlinger,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CBS College Publishing, 1986.
- Jacob Cohen & Patricia Cohen, Applied Multiple Regressi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1983.
- Jill H. Ellsworth & Matthew U. Ellsworth, Internet Business Book, Wiley, 1996.
- Resnick R. & Taylor D., The Internet Business Guide, SAMS, 1994.
- WWW 사이트 주소
- <http://www.nw.com/zone/www/report.html>, 1997.9.15
- <http://www.korealink.co.kr/computer/32-2/cc216.htm>, 1996.10.2

<http://www.nw.com/zone/www/dist-bynum.html>, 1997.9.15  
<http://arom.etri.re.kr/>  
<http://www.hani.co.kr/report/res.html>, 1997.9.18  
[http://www.etnews.co.kr/etnews/etnews\\_content?19970715110](http://www.etnews.co.kr/etnews/etnews_content?19970715110), 1997.7.20  
<http://news.hani.co.kr/report/inter3.html>, 1997.9.6  
<http://www.state.ca.us/>, 1997.9.20  
<http://www.hongkong.org>, 1997.9.20  
<http://www.gov.sg/>, 1997.9.20  
<http://www.whitehouse.gov>, 1997.9.15  
<http://www.lg.co.kr>, 1997.9.15  
<http://www.seoul.co.kr/ad/daewoo/index.html>, 1997.9.6  
<http://www.samsung.com>, 1997.9.20  
<http://www.sk.co.kr>, 1997.9.15

## 【요약문】

현대사회는 정보화사회라고 불려진다. 농경사회에서는 토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힘이 되듯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사회적인 힘이 되는 사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일 후의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를 근간으로 지금보다 더욱 발전한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다. 현대 정보화사회의 핵심이 되는 기술인 컴퓨터통신은 컴퓨터와 컴퓨터를 이어주는 단순 기능에서 벗어나 정보 기술 발전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보 통신망과 멀티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환경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개발됨에 따라 이러한 고급기술을 기반으로 실생활의 많은 영역에 적용하고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학의 구성과 관련하여 최근 추진되기 시작한 연구분야가 인터넷 상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가상대학을 구축하는 것이다. 가상대학은 열린 대학이라고도 하는데, 캠퍼스나 교수진, 행정기관 등의 물리적인 형태는 존재하지 않지만 컴퓨터 및 네트워크를 통하여 학생들이 대학의 강의를 습득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컴퓨터 상의 대학이다. 이러한 가상 대학의 구축은 유형의 대학에서 발생하는 재정 문제나 캠퍼스 확보 및 강의 프로그램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 후 국민통합을 위해 북한 지역 주민들의 재교육 수단으로서, 정보 통신망에 연결되어 지원될 멀티미디어 환경 기반의 가상 대학의 구성 및 그 기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가상 대학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지역 주민의 재교육 기관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재정 문제나 캠퍼스 확보 문제, 교수 확보 및 강의 프로그램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가상 대학의 기본 기능은 첫째, 코스웨어 방식에 의거한 강의 프로그램의 제공이다. 학생은 코스웨어에 기반한 강의 프로그램에 따라 강의 내용을 학습하고, 스스로 테스트하면서 진도를 나간다. 또한 이러한 수강 사항을 기록하여 진도 및 수강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제공이다. 음성, 동영상, 그림 형태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한 강의 내용을 유지, 관리하며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타 참고 자료의 전자 도서관 역할도 한다.

종래의 컴퓨터는 문자와 숫자만을 처리하였으나 비디오 카드, 사운드 카드 등 컴퓨터



의 전반적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사람의 정보 전달 수단을 직접 컴퓨터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음성, 동영상, 그림 등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컴퓨터에 입력 하여 저장하고, 컴퓨터로 처리, 출력할 수 있게 되었다. 기본적인 멀티미디어 자료 형태 또는 객체는 위에서 언급한 문서, 음성, 그림, 동영상 등이며 이들의 특징은 대용량이라는 점이다. 이들을 응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데이터 모델링 과정이 필요하나 멀티미디어 객체는 질적 양적인 면에서 사용자에게 최상의 정보를 공급 해준다. 즉,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면 사람과 컴퓨터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상호 작용을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에 관한 연구는 대략 30년 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으나, 멀티미디어 자료 처리에 필요한 기술의 발달은 최근에야 컴퓨터를 매체로 강의 및 학습을 하기에 손색없게 만들었다. 개인별 능력이나 학습 속도에 따라 다양한 학습 과정을 제공하는 학습용 컴퓨터 프로그램인 코스웨어는 학생들의 진도조정, 교육의 효과 판단 및 평가, 교사를 위한 정보 제공, 교과 과정 및 학생들에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한 코스웨어는 텍스트만을 이용한 코스웨어보다 학습에 있어 훨씬 효과적인 점은 자명하다.

인터넷 상의 가상대학을 통한 교육은 통일 후의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학습자를 배출하고 더 나아가 통일 후 북한 지역 주민의 재교육이나 재훈련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제시될 수 있는 학습 환경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일관성있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지니는 속성과 특징으로 인해 통일 후의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스스로 문제 해결의 고등적 사고 능력과 기술 습득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개별적 요구와 관심, 흥미 등을 만족시켜 주면서, 동시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다양한 견해와 생각을 편견없이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학습자를 길러낼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상의 가상대학의 특징과 그 교육적 잠재력으로 인해 통일 후의 정보화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 환경일 것이다.

## 1. 인터넷 상의 가상대학 구축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정보화사회라고 불려진다. 농경사회에서는 토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힘이 되듯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사회적인 힘이 되는 사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일 후의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를 근간으로 지금보다 더욱 발전한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다. 현대 정보화사회의 핵심이 되는 기술인 컴퓨터통신은 컴퓨터와 컴퓨터를 이어주는 단순 기능에서 벗어나, “네트워크가 곧 컴퓨터이다”라는 명제가 등장할 만큼 정보 기술 발전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 통신망이나 컴퓨터의 연구 개발은 네트워크 기능의 고속화, 고성능화, 지능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의 컴퓨터 통신은 단순히 터미널과 과학 계산용 서버를 연결하고 데이터 전송을 하는 목적이 국한되었으나 취급하는 정보가 다양해지고 수많은 사용자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갖게 되고 정보 통신망이 대규모로 확산됨에 따라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 교환, 생성, 가공, 축적, 변환, 수집으로 기능이 확대되었다. 즉, 컴퓨터통신의 기본 구조는 정보, 응용, 미들웨어, 네트워크의 계층적 구조로 발전하였다.

현재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 기술이 등장하였으나, 모두 데이터의 전송 및 교환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 분산형 멀티미디어 응용이 확산됨에 따라 기본 기능만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와 응용사이를 결합시키는 미들웨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미디어 동기, 멀티포인트 통신, 디렉토리 기능, 보안 기능, 프로토콜 정합기능 등이 대표적인 미들웨어 기능이며 네트워크 기반 구조와 분리되어서 특정 서버에 집중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상례이다. 문자와 숫자만을 다루는 시대에서 그래픽, 영상, 소리, 움직임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 시대로 넘어옴에 따라 컴퓨터통신 구조도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의 생성, 저장, 검색, 변환을 위한 새로운 응용 프로토콜과 데이터 구조를 필요로 한다. 인터넷에서 쓰이는 HTML,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 등이 이에 속한다.

---

상기논문은 생략된 정보를 설명한다거나 제한 조건을 기술할 필요 없이 본문에서 모두 상세히 언급하는 일반적인 공학논문 및 연구보고서의 구성 양식을 따랐기 때문에 인문학 및 사회과학에서 통용되는 각주의 사용을 배제하였음.

향후 컴퓨터통신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의 기술적 진화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로 전세계화이다. 고속화, 고성능화된 네트워크 액세스가 거의 모든 사람과 기기에 제공되며 다양한 통신망이 계속 출현할 것이다. 둘째로 가상화이다. 네트워크와 정보의 융합으로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무의미해지고 사회조직, 산업구조도 가상화될 것이다. 셋째로 지능화이다. 스마트 네트워크, 스마트 컴퓨터에 의한 정보 처리로 인간화되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처럼 정보 통신망과 멀티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환경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개발됨에 따라 이러한 고급기술을 기반으로 실생활의 많은 영역에 적용하고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학의 구성과 관련하여 최근 추진되기 시작한 연구분야인 인터넷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가상대학을 구축하는 것이다.

가상대학은 열린 대학이라고도 하는데, 캠퍼스나 교수진, 행정기관 등의 물리적인 형태는 존재하지 않지만 컴퓨터 및 네트워크를 통하여 학생들이 대학의 강의를 습득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컴퓨터 상의 대학이다. 이러한 가상 대학의 구축은 유형의 대학에서 발생하는 재정 문제나 캠퍼스 확보 및 강의 프로그램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 후 국민통합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북한 지역 주민들의 재교육 수단으로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지원될 멀티미디어 환경 기반의 가상 대학의 구성 및 그 기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가상 대학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수단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통일 후 국민통합을 위해 북한 지역 주민의 재교육 기관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재정 문제나 캠퍼스 확보 문제, 교수 확보 및 강의 프로그램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가상 대학의 기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스웨어 방식에 의거한 강의 프로그램의 제공이다. 학생은 코스웨어에 기반한 강의 프로그램에 따라 강의 내용을 학습하고, 스스로 테스트하면서 진도를 나간다. 또한 이러한 수강 사항을 기록하여 진도 및 수강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제공이다. 음성, 동영상, 그림 형태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한 강의 내용을 유지, 관리하며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타 참고 자료의 전

자 도서관 역할도 한다.

셋째, 학교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학생과와 교무과의 기능을 제공한다. 가상대학 학생과에서는 학생의 개인적인 신상 명세와 학적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유지, 관리한다. 그리고 가상대학 교무과에서는 학생들의 수강현황, 진도의 진행사항, 성적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한다.

## 2. 인터넷 가상대학을 위한 기술적 배경

종래의 컴퓨터는 문자와 숫자만을 처리하였으나 비디오 카드, 사운드 카드 등 컴퓨터의 전반적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사람의 정보 전달 수단을 직접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음성, 동영상, 그림 등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여 저장하고, 컴퓨터로 처리, 출력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마이크를 통해 입력받은 아날로그 음성 데이터를 사운드 카드의 변환기에 의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음향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운드 카드에 연결된 스피커로 출력하는 것이다. 또한 그림이나 캠코더에 의해 입력된 동영상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이를 편집, 저장, 재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본적인 멀티미디어 자료 형태 또는 객체는 위에서 언급한 문서, 음성, 그림, 동영상 등이며 이들의 특징은 대용량이라는 점이다. 이들을 응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데이터 모델링 과정이 필요하나 멀티미디어 객체는 질적 양적인 면에서 사용자에게 최상의 정보를 공급 해준다. 즉,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면 사람과 컴퓨터,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 작용을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에 관한 연구는 대략 30년 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으나, 멀티미디어 자료 처리에 필요한 기술의 발달은 최근에야 컴퓨터를 매체로 강의 및 학습을 하기에 손색없게 만들었다. 개인별 능력이나 학습 속도에 따라 다양한 학습 과정을 제공하는 학습용 컴퓨터 프로그램인 코스웨어는 학생들의 진도조정, 교육의 효과 판단 및 평가, 교사를 위한 정보 제공, 교과 과정 및 학생들에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한 코스웨어는 텍스트만을 이용한 코스웨어보다 학습에 있어 훨씬

효과적인 점은 자명하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는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해 종래의 데이터베이스의 동시 공유, 접근 그리고 질의처리 기능을 제공해 준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와 근거리통신망 또는 원거리통신망에서 멀티미디어 정보의 실시간 전송을 가능하게 하여 주는 초고속 통신망의 등장은 가상대학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다.

## 2.1 인터넷

### 2.1.1 인터넷의 역사

인터넷에 대한 아이디어는 1963년 라이 로보트고라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초 냉전 시대의 두뇌 은행 역할을 했던 미국의 RAND 회사는 핵전쟁 이후에도 미 당국이 성공적으로 통신이 가능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1964년 RAND의 최초 계획은 네트워크가 중앙 통제 기능이 없어도 작동되어야 하며, 네트워크의 일부가 파손되어도 전체 네트워크는 작동되어야 하며, 패킷-스위칭 네트워크 개념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미국 국방성은 일정지역의 폭탄폭격과 같은 긴급사태 시에도 장애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 방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던 중, 연구원들 간의 정보와 자원 공유를 위하여 1969년부터 ARPANET란 컴퓨터 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 미 국방성의 지원 하에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1969년 최초의 노드가 UCLA에 설치되었고 그 해 말에 모두 네 개의 노드가 되었는데 이 때의 네트워크를 ARPANET이라고 불렀다. 이때의 전송속도는 0.056 Mbps였다. 1 Mbps는 초당 1 메가 비트를 보낼 수 있는 빠르기이다. 1971년까지 노드는 19개로 늘어났는데 분산 구조가 확장을 쉽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ARPANET은 원격 시스템 접속, 파일전송, 전자우편 및 정보공유가 가능한 컴퓨터 통신망으로서 사용자 수의 증가와 망의 확장과 함께 미국의 중요한 컴퓨터 통신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ARPANET의 확장과 함께 미국에서는 근거리통신망 기술과 워크스테이션의 보급에 따라 새로운 컴퓨터 통신망들이 탄생하여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ARPANET은 이들 통신망들과의 상호 연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종에 관계없이 통신망에 접속된 모든

컴퓨터간의 통신이 가능한 컴퓨터통신망 구축을 위해 새로운 통신프로토콜과 통신망구조가 필요하게 되었다.

1973년 미 국방성 고등연구사업국은 여러 종류의 상호 연결 패킷 네트워크에 대한 기법과 기술을 조사하는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그 목적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복수로 연결된 패킷 네트워크 상에서 통신을 원활하게 해주는 통신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를 인터넷팅 프로젝트라 불렀고 이 연구에서 파생된 네트워크 시스템이 "인터넷"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이 연구 과정에서 개발된 프로토콜 시스템을 TCP/IP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라고 불렀다. ARPA 통신 표준은 원래 네트워크 제어 프로토콜이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수준의 기술이 개발되어 TCP/IP라는 보다 복잡한 표준으로 대체되어 1983년에 ARPANET의 모든 시스템에서 TCP/IP로 바뀌었다. 그 당시 ARPANET은 MILNET과 ARPANET으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인터넷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ARPANET이 둘로 나뉘어 인터넷을 형성할 때 미 국방성은 모든 ARPANET 호스트들이 TCP/IP 사용을 의무하고 패킷교환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이를 적용토록 하였다. 결국, 모든 ARPANET 호스트들은 TCP/IP프로토콜을 사용한 인터넷 환경에서의 상호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서 TCP/IP 인터넷의 표준 프로토콜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보다 많은 호스트와 게이트웨이들이 기존의 통신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TCP는 보내는 쪽에서 메시지를 일련의 패킷으로 바꾼 뒤, 받는 쪽에서 패킷을 재조립하여 메시지로 바꾼다. IP는 주소를 관리하는데, 패킷이 여러 노드 심지어는 표준이 서로 다른 여러 네트워크를 지나가더라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준다. 처음에는 TCP와 IP를 구별하지 않고 TCP만 존재하였지만 70년대 중반 음성을 패킷에 실어 보내되 음성이 연속적으로 들리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IP가 개발되었다. ARPANET에 연결하기 위해 다른 네트워크들이 TCP/IP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단체들의 컴퓨터가 쉽게 연결되면서 1989년 공식 해체되기까지 ARPANET은 모든 컴퓨터 네트워크의 모체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후 세계 각국의 학술연구망들을 상호 연동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국제학술연구망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연구개발을 위한 유닉스 시스템에서 TCP/IP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

으로 신뢰성 있는 전산망을 쉽게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인터넷은 미국의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지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통신망으로 발전하였다. 인터넷의 사용 증가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된 계기는 NFSNET의 등장이다.

### 2.1.2 인터넷의 발전

1986년 전미 과학 재단은 오늘날 인터넷의 주요한 백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NSFNET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여러 통신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망 중에 하나가 전미 과학 재단이 운용하는 NSFNET 이었다. 80년대 말에 전미 과학재단은 5개의 슈퍼컴퓨터센터를 설치하였는데, 이전 까지만 해도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빠른 컴퓨터들은 단지 무기개발자들 혹은 아주 큰 기업 연구원들만이 사용이 가능했다. 전미 과학재단이 이와 같이 5개의 슈퍼컴퓨터센터를 설치함으로써, 학술연구 목적으로 슈퍼컴퓨터자원이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슈퍼컴퓨터가 고가인 이유로 5개의 센터만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5개 센터의 슈퍼컴퓨터들은 많은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통신망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모든 슈퍼컴퓨터센터를 상호 연결할 필요뿐만 아니라, 컴퓨터센터 이용자들이 슈퍼컴퓨터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센터와 이용자들을 연결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다. 처음에 전미 과학 재단은 통신을 위하여 기존의 ARPANET을 사용하려 했으나, 직원채용과 관료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실패하였다. 그러자 전미 과학 재단은 ARPANET의 TCP/IP 기술을 바탕으로한 자기들 고유의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른다. 이 통신망은 전화선을 통하여 56Kbps로 센터들을 연결하는 것이었는데, 이 전송속도는 대략적으로 초당 타이핑된 2장의 문서내용을 보낼 수 있는 속도이다. 지금 기준에서 56Kbps는 그리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없지만 1980년대 중반기에는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모든 대학을 슈퍼컴퓨터센터와 직접 연결하려 한다면 슈퍼컴퓨터센터는 대학별로 별도의 연결회선과 장비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는 여러 측면에서 봐도 비경제적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도 통신망이 구축되고 각 지역망들은 다시 체인처럼 연결되게 되었고,

이러한 체인망들 중에 하나가 슈퍼컴퓨터센터와 접속되게 하였다. 이러한 구성으로, 통신망에 접속된 어떤 컴퓨터도 다른 모든 컴퓨터와 호환을 통하여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전미 과학 재단의 노력으로 지역이나 대학의 컴퓨터통신망 구축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이는 인터넷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나, 대개의 경우처럼 결국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통신망에 연결된 곳에서는 슈퍼컴퓨터의 공동사용과 함께 컴퓨터센터와 별개의 다른 자원도 공유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다. 즉, 통신망에 속한 학교들은 어느 날 갑자기 데이터 세계와 협력자를 그들의 손가락 끝에서 얻게된 것이다. 결국 통신망의 트래픽이 증가하여 통신망을 제어하는 컴퓨터와 연결을 위한 전화선에 과다하 부하가 걸리게 되었다. 그러자 1987년에 망의 운용과 향상을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전송 속도가 기존에 비해 20배 정도 빠른 전화선으로 구축되었고 망을 제어하는 컴퓨터들 또한 빠른 기종으로 대처되었다. 초당 45메가 비트의 전송속도로 NSFNET은 연결된 네트워크간에 매월 120억 개의 패킷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ARPANET 사용자는 이제 1.5 Mbps 빠르기를 제공하는 NSFNET으로 다니기 시작하였고 1990년 마지막 노드가 문을 닫으면서 ARPANET은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한국은 1987년 ARPANET에 접속을 하게 되었고 이어 교육 전산망, 연구 전산망 등을 가동시켜 국내 인터넷 사용을 확산시킨다. 처음에 인터넷은 과학자들 사이에 널리 쓰였지만 1988년 이후 TCP/IP에 직접 연결된 호스트 수가 매년 2배씩 증가하면서 초등 교육기관에서 고등 교육기관까지, 공공도서관이나 상업 영역까지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인터넷 발전에 있어 전미 과학 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인터넷 접속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다. 그 이전에는 인터넷은 단지 컴퓨터 연구자와 국가공무원 및 국가기관 종사자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 전미 과학 재단은 대학이 접속범위를 확대할 계획만 있으면, 대학의 인터넷 접속을 위해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교육을 위한 인터넷 접속을 촉진시켰다. 그럼으로써, 대학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은 결국 인터넷 이용자가 되게 되었다. 인터넷의 이러한 요구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모든 대학들이 연결됨으로써 이제는 중고등학교들을 연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모든 사람은 인터넷이 어디에 유용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취업한 후 그들의 고용주들에게 거래처와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하도록 제안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



은 지속적인 성장, 풀어야 할 새로운 문제 발생, 기술의 진화 및 망이용자를 위한 직업 보완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터넷에 몰려드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유롭기 때문 일 것이다. 인터넷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가장 현대적인, 가장 기능적인 민주 사회의 전형일 것이다. 인터넷 주식회사라는 것도 없으며 공식적으로 집열관도, 주인도, 이사회도, 주주도 없다. 원칙적으로 TCP/IP 프로토콜의 규칙만 준수한다면 어떠한 노드라도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TCP/IP 프로토콜은 사회집단도 정치 집단도 아닌 기술적 사항일 뿐이다. 인터넷이 민주 사회라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다.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은 이제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누가 공기를 독점하고 있거나 공기를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면 것처럼 끔찍한 세상은 없을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하는 작업으로는 기본적으로 4가지를 들 수 있다. 전자 메일을 주고받고, 뉴스 그룹이라 부르는 토론 그룹에 참가하며, 멀리 떨어진 컴퓨터를 내 것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현재 인터넷은 미국의 MIT, 하버드, 스탠포드 대학을 비롯해 항공우주국, 벨 연구소 등 세계 유수 연구기관 및 기업망 등 93개 국가, 7만여 개의 망이 온라인으로 접속되어 다양한 전산자원을 공유하고, 과학, 기술, 경영, 사회, 교육, 기상 등 전 분야에 걸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를 이용형태별로 분류해 보면 1993년 7월의 경우, 연구용 44%, 상업용 31%, 국방용 10%, 교육용 8% 및 정부용이 7%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상업용은 최근 3년간 평균 300% 이상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인터넷은 이제 단순한 학술정보망에서 탈피, 여러 정보망들이 통합된 멀티미디어 통신망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신뢰성 있는 정보전달을 위한 통신망 구축에서 시작한 인터넷은 이제, 전세계를 연결하는 지구촌 통신망으로 자리를 굳혔고 각국의 정보 고속도로 구축에 따라 더욱 더 통신망으로서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통신망으로서의 인터넷의 성장을 바탕으로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축적된 정보가 엄청나고 나날이 그 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자가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최적으로 찾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 대부분이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창출자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쉽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창

출하기 위한 툴들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우리의 생활과 더욱더 밀접해짐에 따라 이제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인간중심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 상업화되면서, 영리추구의 기업 생리가 기존의 인터넷이 추구한 "열린 통신", "열린 정보"와 "열린 마음"의 철학이 퇴색되어 가는 상황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 2.1.3 인터넷의 구성과 웹의 성장

인터넷은 TCP/IP를 기반 통신규약으로 하고 전용회선과 라우터로 점대점 방식으로 연결된다. 인터넷의 중추망은 45Mbps급의 고속전송회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 기관에 의해 미국내 각 지역과 유럽, 호주, 아시아 등 전세계의 서브네트워크들이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간의 링크는 대부분 전용회선이며 연결장비로 라우터가 사용된다. 이때 각 지역망과 모든 호스트들은 유일한 주소를 갖는다. 즉, 전세계의 지역망들이 라우터로 연결된 구조이며 전체의 망구성에 관한 정보들을 라우터들이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항상 정상적인 라우팅 테이블을 유지하게 되고 사용자들은 목적지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필요 없이 주소만을 있으면 어느 컴퓨터든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숫자로 된 인터넷 주소를 기억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네임 서버를 운영함으로써 주소 대신 이에 매칭되는 호스트 이름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라우터 간의 라우팅 테이블 교환을 위한 프로토콜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1992년 인터넷 사용 환경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일이 생겼는데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 의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웹이 개발된 것이다. 1989년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제안된 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1990년 넥스트 컴퓨터에 웹의 시제품이 설치되었으며 1991년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의 중앙 컴퓨터에서 본격적인 웹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웹 서비스가 시작된 지 몇 년밖에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차이는 앞으로 하루가 다르게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 구성된 조직이다. 현재 인터넷을 쉽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웹을 이용하고 있다. 월드 와이드 웹 또는 간단히 말해서 웹은 분산 멀티미디어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이다. 무슨 뜻인지 알아보면, 분산이라 함은 웹 상의 정보는 어느 한곳에 집중되어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구석구석에 흩어져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멀티미디어라 함은 웹 상에서 표현되는 정보는 일반 문자뿐만 아니라 그래픽, 음성, 동화상, 3차원 영상 등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하이퍼텍스트라 함은 웹 상의 정보를 일렬로 세워 놓고 차례차례 읽어 나가는 것뿐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정보를 이리저리 건너뛰어 다니면서 취사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웹은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다.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가 처음 웹을 개발한 동기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연구하고 있는 여러 물리학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데 있다. 웹의 자유로운 정보 표현 방법과 손쉬운 사용 방법으로 인해 인터넷이 웹의 파도를 타고 일반 대중에게까지 몰밀듯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인터넷과 웹이 거의 동의어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어 비린 것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웹이라는 문으로 인터넷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 2.1.4 한국의 인터넷 사용 환경

인터넷에 대해 몇 가지 사항만 알면 웹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웹이 인터넷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커졌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는 웹이외의 부분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음을 지나쳐서는 안된다. 웹은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아울러 제공하므로 인터넷에서의 이용은 가파른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이 지금과 같이 일반인에게까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웹의 사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웹 등장 이전에 사용되었던 텍스트 기반의 각종 인터넷 서비스가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컴퓨터는 유닉스 계열의 컴퓨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대다수의 일반 사용자는 개인용 컴퓨터나 매킨토시에서 윈도 환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 유닉스 계열의 컴퓨터에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거리감이 웹의 등장으로 대부분 해소되어 일반 사용자는 넷스케이프 같은 브라우저만으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게 되었다.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 웹의 개념이다. 인터넷은 어느 특정 서비스가 독점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다양하다. 현재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가 속속 발표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철저하게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개념의 서비스라 할 지라도 인터넷의 파도에 밀려 살아 남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나라에서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이 손쉽게 인터넷을 이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산업사회에서 고속도로가 산업의 대동맥 역할을 한다면 정보사회에서는 정보 고속도로가 국가의 대동맥 역할을 한다. 정보 고속도로라는 말이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이 단어 대신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하자. 즉,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터넷을 쓰기 쉽게 해야 국가가 경쟁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다.

여러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사람들을 인터넷에 연결시켜 주고 일정 비용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가정에서 전화로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연결 수수료와 전화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기에는 비용 때문에 갈등을 겪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길 원하지만 비용부담이라는 높은 장벽 때문에 정보화사회의 언저리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답을 낮추어야 한다. 어린아이도 쉽게 건너 올 수 있도록 낮게 해야 한다. 100여년 전 우리 조상은 산업사회에 대한 이해가 늦어 참으로 힘든 세월을 겪어야 했다. 한 세기가 흘러 이제 새로운 사회가 출현하고 있다. 정보화사회가 바로 그것이다. 정보화사회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하면 우리 후손은 또 한 세기 아니 그보다 더 긴 세월을 힘겹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각 나라마다 정보화에 대한 우위를 선점하려고 100년 전 식민지 쟁탈하듯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 나라의 기간망 사업자와 정보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현재와 같은 요금 구조와 이용 환경을 지속한다면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에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기간망 사업자와 정보통신제공자의 역할이다. 고갯마루를 지키고 서서 통행세를 받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의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는 터를 닦아야 할 일이다. 정보는 사용할 수록 공유할 수록 그 가치가 증폭되는 속성을 가진다.

### 2.1.5 인터넷 신기술 및 경향

M-Bone은 인터넷 상의 멀티캐스트를 위한 가상망으로, 인터넷 상에서 음성/영상 방영을 가능하게 해준다. 1992년의 오디오를 이용한 음성회의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25개 국가, 1700여개의 부분넷이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이 같은 M-Bone의 성장에는 멀티캐스팅 관련 프로토콜과 실시간 음성, 영상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는 프로토콜의 개발과 M-Bone을 지원하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M-Bone을 이용하면 각 기업체나 연구소, 국제 학술회의 등에서 세미나, 학술회의 등을 앉은자리에서 참가할 수 있으며 기상, 천체 사진이나 라디오, TV 방송 등의 공공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음성, 영상 정보 외에 참가자들간에 전자철판을 공유할 수 있다. 조만간 M-Bone은 웹을 잇는 다음의 인터넷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의 M-Bone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러한 M-Bone이 활성화되려면 대역폭 할당 및 보안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전화, 팩스는 통신 사업자의 영역이었으나 최근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관련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에 전화, 팩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보급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전화는 단순한 음성전화 이외에 쌍방간 음성 사서함, 파일 전송, 전자 칠판 등의 다양한 부가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부처럼 전화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렉토리 서비스 기능까지 제공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인터넷 전화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기종간 통신이 되지 않으며 음질이 기존 전화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기술의 발달로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이 글로벌 인프라로 등장하면서 전자 상거래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1994년 약 2천4백50억 달러였던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가 2천년에는 약 1조6천5백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기업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시스템 솔루션 개발 및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 회사와 온라인 대금 결제 회사를 중심으로 보안 시스템 개발이 한창이다. 전자상거래의 인프라 가운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네트워크상의 전자화폐 개발,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홈쇼핑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도 망사업자와 각 금융기관이 제휴하여 가상은행을 구축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업체들도 인터넷 쇼핑센터 건설을 계기로 전자상거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 인터넷을 홍보 수단쯤으로 여겼던 대기업들도 전자상거래, 택배 시스템, 애프터서비스가 한데 묶이는 제조, 유통의 혁명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금융, 유통 관련 계열사와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에서 대학교 과정까지 개설되어 있으며, 누구라도 필요하면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처의 가상 도서관, 박물관 등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받아볼 수 있다. 진학정보, 지원 등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일부 기업에서는 미국의 대학과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회의, 정보 자료 공유를 통해 MBA 과정을 개설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실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터넷이 지닌 교육적 측면이다. 세계를 한 눈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끝없는 호기심과 학구열을 자극시킨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지구촌 여러 곳의 뉴스를 보면서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세계인을 상대로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인터넷은 또한 학생들의 과학교육을 위한 총아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 미국의 항공우주국을 연결하면 선명한 화면을 통해 태양계와 우주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다. 외국의 저명한 교수나 학자의 연구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유학을 가지 않고도 그들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도 있다.

### 3. 인터넷과 교육의 변화

인터넷은 교육의 영역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인터넷이 교육과 관련하여 가지는 특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교육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통일 후의 미래

교육 환경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가? 교육과 관련한 인터넷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은 교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을 추구한다. 둘째, 인터넷은 교육 활동의 개방화를 촉진한다. 셋째, 인터넷은 교육에 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넷째, 인터넷은 교육이 비용효과에 민감하도록 요구한다. 다섯째, 인터넷은 새로운 교육적 발전을 추구한다.

### 3.1 인터넷의 통합성과 개별화된 교육 환경

현재의 인터넷은 통합을 추구하며, 기술적으로 통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컴퓨터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정보처리의 도구에서 전화 등의 통신체제와 통합되어 정보처리와 전달의 매체로 발전하였다. 멀티미디어의 등장은 음성과 문자, 영상을 다루는 각각의 매체가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 역시 통합된 정보 전달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은 여러 장소의 통합을 가져왔다. 원격영상회의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도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인터넷은 여러 사람의 서로 다른 목적을 동시에 통합시킬 수 있는데 까지 발달하였다. 이는 컴퓨터가 가진 융통성 있는 정보 검색과 처리 기능에 바탕을 둔 것으로써 하나의 통합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개별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인터넷이 가지는 통합성은 보다 능동적 이면서 개별화된 교육 환경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 3.1.1 교육 매체의 통합

교육과 관련된 인터넷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하나나 둘 정도의 상징체제로 표현되는 매체들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대표적인 매체인 오디오카세트와 영상을 보는 비디오가 모두 컴퓨터와 결합되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문자까지를 들을 수 있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발전하였다. 멀티미디어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으

며, 이제는 컴퓨터 단독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데에서 멀티미디어 중심의 CD-ROM 이나 상호작용 비디오 등 여러 매체가 통합된 형태의 시스템을 이용한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책상 위에 놓여있거나 휴대하고 다니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전화선이나 종합정보통신망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시스템과 연결되어 문자, 영상, 음성 등의 다양한 상징 형태를 가진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발전되고 있다.

### 3.1.2 교육 장소의 통합

인터넷이 가져온 또 하나의 통합은 교육장소를 통합시켜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여러 장소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남이나 교육의 물리적 장소가 세계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그 장소의 사람들이 교육 내용이나 교육 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터넷 발전의 혜택이다. 이러한 교육 장소를 통합시키는 형태는 같은 시간에 여러 장소에서의 이용이 가능한 실시간 통합 형태와 서로 다른 편리한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교육 내용이나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비동시적인 통합 형태가 있다.

### 3.1.3 교육 목적의 통합

인터넷이 가져온 통합은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목적이나 필요를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한 학급의 학생들은 선수 학습 능력의 정도와 경험의 폭에 있어서 서로 다르며, 본인이 좋아하거나 효과를 볼 수 있는 학습 스타일이나 인지적 특성에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개인별 차이로 인하여 실제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목표는 달리 설정되거나, 주어진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학습자마다 달리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육 상황에서 이러한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목표 성취를 위한 환경의 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원인은 노력의 부족이 아닌 교육 자원의 부족이다. 여기에 인터넷이 도입됨으로써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의 기본이 되는 컴퓨터는 비교적 오랫동안 교육에 활용되어져 왔다. 컴퓨터 보



조 교육 등에서 컴퓨터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분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방식과 내용으로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컴퓨터 보조 교육 이후 발전한 하이퍼텍스트의 원리를 도입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학습자가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맞는 정보를 원하는 표현 형태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다양성을 허용하고 있다.

## 3.2 인터넷과 개방화된 교육 환경

인터넷이 경제나 사회의 제 분야는 물론 교육과 관련하여 가지는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는 그 발전으로 인한 개방화 또는 범세계화이다. 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세계를 네트워크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정보 저장과 처리 도구와 연결되어 이제 개인이나 조직은 자신이 원하는 네트워크 속에서 정보의 물질을 타개 되었다. 인터넷이 가져온 개방화의 의미는 교육과 관련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정보의 네트워크가 개방됨으로써 자유로운 정보에의 접근이 가능하여졌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의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개방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보 활용의 형태가 자유로워짐으로 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만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여졌다.

### 3.2.1 접근 기회의 개방

정보화사회의 핵심적인 자산인 정보는 예전과는 달리 쉽게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발달한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도 접근이 가능하며,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더라도 방대한 양의 정보는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즉, 정보에의 접근이 개방화되어 범세계적인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전의 교육 상황에서는 교사나 교수자가 정보의 소유자로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정보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관에서 개인에게 보급되는 형식으로 공유되어 왔다. 여기에서 개인적 수준에서 전달될 수 있는 정보의 양이나 형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말할 나위 없다. 인터넷이 도입되고 있는 현재나 통일 후의 장래의 교육 상황에서 정보는 교사나 교수자를 통하여 보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길을 통하여 획득될

수 있는 자원으로 변하여 왔으며, 정보의 양이나 형태도 거의 무한정하게 다루어질 수 있어서 교육에서의 문제는 유용한 정보의 소유가 아니라 정보 창고에서 유용한 정보를 검색하고 조작하는 문제로 바뀌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정보에의 접근이 개방화되었으나 여기에서 정보접근에의 불평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일찍 인터넷을 사용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간의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경제적인 빈부 격차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상의 가상대학은 통일 후의 북한 주민 재교육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을 위해 절실한 것이며, 이에 교육의 목표와 그 사회적 역할에 관한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3.2.2 상호작용의 기회 개방

인터넷은 모르는 타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자유로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하여 개방된 상호작용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준다. 교육이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할 때 대규모 교실 중심의 수업 환경은 상호작용의 범위가 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도 미흡하여 교육적 효과를 제대로 성취할 수 없었다. 인터넷은 상호작용의 범위를 전세계의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공개된 네트워크나 비공개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넓혀 놓았으며, 아울러 아이디어 공유를 통하여 보다 다각도에서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3.2.3 정보 활용 형태의 개방

이는 인터넷이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을 바탕으로 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때와 장소에서 원하는 정보를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에 맞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 교육이 그 환경적 특성상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정한 속도로 같은 내용을 공부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인터넷은 개인이 자신에 맞는 목표를 세워 자신의 속도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의 재구성을 지원한다.

### 3.3 인터넷으로 인한 교육에서의 질적 변화

인터넷이 발달됨에 따라 사회의 세 분야의 기능과 구조 등이 바뀌고 있으며,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으로 인한 변화들이 바람직하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가는 아직도 많은 관찰과 논의들을 필요로 한다.

#### 3.3.1 아이디어의 공유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간의 아이디어 교환과 공유, 상호작용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상징 표현 체제를 써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는 자신의 글을 쓰고자 할 때 많은 정보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의 결과를 구하는 활동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글의 질적인 수준 향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인터넷이 가진 통합성과 개방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여러 곳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 주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과정 자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그 결과도 더 향상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산성비를 중심으로 세계의 환경 파괴와 그 대책을 하나의 주제로 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실험한 프로젝트의 결과는 인터넷이 여러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에 어떠한 질적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보여준다.

#### 3.3.2 능동적 참여

교육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에 의하여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우리 교육의 많은 문제들이 수동적인 정보의 흡수와 학생들의 참여가 적다는 점과 관련되어 지적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능동적인 학습자 참여를 허용하는 교육 환경이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은 능동적 참여를 허용하기도 하고 오히려 수동적인 태도를 갖도록 할 수도 있다. 인터넷이 가진 기술적 특성들은 교육환경을 보다 개방적이면서 개별화시켜 학습

자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구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과정이 학습자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능동적 학습 환경의 제공은 학습자가 학습하는 방법을 아는 경우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 3.3.3 피이드 백을 통한 교수-학습 활동

인터넷의 힘으로 사람들이 교환하는 많은 자료들은 공개되며, 아이디어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쉽게 노출된다. 예전의 닫힌 교실 환경에서의 수업의 질에 대한 평가는 소수의 학습자나 가르치는 사람 자신에 의하여 내려졌음에 비하여 인터넷을 도입한 교육 환경에서는 다각도에서 지속적인 평가가 내려지며, 그 평가는 즉각적인 평가를 유도한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의 교수-학습 활동과 그 결과가 즉각적, 공개적, 계속적으로 평가되어 그 피이드 백이 곧바로 당사자에게 전달이 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한 피이드 백은 교수-학습 활동의 질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4 인터넷과 비용효과

발전한 기술은 많은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의 인터넷 기술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류는 각종 기술의 산물을 활용하여 왔으며,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왔다. 그러나 인터넷의 활용은 더욱 큰 규모의 비용과 종합적인 체제의 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비용 효과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다.

발전된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하여 교육에서의 비용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의 제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빈곤하였던 교육이 예전에도 비용 효과에 대해 고려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현대 인터넷의 활용이 점차 보편화되고 그로 인한 교육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이 과연 투자한 만큼의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가 논의되고 있다.

### 3.4.1 비용 구조의 전문화

인쇄 매체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교육 체제에서의 비용과 관련된 구조는 비교적 단

순하였으나 발달된 인터넷이 교육에 도입되어 활용될 경우의 비용 구조는 복잡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의 교육 체제는 다른 사회 체제에 비하여 덜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 한 사람의 교사가 자료를 개발하고, 가르치고, 평가하였으며, 교수 과정 및 행정적 업무까지를 관리하였다.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되고 있으나 그것을 교육 목적에 맞도록 설계하고, 관리하며,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해진다. 따라서 인터넷이 도입된 교육 체제는 보다 분업적으로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세분화된 비용 구조를 통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인터넷 상의 가상대학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비용,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 설계 및 개발 공학이 요구하는 비용을 처리할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이 요구하는 보다 세분화되고 복잡한 비용구조는 고정 비용과 아울러 변동비용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비용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 3.4.2 학습자의 수행능력과 비용효과

인터넷의 도입으로 교육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증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인터넷의 교육에서의 활용으로 학업 성취의 향상이나 이후 수행 능력의 향상은 있는가? 또 다른 교육적 효과는 있는가? 인터넷의 교육 상황에서의 활용은 정보 수집력과 조직력, 사고력이나 창의력, 협동적 학습방법 등 고급 수준의 인지적 능력이나 교육 태도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의 비용 효과성은 일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교육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3.4.3 사회적 투자 효과의 증대

인터넷의 비용 효과성은 단순히 교육적 효과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 전체가 인터넷과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의 비용 효과성은 반드시 사회적 투자 가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인터넷의 교육에서의 이용은 높은 사회적 투자 가치를 지닌다. 일단 학습자들이 인터넷 기술의 활용을 자연스럽게 습득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인터넷을 하나의 편리한 도구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 등은 더욱 중요시될 통일 이후의 미래 사회에 대한 현재의 투자일 것이다. 아울러 교육이 아닌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축적된 지식이나 기술, 인력 등 각종 자원의 교육적 공유가 인터넷 기술의 지원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사회의 보유 자원이 자연스럽게 교육 과정에 활용되어 인터넷에 대한 사회적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

### 3.5 인터넷과 가상대학

#### 3.5.1 국내의 가상대학

교육부 가상대학연구팀은 가상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가상대학 설립, 운영규정 연구안'을 제시했다. 연구안에 따르면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가상대학의 설립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으로 한정하되 가상대학의 특성상 교지 또는 교사에 관한 설립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쌍방향통신이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갖추도록 했다. 기준을 갖추면 전문학사 및 학사, 석사, 박사학위 과정의 가상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며 기존의 대학이 특정 단과대학만을 가상대학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생선발 방법 및 정원, 입학 시기, 졸업학점등은 대학자율로 학칙에 규정토록 하고 학점은 1학기 45시간을 1학점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가상대학의 수업진행은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개설교과의 4분의 3이상을 가상공간에서 하도록 했다. 등록은 학기당 등록 및 학점당 등록중 학생이 선택토록 하고 일반 대학과 전문대 등 다른 고등교육기관과의 자유로운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원은 학위종별로 프로그램 또는 학과당 최소 1명의 전임교원과 조교를 두도록 하고 석사, 박사과정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각각 20명과 1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 3.5.2 해외의 가상대학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온라인 원격교육이 이미 상용화단계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1980년대 초반부터 유럽통합을 위해서는 교육통합이 중요하다고 보고 온라인을 통한 교육통합을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여러 대학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

은 물론이고, 학교와 학교를 잇는 교육망으로, 사회 계교육의 장으로 다양하게 응용하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학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인터넷 안에서만 존재하도록 계획되고 설립된 가상캠퍼스가 이미 상용화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온라인으로 학교 운영을 하고 강의를 한다는 현상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존재와 칠판 밑에서의 교수행위를 없었다는 측면에서 가상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온라인 대학의 등장은 의미심장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가상대학으로는 가상 온라인 대학과 피닉스 대학이 있다. 가상 온라인 대학은 일종의 개방대학으로 성인들에게 원격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그리고 피닉스 대학은 인터넷 상에서 학부 및 대학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특히 피닉스 대학의 학생들은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해 질의, 응답 및 토론을 할 수 있고, 교육 장에 설치된 근거리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시간 대학의 근거리통신망에 접속하여 도서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수는 인터넷을 통하여 강의내용을 사전에 발송하여 공지시키고, 학생들 역시 인터넷을 통해 과제물을 제출할 수 있다.

핀란드 헬싱키 공과대는 '산업경영대학원'을 가상대학 형태로 운영한다. 주로 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석사·박사학위 과정이 개설돼 있다. 교과과정은 기업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보, 기술 습득 등 철저하게 실무 위주고 세미나와 현장 사례중심으로 첨단 교육공학의 수업에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대학만큼 핀란드내 교육, 연구기관은 물론 북미, 유럽, 아시아의 주요 대학, 연구소 등과도 연결돼 있다. 이 대학이 특히 자랑으로 내세우는 부분은 시뮬레이션 실험실로 이는 가상현실, 가상공장과 같은 첨단 공학기술을 활용해 경영 시뮬레이션, 기업 리엔지니어링 등을 직접 실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학생, 교수 모두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구촌 어느 곳에서든지 강의를 하고 강의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체 직원들은 직장을 벗어나지 않고도 최신의 정보와 기술을 습득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대학은 산업체의 첨단시설과 환경을 교육과 연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미국에서는 마흔 성인들을 위한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디오, 음성회의, 온라인 컴퓨터 네트워크 및 공용 데이터베이스들을 통

하여 학생들은 학부나 대학원 과정의 학위를 다양한 학문분야에 걸쳐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면, 원격학습 프로그램 중 18%가 경영에 관한 것이고, 16%는 공학분야, 10%는 인문분야, 10%는 의료관계 그리고 9%가 교육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영방송도 이러한 원격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70여 개의 과목을 방송하며, 어떤 과목은 약 2,000여 개의 대학들에 제공되기도 한다. 이들 원격프로그램들은 모뎀을 통하여 24시간 언제나 학습 네트워크에 접속하게 하므로, 엄격한 학사일정에 묶일 필요가 없다.

IBM은 현재 아리조나, 콜로라도, 하와이 등 미국 서부 13개 주가 공동으로 설립한 가상대학인 '웨스턴 거버너스 대학'의 시스템 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공인된 대학으로 정식 학위까지 수여하는 이 가상대학은 기존 대학과 동일한 과정과 함께 기업에 필요한 정보, 기술교육 강의 등 다양한 산업체 과정도 개설된다. 이제까지 TV나 라디오를 이용해서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던 방송대학과 달리 가상대학은 인터넷을 통해 음성, 화상을 보낼 수 있는 대화형 쌍방향 화상회의시스템, 과제물도 전자우편으로 주고받고 세미나도 개인용 컴퓨터에 카메라가 달린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다. 도서관도 필요없다. 전국 주요 대학, 연구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도 책 펴고 치르는 「오픈북」 방식으로 진행되고 응시자는 「정보사냥」 능력을 테스트 받는다. 초기자본 6백만~1천만 달러를 조성, 첨단 전자 기술을 이용한 교육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서부 10개주가 가상대학 설립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이 지역이 미국 내에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같은 선택의 다양성 말고도 예산, 비용의 절감이 웨스턴 거버너스 가상대학이 갖는 커다란 장점이다. 강의 전달 수단이 인터넷이어서 대학건물이 전혀 필요치 않고 따라서 기존 대학처럼 건물 설립과 유지 등에 돈을 쓸 필요가 없다. 반면 최고의 교수진과 멀티미디어 기술 활용 등 최첨단 교육기법이 동원된다. 원하는 사람 누구나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꿈의 가상대학이 등장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수업을 하고 학위까지 주는 1백% 순수한 가상대학이다. 국경 없는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하면 가상대학의 등장은 국내 대학교육시장을 여는 계기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뉴욕대학의 평생교육대학에서는 16학점 짜리 정보기술 전문직 증서 과정을 열고 있



는데, 학생들은 윈도우 기반의 개인용 컴퓨터, 학사학위, 고속 종합 정보 통신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1학점당 550 달러를 수업료로 내는데, 한 과목당 수강 인원은 20명으로 제한하며, 학생-교수간의 토론과 학생들 사이의 프로젝트에 중점이 두어진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원격교육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로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공부한 학생들을 외부에 어떻게 알리느냐 하는 문제이다. 비록 학생들의 성취수준이 매우 높을지라도, 이들에 대한 인지도가 꼭 그렇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이러한 가상대학이 누구에게나, 어떤 주제에나 혹은 학위 과정에 모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많은 실험을 요구하는 과목일수록 그 어려움이 크다. 정상적으로 보면서 점검하지 않으면, 교수는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시스템의 불안정이나, 새로운 시스템을 학습을 위하여 배워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가상 대학 중에서 현재 가장 활발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케이프 소프트웨어에서 94년에 설립한 인터넷대학이다. 미국의 30여개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의 위탁을 받아 24개 코스 내에 700여 개의 과목을 전공별로 운영하고 있다. 각 코스를 수료하면 그 코스를 제공한 대학의 학사자격이 인정되므로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 또 홈 페이지 내에 연동된 2천여 개의 웹 사이트는 무궁무진한 학습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 역할을 한다. 이 가상대학의 커리큘럼은 정규대학의 그것과 차이가 없을뿐더러 학사관리도 엄격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입학 자격이 주어지며, 철저한 수업관리, 전자 메일과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한 활발한 토론학습은 물론 과제물 제출을 준수해서 평가를 받아야만 코스를 이수할 수 있다. 학기는 과목의 학점 단위에 따라 16주에서 24주로 구성되어 있고, 다만 수강료만 코스를 위탁한 대학의 지역과 수강자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해도 타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간다고 가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면 대단히 저렴한 비용이 아닐 수 없다.

강의실 없는 강의, 시험지 없는 시험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아적은 많다. 그들은 분필 가루를 마시는 것이 대학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인디애나주에 사는 보험회사의 중역인 조 마틴은 8백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듀크대의 국제 경영자 석사과정에 등록하고 있다. 그는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집에서는 아내가 잠든 한밤중에 인터넷에 접속해 교수가 부과한 과제물에 매달린다. 강

의는 인터넷의 음성 서비스로 듣고 웹 채팅으로 중국에서 브라질까지 14개국에 퍼져 있는 40명의 학급 동료와 토론에 참여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MBA 과정을 개설한 학교는 듀크대 외에도 오하이오대와 퍼듀대, 등 몇몇이 더 있다. 다른 학교들도 다양한 전자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교양학부 지망생들도 방한용 귀마개 없이 북극의 찬바람 몰아치는 알래스카대의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가상대학」의 저자 팸 덕슨은 현재 3백여 대학에서 가상 학위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히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이버스페이스를 상아탑으로 하는 교수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측했다. 듀크대의 가상 대학원 책임자 리처드 스텔린도 “교육계에 일대 변화가 일고 있다. 5년 내 우리의 가상 MBA 신청자 수는 정규 과정 신청자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마틴이 캠퍼스 대신 가상대학을 선택한 것은 그만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직업의 성격도 그렇고 가정생활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공부를 생각도 못했다. 기존 대학원 과정은 융통성이 없다.” 19개월에 걸친 듀크대의 가상 MBA 과정의 학비 7만5천 달러는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피닉스대에서 두 강좌를 맡고 있는 온 라인 강사 리자 해도크도 학기 도중 둘째 딸을 출산하면서 가상대학의 융통성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녀는 “진통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인터넷에 세 번 접속했다”고 말했다. 물론 가상대학도 그 전신격인 통신대학이 남긴 오명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온라인 대학에서 주는 학위가 전부 공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망생들은 적어도 당분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덕슨은 “2000년까지 일부 사기성이 농후한 가상대학 과정들이 자연 소멸될 것이다. 그때쯤이면 가상공간과의 말월에서 깨어나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교육에 효과적인지를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래의 수요를 감안하면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유타주의 마이클 레빗 주지사는 인근 13개 주의 20여 개 대학을 연결하는 온라인 대학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앞서서도 언급한 서부 주지사 대학으로 불리는 이 가상 대학의 학생들은 참여 대학 가운데서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레빗이 창안한 이유는 2015년이면 유타주의 대학생 수가 지금의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만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대학을 9개나 신설해야 하지만 주정부는 그에 따르는 비용 30억 달러를 조달할 능력이 없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교사·교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까지

예측하고 있다. 「2025년: 과학과 기술로 재편성된 미국과 세계 사회의 시나리오」의 공동저자 조지프 코츠는 연령에 따른 학년제가 폐지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진도를 결정하는 새로운 가상교육 시스템이 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열렬한 가상교육 옹호론자들도 전통적인 교실이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서부 주지사 대학의 제프리 리빙스턴 교무처장은 “전통적인 교실과 가상교실 둘 중 한가지만 남게 되리라는 것은 억측이다. 가상대학은 기존 캠퍼스에 대한 대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전통 교실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피닉스 대학처럼 강의내용을 미리 발송하는 형식이 아니라, 인터넷 상에 올려놓은 강의내용을 학생들이 진도표에 따라 자기 스스로 학습하고, 테스트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과목별 과제 제출함을 인터넷 상에 두어 학생에 의해 작성된 과제물을 그 주소의 해당 디렉토리로 발송하도록 하게 한다.

## 3.6 가상대학 구축을 위한 시스템 환경

### 3.6.1 멀티미디어 서버

오디오, 비디오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스템 사양을 사용한다.

- 컴퓨터 : 워크스테이션, 멀티미디어 개인용 컴퓨터
- 멀티미디어 기기 : MPEG 인코더와 디코더, 사운드 카드, 마이크, 캠코더
- 저장장치/보조기억장치 : RAID 레벨 6, 스카시 CD-ROM 드라이버

멀티미디어 서버는 고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보조기억장치 뿐만 아니라 방대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접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166 Mhz 이상의 중앙 처리 장치 속도와 3.5 기가 바이트 이상의 메모리 용량을 갖는 멀티미디어 개인용 컴퓨터와 워크스테이션 등의 상위 기종을 서버로 사용한다. 강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MPEG 인코더와 디코더, 그리고 캠코더를 사용한다.

### 3.6.2 멀티미디어 단말장치

멀티미디어 단말장치는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스템 사양을 사용한다.

- 컴퓨터 : 멀티미디어 개인용 컴퓨터
- 멀티미디어 기기 : 사운드 카드, 스피커, 마이크, 캡코더
- 저장장치/보조기억장치 : 하드디스크, 스카시 CD-ROM 드라이버

여기에서도 대용량의 저장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학습 데이터를 자신의 단말장치에 저장시켰다가 후에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 3.6.3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는 워크스테이션 용 운영체제인 유닉스와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이 지원되는 윈도 NT, 그리고 윈도95가 사용된다. 특히 자바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이나 프로그래밍 환경도 이와 동일하다. 개발 도구로는 CGI를 구성하기 위해 C++와 자바를 사용하며, 애플릿을 개발하기 위해 자바를 사용한다. 또한 문서의 작성을 위해 HTML 에디터를 사용하고, 입체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VRML 컴파일러를 사용한다. 동영상 편집을 위한 동영상 편집기와 사운드 편집을 위해서 음악 편집기를 사용한다.

### 3.6.4 보안 위협과 메커니즘

정보통신 시스템에서의 보안 문제는 대수학에서의 공리들과 같으며 정보화 경제사회의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정보 통신 시스템들에서는 보안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 통일 후 북한 주민 재교육을 위한 가상대학에서 적용할 보안 메커니즘들은 다음과 같다.

(1) 무결성 메커니즘 : 무결성 메커니즘은 애플릿 서버로부터 애플릿을 다운로드 할 경우, 애플릿의 내용과 순서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해 준다. 이를 위해 RSA나 MD5 알고리즘을 이용한 “디지털 서명” 기술을 아용하고 있다. 즉, 애플릿 서버가 애플릿 바이트 코드의 해싱값을 구하여 바이트 코드와 함께 RSA로 암호화하여 애플릿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면, 클라이언트는 복호화하여 애플릿과 해싱값을 분리하고 애플릿을 해싱

하여 수신된 해싱값을 분리하고 애플릿을 해싱하여 수신된 해싱값을 비교한다.

(2) 기밀성 메커니즘 : 애플릿 전송 시의 애플릿이 인터넷상에서 노출되므로 애플릿의 변조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애플릿을 암호화해야 하며 일방향 해쉬함수인 MD2, MD5 또는 SHA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이를 위해 애플릿을 구성하는 바이트 코드와 관련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구성한 후 디지털 서명을 실시한다.

## 4. 멀티미디어 기법을 이용한 강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실제의 강의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강의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컴퓨터에 이식하는 것이다. 현재 대학에서 교수들에 의해 행해지는 강의를 고려하면 대부분의 교수는 강의 교재와 출석부를 가지고 강의에 임하고, 학생들은 노트와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듣는다. 강의는 강의노트를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을 칠판에 쓰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관련 그림을 그리면서 진행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OHP나 빔 프로젝트가 사용되기도 한다. 학생은 강사의 강의 내용을 필기하고 질문에 대답하고 의문 나는 내용을 수강한 후에 과제물을 제출하기도 하고 시험도 본다.

이런 형태는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학습에서는 강의 노트에 해당하는 텍스트 자료와 도식적 설명을 위한 비트맵 그래픽 이미지, 그리고 교수의 음성에 해당하는 음성 압축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체할 수 있다. 동영상 정보까지 주어진다면 더욱 훌륭한 원격학습이 될 것이다. 학생의 경우에는 노트에 해당하는 텍스트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시험이나 주어진 과제를 완료한 후 가상대학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 4.1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란 기존에 처리되어 왔던 문서형 자료뿐만이 아닌 그림, 소리, 동영상 등이 한데 아우려져 있는 정보의 형태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행동을 가장 잘 모형화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형태의 접근은 필연적이며, 이는 최근 나타나는 모든 정보 시스템의 멀티미디어화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내용량성과 복잡성을 가지는 멀티미디어 자료는 기존의 자료와 대비되는 특징을 가

지며, 따라서 자료의 처리 및 관리에 있어서 별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통일 후 북한 주민 재교육을 위한 가상대학에서 주고받는 정보는 교육의 효과를 위해 멀티미디어 요소여야 하며, 따라서 그의 검색 및 접근,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4.1.1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현재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란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일기 전용의 대용량 CD-ROM을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라 하는 사용자도 있고, 대용량 자료 입출력 검색 기능을 가진 관계형/객체지향형 데이터베이스를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멀티미디어 자료형의 지원
- 대용량 멀티미디어 자료처리 기능
- 멀티미디어 자료를 위한 저장 시스템
- 멀티미디어 자료 관리시의 무결성 보장
- 멀티미디어 정보 검색 기능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단순히 멀티미디어 자료형을 첨가한 것이 아닌, 멀티미디어 정보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만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화형 자료 입출력
- 효율적인 멀티미디어 질의 처리
- 멀티미디어 특성에 맞는 연산 지원
- 확장성
- 대용량 자료의 효율적 처리
-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 개발 도구 및 개발 환경

#### 4.1.2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질의 처리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질의 처리 메커니즘은 멀티미디어 정보의 특성에 의해 기존의 방법과 달라지게 된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질의 언어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질의를 입력받는다. 입력된 질의는 해석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적화 되어 파스 트리를 생성해낸다. 질의 최적화기는 파스 트리를 생성할 경우 색인 정보를 참조하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조인 연산의 순서를 결정한다. 최적화된 질의는 수행 후에 사용자에게 결과가 전달되게 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의 질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처럼 질의를 명시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또한 검색의 결과가 사용자가 원하던 의도와 명확하게 부합될 가능성도 적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반복적으로 질의를 처리하는 구조가 요구된다. 검색을 원하는 멀티미디어 요소의 명확한 기술을 위하여 질의 생성 시에 사용자로부터 여러 가지 입력을 받는 과정이 추가된다.

멀티미디어 응용 시스템에서 정보 검색이 필요할 경우 가장 빈번한 질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에 맞추어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멀티미디어 질의는 다음과 같이 그 검색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속성 질의이다. 멀티미디어 정보를 기술하는 여러 속성 값을 주고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검색한다. 이 경우 속성은 수치나 문자 등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료형이다. 두 번째는 내용 기반 질의이다. 멀티미디어 정보를 기술하는 여러 특징을 주고 그에 부합하는 멀티미디어 요소를 검색한다. 이 질의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문서 검색 시스템이며 점차 영상 및 음성 분야 쪽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세 번째는 구조 질의이다. 복잡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멀티미디어 정보에 대해 구조에 대한 조건을 주고 이것에 일치하는 정보를 검색한다. 예를 든다면 “뉴스 비디오 중에서 다른 뉴스에 참조된 연산이 두 개 이상 있는 것을 검색하라”라는 질의가 있을 수 있다. 컴퓨터 이용 실개나 구조화된 영상 자료들에 대하여 이 형태의 질의가 행해질 수 있다.

### 4.1.3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처리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처리에 비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트랜잭션 처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장기 트랜잭션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것은 멀티미디어 자료의 복잡성에 의하여 한 개체나 그의 일부분을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와 멀티미디어 자료의 대용량성에 의하여 한 개체를 삽입, 삭제, 갱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의 자료형 들을 처리할 경우보다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 기인한다.

멀티미디어 정보 처리에 필요한 장기 트랜잭션을 기존의 단기 트랜잭션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여러 가지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연산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체 트랜잭션이 복귀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은 트랜잭션의 원자성에 기인하는데, 장기 트랜잭션에 있어서는 복귀 처리의 비용이 일반 트랜잭션에 비하여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비싸게 된다. 또한 제한된 자원하의 시스템에서 트랜잭션이 커지고 복잡해진다면 다른 트랜잭션과의 자원 경합이 많아지게 된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여러 트랜잭션의 자원 요청을 증제,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자원 경합이 많아질수록 데이터베이스 정보 접근에 드는 비용보다 데이터베이스 정보 관리에 드는 비용이 많아지게 된다. 효과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자원관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경우는 복잡한 자료에 대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작업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의 트랜잭션 모델은 이러한 분야에 부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멀티미디어 및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장기 트랜잭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트랜잭션 관리 기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그들 중 대표적인 것이 중첩 트랜잭션 방법과 협력 트랜잭션이다. 중첩 트랜잭션이란 제목에서부터 추측할 수 있듯이 트랜잭션을 계층화하여 주 트랜잭션을 여러 개의 부 트랜잭션으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협력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 자원을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동시성 제약 조건을 완화하여 트랜잭션 처리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는 이들 트랜잭션 처리 기법을 수용하여 사용자들이 멀티미디어 자료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4.2 강의노트의 데이터베이스화

강의노트의 특성은 강의자 혹은 관리자만이 갱신 가능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이고 이를 일기만 하려는 사람이 많기에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동시성 제어의 문제보다는 빠른 접근을 통한 여러 사용자를 만족시키는데 그 주안점을 주어야 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강의노트가 다른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응용과 다른 한가지는 일반적으로 강의노트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영화상영과 비슷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영화와 다른 점은 실제 강의 시와 마찬가지로 아무때나 멈추고 수강자의 의문점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의 질문이나 참고자료에 관한 질의에 효율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검색기능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순차파일로 강의 노트를 구성하기에는 미흡하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가상대학의 수강생들은 속성에 대한 검색 외에도 내용에 대한 검색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멀티미디어 객체는 키워드의 집합으로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고, 이들을 포함한 질의로 찾고자하는 객체를 표현한다. 이때 키워드를 사용한 질의처리의 응답시간을 줄이기 위해 색인을 사용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는 객체지향 기법으로 구현되기에 멀티미디어 자료와 멀티미디어 객체는 같은 의미로 쓰인다.

문서형태를 갖는 멀티미디어 객체 내용 검색에 대한 응답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역색인 기법과 특징에 의한 색인 기법이 있다. 역색인은 키워드와 그 값에 관련된 멀티미디어 객체들의 식별자로 이루어진 구조로 키워드들이 정렬된 이들의 집합을 역색인 파일이라 하며 내용 검색에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역색인 파일을 사용함으로써 방대한 자료들에 대한 검색 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별도의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징에 의한 색인기법은 각 객체에 대해 특징 코드를 생성하고 이 특징 코드를 색인한다. 한 키워드를 객체 집합에 연관시키는 역색인과는 달리 이 기법에서는 한 객체의 특징을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키워드를 담게 된다. 질의가 주어지면 질의 내용을 특징 코드로 생성하고 특징 색인 파일과 대조하여 다른 특징을 갖는 객체들은 제외시킨다. 역색인 방법에 비해 필요한 저장 공간의 크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고 특징 파일의 크기가 워낙히 작기에 자료 내용을 스캐닝하는 작업에 비해 빠르다. 그러나

역파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일일이 대조해야 하기에 느리다. 또 질의처리 결과에 대해 별도의 필터링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다. 자료에 접근 속도를 중요시하는 가상대학의 환경 때문에 역색인 기법을 사용한다. 그림, 음성이나 동영상에 대한 내용 검색은 대략 비교 기법을 사용하여 내용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

멀티미디어 자료는 일반적으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디스크의 여러 페이지에 걸쳐 저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크기가 일정치 않으며 커다란 자료의 저장을 위해 단순히 페이지들을 연결 리스트로 구성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 방법은 순차성 때문에 멀티미디어 자료의 특정위치를 찾기가 나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결 리스트와 디렉토리 구조를 결합한 방법을 쓴다.

이 기법은 대용량 자료의 페이지 정보를 디렉토리를 사용하여 관리하는 형태로, 디렉토리는 자료에 대한 내부 페이지로 구성된다. 이는 B+트리의 키 대신에 페이지 위치 정보를 기록한 위치적 B+트리를 마치 내부 페이지에 적용한 것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위치적 B+트리의 삽입, 삭제,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B+트리와 유사하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를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할 때 군집화가 필요한데 이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복합 객체를 가능한 한 곳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종속 객체들은 주 객체 가까이에 저장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전체 복합 객체를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객체 구조는 일반적으로 트리 형태가 아니라 그래프 형태이기에 한 복합 객체가 다른 복합 객체와 종속 객체를 공유한다면 복사본을 유지하던지 참조 포인터를 두어 관리해야 한다. 아니면 일관성을 잃어버리거나 참조 포인터를 유지하는 경우 복합 객체를 효율적으로 추출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 복합 객체를 분석하여 같은 형태의 자료들끼리 묶어서 저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같은 형태의 자료를 묶음으로써 다른 주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라도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객체의 속성을 그 객체의 대용체와 짝지어 관리하는 방법이다. 여러 형태의 접근방법을 갖는 임의의 복합 객체를 저장하기에 간결하고, 여러 다른 타입의 접근에 대해 일정한 성능을 보이거나 복합객체의 재구성시 필요로 하는 속성들을 조인해야 한다. 강의 내용이 수강과목, 단위, 부 단원으로 이루어지고 속성 또는 내용에 관한 검색이 일반적으로 그 수강과목내의 단위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두 번째 방법이 효율적이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응용 시스템의 특징 중의 하나는 트랜잭션 처리가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멀티미디어 자료의 복잡성에 의해 한 객체나 그 일부분을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멀티미디어 자료의 대용량성 때문에 한 객체를 삽입, 삭제, 갱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의 자료 형들을 처리할 경우보다 오래 걸린다.

이런 멀티미디어 자료의 장기 트랜잭션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첩 트랜잭션 기법, 그리고 공동 트랜잭션 기법이 필요하다. 트랜잭션의 중첩은 하나의 트랜잭션을 여러 개의 중속 트랜잭션으로 구성하는 기법이다. 트랜잭션 협조 체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자원을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함에 있어 하나의 협조 규칙을 만들어 놓고 여러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기법이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이들 장기 트랜잭션 자료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여러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해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동시성 제어이다. 멀티미디어 자료의 강사의 쓰기 접근시 자료 전체에 잠금을 걸음으로써 간단히 상호배제를 구현할 수 있으나, 같은 자료의 서로 다른 부분을 접근하고자 하는 두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될 수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이런 자료들의 양이 방대하므로 이 방법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동시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상호 배제 기법이 필요하다. 수행의 동시성 제어를 위해 멀티미디어 자료 특성에 맞게 단위 설정을 할 수 있는 다입자성 잠금을 제공하는게 좋은데 이는 데이터베이스 접근시 있어야 하는 잠금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기법에서 선택될 수 있는 입자의 단위는 데이터베이스, 유사한 멀티미디어 객체들의 집합인 클래스, 레코드 등인데 입자의 단위가 잠금시에 드는 비용은 적게 드나 동시성이 떨어지고 입자의 단위가 작아지면 그 반대가 된다.

컴퓨터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이 있진 않진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네트워크 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을 수도 있다. 원격학습을 위한 시스템도 예외일 수는 없다.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다운 받다가 컴퓨터의 장애가 생겼다고 가정하자.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온 뒤 혹은 다른 사이트로부터 다시 그 자료를 처음부터 다운 받아야 한다면 원격학습지는 지루하게 여길 것이다. 따라서 한 사이트의 장애가 학습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수행기록에 근거

한 회복기법이 필요하다. 즉 자료의 이동을 로그 파일에 기록하였다가 회복시 이 기록을 이용하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회복의 대상이 되는 자료들,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세그먼트, 클래스, 멀티미디어 객체와 객체 식별자를 위한 색인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강의노트는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에 연역기법을 첨가하여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가 좋은 이유는 멀티미디어 자료와 같은 복잡한 자료 구조의 표현 용이성,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융합성, 새로운 자료형의 확장성 때문이며 연역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대용량의 자료를 연역기법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학생의 애매모호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의 구현과 변경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빠른 접근을 위해 강의 노트를 여러 개의 같은 복사본을 만들어 여러 사이트에 유지하는 방법과 강의 노트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여러 사이트에 분산시켜 놓는 방법, 그리고 이 두 방안을 결합한 방법이 있다. 비록 관리하기 또는 강의노트를 수정하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나 두 방안을 결합한 방법을 택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사이트로 부하가 몰리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으며 한 사이트가 다운되어도 다른 사이트로부터 강의가 가능하고 동시에 여러 사이트로부터 커다란 멀티미디어 자료를 받을 수 있어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 참고자료와 기타 도서도 이와 같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전자 도서관의 구현도 가능하다.

### 4.3 강의 프로그램

강의 프로그램은 문제 풀이 이전에 학생이 전체 내용을 스스로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영역이다. 기존의 학습내용이 텍스트 형태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학생의 이해 속도와 학습내용의 유지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텍스트 형식보다는 그래픽 중심으로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하여 학습효과를 높인다.

하이퍼텍스트 형식의 강의 프로그램의 초기화면은 강의 과목의 소개를 나타내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는다.

- ① 과목명 및 학수번호
- ② 강의 개요

- ③ 주교재 및 부교재의 이름과 저자명, 출판사명, 발행년도
- ④ 담당교수
- ⑤ 강의 내용 및 일정

④의 담당교수 항목에서는 담당교수의 홈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⑤의 강의 내용 및 일정에서는 강의 내용 및 다양한 내용이 지원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단원별 강의 내용
- ② 과제
- ③ 코스웨어 형식의 문제 풀이
- ④ 관련내용이 있는 참고문헌

①의 단원별 강의 내용에서는 정지 화상, 동화상, 음성 및 소리 효과를 포함한 멀티 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는 마우스, 커서로 내용의 위치를 옮기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한 단원 또는 부단원이 종결되면 자동적으로 그 내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가 학생에게 효과음을 내면서 주어진다. ②의 과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과제 내용
- 힌트 및 참고문헌
- 송신할 전자우편 주소 및 방법

③의 코스웨어 형식의 문제 풀이는 핵심 내용으로, 이 단계를 거쳐야만 다음 단원을 학습할 수 있다.

이상에서 기술된 강의 프로그램은 관리자에 의해 입력된 내용들인데 학생은 단원별로 학습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작업인 내용의 추가, 삭제, 그림의 수정들은 할 수 없다.

## 4.4 코스웨어 형식의 문제풀이

코스웨어 형식의 문제풀이에서 핵심이 되는 모듈은 학생들이 접근하여 문제를 풀고, 점수를 확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사용자 모드와 사용자를 관리하고, 학습내용의 추가 및 문제 등을 추가하는 관리자 모드로 구분될 수 있다.

### 4.4.1 사용자 모드

문제풀이는 사지선다형과 ○×형 등의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현재 풀고 있는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만 다음 문제로 진행된다. 즉 오답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문제로 진행할 수 없는데, 이는 사용자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문항을 접할 수 없도록 하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그리고 오답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오답을 선택한 횟수가 기록되어 점수 환산에 사용된다. 또한 문제풀이 시간을 계산하여 각 문항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여 풀었는가가 기록된다.

또한 각 문항별로 힌트를 두어 사용자가 문제를 풀기 어렵거나, 오답을 선택하였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힌트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점수 환산시 고려된다. 힌트를 사용하여서도 정답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처음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초기 메뉴 버튼을 눌러 초기 메뉴로 이동할 수 있다.

사용자는 자기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점수 보기에서 사용자는 문제를 푸는데 걸린 시간과 정답률, 힌트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자신의 단원별 진도를 확인할 수 있다.

### 4.4.2 관리자 모드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다중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각각의 사용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리자에 의해 조회, 관리되는 사용자 관리 영역에서는 각 사용자가 내용 학습과 문제풀이에 투자한 시간과 문제풀이시의 오답률, 그리고 학습의 진도를 관리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적인 기능으로는 관리자는 사용자의 신상명세와 점수도 조회할 수 있다.

관리자는 사용자 모드와는 구별되는 로그인 이름과 패스워드로써 일반 사용자에게 대한 신상명세와 점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접근하여 검색, 수정, 추가, 삭제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여기서 사용자 관리 모듈은 주 프로그램과 독립되어 유지되는데, 그 이유는 필요시에만 실행하여 기억장소를 적게 차지하기 위함이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 메뉴에서 사용자 관리 버튼을 선택하여 실행되며, 완료 시에는 메모리에서 제거된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강의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확장, 갱신하는 기능은 정보통신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학습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은 관리자 모드에서 이루어진다. 관리자 모드는 기존의 강의 프로그램 상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내용의 추가, 내용의 삭제, 그림의 수정 등과 관련된 기능을 추가로 가진다. 이러한 기능들은 계속적으로 학습내용을 갱신, 보완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내용의 추가이다. 추가할 위치를 선택한 후, 추가버튼을 실행시켜 추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화면으로 들어간다. 이 환경화면에서는 다양한 학습내용 유형을 선택한 후, 그림 또는 글 등을 채우는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한다. 구성된 화면은 관리자에 의해 현재의 화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완료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내용의 삭제이다. 기존의 학습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내용에 맞는 화면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 즉 삭제를 위한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다. 내용의 삭제는 삭제하고자 하는 페이지 상에서 현재의 페이지 전체 또는 일부의 글을 마우스로 설정하여 삭제버튼을 실행시킴으로 삭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그림의 수정이다. 내용의 전반적인 수정 없이 그림만을 다른 그림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 현재의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그림만을 다른 화면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관리자에게 커다란 부담이다. 따라서 한 페이지내의 그림을 나타내는 그래픽 파일을 수정하기 위한 그림 수정버튼을 두어 사용한다. 이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그림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화면이 떠서 새로운 그림 파일을 설정하고 그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문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유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자는 문제유형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문제유형에서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그 유형의 문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관리자가 문제를 추가하고자 할 때, 문제유형을 만드는데 드는 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단순히 문제를 텍스트 형식으로 주고, 답만을 고르게 하는 것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 따라서 문제에 그림도 함께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지원되는 그림 파일은 내용 추가부분에서의 방식대로 수행된다. 또한 힌트에서는 관련내용이 있는 내용학습 부분을 연결시켜주어, 사용자가 문제풀이를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다.

## 5. 가상대학의 코스웨어 설계 및 수업 전략

본 연구에서는 체제적 접근 방법의 교수설계 모델과 상황 학습과 앵커드 수업이론을 수용하여 코스웨어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절충적인 코스웨어 설계 모델을 제시한다. 본 코스웨어 설계 모델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코스웨어를 설계할 때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통일 후 북한 주민 재교육을 위해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자 할 때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다. 둘째, 통일 후의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상황 안에서 가르치고자 할 때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다.

상황 학습과 앵커드 수업이론을 적용한 코스웨어 설계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설계의 원리를 따라야 할 것이므로 본 설계 모델은 이들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모델이다. 설계 원리를 살펴보면, 첫째, 학습자에게 다양한 과제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과 기술의 전이가 용이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둘째, 문제 해결의 모든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추론 능력과 메타 인지 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설계를 하는 것이다. 셋째, 개발된 교수 체제 즉, 교수자료나 교수전략 등은 융통성이 있어 개발 완료 후 코스웨어를 활용하면서도 언제든지 교수체제를 바꿀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다섯째, 교육장소에서도 '인증된 과제'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의 경험을 실제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설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코스웨어의 설계 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지침과 교육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업 전략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1 코스웨어 설계 전략

### 5.1.1 학습 목표의 서술

교수 목표의 진술 단계에서는 개발되어질 코스웨어가 가장 중요하게 다룰 학습은 어떤 것이며 어떠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될 서이라는 학습 목표에 대한 대체적인 서술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 통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교육'과 같이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둔 학습 목표가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목표에서는 서술되지 않은 지식에 대해서도 설계자는 관심을 가지고 목표 가능성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 5.1.2 요구 분석

요구 분석의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로 제안된 문제가 현재 상황에서 잘 해결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한 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그 문제점을 이해하고 문제의 원인과 교육적인 해결책에 관한 조사와 분석이 행해져야 하며, 코스웨어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당위성이 밝혀져야 한다.

### 5.1.3 학습자 분석

학습자 개개인인 북한 주민의 특성과 성향, 통일전의 북한 사회의 문화적인 배경과 지적 수준, 동기 유발의 정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면담이나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이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5.1.4 학습 내용 분석

학습 내용의 분석에서는 해당 영역의 전문가들이 설정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추론 방법 그리고 전문가를 참고로 활용하는 자료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을 인공 지능의 지식 공학 기법과 같이 체계적, 통합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5.1.5 상위 문제 설정

서술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를 해당 영역의 전문가와 학습 내용 분석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선정한다. 이 때에 주의할 점은 문제가 실질적이고 복잡한 거시 문맥적인 문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상위 문제는 문제 해결 학습에서 앵커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 5.1.6 하위 문제들의 결정

복잡하고 거시 문맥적인 상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하위 문제들을 전문가들의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분석의 결과에서 나온 자료를 활용하여 선정한다. 하위 문제들도 역시 학습 상황에서 앵커로 활용될 수 있다.

### 5.1.7 검증된 과제의 선정

위의 학습 목표에 관련된 상위, 하위 문제들이 포함된 실제 문제 상황을 전문가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당 영역의 ‘검증된 과제’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과제’라는 것은 실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제이므로 매우 복잡하고, 정의가 명백하게 내려질 수 없고, 문제 파악과 해결책을 구하는 데에 학습자들은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며, 학습자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융통성 있는 과제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과제 중에서 설계자는 학습자가 지식과 기능을 가장 안정감 있게 찾아낼 수 있는 일련의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검증된 과제’는 현실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다.

### 5.1.8 발판 선정

상황 학습의 성공적인 달성은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를 능동적으로 찾아 연구하는 기회를 주어 스스로 해결책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초보자의 경우에 너무나 많은 정보나 기회는 그들을 혼돈시키는 경향이 있고, 학습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학습자가 적정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것이 발판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코스웨어 설계자들은 언제

어떠한 발판을 학습자에게 제공해 주고 또 제거해 주는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5.1.9 자료 정리

학습에 필요한 자료는 학습자가 스스로 찾아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전문가가 활용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되, 자료 제시의 원리는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지구조에 맞게 찾을 수 있도록 융통성있는 하이퍼텍스트의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또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나 도구들은 과제를 제시할 때에 자연스럽게 화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상황학습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자가 아니고, 학습의 안내자일 뿐이므로,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 상황을 파악하고 학습자의 개인차에 대한 감지와 학습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 5.1.10 학습 평가 전략 수립

학습에 대한 평가는 학습 과정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고, 평가 모델에서 제시한 세 가지 평가 자료를 수집,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첫째,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의 결과물로 생성된 일련의 과제물들을 평가하고, 둘째,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의 학습 과정을 분석하는 요약 통계를 활용하며, 셋째, 수집된 일련의 과제물과 요약 통계는 물론이고 교사가 끊임없이 관찰한 학습자의 진전이나 능력들을 통합하여 진단하는 세 가지의 평가가 바람직하다. 다만 평가에서 중요시 할 원칙은 항상 능동적이고 지속적이며 연속적인 학습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5.2 수업 전략안

### 5.2.1 강의 형태의 자료들의 내용

컴퓨터 화면을 통해 강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가능한 강의 내용은 짧게 한다. 뿐만 아니라 강의 자료가 짧을수록 오히려 학생들의 참여폭과

기여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강의 형태의 자료에는 간혹 유머도 섞어서 자칫 컴퓨터라는 매체가 주는 형식성과 수업 내용의 형식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5.2.2 일정 시간 배정

비록 인터넷을 통한 가상 대학을 이용한 수업의 근본 취지가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넘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교사의 경우에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배정하여 인터넷에 올려진 학생들의 과제물이나 질문 사항, 그밖에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다급한 질문 사항이나 요청 등이 학생으로부터 제기되었을 경우, 자칫 때늦은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 후 북한 주민 재교육을 위한 인터넷상의 가상 대학은 기존 수업에서처럼 매주 특정 몇 시간 동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학생들의 요구와 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요구된다.

### 5.2.3 그룹 과제의 적극적 활용

재택 수업의 특성상 개인적인 과제를 활용할 경우, 교수의 시간적 부담이 너무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학생들 간의 협력 학습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의 성취라는 취지에도 잘 맞을 수 있는 그룹 과제들을 많이 활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재택 수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간에 상호 작용과 협동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과제물의 결과도 그룹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을 경우, 모두 책임 의식을 느껴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며, 또한 혼자 과제물을 해결해야 할 때의 인지적, 심리적 중압감에서 조금은 덜어진다.

### 5.2.4 교사와 학생들의 역할

재택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정보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 자원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고, 학습 진행의 전반적인 구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학생들 간의 협력 학습을 통해 과제를 달성하거나, 서로간에 자신들

의 학습 성취에 대한 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간의 인터넷을 통한 토론을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너무 지엽적인 문제나 사항에 매달려 전체적인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방지하며, 필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전체적인 방향과 목적에 대하여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상기와 연결지어서, 인터넷 상의 가상 대학이 컴퓨터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보니, 자칫 학생들의 관심이 학습 내용보다는 매체 자체에 더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수업 내용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에 학생들의 경우는 교사에 의해 제시된 특정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서로 간에 과제 해결을 위한 각 부분의 역할을 스스로 분담하여 맡기도 하며, 그룹원들 중에 과제 해결에 애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이 이해한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잘 요약하여 설명해 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말할 때, 구체적인 수업 내용을 학생들의 관심과 수준 정도에 따라 맞추어 수업 진행을 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여기에서는 교사의 고유 영역이라고 여겨져 왔던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참여를 확장시킬 수 있다. 스스로 그룹 내에서 평가 문제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 각 팀들이 자신들의 진해를 써넣고, 그리고 각 팀들이 다른 팀의 과제물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그룹 내에서도 자신의 학습 성취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기여도와 성취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자신을 평가하고 남의 것을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은 곧 평가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본인이 학습한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의 것을 물론 남의 것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 문제조차 학생들이 스스로 제시한 것으로 보도록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고 신중한 사고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5.2.5 전자 게시판의 운영

전자 게시판은 비록 수업 관련 공지사항 등이 제시되는 난으로 활용되지만, 휴게실, 공개 토론실, 그리고 보고서 제출난으로 활용될 수 있다. 휴게실과 같은 역할은 학생들

간에 수업 관련 혹은 수업의 상황에 대하여 서로 공유하거나 상호 도움을 받고 청하면서 국민 통합을 위한 지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난이 되도록 활용한다. 따라서 교사가 먼저 시판의 활용을 시범을 보이도록 하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게시판에 올린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에 성공적으로 접속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우선 그것에 대한 축하와 격려를 보내고, 인터넷 통신상의 에티켓들을 소개하고, 게시판의 활용안에 대하여 제시를 하도록 한다. 공개 토론실의 경우에는 큰 주제를 좀더 세분화하여 몇 개의 하위 주제를 설정하고 각 방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에 쉽게 선택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보고서 제출난의 경우, 자칫 먼저 과제물을 낼 경우, 다른 사람들에 의해 생각이나 견해가 도용될 수 있기도 하여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먼저 올린 팀의 자료는 다른 팀에게 하나의 참고 자료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 5.2.6 장기적 계획과 제도화

인터넷 상의 가상 대학은 서론에서 밝혔듯이 통일 후 북한 주민 재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여러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새로운 방식이라는 호기심적 단계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필연적 방식이라는 단계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운영 및 연구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재교육에서 행해졌던 과제물도 그 교육이 끝남과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교육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과제들로 선택,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6. 행정 업무 지원

교수에 의해 관리되던 학생의 출석여부와 수업 진도, 그리고 학생의 신상 명세, 수강 과목 기록과 같은 교무 행정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유지하는 것은 교수나 행정부서 양측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이 강의에 얼마나 참여하였는지 또는 강의를 제대로 수강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은 관리 면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에게도 자신

의 상황을 점진하는 입장에 있어 강의를 듣는 것 자체와 더불어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기존의 유형 대학이나 교육 망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즉, 기존의 대학에서는 관리 및 유지 내용을 제대로 전산화하기 어려워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기존의 교육 망에서는 학생이 통신에 접속하여 원격 학습을 받는 중에 끊어나거나, 어려워지면 바로 접속을 끊고 나가도 이를 제어 관리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학생의 신상 명세와 수강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유지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등록된 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실제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무행정, 학적 업무를 지원하는 가상 교무과와 가상 학생과의 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 즉, 학생의 단계적 수강현황을 분석, 기록하여 학생의 계정에 정기적으로 상황관련 정보를 전자우편 형식으로 보내주는 기능 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학집관리 및 선수과목, 가능한 수강과목 관련 사항에 대해 분석하여 자동화된 작업을 수행하고 학생과 상호 통신하는 기능이 제공된다. 등록된 학생이 아닌 일반 사용자가 가상 대학의 일부 강의 및 관련자료를 접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다. 이는 통일후의 북한 주민 재교육을 위해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행정업무 측면에서는 관리하지는 않는다.

가상대학의 교무, 학적업무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웹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놓은 형태로 사용자가 웹으로 들어가 검색은 물론 직접 데이터의 갱신도 가능하게 해준다. 이때 접속 가능한 사람의 명단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어서 민감한 자료의 보안도 가능하게 해준다. 이로써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입력에서 자신이 웹에 연결하여 자료를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자료가 잘못 입력되어도 사용자는 알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강의자는 보다 효과적인 강의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이 원격 교육을 통해 수강 내용을 얼마나 소화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재 프로그램은 강의 내용과 학생의 수강 기록을 연결 지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로그인 과정에서 확인된 각 학생의 데이터에 가상대학 접속 및 해제 시간과 어떤 수업을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어디까지 들었는지를 기록한 수강 진도 내역, 성적 등을 기록하게 된다. 이 데이터는 말

미디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강의노트와는 별도로 유지되며, 교무와 학적관리용 자료만을 위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두어 연관된 속성들에 접근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7. 결 론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 지역 주민의 재교육 기관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재정 문제나 캠퍼스 확보 문제, 교수 확보 및 강의 프로그램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의 가상 대학 구축에 관한 것으로 이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상의 가상대학을 통한 교육은 통일 후의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학습자를 배출하고 더 나아가 통일 후 북한 지역 주민의 재교육이나 재훈련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제시될 수 있는 학습 환경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일관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지니는 속성과 특징으로 인해 통일 후의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스스로 문제 해결의 고등적 사고 능력과 기술 습득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개별적 요구와 관심, 흥미 등을 만족시켜 주면서, 동시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다양한 견해와 생각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학습자를 길러낼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상의 가상대학의 특징과 그 교육적 잠재력으로 인해 통일 후의 정보화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 환경일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성순, 김성규, 김우분,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가상대학의 구축”, 「정보과학회지」, 제14권, 제12호, 1996, pp. 5-14.
- 강명희, “상황학습과 앵커드 교수 이론을 적용한 코스웨어의 설계전략”, 「정보과학회지」, 제12권, 제6호, 1994, pp. 62-72.
- 김분규, “컴퓨터 학습용 코스웨어의 개발현황과 발전방향”, 「정보과학회지」, 제7권, 제3호, 1989, pp. 36-44.
- 이성수, “컴퓨터 보조 학습의 효과: 그 가능성과 한계점”, 「컴퓨터 교육연구」, 1(1), 1992.
- 권성호, “문제 해결력 증진을 위한 비디오디스크 매크로 컨텍스트 구성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연구」, 9(1), 1994.
- 강인애, “구성주의 학습 원리와 적용: 조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공학연구」, 11(1), 1995, pp. 25-45.
- 강인애,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한 간략한 고찰”, 「교육공학연구」, 11(2), 1995, pp. 3-20.
- 강인애, “왜 구성주의여만 하는가?: 구성주의의 이론과 실천”, 「산업교육」, 1996, pp. 38-60.
- 허운나, “교육 방법 쇠퇴책으로서의 원격 교육”, 「교육공학연구」, 5(1), 1989, pp. 51-70.
- 오해석, 「멀티미디어」, 이한출판사, 1994.
- 김명호, 이윤준, 「멀티미디어: 개념 및 응용」, 홍릉과학출판사, 1996.
- 이창수, 「인터넷 World Wide Web 이렇게 시작하세요」, PC Book, 1996.
- 양철웅, 양우석, 이윤준, 김명호,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기술”, 「정보과학회지」, 14(9), 1996, pp. 4-12.
- 최양희, “컴퓨터통신의 진화 동향”, 「정보과학회지」, 14(11), 1996, pp. 4-7.
- 김대영, “Internet의 차세대 기술”, 「정보과학회지」, 14(11), 1996, pp. 21-28.
- 송주영, “Internet과 초고속정보통신망”, 「정보과학회지」, 14(11), 1996, pp. 29-36.

- 이강수, "Java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과 메커니즘", 「정보과학회지」, 15(7), 1997, pp. 48-56.
- 정인성, "정보통신공학과 교육 환경의 변화", 「정보과학회지」, 12(6), 1994, pp. 30-38.
- Khoshafian S. and Baker A. B., Multimedia and Imaging Databases, Morgan Kaufmann Publishers, 1996.
- Marcus S. and Subrahmanian V. S., "Foundations of Multimedia Database Systems", JACM, Vol. 43, No. 3, 1996, pp. 474-523.
- Folks M. J. and Zoellick B., File Structures, 2nd Ed., Addison Wesley, 1992.
- Korth H. and Silberschatz A., Database System Concepts, McGraw-Hill, 1991.
- Subrahmanian V. S. and Jajodia S., eds., Multimedia Database Systems, Springer, 1996.
- Lohman G. M., et al., "Extension to Starbust: Objects, Types, Functions, and Rules", CACM, Vol. 34, No. 10, 1991, pp. 94-109.
- Kim W. and Lochovsky F. H., eds., Object-oriented Concepts, Databases, and Applications, ACP Press, 1989.
- Tanenbaum A. S., Computer Networks, 3rd ed., Prentice-Hall, 1996.
- Althausen R., "Collaborative Learning via Study groups and the Electronic Classroom", Eds. by S. Hamilton & E. Hansen, Sourcebook for collaborative learning in the arts and science at Indiana University, 1992, pp. 142-146.
- Hilts S., "The Virtual Classroom: Software for Collaborative Learning", Ed. by E. Barrett, Sociomedia, 1991, pp. 347-368.
- Schwartz H., "Intellectual Community via Telecommunications", Eds. by S. Hamilton & E. Hansen, Sourcebook for collaborative learning in the arts and science at Indiana University, 1992, pp. 131-141.
- Slatin J. M., "Is there a class in this text? Creating knowledge in the electronic classroom", Ed. by E. Barrett, Sociomedia, 1991, pp. 27-52.
- Turoff M., Designing a Virtual Classroo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1995.

- Kulik C. C., J. A. Kulik and B. J. Shwalb, "Effectiveness of Computer-based Adult Learning: A meta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2, 1986.
- Merill M. D., Li Z and Jones M. K. "Limitations of First Generation Instructional Design", *Educational Technology*, 30(1), 1990.
- Brown J. S., Collins A., and Duguid S., "Situated Cognition and the Culture of Learning", *Educational Researcher*, 18(1), 1989.
- McLellan H., "Situated Learning in Focus: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Educational Technology*, 33(3), 1993.
- Brown J., and Duguid P., "Stolen Knowledge", *Educational Technology*, 33(3), 1993.
- Adams L. T., "Improving Memory: Can retrieval strategies help?", *Human Learning*, 4, 1985.
- Anderson J. R., "Skill Acquisition: Compilation of weak method problem solutions", *Psychological Review*, 94(2), 1987.
- Schuman L. A., Plans and Situated Actions: The problem of human/machine communi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요약문】

본 연구는 남북통일을 앞둔 현 시점에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그것이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남북통일은 제도통합을 필연적인 과제로 하고 있다. 특히, 정치·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이질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교육통합은 그 자체가 매우 커다란 과제이지만, 교육통합이 수행하게 될 여타 제도의 통합 및 국민통합에 미칠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 중요성은 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런데 남북한의 이질적인 교육제도를 통합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 다른 아닌 의무교육제도의 “통일”이다. 달리 말해, 의무교육제도 통일은 교육제도 통합의 선결요건적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통합”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통일 한국의 정체(政體)에 따라 교육제도 통합의 방식이나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경우이건 간에 교육제도 통합은 의무교육제도 “통일” 전제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아주 느슨한 형태의 교육통합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무교육에 관한 생각과 비전을 공유할 수 없다면, 교육제도의 통합 또는 완전한 통일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의무교육연합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상 부차적인 문제이다. 또 이에 기초하여 학제를 어떠한 형태로 개편할 것인가는 더더욱 나중의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의무교육에 대한 기본원칙의 확인이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 국가의 의무교육제도에는 국민의 교육권에 대한 입장, 교육정책의 이념과 우선순위, 정책을 수행하는데 동원되는 물질적 조건 등이 함축되어 있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의무교육제도는 특정 국가의 교육이념 및 교육여건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의무교육법제가 통일되지 않을 경우 그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정치적 저항이 뒤따를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통일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무교육제도 통일을 위한 기본원칙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남북한의 의무교육 관련 법규가 어떻게 체계화 되었으며,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은 남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의무교

육 법제에 남겨있는 정신·의지·제도적 실상을 파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무교육법제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주된 논점은 앞의 역사적 고찰을 토대로 법제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작업은 곧 바로 그간 남북한의 교육제도 통합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종합·제시된 의무교육법제 통일의 기본원칙을 요약화 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보통교육 단계의 의무화 원칙
- 의무교육의 무상성의 원칙
- 취학전 교육의 무상성의 원칙
- 학년제 개념으로 접근 원칙
- 재정 부담 능력 및 국제적 경향 존중의 원칙
-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성향 존중의 원칙
- 상호접근·연합의 원칙

의무교육법제 통일에 있어 위의 원칙을 견지할 때, 무상의무교육 연한은 10년으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취학전 교육은 의무교육에 포함시키지 않되, 교육기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공교육체제로 편입시켜 적어도 만 5세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10년의 의무교육 기간은 학년제의 개념에 입각한 것으로, 남한의 현행 학제를 기준으로 보면, 초등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년을 합한 것이다. 이 기간은 바로 교육개혁위원회가 교육과정 개혁안으로 내놓은 ‘국민공통교육과정’ 이수 기간에 해당한다. 북한의 현행 학제를 기준으로 보면,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하는 셈이다. 이럴 경우, 현재 의무교육 단계에 편입되어 있는 북한의 취학전 교육(유치원 높은반 1년)은 의무교육에서 제외되기는 하지만,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교육기회의 실질적인 보장을 한다는 점에서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한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 10년간의 의무교육제도의 실시와 취학전 1년간의 무상교육 실시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큰

들에서는 위의 기본원칙에서 제시한 취학전 1년의 무상교육의 실현이라는 방안은 취학 전 1년간의 교육(만 5세아)을 “무상 유아교육 원칙”을 적용하여 2005년까지 100% 취원율을 목표로 한다는 교육개혁안의 취지로 보아 일단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과정 개혁에 있어 10년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단계에 해당하는 수업연한에 대해 무상의무교육화 하는 것 역시 통일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의무교육법제를 통일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 소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가히 천문학적 숫자에 이를 것으로 예견된다. 여기에다 최근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교육시설 및 여건의 악화현상까지를 고려하여 필요한 재정 규모를 산출해야 한다는 부담에 직면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경제가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호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난은 체제적·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에서 제시된 원칙에 따라 의무교육법제의 통일을 기하되, 그 과정에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통일국가 완성단계 이전의 남한의 대책 첫째, 현행 9년의 의무교육을 그 어떠한 유보조항 없이 완전하게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제도 운용의 체질을 강화하는 길인 동시에 통일국가 완성단계에 의무교육법제 통일 달성할 수 있는 기본요건에 해당한다.

둘째, 교육개혁위원회가 내놓은 ‘무상유아교육’ 개혁방안을 조속히 그리고 더욱 확충하여 실현해야 한다. 그 대상을 국·공립 유아학교에 국한시키지 말고 사립유아교육기관으로 확대해야 하며, 2005년까지 100%의 취원율 달성이라는 개혁의 목표도 조기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셋째, 이상의 두 가지 대책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세원(稅源)의 개발과 더불어 정부와 민간의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 마인드를 진작시켜야 하며, 국가 정책수행의 우선순위에서 교육통합이 뒤쳐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의무교육 단계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현재 교육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기초로 북한의 교육현황, 특히 교육과정 운영

의 현실을 감안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현재 임용되지 않은 교수자원(초·중등 교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통일 이후 교육현장에 곧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재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의 고려사항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의 고려사항은 “의무교육 법제 통일을 위해 제시된 앞의 원칙들을 강력히 고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막상 정치적 통일이 실현되고 나면 앞에서 제시된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특히,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의무교육연한의 축소나 ‘단계적 실시’ 등의 단서를 달아 그 실시를 지연시킬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독일의 경우, 의무교육 법제의 통일은 기본적으로 연한이 2년 더 긴 서독의 의무교육제도를 기준으로 통일시켰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위의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약간의 지역적 또는 시간적 차이는 제도 실현의 기술적인 문제로 양해될 수 있으나, 원칙 자체의 무시는 계산 불가능한 정치적 비용을 추가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아 모든 제도의 통합은 보다 발전적인 형태를 통합의 준거를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의 의무교육 연한이 대체로 10년에 수립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또한 체제운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남한의 의무교육 연한은 북한의 그것에도 뒤질 뿐만 아니라 OECD 제국(諸國)의 평균에도 미달하고 있다는 현실을 참작해야 한다.

끝으로 통일국가 형성에 필요한 교육통합, 특히 의무교육 통일을 위해 교육내용의 중립성이나 보편성 견지 등 북한이 수행해야 할 과제나 고려사항이 많기는 하지만, 이는 어찌보면 상대에 대한 요구일 따름이지 상대방의 태도가 완강하여 그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치적 통일 및 교육통합은 당초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본고의 직접적인 관심사가 아니다. 더욱이 그러한 사항을 조목조목 열거한다는 것은 그리 의미있는 작업이라 보기 어렵다. 위에서 제시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의 기본원칙은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 북한 측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 통일작업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점은

어찌보면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무교육법제 통일의 원칙을 제시한 다음, 대책이나 고려사항을 주로 남한 측에 제기되는 과제로 국한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1. 서 론

본 연구는 남북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그 목적이 있다. 법제(法制)라 함은 법률의 규정 그 자체 및 법률에 의하여 지지되는 제도를 총괄적으로 일컫는 말로서, 본고의 고찰 대상은 결국 “의무교육에 관한 법률 그 자체 내지 의무교육 관련 법규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가 된다. 제도의 통일에 있어 관련 법규의 통일이 하나의 선행조건 내지 필수적인 해결과제이므로, ‘의무교육법제의 통일’은 “의무교육 관련 법규의 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체제를 달리하는 법의 통일을 모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법의 정신”(法精神, L'Esprit des Lois)을 잘 살려 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느냐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몽테스키외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法)이란 정체(政體)의 성질과 원리, 지세, 풍토, 종교, 상업, 생활 양식 등과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무교육 관련 법규의 “법정신”에 대한 고찰은 이질적인 체제의 법제 통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방법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8.15 이후 남북한의 의무교육법제의 제정 및 변천과정과 그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을 중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이다.

통일을 전제로 교육제도 통합방안을 연구하는데 있어 “의무교육법제”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고찰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의무교육법제의 통일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고 중요한’ 까닭은 다음의 몇 가지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의무교육법제가 교육법제 전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무상의무교육(free compulsory education)은 1)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무상으로 교육받을 조건을 정비해야 할 국가의 의무, 2)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취학시켜야 할 친권자 및 후견인의 의무, 3) 법이 정한 기간 동안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아동의 학습권 등으로 해석된다. 즉, 국가가 나서서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리를 실현해 준다는 점이 의무교육의 핵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를 국민교육제도(national education system)의 근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제도 통합방안 마련은 의무교육법제에 관한 고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의무교육법제에는 해당 국가의 교육이념, 교육정책의 우선순위, 정책 수행에 필

요한 경제적 여건 등이 그대로 반영되기 마련이어서, 의무교육법제의 통일이 가장 많은 논란을 함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무교육법제에 대한 논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에 대비한 교육제도 전반에 관해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의무교육법제 수립에 있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그에 필요한 자원 등을 고려하여 의무교육법제 통일방안을 수립하고 나서야 다음 단계(후기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단계)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두 번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진 교육제도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지나치게 종합적이고 고찰의 순서가 심히 잘못되었다는 연구현실 때문이다. 교육제도 통일에 대한 고찰은 미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계획(educational planning)의 한 과정이다. 계획에 우선순위가 있듯이, 미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관련 요인들에 대한 선후(先後)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추정의 기초가 될 최초의 추정값(양적인 것이든 질적인 것이든간에)이 흔들리면, 여러 단계의 추정의 결과인 계획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마련이다. 지금이라도 의무교육법제에 관한 고찰을 바탕으로 교육제도 전체의 통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남북한의 의무교육관련 법규 체계화과정(2.1)
- 2) 의무교육 관련 법규의 변천과정(2.2)
- 3) 남북한 의무교육 법제의 현황과 특성(3.1)
- 4) 의무교육법제 통일방안(3.2)
- 5) 결론 및 제언(4)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될 것인 바, 연구에 동원되는 주요 문헌으로는 남북한의 의무교육 관련 법규, 남북한 의무교육 수행에 관련된 일차자료, 남북통일 및 교육통합에 관한 선행연구, 기타 문헌 및 연구논문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가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의미있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육제도 통합방안 마련에 있어 “의무교육법제” 통일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방법 내지 순서 면에서 “의무교육법제”에 대한 고찰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되어야 할 과제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둘째, “의무교육법제”가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혀 다른 정치체제하의 의무교육법제를 비교분석하여 그 공통점과 상이점을 추출하고, 의무교육법제에 거는 국민의 기대나 국가의 의도(의무교육법제의 정치사회적 역할)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남북한 “의무교육법제”의 변천과정을 연대기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의무교육 현황과 관련지워 해석(解釋)함으로써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의무교육 방향을 확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게 될 것이다.

넷째, 의무교육법제 통일안을 마련하는 데서 부각되는 쟁점을 드러내고 법제통일에 필요한 원칙<sup>1)</sup>을 제시함으로써 법제통일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2. 남북한 의무교육 관련 법규의 변천과정

### 2.1 남북한의 의무교육 관련 법규 체계화과정

남북한의 의무교육 관련 법규의 연원은 8.15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한의 경우 '46년 1월 26일 미군정기에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이미 그 골격이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에 따른 헌법 제 16조 및 '49년 12월 제정·공포된 「교육법」에 거의 그대로 반영된다. 이러한 사정은 북측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여서 소련군이 주둔해 있는 상황에서 정강(政綱) 등을 통해 의무교육에 관한 각종 원칙이 천명·시행된다. 남한과 북한 공히 의무교육에 관해 이처럼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일제 식민지 교육의 유제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와 더불어 8.15 직후 분출한 국민의 교육접근기회 균등 및 확대 요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때문이었다(김용일, 1994).

1) 북한의 경우, 교과서는 물론 교육에 관련된 상세한 통계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외부로의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량적인 수준의 기본자료만을 갖고 의무교육제도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 규모를 산출하는 등의 계량적인 접근은 사실상 무의미한 작업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무교육법제 통일에 필요한 기본원칙의 제시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에 나타난 의무교육관련 법규를 시작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임시정부의 헌법(또는 강령)에 나타난 의무교육에 대한 기본방침은 8.15 이후 남북한의 의무교육 관련 법규 제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반드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다. 계속해서 남한의 경우 미군정기의 의무교육 실시에 법원(法源)으로 기능하였던 관련 법규 및 결정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49년 「교육법」 가운데 의무교육 관련 조항을 고찰함으로써 법규에 담긴 기본정신을 파악하고자 한다. 북한의 경우에도 역시 소군정기에 표방된 의무교육에 대한 기본입장을 시작으로 '48년 9월 9일 정부 수립 이후 결정된 의무교육 관련 법규 및 결정사항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2.1.1 남한의 의무교육 관련 법규 정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상해에서 의정원(議政院)의 결의로 헌법적인 「대한민국임시헌장」(1919. 4. 11)을 선포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교육의 의무”를 헌법상의 국민의 의무로 명문 규정함으로써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의 의무조항이 생기게 되었다. 즉, 임시헌장 제 6조는 “인민의 교육·납세 및 병역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태수는 그 교육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이미 구한국 시대에 1895년 소학교령(칙령)에서 학령을 정하고 부군(府郡)에 학교 설치 경영의 의무를 지우는 등의 근세적 교육법제를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취학의 의무 강제규정이 없어 조세교육 정신만을 법제화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24년이 경과한 이후, 국권을 빼앗기고 타국에 세운 임시정부에서나마 법제상 명백한 의무교육 규정을 두게 된 것이었다.”(정태수, 1995: 43)

위의 임시헌장은 그 명칭이 ‘임시헌장’, ‘임시헌법’, ‘임시약헌’ 등으로 바뀌면서 5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제 1차 개정시 의무교육 관련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된다. 즉, 3대 의무를 납세의 의무, 병역에 복하는 의무, “그리고 교육의 의무로 하되, 교육의 의무를 ‘보통교육을 수(受)하는 의무’”로 개정하였다. 당시는 하위 법률이나 세부적인 규칙이 없던 시기이므로 그 개정목적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제 1차 헌법의 “교육”

을 “보통교육”으로 고친 것은 의무교육을 보통교육에 국한한다는 취지였을 것으로 보인다.(정태수, 1995:43~45)

물론 이같은 헌법상의 의무교육에 대한 규정은 우리 국민이 일제의 식민지교육 아래 교육의 제반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나온 실현성이 없는 일종의 선언문이긴 했으나,<sup>2)</sup> 의무교육을 요체로 하는 근대적 교육권에 대한 인식은 곧 바로 해방후 남북한의 교육법, 특히 의무교육관련 법제에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8.15 직후 좌익진영과 우익진영 모두 “초등 단계의 국가에 의한 무상의 무교육”을 구체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즉, 8.15 직후 각 정파의 의무교육안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김용일, 1995 참조),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논의와 주장이 일정한 영향을 미쳐 성안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의무교육 관련 법규의 제정에는 미군정기에 교육의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45년 11월 14일 구성된 조선교육심의회 산하의 두 개 분과(제 2분과: 교육제도분과, 제 4분과: 초등교육분과)가 관여하였다. 초중등교육정책에 있어 당시 학무국(뒤에 문교부)의 현안은 조선교육심의회에서 결정된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결정사항, 즉 ‘국민의 기본교육’을 완수하는 것이었다.(김용일, 1994: 131) 이러한 사정은 다음의 자료에 비교적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일본 식민지교육으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국민교육의 건설을 위하여 즉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자 방침을 결정하고 계속하여 그 준비에 착수하였으니, 즉 1945년 11월 14일 제 1회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의무교육실시에 관한 토의를 시작하여 누차 초등교육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를 계속한 결과 1946년 1월 26일 교육심의회에서 의무교육실시요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이 안을 실시함에 많은 난관이 있어 재원염

2) 조소앙이 기초한 「대한민국건국강령」(1941. 1. 28)을 보면, 이러한 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동 강령에서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기본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기본교육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케 함.”이라 하여 교육 전반에 관한 국가 부담의 의무교육제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및 각종독립운동관계자료」, 이현희(1982).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서울: 집문당, 374, 392. 이에 대해 정태수(1995: 45~47)는 동 강령은 지력, 권력, 부력을 균등히 향유하는 삼균제도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지력균등과 관련하여 총강에서 “학권(學權)”을 균등히 하고 “교육의 권”을 균등히 할 것을 밝힌 다음, 제 3장 제 4항에서 이를 “피면비(彼免費) 수학권(受學權)”으로 요강화 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기서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서의 교육’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목도하게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출(財源捻出), 교사설비(校舍設備), 교원양성(教員養成) 등에 관하여 더욱 신중히 연구를 거듭하던 중 1946년 4월에 종급(終及) 의무교육실시계획이 성안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또는 재정적 조처만이 미결로 현재에 이르렀으니 이의 최후적 결정은 늦어도 신학년도에는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바이다.”[문교부조사기획과(1946). 문교행정개황].

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초등 단계의 의무교육실시요강은 조선교육심의회 제 4분과에서 성안된 것이다. 동안이 심의회 전체회의에 처음 상정된 때는 제 9차 전체회의가 개최된 '46년 1월 24일로서, 이틀 뒤인 1월 26일 제 10차 전체회의에서 동 상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된다.<sup>3)</sup> 최종의결안의 골자는 1) 6년 이내에 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9월 신학기부터는 6세의 아동과 그 이상의 학령아동은 지원자에 한해서만 전원 수용하며, 2) 부족되는 교육시설과 교사보충을 위해 2부제 수업을 하도록 하고, 3) 교원은 6년 동안 매년 1만 2천 8백 여명씩 양성한다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4) 연간 소요재원 11억원은 국고보조를 원칙으로 하되 액수가 미달될 경우는 민간인의 찬조금으로 이를 충당키로 하고, 5) 의무교육의 완벽한 실시를 위해 군정청(軍政廳), 道, 市(府), 郡, 島, 邑, 面에 「의무교육제 실시 촉진위원회」를 둔다는 것이었다.(교원복지신보, 1986. 12. 22).

여기서 우리는 군정 당시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곧 바로 교육정책으로 전환되는, 일종의 법원(法源)으로 기능하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안기성·김용일, 1996). 즉, 군정청 학부국은 조선교육심의회를 활용하여 교육 전반에 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케 하고 이를 수용하여 시책을 펴나감으로써 8.15 직후 교육정책의 가닥을 잡아나갔다. 조선교육심의회가 “의무교육의 완벽한 실시”를 위해 두기로 하여 설치된 의무교육제 실시 촉진위원회의 규정 전문은 다음과 같다.

3) 조선교육심의회에서는 이보다 조금 앞선 '45년 12월 5일 전체회의에 학제 개편안을 상정·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제 식민교육의 복선형 학제는 6-3-3-4의 단선형 학제로 개편되었는데, 학교의 종류·수업연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유치원(취학전 교육): 4~5세, ②국민학교: 6~11세, 6년간, ③초급중학교(또는 초급실업중학교): 12~14세, 3년간, ④고급중학교(또는 고급실업중학교): 15~17세, 3년간, ⑤중학교(또는 실업중학교): 12~17세, 6년간(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 ⑥사범학교: 15~17세, 3년간, ⑦대학(교): 18~21세, 4년간(의과대학은 18~23세, 6년간), ⑧대학원: 22세~ , 1년간 이상, ⑨각종 대학: 4년제 대학에 준함. 정태수, 1995: 157. 이 신학제가 '4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결정됨에 따라, 심의회는 '45년 12월 14일 「현행 교육제도에 대한 임시조치안」을 심의결정하여 졸업·진입학·전원입학이 가능하게 하였다.

“제 1조 본회는 의무교육제 실시 촉진위원회라 칭함.

제 2조 본회는 관계당국과 협력하여 의무교육제 실시를 촉진함을 목적함.

제 3조 위원은 학무국장이 각계인사를 망라하여 차(此)를 위촉함

제 4조 본회의 임원 급(及) 기선출방식(其選出方法)은 여좌(如左)함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간사(幹事) 약간명, 고문 1명

1. 회장은 학무국장을 추대함.
2.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차(此)를 호선(互薦)함.
3. 간사는 청내직원(廳內職員) 중에서 차(此)를 호선함.
4. 고문(顧問)은 군정장관을 추천함.

제 5조 임원의 임무는 여좌(如左)함.

1. 회장은 회무를 총리(總理)함.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있을 때에 기직무(其職務)를 대행함.
3. 간사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일반 사무를 처리함.

제 6조 본회는 기목적(其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기(下記) 사항을 처리함.

1. 의무교육제 실시 취지 급(及) 국민의 애국적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취학 장려에 관한 사항
3. 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사(校舍) 급(及) 기타 시설의 증설 확충에 관한 사항
5. 임시비 재원 급(及) 기타 경제에 관한 사항
6. 건축자재 확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자재 확보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국사편찬위원회, 1974, 120).

의무교육실시촉진위원회는 학무국 내에 두어졌는데, 이는 무엇 보다도 사업의 중요성 때문이었다고 전해진다. 위의 규정에서 동 위원회를 만들면서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해 미군정 당국자들을 적극 참여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초등의무교육이 8.15 직후 우리 교육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였다고는 하지만, 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제반 여건의 조성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sup>4)</sup>

특히, 의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재정상의 곤란은 심각한 것이어서, 무상교육의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군정 당국의 의무교육 실시 의지는 '46년 5월 28일에 발표한 「의무교육실시계획」<sup>5)</sup>에 종합된다. 문교부조사기획과의 자료에서 4월에 성안되었다는 계획안이 바로 이것인데, 계획기간은 6개년으로 '46년 9월부터 6년간 지속적으로 준비·실시하여 '51년에는 전원 수용의 완전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문교부 내에 설치한 의무교육실시촉진위원회는 일종의 본부임셈이고, 각도와 각군 그리고 읍·면에 그 자부를 두어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을 구하는 추진방식을 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의무교육의 추진성과는 2부제, 3부제 수업을 도입하는 조치 등을 통해 국민학교 학령 아동의 취학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 말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완전한 것이었다. 특히, 법령화(당시에는 “군정법령”)되지 못하고 행정적 조치를 근거로 실시되었다는 점, 재정난으로 인해 공비부담(공비부담은 30%, 학부모 등의 사비부담 70% 이상)에 의한 무상(無償)교육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 등은 군정하의 의무교육이 매우 불완전한 것이었음을 뜻한다. 재정상의 곤란으로 인해 “무상성”이 실현되지 못한 까닭에 “의무성” 또한 강한 구속력을 갖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정부 수립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된다. 다만, '48년 제헌국화에 의해 마련된 헌법과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49년 「교육법」 제정에 따라 의무교육 관련 법규는 체계성을 갖추게 된다.

4) 이러한 사정에 관해서는 다음의 자료에 비교적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1) . . . 그리고 특히 초등교육에 관한 문교정책의 중점은 의무교육의 실시계획과 교원의 계훈련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교정책은 당시의 사회사정으로서 당연하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초등교육을 위한 교육예산: 당시 모든 국가예산은 미국의 원조에 의하여 수립되었고 또한 집행되었던 것이다. 교육예산 역시 그러하였다. 1946년의 교육의 총예산이 1,104,576,644원이었으며, 그중에서 초등교육 경비보조는 756,315,644원이며, 그 내역은 국민학교 영선비(營繕費)보조 634,313,884원, 교육단체 재정부족보조가 119,001,160원이다. 특히 교육행정이나 교육제정에 관한 주도권은 비교문관에 있었던 것이며, 이것도 당시의 실정으로는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編, 1960: 83.

5) 이보다 한달 앞선 '46년 4월 19일 군정청 문교부는 서울시 의무교육실시계획을 통학구역표와 함께 발표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9월 1일 신학년도부터 직령아동(1939년 9월 이후 출생한 만 6세 아동) 의무 취학을 실시하되, 학령초과아동(1939년 9월 2일 ~ 1934년 9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7세 이상 만 12세 미만 아동) 20,000명도 통학구역별 2부제(4학년 이하에만 실시)로 전부 수용하도록 계획되었다. 통학구역표란 이들을 수용할 학교에 대한 각 동별 통학구역을 정한 표(학구제 표)를 말한다. 정대수, 1995: 166~169 참조.



'48년 정부 수립에 따라 제정된 헌법 제 16조에는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하여 초등의무교육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 16조(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덕의 강조는 연구자)

이에 대해 안규(1984)는 “의무적 초등교육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리중에서도 현대의 복지사회가 취한 수익권 또는 생활권의 기본에 속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빈약한 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초등교육에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익(法益)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정신의 발로이며 귀결로서 20세기 이후 민권사상, 즉 국민주권의 이론과 국민의 정치참여권의 확대 강화가 국민의 교육권에 까지 파급된 것이다.”라고 평하고 있다.

헌법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48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교육법」 제 8조, 제 10조, 제 95조, 제 96조, 제 97조에는 다음과 같이 의무교육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제 8조: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전항이 초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치경영하여야 하며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그 보호하는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제 10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국민에게 민주국가의 공민으로서 필요한 교양을 주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시책을 강구 실시하여야 한다. 제 95조: 국민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 96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가 만 6세가 된 익일(翌日) 이전의 최초학년초로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에 속하는 학년 말까지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 전항의 의무독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7조: 전항에 규정된 아동(취학아동)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학령아동의 의무교육을 받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교육법 부칙 제 167조: 의무교육은 1950년 6월 1일 현재로 취학시기에 달한 학령아동으로부터 시행한다.”(관보, 호외, 법률 제 86호 교육법, 1949. 12. 31, 115~120., 안규, 앞의 논문, 163에서 재인용).

위의 「교육법」 제 96조에 따라 「교육법시행령」은 '52년 4월 23일 대통령령 제 633호로 제정·공포된다. 「교육법시행령」 가운데 의무교육 관련 조항은 제 95조, 제 97조, 제 98조, 제 99조, 제 103조, 제 104조로서, 여기에서는 취학독려 및 취학과정·면제·유예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제정에 관한 사항은 의무교육제도의 성격과 추진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법」 제 3장 교육세와 보조금에 대한 규정, 제 68조, 제 69조, 제 70조는 의무교육제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 68조: 교육구, 시 또는 특별시는 그 설립경영하는 국민학교와 그에 준하는 학교를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제 69조: 교육구, 시, 특별시 또는 도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 70조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국민학교교원의 봉급 전액과 공립중학교와 고등학교교원의 봉급만액은 국고가 부담한다.”(관보, 호외, 법률 제 86호 교육법, 1949. 12. 31, 115~120., 안규, 앞의 논문, 165~166에서 재인용).

한편, 「교육법시행령」 제 40조, 제 41조, 제 42에는 의무교육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기하고 있는데,<sup>6)</sup> 이는 헌법 제 16조의 정신에 따라 의무교육에 관련된 모든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것과 아울러 학교의 유지경영에 필요한 경비는 물론 인건비, 교재비, 아동급식비, 후생비, 피교육자의 교육용 소모품대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의무교육경비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학기에 관한 규정은 「교육법」 제 151조에

6) 참고로 그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제 40조: 교육법 제 70조의 교육비국고부담액은 교육구, 시, 도 또는 특별시에 보조한다. 제 41조: 교육법 제 71조 제 1항의 교육비라 함은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제 42조: 교육법 제 71조 제 1항의 의무교육비라 함은 아래의 경비총액을 말한다. 1. 국민학교 경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비, 신영비(新營費) 기타 유지비 일체, 2. 특별시 또는 시·읍·면의 취학독려에 관한 인건비 기타 경비, 3. 특별시와 시의 교육위원회, 교육구의 인건비 및 사무비 및 기타 경비. 의무교육비재정 부족액은 전항에 의한 의무교육경비총액에서 각교육구 및 시와 특별시의 교육세의 전전년도 수입액을 감한 차액으로 한다. 단, 교육세 수입 중 특별부과금은 제외한다.”(관보, 호외, 대통령령 제 633호 교육법시행령, 1952. 4. 23., 113~115., 안규, 앞의 논문, 166에서 재인용).

“각학교의 학교는 4월 1일 시작하여 익년(翌年) 3월 31로 끝난다”고 하고, 이에 관련된 학기와 수업에 관한 사항을 「교육법시행령」 제 70조와 제 71조<sup>7)</sup>에 정하고 있다.

'46년 5월 28일에 발표된 “의무교육실시계획”은 그간 제반 여건의 불비로 그 시행에 있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에는 의무교육실시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행정조치를 통하여 초등의무교육에 대한 계획을 마련한 채 정부 수립을 맞이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정부 수립이 되고나서야 「교육법」에 의거하여 '50년 6월 1일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지만, 이 또한 6.25동란으로 중단되고 「교육법시행령」 등의 초등의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52년에 가서야 체계화된다. 따라서 남한의 의무교육은 ‘의무교육6개년계획’<sup>8)</sup>이 수립되고 난 '54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 2.1.2 북한의 의무교육 관련 법규 정비

8.15 직후 북한은 「북조선학교교육실시조치법」('45. 11. 21)을 제정·공포하고 종래의 국민학교를 인민학교로 개칭하는 등의 개혁작업에 착수한다. 이어 '46년 3월 2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46. 2. 8. 발족)는 20개 정강을 발표하는데, 그 가운데 제 16조에서 “점진적 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국가경영인 소·중·전문·대학교들을 광범히 확장할 것, 국가의 민주주의 제도에 따라 인민교육제도를 개혁할 것” 등을 천명함으로써 의무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소군정하에서 북한이 의무교육에 관한 어떠한 방침을 갖고 있었던 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미소공위에 대한 북로당과 남로당의 답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좌익진영은 8.15 직후 얼마간 “국가부담의 9개년 이상의 의무교육실시”(조선공산당 경성시위원회, 격(檄), 심지연, 1986, 112)에서 보듯이 9개년의 의무교육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교육의 기회균등을 폭넓게 실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이념적

7) “제 70조: 학교의 학기는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 제 1학기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 2학기: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제 71조: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년 230일 이상으로 한다.”

8) 의무교육6개년계획에 따르면, '59년을 계획달성의 연도로 하여 취학율을 매년 1.28%씩 향상시켜 완성연도에는 총학령아동의 취학율을 99%로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완성연도까지 보통교실수 31,863개, 특별교실수 4,523개 도합 36,386개를 신축하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문교부(1958), 문교개관, 51., 안규, 앞의 논문, 171에서 재인용.

급진성의 한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얼마되지 않아 남로당과 북로당 대책안에서 보듯이 좌익진영의 의무교육 대책안은 대개 5년의 초등의무교육으로 통일된다.(김용일, 1995: 17~18)

우선 남로당은 의무교육을 5년제(만 7세에서 만 12세까지)로 하여 즉시 실시할 것을 주장하면서 의무교육에 필요한 경비·시설(운용)·교원의 대책을 밝히고 있다.(남조선노동당, 「남로당 답신안」, 1947년 7월 4일자 자료, 심지연, 1989: 319). 의무교육에 관한 경비를 국가부담으로 하되 ‘의무적 교육세’를 부과하여 재정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학교 내용 시설의 증설 대책으로는, ①2부교육제를 실시할 것(2만 학급이 증설됨) ②3개년 계획으로서 3만 학급을 증설할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교원의 대책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①8.15전 사범학교의 교원양성 능력을 3배로 증대시킬 것이며, 이것은 현 사범학교의 확충 및 신설에 의하여 할 것, ②초등교원 임시양성소를 사범학교, 기타 중등학교에 부속시켜 중등 졸업 학력 이상을 갖은 자를 단기 강습시켜 초등학교 교원을 대량 양성하도록 한다고 하였다.<sup>9)</sup>

북로당의 경우에는 “조선인민은 국가의 부담으로 하는 초등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라고 하여 초등의무교육을 민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언명하고는 있지만, 그 방도에 관해서는 상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쏘·미공동위원회 공동결의 제 5호, 제 6호에 대한 답신서」, 1947년 7월 3일자 자료, 심지연, 1989: 356.) 그 이유는 교육체계를 통한 교육사업을 논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모든 학교를 국립으로 할 것”이라는 기본방침에서 구체적인 방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굳이 ‘무상교육’ 등 의무교육 실시의 구체적인 방책에 대해 일일이 열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정태수(1995: 49~50)는 미소공위에 답신서를 낸 4개의 정파(政派)의 답신 내용을 교육권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면서, 의무교육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즉, 의무교육에 관해서는 4개 정파가 모두 의무교육제도(3개 파는 6년제, 민전만은 5

9) 민전 역시 초등 의무교육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재정에 관해 “의무교육실시에 따르는 경비조달을 위하여 의무교육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단, 빈민에게 대하여는 상당한 면세점을 설정한다)”고 하여 남로당의 안과 차이가 없다. 미국라성과 하와이 계파한족연합위원회(1948). 해방조선, 124., 현대사자료총서 10권, p.682.

년제의 초등의무교육)를 건의했으나, 수교육권(受教育權)에 관하여는 민전만이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명문을 두었다. 또한 민전만이 교육권을 내세웠는데, 이는 상해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제를 받아 들였다고 보기보다는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의 헌법조항을 모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로써 당시 교육의 의무성(義務性)에 대한 인식이 통념화한 상황 하에 교육의 권리성(權利性)에 대한 인식이 모두 희박하였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는 평가이다.

해방 직후 북한의 보통교육체제는 인민학교 6년, 중학교 및 이와 동등한 기술학교 4년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46년 12월 18일을 기하여 임시인민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보통교육체제가 개편·공포되었다. 동 결정서 제 1장에서는 보통학교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 1조 인민학교는 5년제로 하고 제 1학년 입학연령은 만 7세로 한다. 인민학교에 1년의 유치반을 둘 수 있으며 입학연령은 만 6세로 한다. 제 2조 초급중학교는 3년제로 하고 제 1학년 입학자는 인민학교 졸업자로 한다. 제 3조 고급중학교는 3년제로 하고 제 1학년 입학자는 고급중학교 입학자격검정시험 합격자로 한다. 고급중학교는 초급중학교에 병설 또는 신설한다. 제 4조 야간 초급중학교 및 고급중학교의 수업연한과 자격은 주간 초급중학교 및 고급중학교와 동일하다.”<sup>10)</sup> 학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동 결정서에는 「북조선교육체계에 관한 규정실시에 관한 조치」를 따로 두어 기존의 학제와 개편된 학제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sup>11)</sup>

이후 북한에서는 제 41차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학교교육 체계에 관한 규정 및 그 실시에 관한 조치 일부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통해 앞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 133호를 일부를 개정하였는데, 인민학교의 학령이 만 7세에서 11세의 아동이라는 점

10) 아울러 제 2장은 기술학교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 5조 초급기술학교는 3년제로 하고 제 1학년 입학자는 인민학교졸업자로 한다. 제 6조 중등전문학교는 3년 또는 4년제로 하고 제 1학년 입학자는 초급중학교 또는 이와 동등정도 이상의 학교졸업자 및 고급중학교 입학자격검정시험 합격자로 한다. 야간 초급기술학교, 야간 전문학교의 수업연한과 자격은 주간의 초급기술학교 및 전문학교와 동일하다.” 「학교교육체계에 관한 규정 및 그 실시에 관한 조치에 대한 결정서」, 1946. 12. 18.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 133호.

11) 관련 규정은 “제 1조 현재 인민학교 제 1, 2, 3, 4학년은 1947년 9월 1일 신제 인민학교 제 2, 3, 4, 5학년으로 각각 개편한다. 제 2조 현재 인민학교 제 5, 6학년은 1947년 9월 1일에 초급중학교 또는 초급기술학교 제 1, 2학년에 각각 입학하게 한다. 다만 제 5학년에 한하여 상급학교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없는 학동은 신제 인민학교 제 5학년에 편입한다.”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학교교육체계에 관한 규정 및 그 실시에 관한 조치에 대한 결정서」, 1946. 12. 18.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 133호.

등은 변화가 없었다.

'48년 9월 2일 최고인민회의 제 1기 1차회의에서는 헌법이 채택된다. 동 헌법 제 18 조에서는 교육에 관해 다음의 사항을 정하고 있다.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은 전반적으로 의무제이다. 국가는 빈한한 공민의 자녀에 대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한다. 전문학교 및 대학의 대다수 학생에 대하여 국비제를 실시한다. 교육용어는 국어로 한다.”(김동규, 1990: 104~105)

이어 최고인민위원회는 “①교육기회 확충, ②초등 의무교육실시(1950년), ③기술교육 및 고등교육의 진흥, ④직장에서 기술훈련 강화, ⑤문맹퇴치와 성인교육의 발전 등”(김동규, 1990: 100)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종합적인 구상은 내각 결정 제 92호 '1950년도부터의 전반적인 초등의무교육실시를 위한 1949년도의 준비사업에 관한 결정서'('48. 12. 16)에 집약되어 나타난다. 이 결정서는 북한 당국자의 의무교육에 대한 관점, 추진방법, 과제 등을 망라하고 있어 사실상 북한의 의무교육에 관한 청사진이라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동 결정서를 보면, 우선 결정서가 나오기 직전까지의 초등교육부문의 현황<sup>12)</sup>을 해방전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전면적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는 과업이 “가장 긴급한 국가적 급무”로 제기되는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즉, 전면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 배경에 대해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호하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보장하며 문명하고 부강한 민주국의 자주독립국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전체인민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민주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조국에 충성을 다하는 유능한 인재를 더 광범히 양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라고 언명하고 있다.

12) <표 2 - 1> 해방전후 초등교육부문의 교육현황 비교(48. 12월 현재)

구 분	학 교 수	학 생 수	취학율	비고
해방전	1,372	877,894	58.0%	
해방후	3,245(△237%)	1,378,536(△157%)	94.3%	

아울러 동 결정서는 '50년부터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의 실시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 준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할 학교망(網)을 공포확장시키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 '49년 1월 말까지 교원들의 물질적 사회적 대우를 향상시킬 국가적 대책 마련, 초등의무교육실시의 국가적 의의와 중요성 선전의 필요성과 책임,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실시준비위원회」<sup>13)</sup> 조직의 과제 등이다.

초등의무교육실시를 위한 준비사업에 관한 내각의 결정서를 토대로 '49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 1기 4차회의에서는 관련 법령을 채택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조 헌법 제 18조에 의하여 1950년 9월 1일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역에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한다. 그러나 지방사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에서는 그 실시를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다. 제 2조 1950년 9월 1일부터 인민학교에서는 무료교육제를 실시하고 빈한한 농민의 자녀에게는 교과서, 학용품 등을 국가에서 무상 배급한다. 제 3조 학령아동은 만 7세로부터 만 15세까지의 아동이다. 인민학교 제 1학년 취학 연령은 만 7~8세로 하되 앞으로 이 이상의 연령의 아동을 취학시킬 때에는 이를 내각에서 결정한다. 제 4조 학령아동을 취학시킬 의무는 부모 및 후견인에게 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 1949. 9. 10. 최고인민회의 법령)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령에는 의무교육의 기본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동 제도의 성격 및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50년 1월 11일에는 「학령 아동 취학에 관한 규정」, 「최고인민회의 제 4차회의에서 채택된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 실행에 관한 결정서」(이상 내각 결정 제 6호)를 공포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취학 관련 행정 및 사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13) 동 결정서 제 4항에 따르면,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실시준비위원회」는 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 학령아동조사, 학교구 재배정, 학교 기본건설 계획 수립 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1949년 1월 말일까지 조직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교 신증축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각 면(面)에 「학교건설위원회」를 1949년 2월까지 조직할 것을 교육상 및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책임지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정서 참조.

이로써 북한의 의무교육 관련 법규가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 2.2 의무교육 관련 법규의 변천과정

남북한 양측의 의무교육 관련 법규는 많은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관련 법규의 변화에 매우 다양한 요인이 개재하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정치이념을 달리하는 남북한 정권이 수립되고 전쟁 및 극한적인 이데올로기 대립을 경험한 한반도의 분단현실이 이질적인 변화를 가속화시켰으리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적어도 의무교육에 관한한, 남한에서의 변화보다는 북한의 그것이 훨씬 더 많이 목격된다. 이는 의무교육의 실현 및 그 연한의 확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서 북한이 남한보다 더 적극적이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물론 학제 운영의 기본 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앞서있다” 또는 “좋다”라는 식의 단순한 판단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학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sup>14)</sup>을 고려하면서 남북한 의무교육 관련 법규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 2.2.1 남한의 의무교육 관련 법규의 변천

남한의 현행 헌법 제 31조의 여섯 개 조항 가운데 세 개의 조항이 의무교육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보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우리는 제 ②항의 “의무교육”이 제 ①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기회균등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최적인 방도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제 ③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함은, 의무교육 단계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다름 아닌 “무상성”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이 세 개의 조항은 “무상성에 기초한 의무교육”을 통해 국민의 교육권 내지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해 온 의무교육 발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14) 우리가 학제에 관한 논의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학제 자체가 매우 복합적인 요인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최희선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이러한 면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학제는 적어도 그 정치적 측면에서 국가의 통치이념과, 경제적 측면에서 산업구조의 변동과 이에 병행하는 인력수요구조의 양적인 변화와 기술수준과 근로원리가 반영될 질적 변화 그리고 교육비 부담능력,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간, 사회계층간의 격차와 갈등 그 속에 내포된 인간관·사회관·교육관의 규범적 유형과 유형간의 갈등과의 관련 속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최희선, 1990: 62)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위의 제 2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교육법 제 8조(의무교육), 제 8조의 2, 제 102조의2(중학교에 취학시킬 의무)에 상세히 정하고 있는 내용을 의미한다. 교육법 제 8조는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총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모든 국민은 6년(제 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6년에서 해당 연수를 뺀 연수를 말한다)의 초등교육과 3년(제 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3년에서 해당 연수를 뺀 연수를 말한다)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학령 대상아동 전원을 취학시킴에 필요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설치·경영하여야 한다.(이하 ⑤ 생략)”

이 조항은 당초 제 1항의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84년 6월 25일에 열린 제 12회 임시국회 제 6차 본회의에서 위와 같이 원안가결되어 동년 8월 2일 법률 제 3739호로 공포된 것이다. 개정의 골자는 말할 것도 없이 중등 전기, 즉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법규상 9년의 의무교육제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법규를 두고 하는 말이다.(안기성·김용일 외, 1994: pp.22~23).

교육법 제 8조의2는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따로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신설 84. 8. 2)”는 내용이다. 이는 제 8조에 대한 일종의 유보조항<sup>15)</sup>으로 신설된 것인데, 골자는 중등 전기 3년간의 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동시

에 실시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정한 바에 따라 중학교 단계의 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1985. 2. 21 대통령령 제 11626호)에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85년 3월 1일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규정은 현재까지 8차에 걸쳐 개정(1996. 2. 22 대통령령 제 14920호)된 바 있는데, 의무교육대상지역 및 그 대상자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2조(의무교육중학교교육 대상자) ① 의무교육중학교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2. 2. 1, 94. 12. 31, 96. 2. 22)

1. 행정구역상 군지역 및 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과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시지역중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이하 “중학교의무교육 실시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중학교학령대상자 2.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지역중 특수교육대상자중 중학교과정 교육대상자(이하 생략)”

이렇게 볼 때, 현재 남한의 9년의 의무교육제도는 완전한 9년제 의무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분적인’ 또는 ‘불완전한’ 9년의 의무교육이라 함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유보조항까지 달아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새로 발생하는 의무교육제정의 소요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16)</sup> 즉, 중학교 단계를 일시에 무상의무교육화 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공교육비

15) 이러한 유보조항을 둔 이유가 무엇인가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유보와 관련된 합헌결정(1991. 2. 11., 90헌가27)에 대한 재판관 변경수 및 재판관 이시윤의 반대의견에 잘 나타나 있다. 우선 재판관 변경수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1. 재정사정 등을 이유로 초등교육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아주 유보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헌법 제 31조 제 3항에서 보장된 초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재정 부담을 이유로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의 순차적 실시를 규정한 교육법 제 8조의 2는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 11조 제 1항의 평등의 원칙을 제한하는 법률이다.(이하 생략)” 또한 재판관 이시윤은 “교육법 제 8조의 2는 교육법 제 8조의 규정을 사실상 수정·정지시키는 것이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년의 강조는 연구자) 안기성·김용일 외, 1994: 24 참조.

16) 교육법 제 8조의 2의 유보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에서도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중학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임을 시사하고 있다. 즉,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시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도록 한 것은 주로 전면 실시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부합된다.”(고년의 강조는 연구자) 안기성·김용일 외, 1994: 24.

만 하더라도 대략 3조 8,5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sup>17)</sup> 이는 '96년 현재 19조 2,150억의 공교육비 총액 대비 20.0%이고, GDP 대비 1.1%의 규모이다. 교육예산을 GNP 대비 1% 남짓 인상하려는 계획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간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정을 감안할 때, 의무교육을 일시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도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 없다. 때문에 정부는 의무교육 연한을 3년 확대하여 총 9년으로 연장할 당시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취지를 동 유보조항에 반영시킨 것이다.

교육법 102조의2는 “중학교에 취학시킬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다. 즉, “①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의 학년초로부터 만 15세(제 9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4세를 말하고, 제 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뺀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를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개정 95. 12. 29) ②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독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조신설 84. 8. 2)”

여기서 보면, 중학교 학령 아동을 취학시켜야 할 친권자 및 후견인의 의무, 취학독려의 국가의 의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초등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친권자 및 후견인 과 국가의 의무와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동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교육법 제 8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상의 형식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행과 같은 9년간의 의무교육제도(초등 6년, 중학교 3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초등 6년간의 의무교육 단계의 취학율이 '60년대 말 이미 100%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대금·학용품비 등 피교육자의 직접부담금이 존속되고 있으며 육성회비의 명목으로 상당

17) 이 수치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수에다 중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곱하는 방식으로 의무교육비를 단순 추정한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여타의 제반 의무교육경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확한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결과를 제시한 이유는 의무교육제도가 얼마나 많은 교육재정 소요를 유발시키는 요인이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의무교육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에게 얼마만큼 부담이 될 것인가에 대해 시사를 받기 위한 것이다. 산출에 사용된 중등학교 학생수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은 '96년도 지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상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97 참조.

정도의 재원 학부모에게 부담지워져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남한의 의무교육에서 무상성의 개념은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의미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남한의 의무교육 관련 법규는 크게 보아 ①비록 완전한 법적 체계(당시에는 군정법령)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 미군정기이던 '46년 1월 26일의 “초등단계의 의무교육실시 요강” 단계, ②'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라 제정된 헌법 제 16조, 이듬해 제정· 공포된 교육법 제 8조 및 관련 법규 등에 의거한 초등의무교육단계, ③그리고 '84년 교육법 개정 및 헌법 제 31조 제 2항을 포함한 관련 법규 개정, '85년 대통령령으로 신설된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에 의거한 초등 및 중학교의무교육단계 등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 1단계와 제 2단계는 법적 체계성 내지 정권의 성격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의무교육 연한의 연장과 같은 실질적인 변화·발전과정은 제 2단계에서 제 3단계로 넘어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에서 의무교육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무상성에 기초한 의무교육”을 통해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근대 교육이념의 전개과정과 같은 맥락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 연한을 연장시킨 '84년 의무교육 관련 법규의 개정은 제도 운영상의 상당한 진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무교육 관련 법규 및 그 시행은 시장경제 중심의 사회운영 원리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무상성”의 원리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때문이다.

### 2.2.2 북한의 의무교육 관련 법규의 변천

김봉규(1990: 99~117)는 해방후 현재까지 북한의 교육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다음의 여섯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특징을 분석한 바 있다. 아래의 시기구분에서 특히 제 4, 5, 6기는 그 기준을 의무교육 연한의 확대 및 그에 수반되는 교육제도상의 변화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교육이 교육제도 전반에 매우 강력한 규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제 1기: 해방후 교육정책 정립기(1945~50)

제 2기: 조국해방전쟁기(1950~53)

제 3기: 전후재건기(1953~59)

제 4기: 7년제 의무교육기(1960~66)

제 5기: 9년제 기술의무교육기(1967~74)

제 6기: 11년제 의무교육기(1975~현재)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의무교육 관련 법규의 제정과정에 해당하는 시기는 제 1기이지만, 초등교육의 의무교육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것은 '56년 경에 가서야 가능하였다. 때문에 북한에서 중등교육애로의 의무교육 확장이 시작된 것은 이 이후에서야 가능하게 되었다.<sup>18)</sup> 그런데 의무교육 관련 법규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동인인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무교육단계(초·중등교육)에 있는 학제의 변화를 먼저 살펴볼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우 의무교육정책의 변화와 관련 학제의 개편이 동시적으로 혹은 조금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 단행되었기 때문이다. 8.15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초·중등학제상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45.11.21 국민학교를 '인민학교'로 개칭

'47. 6. 8 인민학교를 6년제에서 5년제로 개편

'53. 7.11 인민학교를 5년제에서 4년제로 개편<sup>19)</sup>

'67. 4. 1 9년제 기술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학제 개편(2년제 기술학교와 5년제 초급

18) 북한의 최고인민위원회도 “...1956년부터는 공화국 북반부 전지역에 걸쳐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었다.”(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 실시를 준비할 데 관하여」, 1958. 10. 2.)라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

19) '53년 한국동란 직후 학제의 전면 개편에 따라 북한의 인민학교 수업연한은 종전의 5년에서 현재와 같이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즉, '53년 7월 11일 내각 결정 제 111호로 공포된 「인민학교 기술전문학교 및 대학의 학제개편에 관하여」에서는 “...각 부문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하여 일층 질적으로 준비된 과학, 기술 인재가 요구되고 있는 오늘 인민학교의 수업연한은 해당 교과목을 습득시킴에 여유있는 기간으로 된 반면 대학 및 기술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은 선진 과학 기술을 원만히 습득시킴에 불충분한 기간으로 되었으며...”라면서 인민학교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한다.

중학교를 통합하여 5년제 중학교로 개편)

- '72. 7. 1 전반적 10년제 고등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학제 개편(5년제 중학교와 2년제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6년제 고등중학교를 개편)
- '73. 4. 9 취학전(유치원 높은반) 교육의 의무교육제도 편입
- '75. 9. 1 11년제 의무교육의 전면 실시

북한 당국은 '56년 신학기<sup>20)</sup>에 들어 4년제 초등의무교육이 소기의 목표에 도달하고, '58년에 이르러 인민학교 졸업생의 초급중학교 취학율이 완전취학율에 달하는 성과를 보이게 되자 중등의무교육체제를 확립하려는 조치를 강구한다. 이를 위한 시정방침이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 실시를 준비할 데 관하여」(1958. 10. 2) 라는 최고인민위원회의 결정서 형태로 집약되는데, 동 문건에서 북한은 전반적인 중등의무교육제 및 기술의무교육제 실시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이미 확립되고 인민경제가 기술적 재건기에 들어선 현 단계에 있어서 문화혁명은 조선인민공화국의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문화혁명수행에서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전체근로자들의 일반 교육지식과 기술지식 수준을 제고하며 기술인재를 대량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 . . 조선에서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는 현 조건 하에서 당면되어 제기되는 과업은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더욱 공고히 하며 그에 토대하여 기술의무교육제 실시를 준비하는데 있다.”

동 결정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제도 시행의 원칙 및 추진계획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sup>21)</sup>

20) 북한의 학기구분은 '57년 2월 21일자 내각 명령 제 6호로 공포된 「대학 및 각급학교 학기구분을 변경할 데 대하여」에 나타나 있다. “1. 인민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제 1학기 9월 1일~2월 9일까지, 제 2학기 2월 10일~4월 25일까지, 제 3학기 4월 26일~8월 31일까지, 동기휴가 12월 25일~2월 9일까지, 학기휴가 7월 21일~8월 31일까지. 인민학교에 한하여 제 1학기 중에 임시휴가를 1주간(10월 26일~10월 31일까지)을 원칙으로 하여 북부 산간지대의 인민학교에서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임시휴가 1주간을 12월 18일~12월 24일까지로 둘 수 있다.”

21) 제 3항에서는 기술의무교육제 실시에 따른 교원수급 및 교과서 교재 대책을 언급하고 있다. 즉, “기

“1. 1958년 11월 1일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의 전지역에서 전반적 중등 의무교육제를 실시한다. 1958년 11월 1일부터 초급중학교에서 무료교육제를 실시하며 애국 련사의 유자녀들과 국가적 방조를 받는 일부 공민의 자녀들에게는 교과서와 학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인민학교를 졸업한 아동은 초급중학교에 의무적으로 취학되어야 하며, 그의 부모 및 후견인에게는 그를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 2. 초급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학교를 설치하며 앞으로 4~5년 내에 2년제 기술의무교육제를 실시한다. 농업학교, 각종 공업학교, 상업학교, 립업학교, 수산학교 등 각종 기술학교들을 도시와 농촌, 어촌 및 립산구역에 몇 개 리에 1교씩 설치한다. 조건이 조성된 지역들에게는 1958년도부터 기술학교를 개교한다.(이하 생략)”(고덕의 강조는 연구자)

위의 결정서에 의거하여 일주일 뒤에 공포된 내각 결정 제 121호 「전반적 중등 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 실시를 준비할 데 관한 법령을 성과적으로 집행할 데 관하여」(1958. 10. 9.)에서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도가 마련·제시된다. 아울러 북한은 「인민교육체계를 개편할 데 관한 법령」(1959. 10. 28)을 공포하여 “인민교육체계” 전반에 관한 개편을 단행한다. 그러나 개편의 주요 목적이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결합한 중등기술교육체계 확립”이라는 사회주의 교육원리<sup>22)</sup>의 구현, 즉 “기술의무교육제” 실시에 따른 관련 법규의 정비에 있었기 때문에 인민학교(4년제)와 중학교(3년제)에 대한 제도적 개편은 없었다. 동 법령 제 2조는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제 2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밀접히 결합한 중등기술교육체계를 확립한다. (1) 중학교 졸업생을 받아들이는 현재의 2년제 기술학교망을 확장하며, 1962년~1963학년도부터 기술학교까지 기술의무교육제를 실시한다. 기술학교는 학생들에게 중등일반교육을 충분히 주면서 한가지 이상의 기술 기능을 가지게 하는 기술교육을 실시하며 그들

---

술의무교육제 실시에서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교원양성을 위하여 교원양성 및 재교육 기관들을 개편 확장하며 단과대학의 신설 또는 기존 대학들에 양성반을 부설함으로써 1~2년 내에 해당 수의 기술학교 교원을 양성한다. 기술의무교육제 실시와 관련하여 그에 소요되는 교과서 및 교재를 제때에 보장한다.”

22) 그들의 용어를 빌어 표현하면, 사회주의 교육원리는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기술교육체계”(최고인민회의,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하여」, 1966. 11. 24.)라 할 수 있다.

을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교양함으로서 기술문화적으로 충실된 일꾼들을 양성한다. (2) 기술학교 졸업생을 받아들이는 2년제 고등기술학교는 1960~1961학년도부터 실시한다.(이하 생략)”

그러나 위의 법령에 따라 7년간의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은 '58년도부터 시행되었지만, '62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기술의무교육제도는 보통교육부문 강화에 대한 내각 결정 제 59호(1962. 10. 14.)에 따라 '64년으로 연기되었다. 법령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하여」(1966. 11. 24)는 “기술의무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는 시점에 제정·공포되는데, 이는 “조선로동당 제 4차대회에서 7개년 계획기간에 7년제 중등의무교육으로부터 9년제 기술의무교육으로 넘어가는 것을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의 모든 지역에서 1967년 4월 1일부터 전반적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한다. (1)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2)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은 4년제 인민학교과정과 5년제 중학교과정을 거쳐 실시한다.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은 일반교육을 위주로 하면서 그에 기초기술교육을 배합하며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서 자라나는 세대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세형의 사람으로 준비시킨다. (3)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의 대상은 만 일곱살부터 만 열여섯 살까지의 모든 학령아동들이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인민교육체계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동 법령은 교육제도 일부의 개편에 관한 사항을 함께 담고 있다.<sup>23)</sup> 여기서 우리는 “9년제 기술의무교육”이 이른바 ‘사회주의 교육원리의 결정판’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동 법령에 제사된 “9년제 기술의무교육”은 자평(自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

23)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지금 있는 3년제 중학교와 2년제 기술학교를 통합하여 5년제 중학교를 새로 내운다. (2)5년제 중학교 졸업생들을 받아들이는 2년제 고등학교를 새로 내오며 지금 있는 고등기술학교의 수업년한은 3~4년으로 한다. 고등학교는 중학교 졸업생들을 받아들이 중등 일반교육을 완성하며 기초기술교육을 주는 둘째 단계의 중등교육학교이다. 고등기술학교는 중학교 졸업생들을 받아들이 기수, 중등전문가를 길러내는 중등기술교육학교이다.(이하 생략)”



교육리론을 우리 나라(북한 - 연구자 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 교육정책의 빛나는 열매”인 셈이다. “기술의무교육제도”의 도입은 북한의 교육제도가 사회주의 교육원리에 의거해 비교적 안정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은 이후 의무교육 정책이 “기술의무교육”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그 연한의 연장(9년→10년, 10년→11년)만을 꾀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북한에서 10년제 초·중등 의무교육 및 1년의 취학전 의무교육제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한 법적 근거는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하여」이다. '7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제 5기 2차회의)가 제정·공포한 동 법령은 노동당 제 5차 대회에서 제기된 후, 당중앙위원회 제 5기 제 4차 전원회의에서 내놓은 방침<sup>24)</sup>을 최고인민회가 법령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으로, 동 법령에는 제도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sup>25)</sup> 및 관련 학제의 변경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의 모든 지역에서 1972~1973학년도부터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한다.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반구의 모든 지역에서 1972~1973학년도부터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로써 북한은 '73년부터 사실상의 11년제 의무교육의 도입을 시작한 셈이다. 「전반

24) 노동당중앙위원회 제 5기 4차회의의 주요 결정 내용은, ①유치원 1년간(만 5세)의 학교전 의무교육 실시, ②5년제 중학교와 2년제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6년제 고등중학으로 개편, ③6년제 고등반으로 편성, ④3~4년제 고등기술학교를 3년제 고등기술전문학교로 개편, ⑤대학 인문계 4년제, 이공계 5~6년제, 교원대학 2년제, ⑥인민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로 1년 인하 등이다. 김동규, 1990 참조.

25) 의무교육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요한 내용이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보기로 한다. “1)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을 1972~1973학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하여 1976~1977학년도까지 공화국 북반부의 모든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은 도시, 로동자구로부터 농촌으로, 농촌에서는 변방지대로부터 산간지대로 점차 확대하여나가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2)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의 학제는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으로 하는 4-6제로 한다. 3)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을 받는 대상은 만 6살부터 만 16살까지의 모든 청소년들이다.” 다음으로 취학전 교육을 의무교육화 한다는 방침은 다음과 같이 천명되어 있다. “1)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을 1972~1973학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하여 1975~1976학년도까지 공화국 북반부의 모든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2)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은 학령전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집단주의정신을 키워주며 인민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교육을 주어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받침한다. 3)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을 받는 대상은 만 5살의 모든 어린이들이다.”

적 11년제 의무교육에 관한 법령집행 총화에 대하여」(1975. 4. 10. 최고인민회의 결정)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이 남겨있다. 동 결정서는 “이리하여 올해(1975년 - 연구자 주) 9월 1일부터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으로 완전히 넘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6개년계획기간안에 실시할 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은 1년 앞당겨 빛나게 실행되었다.”고 자평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첫째, 최고인민회의 제 5기 제 2차회의에서 채택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에 관한 법령에 예견된 기한을 한해 앞당겨 1975년 9월 1일부터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으로 완전히 넘어갈 것이다. 둘째,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 것이다.(이하 생략)”

위의 결정서에는 “교양교육의 모든 과정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관철할 것”, “새로운 의무교육의 요구에 맞게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등 자연기초과학 학과목을 비롯한 모든 과목교육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 것”,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이 의무교육기간에 한가지 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하고 한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게 것”, “가까운 시일내에 모든 교원들의 정치실무적 자질을 한단계 더 올리도록 할 것”, “학교의 물질적 토대를 개선강화하며 교양교육조건을 더욱 훌륭히 마련하기 위해 전국가적, 전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것” 등이 아울러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은 11년제 의무교육체제의 성립을 보게 되었으며, 이러한 제도의 골격이 현재에 이어지고 있다.

### 3. 의무교육 법제의 현황과 통일방안

#### 3.1 의무교육 법제의 현황과 특성

##### 3.1.1 의무교육 관련 법규에 나타난 이념적 특성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남한은 헌법 제 31조,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중학교의

무교육실시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하여 “불완전한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에 관한 법령집행 총화에 대하여」(1975. 4. 10. 최고인민회의 결정) 등에 의거하여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계속되는 의무교육제도의 특성 및 통일<sup>26)</sup>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예비적 고찰로서 남북한의 의무교육 관련 법규상에 나타난 이념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 나라에서 의무교육제도 관련 법규의 연원은 개화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주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고종이 국민에게 교육권을 균점시키도록 한 윤음(綸音)을 시발로 교육입국조서(教育立國詔書)에 국민평등권에 입각한 교육기회의 개방을 명시하였으며, 흥법 14조에도 교육기회의 개방에 관해 명시하였는데, 이것이 곧 소학교령에서 8년간 공비(公費)에 의한 무상의무교육을 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임시정부의 헌장에도 이어졌다는 것이다.”(안규, 1984: 193~194)

이러한 분석은 우리 나라의 의무교육사상의 발달과정이 세계사적 보편성을 갖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sup>27)</sup> 그러나 일제의 침략에 의한 의무교육사상의 발전 및 그 구현은 왜곡되었다. 다시 말해, 일제가 국민에게 교육의 의무를 강조하였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교육권 및 의무교육사상의 정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였던 것이다. 사실 일제의 조선 통치는 여러 면에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가져왔는데, 의무교육을 포함한 교육권 전반에 대한 인식 역시 예외일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교육권을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서 인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의무교육을 실현을 천명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무교육 관련 법규는 8.15 이후 남북한에 대립되는 정치이

26)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제도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통합’과 ‘통일’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통합’을 “남한과 북한의 상호 이질적인 교육제도가 기능상, 구조상으로 전혀 연계됨이 없이 분리되어 조직·운영되는 것을 떠나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연계되거나 또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표준화된 특성을 지닌 교육체제를 지향하여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형성되어가는 일련의 동태적인 과정”(한국교육개발원, 1994c: 14)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의무교육법제는 제도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일종의 선결요건, 즉 교육제도 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통일’을 기해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통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7) 안규는 의무교육에 대한 개념 규정의 사적 전개과정을 통해 볼 때, 개화기의 의무교육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의무이며 또한 자녀에 대한 의무로 규정하고 모든 부모로 하여금 그 자녀에게 반드시 교육시키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비의 무상교육에 입각한 의무교육이론이 제기되었다고 보고 있다. 안규, 1994: 196 참조.

념을 가진 미군정과 소군정이 들어서기 전까지 의무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진일보한 의무교육사상의 법적 구현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남북한은 공히 의무교육법제 내지 정책의 법통을 임시정부의 그것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군정이 들어서고 남북이 서로 다른 정치이념과 교육이념에 오리엔테이션 되어가면서 남과 북의 의무교육에 대한 관점은 상당히 이질화 되어간다. 남한에서는 자본주의체제 지향적 교육이념과 제도가 성립을 보게되고, 당연히 의무교육이념도 같은 방향에서 체계화된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남한은 교육제도 운영의 기본원리를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 즉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구하였다. 원칙적으로 의무교육 단계의 교육에서도 이 점은 예외일 수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교육 접근 기회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교육기회 균등의 원리를 도입하여 보완하게 되는데, 이의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가 다름 아닌 의무교육제도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가능성 중에 경제적 요인에 의해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가 차단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무상성(無償性)의 원리가 의무교육 실현에서 매우 중시되어 왔던 것이다. 헌법 제 31조 제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와 같은 생각과 경험의 소산으로 해석된다.

반면, 계획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북한의 경우에는 사회운영의 기본원리가 남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사회주의체제는 시장의 기능이 아니라 국가의 제반 정책기능을 통한 분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교육권의 보장 역시 국가의 책무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와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차이만큼이나 명확한 것이다.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남한에서는 학습자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국가 및 학부모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정책의 기초가 본질적으로 수요와 공급 또는 교육권의 실현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반면 북한의 경우, 교육권의 실현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국가적 작용의 대소 내지 효과성 여부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 친권자 및 후견인의 ‘의무’는 부차적인 의미<sup>28)</sup> 밖에 갖지 못한다.

28) 이와는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정부)의 의무와 학부모의 의무가 그 실현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자는 학교를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제로 귀착되는데, 이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 의무교육은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상대적인 의미에서 사회주의체제 지향적 국가에서의 의무교육제도는 사회운영의 원리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점은 자국의 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의무교육 수준을 어느 시기에 어느 연령까지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자본주의체제 지향적 국가에서는 의무교육을 둘러싼 논란은 교육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에서부터 당면한 경제적 여건하에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교육투자 우선 정책이냐 그렇지 않느냐 등) 등 많은 논의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경제적 여건에 따른 의무교육 연한 설정에 관한 논란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앞서 살펴 본 남북한의 의무교육 관련 법규의 체계화 및 변천과정은 의무교육에 대한 관점 내지 그 성격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남한의 경우, 제헌국회에서 교육법을 제정할 당시 “교육권”에 대한 논란은 매우 첨예한 것이었다.(정태수, 1996). 이에 반해 북한의 경우 우리가 흔히 그들의 의사결정체계가 ‘일사분란’해서이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 본 대로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의 의무교육제도 수립 및 시행과 사회주의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의 그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앞으로 남북한 의무교육 통합의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소지가 높아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알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의 교육현실을 어떠한가? 작금의 북한 교육현실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고내용은 ‘교육권을 보장해야 하려는 의지’(의무교육의 이념)와 먹는 문제’(경제적 현실) 사이에 나타나는 모순, 달리 말해 의무교육의 원리(내지 정신)과 그 실현에 필

---

때문에 같은 자본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경제적 여건, 즉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에 따라 그 연한 또는 무상성의 범위 등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반면, 후자의 문제는 근대 산업화 초기 학교교육에 대한 민중의 기피 내지 저항이라는 역사적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최소한 학령아동의 자녀가 자신의 생계를 떠맡지 않아도 될 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아동노동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가계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력 발달을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이것은 사실상 부차적인 문제로 되었다.

요한 물질적 조건 사이의 괴리가 극심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학생이나 부모들은 학교교육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상황에서 학교에 가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에 가보아야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굶주린 배를 더욱 허기지게 할 뿐이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장사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팽배하고 있다. 학생들은 부모와 함께 빵을 구어서 장마당에 내다 파는 장사를 하고 있다”(한만길, 1997: 18)

의무교육제도에 있어 “무상성”의 원칙은 사실 ‘먹는 문제’ 때문에 교육기회에 있어 차별받아서 안된다는 경험과 인식의 산물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의무교육의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의무성”(강제성)은 얼마든지 파기될 수 있다. 근대 공교육체제 성립 이후 우리는 여러 번 이런 경험을 해 왔던 것이다.

의무교육 관련 법규의 변천과정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은 11년제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90년에 이미 모든 주민들이 중등단계의 학력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80년대부터 성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94년에는 170만의 자식인 대군을 양성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11년제 의무교육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대로 ‘무상’의무교육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공식문헌에서는 국가가 수업료와 교과서, 학용품은 물론이고 기숙사 비용, 의복 등에 이르는 많은 교육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국가가 장학금도 제공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80년대 후반 들어서 경제적인 침체 현상이 계속되면서 무상의무교육을 실질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업료는 물론 없지만, 교과서와 학용품, 기숙사 비용, 의복 등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더욱이 학용품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필요한 만큼 제 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침체와 식량 부족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농촌지역의 실정은 더욱 열악한 형편이라고 한다. (한만길, 1997: 26~27) 반면 남한의 경우 ‘시장경제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운영의 원리를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무교육은 교육권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보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보완하는 일종의 사회복지정책적 접근으

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유보조항을 두어서라도 교육권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 3.1.2 의무교육제도의 특성 비교

남한의 현행 학제를 비교해 보면, 우선 취학전 교육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3~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전액 학부모의 부담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교육개혁위원회(1997. 6. 2.: 32~35)는 유치원의 공교육화 정책을 개혁의제로 제시하는 한편, 최소한 만 5세 아동에게는 무상교육(free education)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으나, '97년 현재 취학전 교육은 전적으로 사부담교육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북한의 경우는 낮은 1년과 높은 1년 모두 2년간의 유치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높은 1년은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수업연한의 경우, 남한의 초등학교는 6년<sup>29)</sup>인데 반해 북한의 인민학교는 4년이다. 초등학교를 무상의무교육(free compulsory education) 단계로 설정하고 있는 점은 양측이 동일한데, 수업연한에서는 무려 2년의 차이가 난다. 한편, 중등학교의 경우 우리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과정이 따로 분리되어 총 6년의 수업연한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경우는 중등교육과정이 고등중학교로 통합되어 있으면서 중등반 4년, 고등반 2년으로 되어 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남한의 의무교육 연한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총 9년간이다. 반면, 북한의 의무교육연한은 유치원 높은반 1년, 초등 4년, 중등 6년 총 11년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남한에서 9년간의 의무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때는 '85년이고, 북한에서 11년간의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한 것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75년부터이다.

남한의 경우 의무교육연한이 총 9년이라 하지만, 중등 3년의 의무교육실시에 관한 사

29) 남한의 학제는 8.15 이후 미군정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골격에서 한 번도 변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즉, 6-3-3-4의 기간학제에다 고등교육의 일부와 중등교육의 일부에 대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개편과 환원이 반복되었을 뿐이다. 물론 교육법 제정 당시의 학제는 오늘날과 같은 6-3-3-4제가 아니라 국민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내지 4년, 대학 4년 내지 6년으로 하는 6-4-(2~4)-4(6)제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제도가 시행될 겨를도 없이 당시 교육부가 제 1차 개정안(1950. 1. 13), 제 2차 개정안(1950. 11. 20) 연이어 제출하여 국회의 통과를 보게 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6-3-3-4의 단선형적 성격의 기간학제를 갖게 되었다.

항은 따로 정하여 지역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 수혜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무교육내용에 있어서 남한은 보통교육(common education)에 국한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기술의무교육제의 도입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기술교육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 생산노동을 결합하는 사회주의 교육의 모델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교육개발원, 1997c: 35) 아래의 표는 남북한 의무교육 관련제도를 비교한 것이다.

<표 3 - 1> 남북한 의무교육 관련 제도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학 제	6-3-3-4제의 단선형*	4-6-4(6)제의 복선형**
의무교육	불완전한 9년제	11년(취학전 1년 포함)
취학전교육	만 5세아의 공교육화 추진	유치원 높은반(만 5세아)의 무상의무교육
의무교육단계의 교육내용	보통교육	보통교육 + 직업기술교육

\* 골격은 단선형이나 일반계와 실업계의 실질적인 복선형제로 운영되고 있음

\*\*하력인정 교육체계가 일반교육체계, 성인교육체계, 특수교육체계로 나뉨.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이 곧 바로 ‘의무교육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정도 내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규에 의거한 제도는 어떤 면에서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북한의 ‘폐쇄해지고 있는 교육여건’에 관한 보고를 보면, 북한의 자랑거리였던 11년간의 무상의무교육제도의 파괴상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 . . . 현재 학교교육에 필요한 물자는 거의 학교 자체 조달하는 형편이다.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조달해주는 물자는 거의 없다. 실험실습 도구, 책걸상, 종이, 필기구 등 모든 불품이 부족하고 부족한 물품을 학교는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다. . . . 학습장, 인필, 만년필 등과 같은 학용품은 국가서 배급하고 있지만 질적으로 워낙 나쁘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학습장은 거무스름한 종이로서 한 학기에 한 두권을 구해서 모든 과목의 필기를 한 두권에 한다.”(한만길, 1997: 19)

최근 통일에 대비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해지면서 북한의 의무교육 여건의 개선 문제가 통일후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요컨대, 북한의 경우에는 경제적 파퇴로 인해 교육여건이 극도로 악화됨으로써 의무교육제도의 부실화가 가속화되는 반면, 남한의 경우에는 “무상성”의 실현의 과제가 여전히 현안으로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 3.2 의무교육법제 통일방안 논의

### 3.2.1 통일안 논의를 위한 전제

의무교육법제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의 통합방안 내지 정치적 통합방식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제의 설정이나 교육통합 방식의 설정 문제는 총체적인 의미의 통일방안 내지 정치적 통합방식에 따라 달라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통일방안 각각에 대한 검토나 통일시나리오<sup>30)</sup> 설정은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기존에 제시된 통일방안, 즉 ①무력에 의한 통일, ②흡수에 의한 통일, ③협상에 의한 통일, ④장기공존에 의한 통일 가운데 ①의 통일방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가능성이 어떠한 형태의 교육통합을 가능하게 할 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다음, 우리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의무교육법제 통일 논의를 위한 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문용린은 『통일 후의 교육체제 구상』에서 ①흡수통합방식, ②연방식 통합방식, ③표준 교육체제 통합방식 등<sup>31)</sup>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 세 가지 방안 가운데 ③의 표준

30) 그간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통일방안 내지 시나리오를 내놓은 바 있다. 최근의 것으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구중서 外(1996). 남북한 통일시나리오, 삼성경제연구소.

31) 문용린 교수가 제시한 각각의 교육통합 세 가지 방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흡수통합방식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것으로, 우리의 교육체계에 따라 북한의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다. 둘째, 연방식 통합방식은 장기공존의 통일방안에 따른 것으로, 쌍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나아가 쌍방간의 차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면서 양 체제간의 교류를 통해서 격차를 점차 줄여가도록 하는 방식

교육체제 통합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이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상세히 제안하고 있다. 남과 북의 대표가 이상적인 표준형의 교육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서로 만나 협의를 해나가 도출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용현은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흡수통합방식과 연방식 통합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교육체제 통합방식이 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표준 교육체제 통합방식은 우리의 교육여건과 내용 및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에서 우리만의 노력으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성격의 것으로 삼고자 한다. 그러한 이상적인 교육의 설계와 추진은 분명히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흡수통일과 장기공존에 의한 통일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 통일이 될 것으로 전제하고 우리가 준비해 가야 할 교육의 과제도 흡수통합방식과 연방식 통합방식의 두 방식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하고자 한다.”(박용현, 199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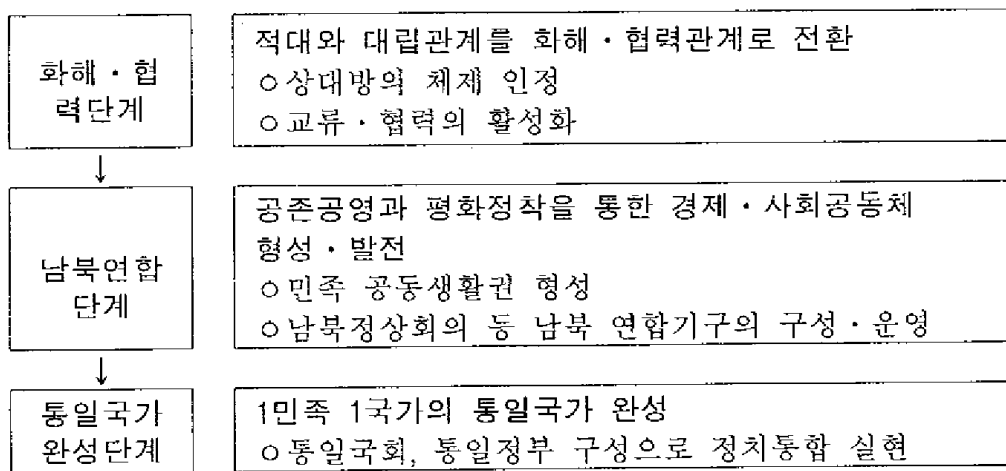
박용현은 지금까지 제시된 네 가지 통일방안 가운데 ①무력에 의한 통일은 교육체제 통합을 논하는 데 있어 사실상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면, ②흡수에 의한 통일, ③협상에 의한 통일, ④장기 공존에 의한 통일 방안만이 교육체제 통합을 논하는 데 있어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통일방안 중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②흡수통일이고, 그 다음이 ④장기공존에 의한 통일이며,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방안이 바로 ③의 협상에 의한 통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하에 그는 다소 일반론적 차원에서의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 당면하는 심각한 교육문제들을 지체없이 개선할 것과, 보다 더 이상적인 교육개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수준까지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의무교육연한의 연장(가능하면 고 3까지), 무상의무교육연한의 연장 등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시급을 요하는 우선 과제라 하겠다. 그리고 기본학제(북한: 4-4-2-4, 남한:

이다. 셋째, 표준 교육체제 통합방식은 협상에 의한 통일방안에 따라 가능해질 수 있는 방식이다. 박용현(1991), 통일후의 교육체제 구상,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용현의 앞의 논문 7면에서 재인용.

6-3-3-4제)의 재검토를 비롯하여 입학연령과 학기의 구분 등도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통합을 논의하기에 앞서 남북한 쌍방의 현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박용현, 앞의 논문, 같은면).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한의 교육체제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육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변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선행되고, 그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는 가운데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 - 1] 우리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

본 연구에서 “남북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다소 긴 제목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통일에 관한 특정 시나리오를 설정한 가운데 교육통합, 나아가 의무교육법제 통일의 구체적인 정책과 내용에 관한 연구도 추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단계에서는 교육체제의 하위 요소들의 이질성과 그것이 배태되게 된 정치·경제·역사적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화해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신뢰를 쌓고 분단으로 훼손된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나가는 바탕위에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의 정치적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논리에 기초해 있다. 이에 따른 통일의 과정은 앞의 그림에서와 같이 3단계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지난 50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속에서 살아오면서 생

거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소해 나가면서 남북한 두 체제가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한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통일원, 1997)이라는 것이다.

앞의 유형분류에 의거하여 볼 때,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은 결국 ④장기 공존에 의한 통일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방안은 현재와 같은 남북한의 이질적 이념과 체제를 서로 인정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가면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가는 장기적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여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 셈이 되었고, 여러 차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발표시킨 “기본합의서”의 제 1조에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명기하여 공식문서를 통해서도 처음으로 쌍방의 체제를 인정하였다.(박용현, 1993: 5 참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는 위에 제시된 3단계 통일방안에 입각하여<sup>32)</sup> 남북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위의 3단계 통일방안을 염두에 두고, 그간 몇몇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의무교육제도 통일안을 검토한 다음 본 연구에서의 고찰내용을 토대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을 마련하는데 기준으로 삼아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 3.2.2 의무교육법제 통일의 기본원칙

#### 3.2.2.1 의무교육법제 통일 관련 논의 검토

시기적으로 조금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정석홍은 남한의 학교교육 개편과 관련하여 보통교육과정을 10년간으로 단축하고 이 기간을 의무교육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그는 “우리도 보통교육과정을 10년 정도로 하고, 점차 무상 의무교육제도로 전환, 우선 중등학교 과정까지는 무상 의무교육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학교의 경우

32)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서도 교육통합의 방향 설정을 위한 “세 가지 기본전제” 가운데 두 가지는 현 정부의 통일방안을 토대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첫째,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여 남북한간 협상을 통해 교육공동체를 건설한다. 둘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단계적, 기능적, 점진적 통합을 도모한다.” 나머지 하나는 “셋째, 잠정적으로 2000년 안에 남북연합이 이루어지고 2010년을 통일시기로 추정한다.”라는 것으로, ‘통일시기까지의 남북한 교육제도의 변화상향도 감안하여 통합방안을 탐색하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전제를 설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1994: 59~60.

이미 농어촌을 중심으로 선행 실시되고 있으나, 금세기 안에는 전 과정이 전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정석홍, 1990: 56) 정석홍의 의무교육 개편안은 ‘민족동질성 고양을 위한 교육전략’을 교육제도적 측면에서 논하는 가운데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다른 문제의식에서 나온 안이다. 그러나 그가 남한의 10간의 의무교육제도로 개편할 것을 주장하면서 내놓은 근거<sup>33)</sup>는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김태완(1993: 17~18)은 “남한의 학제 개편방향을 유-5-3-4-4제와 9년의 완전 무상 의무교육의 실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조기교육을 강화하여 유치원과정 1년을 의무교육화한다. 둘째, 초등학교 과정을 1년 줄이고 고등학교 과정을 1년 늘린다. 셋째, 중학교 무상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김태완의 문제의식 역시 ‘남북한 학제통합을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제도 연한이 어떤 근거에서 9년으로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의 학제개편 방안은 남한의 학제를 기준으로 볼 때, 취학전 1년의 교육을 무상“의무화”하자는 주장과 초등학교를 1년 단축하고 중등후기(고등학교 단계) 수업연한을 1년 늘리자는 데서 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남한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수업연한의 증감없이 조정이 가능하다.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중등후기(고등중학교 고등반 2년) 단계를 2년 늘려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된다. 즉, 취학전 1년의 교육(유치원 높은반 1년)은 현행대로 하되, 초등단계 1년이 늘어나게 되고 중등전기(고등중학교 중등반 4년) 수업연한이 1년 줄어들어 여기까지는 수업연한에 있어 현행 제도 그대로 조정이 가능하다. 결국 중등후기(고등중학교 고등반 2년) 단계의 수업연한을 2년 연장하는 문제가 북한의 학제 개편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와 관련지워 주목할 점은 “북한은 11년의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남한은 9년의 의무교육을 현재 읍 단위까지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 7차

33) 우선 선진국가의 선례를 볼 때 대체로 조기교육체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미 북한이 유치원 높은반 1년을 포함하여 11년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남한이 9년의 불완전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에 비추어 의무교육 연한이 적어도 10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현실론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그는 “북한은 불완전하지만 11년제의 의무교육을 실시, 보통교육과정을 모두 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대단히 크다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국방비 다음의 큰 재정부담(예산의 20% 수준)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민학교 과정 6년만 의무교육화 하고 있다. . . . 현실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어렵다면 점진적 계획에 따라 중학교까지는 90년대 중반까지 시행할 수 있다. 현재 공무원, 국영기업체, 언론기관, 대기업체의 학비 보조제도를 감안해 보면, 기타 비수혜자부터 교육비를 부담하는 형태로 줄여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석홍, 1990 참조.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96년까지 읍단위까지 완전 무상 의무교육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다”(김태완, 1993: 15)는 남북한의 의무교육 실시 현황에 대한 언급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그는 남한의 비용 부담으로 9년제 무상 의무교육의 전면 실시 조차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 교육제도 통합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우선 과제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제가 김태완이 제시한 안대로 개편되는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개편되는 간에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에서 의무교육연한의 확대(중학교 의무교육 완전실시를 포함하여)가 남한 측에 제기되는 중차대한 과제라는 사실이다.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연구보고서는 남북한 교육제도 전반의 통합방안을 망라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통합방안은 역시 초·중등학교 개편에 관한 것이다. 특히, 동 보고서는 의무교육제도 통합방안에 관해 별도의 장을 설정·제시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방안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그 특징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우선 동 보고서에 제시된 초·중등학교 개편·통합방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이 기본학제는 유치원-5-3-3-4제를 표준형으로 하여 개편하되, 초·중등 총 12년의 범위 안에서 다양하게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1) 5년제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제공하며, 3년제 전기 중등학교는 전기중등보통교육을 제공하고, 4년제 후기중등학교는 후기중등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며 . . . 2) 교육자치의 정신에 따라 초·중등 총 12년의 범위 안에서 표준형 이외에 교육단계별로 수업연한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예컨대 6-3-3제나 5-5-2제 등도 허용한다. 다만, 이 때는 표준형과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3)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 병설형, 중등통합형 등도 둘 수 있도록 한다. ○ 중등교육제도는 적성에 따른 진로확립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1) 전기 중등단계는 진로 탐색기로 운영하고, 2) 후기 중등 전반기 2년은 진로 탐색 심화기로, 후반기 2년은 진로 준비기로 설정·운영하며, 3) 후기 중등교육기관은 종합형(comprehensive type)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일반계, 실업계화 예·체능계 등 특수목적형도 허용한다.”(한국교육개발원, 1994: 64)

위와 같은 학제개편을 전제로 의무교육은 “보편적인 국민기초교육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년을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의무교육 연한은 10년간(6~16세)으로 후기 중등교육단계 중반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통일후 초반기에는 8년간 초급중학 단계까지만 실시하여 내실을 다진 후 연장하도록 한다. 1) 10년 의무교육은 농·어촌, 벽지지역 직업계 학교부터 시작하며, 2) 점차 종합계, 예·체능계, 일반계 과정·학교로 확대한다.”(한국교육개발원, 1994: 73)

여기서 10년간의 의무교육제도란 초등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2년(4년 가운데)을 포함하는 것이다. 취학전 1년간(만 4세~5세)을 공교육화 하면서도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무상성”을 강구하되, “의무성”(“교육의 강제성”)에 관한 조치는 다른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학제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분단 사회의 학제는 유사점도 있지만, 상이점이 훨씬 많아 제도를 개편·통합하지 않고서는 통일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인간도 길러낼 수 없으며 민족동질성을 회복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고 하면서, 상이점에 대해 “각 단계별 수업연한도 다르고, 학교명칭도 다르며, 전문직업교육의 분화시기도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의무교육제도의 통합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역시 남북한이 학교 단계별 수업연한이 다르고, 기술직업교육의 분화시기가 다르다는 현실일 것이다.

강무섭은 ‘교육통합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첫째, 남한 교육체제에서는 의무교육, 직업기술교육, 사회교육 그리고 유아교육 등이 개혁되어야 한다. 우선 중등보통교육까지 의무교육 연한을 연장해야 하고, 현장 실기중심의 직업기술교육을 내실화 하며, 다양한 성인 및 사회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유아교육(조기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북한 교육체제에서는 교육의 민주화와 교육기회균등 등 기본적인 교육철학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학과 고등 교육기관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한다”(강무섭, 1995: 43)

위의 글만 보면, 우리의 교육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중등보통교육까지” 의무교육 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방안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논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보면, 북한의 현행 11년제 의무교육 연한을 엄두에 두고 우리의 의무교육 연한이 짧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우리의 경우 중학교 3년간의 의무교육이 교육법 제 8조의 2 등에 의해 불완전한 형태를 갖고 있음에 비추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임천순(1993: 89~90)은 남한의 교육통합에 대비한 교육투자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남한의 교육제도는 취학 전 교육을 강화하여 공교육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남한의 무상의무교육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남한의 의무교육은 현재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중학교의 무상교육은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부분적으로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의무교육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1단계에서는 중학교까지를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인 기반을 조성·추진하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 단계까지로도 연장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방안에 따르면, 결국 통일 전단계에 교육통합을 위한 남한의 정책과제는 유치원의 공교육화 및 9년제 무상의무교육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재정적 기반 조성으로 집약된다. 또한 이 안에서는 통일 이후 본격적인 교육통합 작업에서 무상의무교육 연한이 최소 10년 최대 12~13년(1년의 취학전 교육을 포함하여)으로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육개혁위원회는 그간 수많은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학제개혁안이나 의무교육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개혁의 기본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그것이 바로 “신 교육과정 편제 도입”인데, 이는 남북한의 의무교육제도 통합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신교육과정 편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체제 설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신교육과정 편제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의 골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식·정보의 양이 급증하는 지식·정보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학교급별 개념이 아닌 학년제 개념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 체제를 갖춘다.”(고덕의 강조는 원저자, 교육개혁위원회, 1996. 2. 9: 38~39)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이다.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이란 학년제 개념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과정, 즉 단일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보통교육체제에다 고등학교 제 1학년까지를 포함한 기간이다. 이로 미루어 개혁안에서는 이 10년의 기간을 보통교육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 구성(안)을 논하는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데, 이같은 교육과정 개편안이 갖고 있는 취지는 남한의 현행 초등학교 1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시 말해 10년간에는 보통교육(common education)을 실시하고, 이후 학년(현행 고등학교 2~3학년)에는 학생 개인의 능력·흥미·적성 및 장래 진로를 반영하는 선택과목 위주의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결과할 학제상의 커다란 변화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종전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정의 구분(현행의 인문과정, 자연과정, 예·체능과정, 직업과정)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점이다.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과정개편안을 전제로 할 때, 남북통일 후 ‘중·장기적으로 의무교육 연한을 목표를 10년간으로 잡고 단기적으로는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과도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아울러 유치원교육의 공교육화 방안은, 실질적인 11년제의 무상의무교육의 목표 설정도 가능케 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표 3- 2> 초·중등학교 신 교육과정 편제표<sup>34)</sup>

구분\학년	K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도덕	바른 생활										선택과목		
	국어	8	8	7	7	6	6	5	5	5	5			
	수학	슬기로운 생활												
	사회	즐거운 생활												
	과학	표현생활												
	체육	언어생활												
	음악	탐구생활												
	미술							기술·가정						
실과														
영어														
특별활동	\	1	1	1	2	2	2	2	2	2	2	33	3	
재량시간	\	3			4			6			\			
연간 수업시수	810 (27)	880 (27)	918 (27)	1,020 (30)	1,054 (31)	1,122 (33)	1,122 (33)	1,156 (34)	1,156 (34)	1,156 (34)	1,224 (36)	(144단위)		

※ 괄호안의 숫자는 주당 평균 수업시수를 의미한다(고등학교 2·3학년의 경우, 1단위는 1학기 동안 주 50분씩 수업하는 분량을 의미한다).

※ 빈칸의 교과별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교육부에서 조정한다. 각 학년별 주당 교과, 특별활동, 재량시간의 합계는 해당 학년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보다 2~3시간 부족하도록 조정하여 그 시간을 단위학교가 특정 교과지도에 할당하여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초등학교 1학년 880시간 중 70시간은 입학초기 학교적응활동(3월)으로 활용한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우리는 의무교육제도 통합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논거를 발견할 수 있다. “보통교육단계의 무상 의무교육화”(정석홍), “의무교육 연한의 확대”(김태완, 강부섭),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교육개혁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전문 직업교육의 분화시기 조정”(한국교육개발원), “제정적 기반 조성·의무교육 추진”(임천순), “의무교육비용의 무상화”(정석홍, 김태완, 임천순), “학교급별 개념에서 학년제 개념으로의 전환”(교육개혁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거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장의 내용이 중복 내지 혼재되어 있기도 하나, 의무

34) 자료의 출처는 교육개혁위원회, 앞의 자료(1996. 2. 9), 53면.

교육법제 통일안 마련을 위한 원칙을 세우는데 중요한 사항들이라 할 수 있다.

### 3.2.2.2 의무교육법제 통일의 7대 원칙

지금까지의 고찰을 종합해 보면, 의무교육제도 통일안 마련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된다. 그런데 이는 곧 바로 ‘남북한 의무교육제도 통일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통일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각각의 원칙에 대해 보다 상세히 논구하기로 한다.

1. 국민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보통교육단계는 원칙적으로 의무교육으로 한다.
2. 의무교육은 무상(無償)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5세아를 대상으로 한 취학전 교육은 공교육화를 원칙으로 하되, 그 핵심은 ‘의무성’(義務性)이 아니라 ‘무상성’(無償性)에 있다.
4. 의무교육제도 통합에 있어 학교급별 접근이 아니라 학년제 개념으로 접근을 원칙으로 한다.
5. 의무교육 연한은 이상의 사항을 고려하여 1의 원칙에 따르되, 통일국가의 재정 부담 능력과 국제적인 추세도 아울러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의무교육제 통합안 설정은 기능적·기술적(技術的)이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문제가 함축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통일국가 완성단계 이전까지 쌍방은 제도통합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에서 제반 개편(혁)작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통교육 단계의 의무화 원칙 우선 ‘보통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다’는 원칙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보통교육에 대립되는 개념은 직업기술교육(또는 전문교육, 전문직업교육)이다. 그런데 현재 남북한은 학제 운영에 있어 모두 두 개념을 대립적인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절충 내지 혼용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는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를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하는 것”(「교육법」 제 104조)으로 정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반계는 보통교육을 하고 실업계는 전문교육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업계 역시 “보통교육의 기초

위에 전문교육을 할 수도 있다”(안기성·김용일 외, 1994)고 해석되는데, 두 개념을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일반계와 실업계라는 ‘사실상의 복선형 제도’<sup>35)</sup> 운영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조항(교육법 제 155조 및 제 156조)은 이 점을 보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는 교과목의 85%, 실업계 고등학교는 교과목의 70%까지 보통교육과목으로 편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교육이라 함은 직업기술교육(교육법에서는 전문교육)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국민공통교육”(김용일, 1992)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때, 남한의 현행 실업계 고등학교 역시 보통교육 단계로서 의무교육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에서 새로운 학제의 고등학교 2학년 부터는 실질적인 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단계는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 즉, 보통교육 단계가 아닌 직업기술교육 단계의 교육은 일단 의무교육에서 배제됨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북한에서도 두 개념은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결합한다는 사회주의 교육원리’라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영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도입하면서 “맑스-레닌주의 교육리론을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빛나는 열매”라고 하는 데서 그들의 교육관이 잘 드러난다. 이에 따라 중등단계의 직업기술교육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며, 이 교육 단계를 의무교육으로 설정하는 것도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의무교육 통일안 마련에 있어서는 ‘보통교육 단계를 의무화한다’는 원칙이 고수되어야 할 것이다.

의무교육의 무상성의 원칙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남한의 헌법 제 31조 3항의 원칙 그대로이다. 이에 관해서는 북한 측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문제여서 논란의 소지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무상교육이 반드시 의무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관해서는 취학전 교육문제를 다루는 데서 재차 언급 되어 있다.

35) 이종재는 “우리 나라의 고등학교는 형태상으로는 단선형 학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복선형 고등학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종재, 1997: 19.

취학전 교육의 무상성의 원칙 이는 취학전 교육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무상화”하되, 반드시 의무교육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가 담긴 것이다. 취학전 교육에 대한 국제적 정책 대응의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방안이 합리적이다. 즉, <표 3 -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만 5세아의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이스라엘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북한의 정치교육 지향적인 속성에 비추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무교육화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즉 취학전 교육과정에서의 과도한 정치교육의 배제라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취학전 교육은 “의무성”이 아니라 “무상성”에 기초하여 통합되어야 한다.

<표 3 - 3 > OECE 가입 국가와 우리 나라의 취원율(1996 현재)

연령	OECD 평균	한국
3세	40.2	8.7
4세	64.3	26.8
5세	70.4	42.2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Paris, France, 1996

교육개혁위원회, 1997. 6. 2b: 114에서 재인용

남한의 경우, 교육개혁위원회(1997. 6. 2: 34)는 “취학 직전<sup>36)</sup> 유아교육에 대한 1년의 무상 유아교육<sup>37)</sup>의 원칙”을 천명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를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 또한 “의무성”이 아니라 “무상성”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무상성과 의무성을 추구하고 . . .”(1997. 6. 2: 113) 등의 설명을 부기하여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

36) 만 5세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입학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만 5세아”로 표현하지 않고, “취학 직전 유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37) 여기서 “무상 의무교육”이 아니라 “무상 유아교육”이라 함은 취학전 교육의 세제적인 추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취학전 교육을 의무교육(compulsory education)으로 할 것인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 <표 3 - 3>는 '96년 현재 OECD 가입국과 우리나라의 취원율을 비교한 표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만 5세아 기준으로 70.4%의 취원율을 보이고있는 것은 선진국들 역시 취학전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무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것이 곧 바로 의무교육 단계로의 편입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학년제 개념으로의 접근 원칙 이 원칙은 앞서 살펴 본 '직업기술교육'을 의무교육제도 실시 여부의 기준점으로 삼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시된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가 이미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 체제'로의 개혁을 단행하면서 학년제 개념을 도입한 바 있다. 학년제 개념은 학제 운영의 유연성을 제공시킬 뿐만 아니라 상이한 제도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없는 좋은 방법이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학교급별 수업연한이 상이한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구학제와 신학제의 학생들을 각각 학년 개념으로 환산·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배치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 다른 방도가 없다. 미군정기 6-3-3-4제가 시행되면서 일제(日帝)의 학제에 따라 각급 학교에 재학중이던 학생의 수업연한을 환산하여 새로운 학제에 배치한 경험이 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도 '47년 9월 1일자로 신학제를 도입하면서 마찬가지로의 경험을 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이렇게 할 때,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기간은 "순수한 10년제 보통교육단계"로 볼 수 있다. 즉, 현행 학제를 기준으로 남한의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리고 북한의 경우는 인민학교 1학년에서 고등중학교 6학년까지에 해당한다. 보통교육단계인 9~10학년에서는 '직업기초교육'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이 학년 단계는 엄연히 보통교육 단계이다. 그러나 11학년부터는 선택에 따라 전문화된 직업기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어 이 단계는 더 이상 보통교육단계가 아니다. 즉, 직업기술교육과 관련하여 9~10학년은 일종의 진로탐색기로 그리고 11~12학년은 본격적인 진로준비기로의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재정 부담 능력 및 국제적 경향 존중의 원칙 의무교육 연한을 설정함에 있어 이상의 원칙이 지켜질 경우,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의무교육 연한은 10년이 될 것이다. 즉, "보통교육 단계를 무상의무화한다"는 원칙이 제도적으로 구현된 셈이다. 이러한 기간은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10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도 일치하며, 다음의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교육 연한의 국제적인 추세와도 부합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표 3 - 4 > 주요국의 의무교육 관련 현황(1995년 현재)

국 가	의무교육		학제 (국민교육제도)	취학전교육 입학연령
	연령(세)	기간(년)		
중 국	7~16	9	5-3-2	3
인 도	6~14	8	5-3-4	3
이스라엘	5~16	11	8-4	2
일 본	6~16(4)	9	6-3-3	3
남 한	6~14(5)	9	6-3-3	3
북 한	5~15	11	4-6	4(3)
말레시아	6~16	11	6-3-4	5
스리랑카	5~15	11	K-4-6-2	4
독 일*	6~18	12	4-6-3	3
네덜란드	5~16	11	6-3-3	4
러시아	7~17	9(10)	3-5-2	3
스페인	6~15	9	5-3-4	2
영 국	5~16	11	K-5-3-4	3
캐나다	6~16	10	6-3-3	4
미 국	6~16	10(11)	6-3-3(8-4)	3
페 루	6~16	11	6-2-3	3
콩 고	6~16	10	6-4-3	3
가 봉	6~16	10	6-4-3	3
남아프리카	6~16	10	7-3-2	5

\* 구동독의 의무교육 연한은 6~16세를 대상으로 10년이었음. 반면, 구서독은 통독후의 학제와 같음

자료: UNESCO's Statistics on Education 1995.

그러나 문제는 “통일국가의 재정 부담능력”이다. 10년의 의무교육 실시의 원칙과 그에 필요한 재정 부담 능력은 남한의 시장경제 중심의 사회운영 원리상 일종의 길항적(拮抗的) 관계에 있다. 과도한 재정 부담은 정부로 하여금 의무교육 연한을 단축하거나 지연시킬 수 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통일국가의 정부 정책에서 10년 이하로 의무교육을 단축하는 방식의 통일방안은 북한지역 주민들이 쉽게 수용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의무교육제도 통일을 달성하는데 다음에서 보게 될 여섯 번째 원칙이 지켜져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성격 존중의 원칙 북한의 11년의 무상의무교육 연한(유치원

높은반 1년 포함)을 낮추는 방안은 북한 주민들의 경험 및 의무교육에 대한 인식체계에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앞의 통합안대로라면, 남한 측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된다.<sup>38)</sup> 우선 취학전 교육의 공교육화(무상화)를 위한 제원과 중학교의 완전한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할 경제적 부담만을 고려해 볼 때도 가히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는 추가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도 남한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제 10학년) 단계의 의무교육 제정이 추가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상의무교육의 연한을 낮추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 외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따르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즉, 독자적으로 존재해 왔던 하나의 체제가 결과적으로 특정 체제에 흡수 통합되었다는 상실감 및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경제적·정치적 실패상에 대한 패배감 등을 유발하여 이를 치유하는 데 오히려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sup>39)</sup>

이러한 측면 말고도 북한의 경제적 피해상과 그에 따른 교육여건의 악화 등 역시 통일 이후 엄청난 의무교육 제정의 소요를 발생시킬 것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현실이 의무교육 연한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방안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북한 주민이 새로운 체제<sup>40)</sup>에 적응·자활능력을 갖추기 전에 의무교육 연한의 '전격적인 단축'(경험적으로 북한 주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공산이 크다)은 관념상의 상실감만이 아니라 자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되어 이 또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무교육연한은 10년으로 통일하되, 취학전 1년간의 무상교육의 원칙으로 하고 통일국가 완성단계에 가서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을 별도로 취급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칙을 고수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될 때만

38) 이와 관련하여 임철순(1993: 88)은 남한의 무상의무교육 기간을 통일 후 최소한 11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추가예산 부담을 위해 예산배정의 혁명적 조치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39) 서독이 통일에 대비한 교육의 피체를 일찌부터 연구·추출하고 동서독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꾸준히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에 당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동서독 주민간의 가치관과 의식의 차이"라는 수많은 지적에 미처아 볼 때, 남북주민간의 관념·감정·태도상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 통합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40) 그것이 완전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운영되는 사회체제이든 또는 시장경제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든에 상관없이 새로운 체제는 특히 북한 주민에게 체제 적응을 위한 일정 기간의 배려가 필요한 형태로 될 가능성이 많다.



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상호접근·연합의 원칙 이 원칙은 이미 논의의 전제로 제시한 남북한의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의무교육제도 통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공존공영을 위한 사회공동체 형성·발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육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의무교육제도 통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혁의 방향이 잡혀진 좋은 본보기이다. 이렇듯 통일국가 완성단계 이전까지는 제반 교육제도 개혁시 남북한 제도 통합을 염두에 두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통일국가 완성단계 이전의 제반 정책 수립과 연구활동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인’(남한에서는 북한, 북한에서는 남한)에 대해 진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북통일을 앞둔 현 시점에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그것이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남북통일은 제도통합을 필연적인 과제로 하고 있다. 특히, 정치·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이질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교육통합은 그 자체가 매우 커다란 과제이지만, 교육통합이 수행하게 될 여타 제도의 통합 및 국민통합에 미칠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 중요성은 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런데 남북한의 이질적인 교육제도를 통합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 다름 아닌 의무교육제도의 “통일”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이는 교육제도 통합의 선결요건적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통합”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통일 한국의 정체(政體)에 따라 교육제도 통합의 방식이나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경우이건 간에 교육제도 통합은 의무교육제도 “통일” 전제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아주 느슨한 형태의 교육통합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무교육에 관한 생각과 비전을 공유할 수 없다면, 교육제도의 통

합 또는 완전한 통일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의무교육 연합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상 부차적인 문제이다. 또 이에 기초하여 학제를 어떠한 형태로 개편할 것인가는 더너욱 나중의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의무교육에 대한 기본원칙의 확인이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 국가의 의무교육제도에는 국민의 교육권에 대한 입장, 교육정책의 이념과 우선순위, 정책을 수행하는데 동원되는 물질적 조건 등이 함축되어 있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의무교육제도는 특정 국가의 교육이념 및 교육여건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의무교육법제가 통일되지 않을 경우 그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정치적 저항이 뒤따를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통일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무교육제도 통일을 위한 기본원칙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남북한의 의무교육 관련 법규가 어떻게 체계화 되었으며,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은 남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의무교육 법제에 담겨있는 정신·의지·제도적 실상을 파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sup>41)</sup> 다음으로 의무교육법제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주된 논점은 앞의 역사적 고찰을 토대로 법제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곧바로 그간 남북한의 교육제도 통합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역사적 연원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현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종합하여 의무교육법제 통일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종합·제시된 의무교육법제 통일의 기본원칙을 요약화 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 보통교육 단계의 의무화 원칙

41) 남북한의 의무교육 관련 법규의 제정 및 변천과정에 대해 다소 장황할 정도로 면밀하게 검토한 의도는 단순히 의무교육법제에 관한 양측의 동질성이나 이질성에 대한 비교분석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무교육제도 시행 및 확대과정을 둘러싼 접근방법·태도 등과 같은 오히려 ‘정서적인’ 측면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이 동등한 협상당사자인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수용해야 할 수용자의 입장이건간에 통일도니 제도의 기본원칙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현실적 조건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제도의 통일은 그것을 만들어낸 토양 - 정치, 경제, 역사, 사회분화 등 - 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것으로 만든 생활감정에 대한 이해에 바탕하지 않고서는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의무교육의 무상성의 원칙
- 취학전 교육의 무상성의 원칙
- 학년제 개념으로 접근 원칙
- 재정 부담 능력 및 국제적 경향 존중의 원칙
-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성격 존중의 원칙
- 상호접근·연합의 원칙

의무교육법제 통일에 있어 위의 원칙을 견지할 때, 무상의무교육 연한은 10년으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취학전 교육은 의무교육에 포함시키지 않되, 교육기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공교육체제로 편입시켜 무상교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10년의 의무교육 기간은 학년제의 개념에 입각한 것으로, 남한의 현행 학제를 기준으로 보면, 초등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년을 합한 것이다. 이 기간은 바로 교육개혁위원회가 교육과정 개혁안으로 내놓은 ‘국민공통교육과정’ 이수 기간에 해당한다. 북한의 현행 학제를 기준으로 보면,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하는 셈이다. 이럴 경우, 현재 의무교육 단계에 편입되어 있는 북한의 취학전 교육(유치원 높은반 1년)은 의무교육에서 제외되기는 하지만,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교육기회의 실질적인 보장을 한다는 점에서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한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 10년간의 의무교육제도의 실사와 취학전 1년간의 무상교육 실시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큰 틀에서는 위의 기본원칙에서 제시한 취학전 1년의 무상교육의 실현이라는 방안은 취학전 1년간의 교육(만 5세아)을 “무상 유아교육 원칙”을 적용하여 2005년까지 100% 취원율을 목표로 한다는 교육개혁안의 취지로 보아 일단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과정 개혁에 있어 10년간의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단계에 해당하는 수업연한에 대해 무상의무교육화 하는 것 역시 통일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의무교육법제를 통일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 소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가히 천문학적 숫자

에 이를 것으로 예견된다. 여기에서 최근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교육시설 및 여건의 악화현상까지를 고려하여 필요한 재정 규모를 산출해야 한다는 부담에 직면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경제가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호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난은 체제적·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에서 제시된 원칙에 따라 의무교육법제의 통일을 기하되, 그 과정에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 ○ 통일국가 완성단계 이전의 남한의 대책

첫째, 현행 9년의 의무교육을 그 어떠한 유보조항 없이 완전하게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제도 운용의 체질을 강화하는 길인 동시에 통일국가 완성단계에 의무교육법제 통일 달성할 수 있는 기본요건에 해당한다.

둘째, 교육개혁위원회가 내놓은 ‘무상유아교육’ 개혁방안을 조속히 그리고 더욱 확충하여 실현해야 한다. 그 대상을 국·공립 유아학교에 국한시키지 말고 사립유아교육기관으로 확대해야 하며, 2005년까지 100%의 취원을 달성이라는 개혁의 목표도 조기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셋째, 이상의 두 가지 대책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세원(稅源)의 개발과 더불어 정부와 민간의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 마인드를 진작시켜야 하며, 국가 정책수행의 우선순위에서 교육통합이 뒤쳐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의무교육 단계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현재 교육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기초로 북한의 교육현황, 특히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을 감안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현재 임용되지 않은 교수자원(초·중등 교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통일 이후 교육현장에 곧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재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의 고려사항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의 고려사항은 “의무교육법제 통일을 위해 제시된 앞의 원칙들을 강력히 고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막상 정치적 통일이 실현되고

나면 앞에서 제시된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특히,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의무교육연한의 축소나 ‘단계적 실시’ 등의 단서를 달아 그 실시를 지연시킬 공산이 크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한 바 있듯이 그러한 행태는 ‘정치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독일의 경우, 의무교육 법제의 통일은 기본적으로 연한이 2년 더 긴 서독의 의무교육제도를 기준으로 통일시켰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위의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약간의 지역적 또는 시간적 차이는 제도 실현의 기술적인 문제로 양해 될 수 있으나, 원칙 자체의 무시는 계산 불가능한 정치적 비용을 추가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아 모든 제도의 통합은 보다 발전적인 형태를 통합의 준거를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의 의무교육 연한이 대체로 10년에 수렴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체제운용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남한의 의무교육 연한은 최소한 OECD 제국(諸國)의 평균에도 미달하고 있다는 현실을 참작해야 한다.

끝으로 통일국가 형성에 필요한 교육통합, 특히 의무교육 통일을 위해 교육내용의 중립성이나 보편성 견지 등 북한이 수행해야 할 과제나 고려사항이 많기는 하지만, 이는 어찌보면 상대에 대한 요구일 따름이지 상대방의 태도가 완강하여 그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치적 통일, 교육통합은 당초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본고의 직접적인 관심사가 아니다. 더욱이 그러한 사항을 조목조목 열거한다는 것은 그리 의미 있는 작업이라 보기 어렵다. 위에서 제시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의 기본원칙은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 북한 측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 통일작업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점은 어찌보면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무교육법제 통일의 원칙을 제시한 다음, 대책이나 고려사항을 주로 남한 측에 제기되는 과제로 국한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참고문헌

- 강길수. 한국 교육행정사 연구초, 서울: 재동문화사. 1980.
- 강무섭.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정책의 과제와 방향”, 한국공공정책학회, 통일한국을 대비한 공공정책의 과제와 방향(학술세미나 자료집). 1995.
- 교원복지신보사. “해방교육 40년사”, 교원복지신보(12. 22일자). 1986.
-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IV)」. 교육개혁위원회. 1997.
- 구종서 외. 「남북한 통일시나리오」(정책-96-15-029), 삼성경제연구소. 1996.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1」. 1974.
- 김계숙. “새교육과 교육철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육회, 「교육(창간호)」, 1954: 7-21.
-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 서울: 문백사. 1990.
- \_\_\_\_\_. “남북분단 이후 교육의 역사적 고찰: 북한 사회주의 교육과 교육학의 기본구조원리와 성립 및 그 변화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교육학연구」, 28(3), 1990: 15-26.
- 김용일. 「8.15 전후의 교육개혁론연구」, 한국근현대사회연구회, 1940년대 사회문화와 분단(8.15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1995.
- \_\_\_\_\_. “미군정하의 교육정책연구 - 교육정치학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4.
- \_\_\_\_\_. 「미군정기 조선교육심의회에 관한 교육정치학적 고찰」,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문제연구(제 6집), 1994, 313-345.
- 김남식 엮음. 「남로당연구 - 자료편」, 서울: 돌베개. 1988.
- 김종철. “한국의 교육제도와 교육행정에 미친 미국문화의 영향”,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연창립 10주년 기념심포지움 특집호」. 1967: 93-106.
- \_\_\_\_\_. “6-3-3-4제 논의”, 「징정문화」. 통권 175호, 9월호, 1979: 170-185.
- 김준엽 外 공편. 「'북한'연구자료집 제 1집」, 서울: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89.
- 김천기. “진보주의 교육이 한국 교육정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수정주의적 분석: 미군정기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0(2), 1992: 43-69.

- 김태완. “교육통합의 가능모형: 학교제도 측면”, 「교육행정학연구」, 11(1), 1993: 10-19.
- 김형찬. 「북한교육발달사」, 서울: 한백사. 1988.
- 노승우. “북한교육의 주체철학적 기본요소와 그의 비판”, 「교육학연구」, 33(1), 1995: 269-286.
- 대륙연구소 편. 「북한법령집(제 4권)」, 서울: 대륙연구소. 1990.
- 문용린. “교육통합의 가능모형: 교육내용 측면”, 「교육행정학연구」, 11(1), 1993: 60-72.
- \_\_\_\_\_. “민족동질성 제고를 위한 교육전략: 교육내용적 측면”, 「교육학연구」, 28(3), 1990: 43-50.
- 미국무성과 하와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해방조선”, 「현대사자료총서 10권」, 1948: 617-738.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연구보고서 94-32). 1994.
- \_\_\_\_\_.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대방안 중심」(연구보고서 92-14). 1992.
- 민주주의민족전선 편. 「조선해방연보」, 경성부: 문우인서관. 1946.
- 박용현. “남북통일의 전망과 교육통합”, 「교육행정학연구」, 11(1), 1993: 1-9.
- 박재윤. “연구변인으로서의 통합과 교육”, 정태수·신세호 편저, 「전환기의 한국교육」, 서울: 예지각, 1991: 655-669.
- 박창언. “교육권 논의를 위한 기초 연구”, 「교육법학연구」, 7, 1995: 275-296.
- 백낙준. 「한국의 현실과 이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7.
- 북한연구소. 「북한교육론」, 서울: 북한연구소. 1977.
- 안호상. 「일민주주의의 본바탕 - 일민주주의의 본질」, 서울: 일민주주의연구원. 1950.
- 새한민보社. 「임시정부수립대강 - 미소공위자문답신집」, 서울: 새한민보사, 1947.
- 손인수. “한국 군정교육의 역사적 평가”,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편, 「한국현대교육의 재조명」, 서울: 집문당, 1993: 15-127.
- \_\_\_\_\_. “일제 식민지 교육정책의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일제하의 교육이념과 그 운동」,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59-96.
- 손진대. “민주주의민족교육의 이념”, 「새교육(제 4호)」, 1949: 5-12.

- 심지연. 「미-소공동위원회연구」, 서울: 창계연구소. 1989.
- 심지연. 「민족주의 논쟁과 통일정체 - 해방직후 정치적 대립과 갈등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울. 1988.
- \_\_\_\_\_. 「조선혁명론연구: 해방정국 논쟁사2」, 서울: 실천문화사. 1987.
- \_\_\_\_\_. 「해방정국 논쟁사1」, 서울: 한울. 1986.
- \_\_\_\_\_. 「한국민주당연구II-한국현대정당론」,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4.
- \_\_\_\_\_. 「한국민주당연구 I」, 서울: 풀빛. 1982.
- 안 규. “한국 의무교육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4.
- 안기성. “일본의 교육법제”, 「일본학보」, 17, 1986: 241~289.
- 안기성·김용일 外. 「교육법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대한교육법학회(교육부 연구 보고서). 1994.
- 안기성·한용진·김용일 外. 「미군정하 한·일 교육법제 비교연구」,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1996.
- 오천석. 「한국교육사(上)」, 서울: 광명출판사. 1975.
- \_\_\_\_\_. 「한국교육사(下)」, 서울: 광명출판사. 1975.
- 윤정일·조석훈, “교육법의 기본원리와 구조에 관한 법철학적 분석연구”, 「교육학연구」, 29(4), 1991, 237~256.
- 이영덕. “민족동질성 고양을 위한 교육의 과제”, 「교육학연구」, 28(3), 1990: 7-13.
- 이윤식. “교육통합의 가능모형: 교원 측면”, 「교육행정학연구」, 11(1), 1993: 26-54.
- 이종가 외. “북한 김일성 대학에서의 이태올로기교육과 남한의 통일교육에서의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교육부 수탁연구), 강원대 사범대 교육학과. 1997.
- 이종재. “미래의 초·중등 교육체제”, 한국개발원 1997: 1-27.
-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서울: 집문당. 1982.
- 임천순. “교육통합의 가능모형: 교육제정 측면”, 「교육행정학연구」, 11(1), 1993: 81-97.
- 정석홍. “민족동질성 고양을 위한 교육전략-교육제도적 측면”, 「교육학연구」, 28(3), 1990: 53-63.
- 정제황.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고시계」, 9, 1995: 41-53.



- 정대수. 「한국 교육기본법제 성립사」, 서울: 예지각, 1996.
- \_\_\_\_\_. 「광복3년 한국교육법제사」, 서울: 예지각, 1995.
- 최민수. “남북한 유아의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주요 법규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4(1), 1993: 303-334
- 최희선. “민족동질성 고양을 위한 교육전략: 교육제도적 측면” 주제발표에 대한 논평, 「교육학연구」, 28(3), 1990: 61-63.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통일교육 자료 개발 연구」(수탁연구 CR96-41). 1996.
- \_\_\_\_\_. 「학생의 건전한 통일관 형성을 위한 교육방안」(제 1 회 통일대비 교육포럼). 1996.
- \_\_\_\_\_. 「북한 학생의 가치관 변화와 교육적 시사」(제 2회 통일대비 교육 포럼). 1996.
- \_\_\_\_\_. 「남북한 학생과 주민의 통일 사회 적응 연구」(연구보고 RR95-8). 1995.
- \_\_\_\_\_.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방안 연구」(수탁연구 CR94-3). 1994.
- \_\_\_\_\_. 「남북한 교육과정·교과서 통합방안 연구」, (수탁연구 CR94-4). 1994.
- \_\_\_\_\_. 「남북한 교원제도 통합방안 연구」(수탁연구 CR94-5). 1994.
- \_\_\_\_\_. 「남북한 교육 및 학술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수탁연구 CR94-6). 1994.
- \_\_\_\_\_. 「분단 및 통일국가 교육통합 사례 연구」(수탁연구 CR94-7). 1994.
- 한국교육십년사간행회 編. 「한국교육십년사」, 서울: 풍문사, 1960.
- 한만길. 「북한 김정일의 교육정책과 현실, 그리고 통일교육의 과제」(제 4회 통일대 비 교육포럼), 한국교육개발원, 1997.
- 한국법제연구원. “남북통일에 대비한 법적 대응방안”, 제 6회 법제세미나, 1995.
- \_\_\_\_\_. “남북연합의 법적 성격과 전망”, 연구보고 94-11. 1994.

## 【요약문】

탈북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탈북주민이 통일 전후의 남한사회에서 경제적·정치적·사회적으로 남한주민이나 기존 탈북주민들과 갈등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남한주민과 탈북주민이 하나의 민족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통일한국의 올바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탈북주민에 대한 대책과 그 접근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접근방식은 이들을 보호 내지 수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민족공동체 의식 형성과 이해와 포용의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탈북주민에 대한 접근을 민주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재사회화' 또는 민족공동체 문화로의 '동화'라는 차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1990년대 들어 급속히 탈북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일가족 탈북과 황장엽 등 최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탈북주민들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 적응수준은 향상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탈북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적응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기존의 탈북주민과 앞으로 유입될 탈북주민들에 대한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이다. 탈북주민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현 탈북주민 적응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적응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의 범위는 기존 관련 정책과 그 집행 실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새로운 적응 프로그램의 구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2장은 탈북주민과 관련된 정책의 변천과정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제3장은 탈북주민 적응 프로그램을 적응 수준과 현실적 필요에 따라 준비시기, 심사시기, 심리적 갈등 해소기, 사회 적응기, 사회 통합기의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각 단계별 실행주체를 민관협동형 모델에 따라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의 적응 프로그램 관련 연구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그 미비점은 탈북주민에 대한 면담을 통해 보완하였다. 이와 함께 탈북주민들이 집필할 수

기형식의 글들은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부분적으로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탈북주민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적응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을 개인의 내적·심리적 욕구와 외적·사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로 보았다. 즉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사회의 적합한 구성원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적응은 사회화의 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탈북주민의 경우 대부분이 북한에서 사회화 과정을 겪은 성인이므로 탈북주민에게는 재사회화로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탈북주민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은 신축성을 갖되 성인 탈북주민의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남한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요구하는 교육도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탈북주민의 적응 프로그램은 거시적·집단적 분야의 프로그램은 사회통합이론과 사회화 내지 재사회화이론에 바탕을 두고, 미시적·개별적 프로그램은 문화동화, 문화집변이론을 원용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각 단계별 분류와 시행은 기존 연구를 통해 제시된 사회적 적응 단계와 심리적응 단계를 준용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분류대상의 선정은 세대이론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적응 프로그램의 구성과 실행을 위해 각각의 이론들은 각 단계와 상황에 따라 선택적 유용성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적응 프로그램은 난민, 이민, 이주민 등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검증된 이론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즉 단일 이론적 배경에 따라 전체적인 적응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은 논리적인 설득력은 가질 수 있겠으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1997년 8월까지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유입된 탈북주민은 835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기존 탈북주민 중 사망자와 이민자 170여명을 제외하면 현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주민은 670여명 정도로 볼 수 있다.

탈북주민들의 적응실태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으나 그 적응실태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즉 탈북주민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에 적용 가능한 탈북주민의 적응 단계별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탈북주민 정책의 목표 설정과 구체적 계획 수립,

그리고 집행을 위한 근본적인 몇 가지 사항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대전제로는 인도주의, 국제협력, 국민적 합의, 형평성, 효율성, 민족통합이라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탈북주민의 적응 프로그램을 각 단계별로 세분화한 것은 각 단계의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을 갖추기 위함이다. 교육내용과 그 교육목표는 심리적 갈등 해소기와 사회 적응기 그리고 사회 통합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탈북주민들의 심리적 상태와 교육내용의 습득정도에 따라 그 교육내용이 다르게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적응 프로그램을 각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실시하는 것은 탈북주민들의 흥미를 유도하여 참여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따라서 탈북주민의 각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은 그 대상에 따라 신중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탈북주민들의 의견이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교육기간도 개인별 능력과 성취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탈북주민의 발생배경과 개개인의 연령, 성향, 능력 그리고 적성과 관심사항 등에 따라 단계별 실시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즉 탈북주민의 여러 배경들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을 분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을 크게 사회적 적응단계와 심리적응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① 심사시기, ② 심리적 갈등 해소기, ③ 사회 적응기, ④ 사회 통합기로 구분한다. 이는 탈북주민들의 실태 조사 결과 나타난 적응과정의 문제점들을 통해 구성한 것이다.

또한 탈북주민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은 탈북주민 발생 전 제반 여건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적응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서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준비하는 단계인 준비시기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준비시기는 탈북주민 적응 프로그램 시행 전 선결되어야 할 내용들을 준비하는 시기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기준, ② 보호시설, ③ 전문인력, ④ 공개기준, ⑤ 지원수준, ⑥ 정착지 배정기준, ⑦ 비용조달, ⑧ 안내책자 및 참고교재, ⑨ 남한주민의 포용교육 등이다.

심사시기는 탈북주민이 발생한 순간부터 기초적인 조사와 심사 그리고 분류작업을

마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주로 관계규정에 따라 조사와 분류작업을 하는 단계이지만 차후의 적응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와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중요한 자료를 축적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이 시기는 신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적으로 7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진행속도에 따라서는 그 기간을 단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심리적 갈등 해소기는 이질적인 사회체제로 인한 혼란과 신변불안, 장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친척들에 대한 죄의식 등으로 심리적 갈등과 불안이 유발되는 단계이며, 또한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며, 초보적인 남한사회 실상과 그 적응방법을 교육함이 이 시기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심리적 갈등 해소기에는 적응을 위한 심리적 제반 서비스와 행정·법률적 서비스 그리고 초보적인 남한사회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 운용 기간은 운영위원회가 탈북주민의 발생 규모에 따라 신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탈북 이후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와 함께 각 프로그램 내용들의 우선 순위와 일정 및 시간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회 적응기는 직접적인 남한 생활을 하면서 남한사회에 적응해 가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 남한주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시작하게 되며, 남한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실제 운영원리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과 직업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 시기부터는 정착지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가족구성세대, 단순 노무직 등 취업자, 자영업자, 취학연령자, 비경제활동인구, 남한측 이산가족의 주거지원자들은 개별 정착지로 주거지를 결정하고 전용시설을 퇴소할 수 있다. 사회 적응기는 탈북주민 발생으로부터 14개월 이내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소요기간의 산정은 직업훈련기간과 기초적인 남한 생활적응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사회 통합기는 탈북주민들이 남한사회의 일원으로서 남한사회에 통합되는 시기이다. 탈북주민들이 이방인, 소외자로 남게 된다면 이는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직장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그 구성원들과 갈등없이 조화를 이루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즉 자신에게 적합한 직장을 갖게 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자세를 갖도록 해야 한다.

사회 통합기는 탈북주민 발생으로부터 2년간의 시기를 선정할 수 있다. 이는 사회진출 후 1년여의 시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시기는 특히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와 접촉의 증대를 통한 일체감 형성이 요구되는 단계이다. 지역사회의 학교, 시민 단체, 종교단체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직장 내의 친목단체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동화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까지의 탈북주민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은 정부 관계기관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정부의 배타적 운영과 민간의 참여 배제로 인한 문제들이 야기되면서 그 실행주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가장 효과적인 적응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가장 경제적·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적응 프로그램은 적정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고려될 수 있는 유형으로는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그리고 민관협동형이 있다.

정부주도형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왜곡되지 않은 채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정부주도의 적응 프로그램의 수행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주도형은 탈북주민의 규모가 소수이고 탈북주민들이 개별적 특수한 입장을 갖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뿐 탈북주민의 규모가 증가하고 이들의 출신배경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민간주도형은 정부의 공식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로서 각종 민간단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민간주도형은 국가의 정치적 부담, 재정부담, 전문인력 부족, 시설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지의 반영이 곤란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의 고유한 목적이 우선적으로 개입될 우려가 있다.

민관협동형은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의 혼합형으로서 그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이다. 민관협동형은 민간과 정부의 협동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탈북주민과 관련해서 정부는 전체적인 기획과 비용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탈북주민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민간단체가 주로 담당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탈북주민의 참여의지, 심리적 안정, 실질적 지원효과, 그리고 국민들의 호응도,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탈북주민 정책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판단

된다. 특히 탈북주민 정책에 민간단체가 참여하게 되면 이는 곧 탈북주민들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고, 더구나 정부주도로 인한 탈북주민들의 심리적 거부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기획과 프로그램의 조정은 정부가 담당하지만 민간은 비용분담, 시설제공, 전문인력 제공 등을 통해 탈북주민의 심사시기에서 사회 통합기까지 전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형태이어야 한다. 따라서 핵심적 사항인 전체적인 기획과 프로그램의 조정역할을 정부가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주도 민간보조형 모델’이 탈북주민 적응정책에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부주도 민간보조형 모델의 실행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그 주체를 설정해 두어야 한다. 그 주요기구로는 총괄기구, 집행진담기구로 나누며 그 집행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참여범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탈북주민 적응 프로그램의 각 단계별 실행주체는 그 단계에 따라 설정해 두어야 한다. 각 단계별 주요한 실행주체는 다음과 같다.

①준비시기는 탈북주민대책협의회, 탈북주민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이다.

②심사시기는 조사요원, 상담전문가, 운영위원 등이다.

③심리적 갈등 해소기는 사회복지사,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의료기관, 진로 및 진학상담전문가 등이다.

④사회 적응기는 각 지역의 상담요원, 법률전문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이산가족 재회 지원단체, 직업훈련원, 각종 자격 관련단체, 각 지역 교육청, 종교기관 그리고 각 지방의 지역 사회단체들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⑤사회 통합기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언론사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들, 즉 연극단, 산악회, 조기축구회, 봉사활동, 종교활동, 생활체육, 시민강좌,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이 주체가 된다.

오늘날 탈북주민의 발생은 남한사회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과 인도주의적 입장을 고려하여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지만, 재정적 부담과 경제적 파급효과, 남한사회 부적응으로 나타나는 사회 혼란, 남한주민과의 갈등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발생은 우리 사회에 대한 하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탈북주민의 효과적인 남한사회 적응의 문제는 정부와 남한주민 그리고 탈북주민 자신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일관된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재정 확보를 담당하여야 하며, 남한주민은 탈북주민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그들의 적응을 지원하려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려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탈북주민 자신들은 수혜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적응노력을 통해 사회에서 일체감을 형성하려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조화를 이룰 때 탈북주민들은 남한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통일시대를 맞는 시급성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탈북주민의 적응 프로그램은 탈북주민의 심리적 적응단계와 사회적응 단계 등을 고려하여 4단계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또한 탈북주민 프로그램의 실행유형은 정부주도형, 민간주도형 그리고 민관협동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으나 현재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민관협동형-정부주도 민간보조형의 적용이 현실적인 모델로 보았다. 즉 탈북주민의 적응은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체제하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독일과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이주민 정책도 결국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루어 낸 산물이었다.

탈북주민 적응 프로그램의 연구는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뒷받침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와 같이 탈북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나누어 작성하여 봄으로써 관련기관의 실질적인 시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탈북주민들의 적응을 제고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의 적응 프로그램과 상호 비교를 통해 더욱 발전적인 모델을 채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구나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북한주민에 대한 표본적인 연구로서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 또는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한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1. 서론

## 1.1 연구목적 및 범위

### 1.1.1 연구목적

탈북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탈북주민이 통일 전후의 남한사회에서 경제적·정치적·사회적으로 남한주민이나 기존 탈북주민들과 갈등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남한주민과 탈북주민이 하나의 민족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통일한국의 올바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탈북주민에 대한 대책과 그 접근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접근 방식은 이들을 보호 내지 수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민족공동체 의식 형성과 이해와 포용의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탈북주민에 대한 접근을 민주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재사회화' 또는 민족공동체 문화로의 '동화'라는 차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탈북주민의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은 단순한 보호나 교육의 차원을 넘어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조절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sup>1)</sup>

최근 탈북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들어 급속히 탈북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일가족 탈북과 황장엽 등 최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탈북주민에 대한 정책 실시 결과 그 평가가 부정적이라는 것도 주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관련 연구물도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더구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탈북주민의 부적응 사례는 공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탈북주민들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 적응수준은 향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탈북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적응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더구나 탈북주민들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도 프로그램 연구를 촉진시킨 계기가 되었다.

탈북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적응 프로그램은 최근 관련 연구기관과 학자들에 의해 제

1) 이장호, "남한이주자(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 접근," 『탈북자 지원을 위한 대책과 과제』 크리스찬 아카데미 남북관계 대화 모임 발표논문, (1996. 9. 20), 4-5쪽.

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개별연구자들의 전공영역에 따라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자들이 제시한 적용방안을 토대로 현실적인 법제도하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성격의 적용 프로그램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1.2 연구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기존의 탈북주민과 앞으로 유입될 탈북주민들에 대한 단계별 적용 프로그램이다. 탈북주민 적용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인 탈북주민에 대한 관련 정책기관과 단체가 지금까지 비정형적으로 실시해 온 기존의 탈북주민 정책의 적실성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계별 적용 프로그램의 설정을 주된 연구범위로 한다.

즉 탈북주민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현 탈북주민 적용 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적용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의 범위는 기존 관련 정책과 그 집행 실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새로운 적용 프로그램의 구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2장은 탈북주민과 관련된 정책의 변천과정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제3장은 탈북주민 적용 프로그램을 적용 수준과 현실적 필요에 따라 준비시기, 심사시기, 심리적 갈등 해소기, 사회 적응기, 사회 통합기의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각 단계별 실행주체를 민관협동형 모델에 따라 제시하였다.

## 1.2 연구방법 및 이론적 기초

### 1.2.1 연구방법

기존의 적용 프로그램 관련 연구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탈북주민에 대한 적용 프로그램 구성서 분야별 미비점은 탈북주민에 대한 면접을 통해 보완하였다. 또한 기존 정책 집행기관의 적용 프로그램 집행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기초자료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탈북주민들이 집필한 수기형식의 글들은 심층적인 분석을 위

해 부분적으로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현실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탈북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기존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실태조사 결과가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충분히 의미있는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기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존 실태조사 자료는 그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근의 것을 활용하였다.<sup>2)</sup> 즉 본 연구는 기존 자료에 대한 문헌조사방법과 면접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 1.2.2 이론적 기초

탈북주민의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이질적인 체제를 경험한 탈북주민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최적의 적응여건을 위한 사회의 제 환경을 제구성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므로 탈북주민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적응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개념으로서의 '적응'은, 원래 생물학의 순응(adaptation)이라는 개념에서 유래되어 변화된 것이나 심리학적으로는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한 각 개인의 투쟁을 의미'<sup>3)</sup>한다고 보며, 사회학적으로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으로부터의 기대·요구 등에 개인의 행동을 맞추어 가는 것'<sup>4)</sup>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응을 개인의 내적·심리적 욕구와 외적·사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로 보았다.

2) 최근의 실태조사 자료는, 통일원,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 (통일원, 1994. 12);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논문, 1995); 선한승, 『북한근로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 방안』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5); 박종철 외,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김영수·정영국,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통일원 통일연수원, 1996); 전우택·민성길,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탈북자의 삶』 (서울: 오름출판사, 1996); 전우택 외,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 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발표논문, 1997. 5); 윤덕룡·강태규,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 탈북자들의 경제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발표논문, 1997. 5) 등을 들 수 있다.

3) P. S. Lazarus, *Patterns of Adjustment and Human Effectiveness*, (N. Y. :Macgrow Hill Book, 1967), p.17.

4) 번시민, 『사회학개론』 (서울: 박영사, 1988), 18쪽.

즉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사회의 적합한 구성원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사회화'<sup>5)</sup>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응은 사회화의 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탈북주민의 경우 대부분이 북한에서 사회화 과정을 겪은 성인이므로 탈북주민에게는 '재사회화'로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 있을 것이다.

인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사회와의 접촉을 벗어나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없다. 또 적응-부적응의 평가는 문화적 배경과 관련을 맺고 있고 시대정신에 따라서 그 평가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듯 적응과 부적응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화 과정과 달리 재사회화는 소수 대상자의 주류사회로의 동화만을 강요할 수 없으며, 주류사회도 이에 반응하여 적극적으로 포용, 적응하려는 조절 기능이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탈북주민의 대다수는 성인이므로 탈북주민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은 신축성을 갖되 성인의 탈북주민의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남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요구하는 교육도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탈북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은 일관된 하나의 이론으로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즉 하나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현실적 적합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북주민의 적응 프로그램은 거시적·집단적 분야의 프로그램은 사회통합이론과 사회화 내지 재사회화이론에 바탕을 두고, 미시적·개별적 프로그램은 문화동화, 문화접변이론을 원용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각 단계별 분류와 시행은 기존 연구를 통해 제시된 사회적응 단계와 심리적응 단계를 준용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분류대상의 선정은 세대이론을 적용하였다. 취학전이나 취학세대에게는 사회화 과정으로의 설명이 더욱 적합할 수 있으나 성인 탈북주민에게는 재사회화 과정으로의 설명이 적합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화, 재사회화, 적응이론, 문화접변, 문화동화, 문화충격, 세대이론 등 다양한 이론적 설명이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적응 프로그램의 구성과 실행을 위해 각각의 이론들은 각 단계와 상황에 따라 선택적 유용성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적응 프로그램은 난민, 이민, 이주민 등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검증된 이론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

5) 홍승목 역, 『사회심리학』 (서울: 박영사, 1984), 341쪽.

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즉 단일 이론적 배경에 따라 전체적인 적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은 논리적인 설득력은 가질 수 있겠으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 2. 탈북주민 실태와 적응정책

### 2.1 탈북주민 현황과 발생배경

#### 2.1.1 탈북주민 현황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서 생활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귀순자, 북한탈출자, 귀순북한 동포, 월남자, 북한주민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정치적 의미의 '귀순'을 대신할 수 있는 '탈북주민'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주민과 국외에 있는 탈북자를 구별하기 위해 북한을 탈출한 모든 사람은 '탈북자', 국내에 거주하며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는 자는 탈북주민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1997년 8월까지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유입된 탈북주민은 835명에 이르고 있다.<sup>6)</sup> 그러나 기존 탈북주민 중 사망자와 이민자 170여명을 제외하면 현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주민은 670여명 정도로 볼 수 있다. 탈북주민은 분단 이후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하여, 1990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원이 500여명이었으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북한의 경제난 등 체제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4년 52명, 1995년 40명, 1996년 51명 그리고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이미 55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의 두 배에 가까운 인원이다.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하고 이로 인한 사회체제의 불안과 감시체계의 소홀로 인해 탈북주민의 유입은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주민들은 분단 이후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그 수와 형태에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의 탈북주민은 군사분계선을 통한 군인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6) "탈북·망명자 속출에 당혹과 분노," 『내외통신』 1073호, 1997. 9. 4. 내외1073호E3. 통일원 자료에 근거한 수치임.

1990년대 이후 유학생, 외교관, 무역 종사자, 고위 인사 등 출신 성분이 다양화 되고, 특히 제3국을 통한 입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가족 단위의 탈북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sup>7)</sup> 1997년 상반기 중 가족단위의 입국은 30여명에 달해 급년 국내 입국 탈북주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가족단위의 집단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경제 사정 악화와 특히 식량난의 악화로 북한의 사회통제가 이완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가족단위의 집단 유입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sup>8)</sup> 더구나 북한의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 지난 1997년 5월 13일 김원형-안선국 가족 14명을 태우고 서해상을 통해 유입된 첫 보트피플<sup>9)</sup>이 발생한 만큼 대규모의 북한주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장인숙과 주영희 가족의 탈북은 이미 탈북하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아들인 정현과 홍진희의 계획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주민들의 적응실태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으나 그 적응 실태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즉 탈북주민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sup>10)</sup>

- 7) 최초의 가족단위 탈북 이주는 1955년 5월 17일의 유기방 가족(8명)이었으나 아들은 귀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후 1987. 2. 8. 선박을 이용했던 김만철 가족(11명), 1994. 4. 30. 여만철 가족(5명), 1994. 8. 13. 이철수 가족(3명), 1995. 3. 27. 오수룡 가족(5명), 1995. 12. 12. 최세웅 가족(4명), 1996. 1. 30. 짐비아 주재 외교관 현성일 부부(2명), 1996. 6. 30. 정순영 가족(3명), 1996. 10. 28. 허장철 부녀(2명), 1996. 12. 5. 김경호 일가(16명), 1997. 1. 30. 김영진-유송일 가족(8명), 1997. 5. 12. 안선국-김원형 가족(14명), 1997. 5. 29. 주영희 가족(3명), 1997. 6. 30. 민병균 가족(3명), 1997. 8. 장인숙 가족(3명) 등이 가족 단위로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유입된 사례들로서 이들은 최근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탈북자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8) 통일정책분석 97-05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책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7), 8쪽.
- 9) 보트피플은 지난 1975년 베트남 패망 이후 공산화된 베트남을 탈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본국을 탈출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국제법적으로는 난민 판정 이전의 본국 탈출민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은 무동력선을 포함하여 약 2만여 척의 이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의 정세에 따라서는 대량의 보트피플이 발생할 수 있다.
- 10)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서는 윤이상,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통일원, 『북한주민의 의식민화와 사회통제』 (통일원, 1994. 12);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서울: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선한승, 『북한근로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5); 김영수 외,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조사』 (통일원 통일연수원, 1996. 5); 박종철 외,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12); 전우택-민성길,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탈북자의 삶』 (서울: 오름출판사, 1996); 전우택-김명세-박종규,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 배경에 따른 적응과』

탈북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정착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1993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의 제정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차원으로 전환된 이후 그 문제점이 증가하고 있다. 1993년 이전 탈북주민들은 평균 4,500만원 수준의 정착지원금과 다양한 제반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이후 탈북주민들은 정착금이 1,700만원 수준으로 조정되고 제반 지원서비스도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7년 7월부터 적용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새로운 지원정책이 마련되었으나 그 결과를 속단할 수 없을 뿐더러 이는 이후 입국하는 탈북주민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존 탈북주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995년 말 탈북주민 5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이 조사에 의하면, 탈북주민의 직업은 공무원 19명, 국영기업 13명, 은행원 24명, 의사 4명, 군인1명, 회사원 203명, 상업 44명 등으로 절반 정도는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으나, 나머지 253명은 막노동을 하거나 무직으로서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40-80만원으로 나타났다.<sup>11)</sup>

실질적인 탈북주민은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들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과 지원정책은 1997년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서 최초로 언급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 지역의 탈북자만도 3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중 40%인 1,200여명은 현지공관에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2)</sup> 더구나 이들은 신변불안으로 최악의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국내인권단체는 물론 국제인권단체에서도 이들의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발표논문, 1997. 5); 이장호, “북한출신 주민(탈북자 포함) 심리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성곡논총』 제28집 4권, (서울: 성곡학술문화재단, 1997)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그 연구방법과 목적에서 차이를 갖고 있지만 탈북주민들의 적응실태를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 적응상에 문제점이 있음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1) 동아일보, 1996. 2. 1. 47쪽.

12) 조선일보, 1996. 12. 7. 2쪽.

### 2.1.2 탈북주민 발생배경

탈북주민들의 탈북동기는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그 원인이 다양화되고 있고 이전 탈북주민들과 구별될 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탈북주민들의 발생배경이 갖는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탈북주민들의 발생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탈북주민들은 북한 체제의 일탈자라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이들은 자신의 탈북시 가족이 받을 엄청난 위협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결행하였는데 이는 이들을 외부세계로 밀어내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배출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sup>13)</sup> 북한체제의 사회적 배출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대북정책의 중요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둘째, 탈북주민들의 탈북 배경은 이들의 구체적 적응 프로그램의 작성과 시행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이다. 기존 탈북주민들에 대한 정책이 큰 효과를 볼 수 없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탈북주민 개개인의 탈북 원인과 사회적 배경 등을 무시한 획일적인 정책집행을 들 수 있다. 탈북주민 적응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탈북주민들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즉 이들의 성분과 학력, 직업 그리고 탈북동기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탈북주민들의 북한에서의 사회적 배경이 남한사회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북한에서의 최종학력, 노동당원 여부, 군복부 경험 등 북한에서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남한사회의 적응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sup>14)</sup>

탈북주민들의 탈북동기와 사회적 배경 그리고 탈북 경로 등은 이들의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정확하게 밝혀지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이러한 조사결과와 연구는 한계를 갖고 있으나, 지난 1994년 말 통일원이 조사한 분석자료를 통해 당시까지의 탈북주민들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5)</sup>

13)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앞의 책, 1쪽.

14) 전우택·김명세·박종규,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 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발표논문, (1997. 5) 참조.

15) 1994년 통일원은 1960년 이후 순수 탈북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적 배경인 출신지역, 탈북 당시의 연령·직업, 탈북동기 및 경로 등을 조사하였다. 위의 조사는 전체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조사 목적에 따라 1950년대 탈북주민 180여명, 사망 및 이민자 170여명 그리고 순수 귀순



탈북주민들의 사회적 배경이 다원화되었다는 주장은 통일원의 조사에서도 밝혀졌다. 1994년까지의 탈북주민들의 북한에서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군인(22%), 당정원(17%)·노동당과 정무원 소속 근무자, 학생(12%), 별목공(12%), 기술자(11%), 선원(8%), 농어민(7%), 노동자(6%)의 순으로 나타난다. 연대별로 살펴보면, 1960년대는 군인, 농어민, 선원, 기술자 등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당정원, 학생, 별목공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농어민은 1960년대 이후 탈북주민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탈북주민들의 탈북전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용이한 계층과 지역에서 탈북주민들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고위급인사, 외교관, 해외파견원, 유학생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역 주민들이 주로 탈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황장엽과 같은 최고위급 인사, 인민무력부 상좌, 조종사, 외교관, 외환딜러 등 상층계층의 탈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위의 조사결과 탈북주민들의 탈북동기 또한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전체적인 탈북동기는 남북간 체제비교를 통한 비교인식(26%), 처우불만·인권문제(17%), 성분불량(13%), 처벌우려(10%), 동반귀순(9%), 체제불만(9%), 이성문제(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는 남한체제와의 비교인식, 체제불만 등 체제저항적인 성격을 갖는 요인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나, 1980년대 이후는 처우불만, 성분불량, 처벌우려, 동반귀순, 이성문제 등 개인적 수준의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최근 탈북주민들의 동기를 분석해 보면 개인적 차원의 원인 특히 북한에서의 위법행위가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1990년 이후 탈북주민과의 면담과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탈북동기는 ① 경제 및 형사사범 등 북한내 법률위반, ② 규율위반으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 ③ 외부세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④ 식량난과 정치적 탄압 등이다.<sup>16)</sup> 이처럼 1990년대 탈북주민의 탈북 원인은 그전과 구별될 수 있는 차이를 갖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내 법률 행위, 즉 부정, 부패 등 사회기강 해이 현상의 증가가 탈북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

자료 보기 어려운 자수·검거 전향자 등 150여명을 제외한 200여명이 대상이 되었다. 그 상세한 조사결과는 통일원,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계』, (서울: 통일원, 1994. 12), [참고자료] 귀순자의 사회적 배경 및 현황 참조.

16) 이종석, 정책과제보고서 96-01 『북한의 경제난 실태와 전망』 (성남: 세종연구소, 1996. 8), 35쪽.

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제사범 증가가 탈북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의 경제난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외화벌이의 강조, 북한내 물질만능주의의 팽배를 나타내는 것이다.<sup>17)</sup>

한편 사회에 정착한 탈북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 즉 탈북주민 입국 후 첫 조사에 참여하는 신문관들이 밝힌 탈북동기는 많은 설문 및 면담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직접 신문관으로 참여했던 한 신문관은 탈북주민들의 탈북동기는 대개 세 가지로 애정문제가 가장 많고, 물건의 부족으로 인한 절도나 횡령 그리고 직장배정의 불만 등이었다고 한다. 특히 탈북의 직접원인이 애정문재인 경우가 80%를 넘는다는 견해도 있다.<sup>18)</sup> 이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탈북주민들이 밝힌 내용과 실질적인 탈북동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들의 주장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바탕을 두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sup>19)</sup>

탈북 경로 또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4년 이전 탈북 경로는 전체적으로 제3국(55%), 육상(31%), 해상(13%)의 순서로 나타난다. 그러나 1960년대 탈북주민의 50%가 휴전선이나 해상을 통한 탈북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를 살펴보면 제3국을 통한 탈북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역을 통한 탈북이 다수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해상을 통한 가족단위의 탈북이 성공함으로써 해상을 통한 탈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sup>20)</sup>

### 2.1.3 탈북주민 예상 규모

앞으로 유입될 탈북주민의 예상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탈북주민에 대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들의 예상규모에 따라 시설유지, 비용조달, 전문인력수요, 적응 프로그램의 수준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17) 동용승, "탈북자 증가현상에 대한 분석," 『삼성경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2), 132쪽.

18) 송의호, "귀순자들의 내민세계 그리고 남한사회 수업," 『월간중앙』 (1995. 1), 423-426쪽.

19) 동용승, 앞의 글, 130쪽.

20) 조선일보, 1997. 5. 13. 1쪽.

하지만 탈북주민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 규모를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더구나 적응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탈북주민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탈북주민의 규모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탈북주민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 남한정부의 입장, 북한정부의 입장,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태도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국제정세의 변화와 인근 국가의 입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남한정부의 입장이다. 남한정부의 탈북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북한주민의 탈북을 장려할 생각은 없다는 점이다. 남한은 북한 지역이 비워진 상태에서의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변화를 통한 근원적인 해결을 우선시하여 '포용하되 유인하지 않는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sup>21)</sup> 현재와 같이 자발적인 탈북자는 수용하지만 그 이상의 탈북 사태를 조장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 자유왕래나 통일시기가 되어 남북한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황이 되더라도 남한정부는 상당 기간 현 군사분계선을 유지시켜 북한주민들의 일시적인 대규모 남하를 저지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북한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탈북자의 발생을 억제해 왔다. 더구나 1990년대 이후 탈북자가 계속해서 증가하자 탈북사태를 막기 위해 국경경비강화는 물론 해외 파견 근로자, 유학생 등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탈북자를 체포하기 위해 체포조를 파견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협조를 얻어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여<sup>22)</sup> 국내외 인권단체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탈북자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이 강화된 이후에도 탈북사태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파탄과 사회적 혼란 등으로

21) 김석우 통일원차관,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기본방향,"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산하 체제적응연구센터 주최 (특강자료), 1997. 3. 22. 7쪽.

22) 중국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탈북자의 수가 중국 정부의 공식문건에 의해 확인되었다. 1996년 3월 7일 발표된 중국 길림성 정부의 「길림성 변경관리조례 선전제강」 문서를 보면 강제송환된 탈북자가 1994, 95년 140명, 1996년 당시까지 48명이며, 현재 공안당국에 체포돼 조사중인 탈북자가 30여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아일보, 1996. 12. 26. 중국 길림성 정부의 「길림성 변경관리조례 선전제강」의 원문은 『생명과 인권』 봄호 No. 3 (서울: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1997), 36-38쪽 참조.

사회통제가 완화되면서 탈북사태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사태는 북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북한 체제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주민들의 태도이다. 탈북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 주민 자신의 의지이다. 철저한 사상교육과 통제정책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에게서 탈북 결심은 대단히 힘겨운 일이었다. 그러나 북한에 경제난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남한에 대한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면서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시각은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민들의 남한관은 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종전과 비교하여 남한의 실상을 상당 부분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을 겪는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sup>23)</sup>

더구나 탈북주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sup>24)</sup>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탈북사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증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가폭을 현재 상황에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탈북주민들의 발생 요인이 최근 들어 사회체제적 요인에 비해 개인적 차원의 원인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그 규모를 예측함에 있어 더욱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탈북주민의 발생인원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상정하고 발생인원을 분석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구체적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2-1> 탈북주민 발생 예상규모

연구자 및 기관	예상규모	출 처	비 고
이정우(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0만명	『통일』, 97. 7.	통일시
김구섭(한국국방연구원)	450만명	조선일보, 97. 1. 1.	북 붕괴시
독일연방정보부(BND)	650만명	서울신문, 96. 11.23.	중국으로 탈출
한국개발연구원	200만명	중앙일보, 96. 3. 15.	통일 후
선한승(한국노동연구원)	200만명	중앙일보, 95. 7. 6.	제도적 억제정책 미비시
류우익	300만명	이정우 논문	통일후 2-3년
M. Noland(워싱턴국제경제연구소)	960만명	이정우 논문	통일 후 25년간, 북한주민 40%
남한정부(내부자료)	500만명		난민유입으로 상정

23) 1996년 5월 10일 한국사회문화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조병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탈북주민) 이 밝힌 내용.

24) 김정호 씨 가족의 기자회견 중 김명실은 탈북주민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을 '종전에 탈북자에 대해 민족반역자, 인간쓰레기 등으로 비난했으나, 최근에는 난 사람, 썩 사람으로 두둔하고 있다'며 그 변화 내용을 소개하였다. 자유신문, 1996. 12. 28. 3쪽.

위의 <표 2-1>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연구는 북한의 혼란 상황을 상정하여 추정 한 수치이다. 그 결과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최소한 200만명 이상이 남한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북한주민의 남하는 북한주민의 대남인식과 북한의 정세 그리고 남한의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되겠지만, 북한주민들의 성분 구성상 200만명에서 500만명 규모의 탈북주민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탈북자 모두가 적응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탈북자 중 상당수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남한으로의 유입을 원하지 않고 있다. 즉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역으로 탈출한 탈북자 중 40-60%는 현지 정착을 원하고 있다.<sup>25)</sup> 이러한 사실은 대량 탈북사태에도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부가 무너진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중국 러시아 지역으로 탈출한 탈북자들중 현지정착을 원하는 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이들의 국내유입을 막고 있는 원인은 남한정부의 미온적 태도뿐만 아니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박해를 우려하는 것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탈북주민의 예상규모를 시계열별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현재와 같이 남북한의 대치상태가 지속될 경우 탈북주민은 현재 수준의 연 100여명에서 500여명 수준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남한정부가 건설 중인 탈북주민 수용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이 500명인 것도 이러한 예상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정세에 따라 탈북주민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즉 매년 1,000명이 넘는 탈북주민이 발생할 경우 이는 대량유입으로 간주하여 비상사태에 따르는 조치가 요구된다.<sup>26)</sup> 그러므로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은 매년 1,000명 이내의 인원내 대한 시설과 전문인력, 비용 등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본다. 그러나 북한의 정세변화에 따라서는 200만명 이상의 탈북주민을 예상하여야 할 것이다.

25)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중 남한으로의 입국을 원하는 비율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해외에 있는 탈북자의 수도 집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들을 3,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 중 현지공관에 망명외사를 밝힌 탈북자는 40%인 1,200여명으로 밝혔다. 조선일보, 1996. 12. 7. 2쪽. 그러나 또 다른 자료에서는 해외 거주 탈북자 중 남한행보다는 제3국에 정착을 원하는 인원이 6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1996. 8. 10. 1쪽.

26) 탈북주민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이를 대규모 탈북사태로 인한 비상사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군비통제』(국방부, 1996. 9월호) 제성호의 글 참조.

## 2.2 탈북주민에 대한 적응정책

탈북주민을 위한 정책은 탈북주민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이들의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은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의 제정으로 수립되었다. 그 후 탈북주민을 위한 정책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그 주요한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sup>27)</sup> 탈북주민에 대한 정책은 남한정부의 제정 상태, 대북 자신감 정도, 탈북주민의 수, 그리고 탈북주민에 대한 활용가치의 중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변화하여 왔다. 이는 곧 탈북주민이 받는 수혜의 폭이 변화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다음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2.2.1 탈북주민 정책의 변천

#### ① 보안차원 수용시기 (1950-1961)

이 시기의 탈북주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전쟁 직후의 남한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한국 전쟁 중 대거 월남한 월남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잦은 부장 공비의 출현으로 인한 대북 적대감 고조로 탈북주민의 활용가치 저조 등 탈북주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시기 탈북주민들은 그 인원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지원정책의 불모지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써 단순 월남한 월남자들과 유사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단지 이들은 군 보안적 차원에서 수용되어 활용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귀순한 탈북주민은 1962년 제정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의 정착수당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sup>28)</sup>

27) 아래의 내용은 윤이상, “남한의 귀순농포에 대한 정책 연구”, 『영남정치학회보』 제5호, (대구: 중문출판사, 1995. 12), 326-329쪽을 보완 재정리한 것이다.

28) 1962년 4월 16일 제정된 법률 제1053호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의 부칙 ③(정착수당의 지급)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정착수당은 1962년 이후에 귀순한 자부터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전 탈북주민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

## ② 보훈차원 수용시기 (1962-1977)

5.16 군사정권은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을 제정함으로써 탈북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길을 열어 놓았다.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은 탈북주민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sup>29)</sup>를 함으로써 탈북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위 법은 부분적으로는 탈북주민을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대우를 하고 있으나 유자녀의 교육보호(동법 제11조), 加療等保護(동법 제13조)에서는 탈북주민만을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보완되었고, 위 법이 1974년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으로 개정되고, 다시 1977년 12월 19일 개정되면서 탈북주민에 대한 수혜의 폭은 더욱 증가되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되었다.<sup>30)</sup>

## ③ 체제선전차원 수용시기 (1978-1992)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포함되어 있던 탈북주민 관련규정이 1978년 「월남귀순용사 특별 보상법」으로 통합되어 제정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탈북주민 정책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 탈북주민들의 수혜의 폭은 전 시기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졌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보상금의 지급은 물론 특별임용제도, 주택무상제공(건평49.5평방미터 이상의 주택), 본인은 물론 처와 자녀에 대한 직장알선,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보호,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료보호 등으로서 국가유공자 보다 오히려 풍족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탈북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정착을 위한 물질적 토대로서는 부족함

29) 1962년 4월 16일 제정된 법률 제1053호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의 제2조(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一. 애국지사 및 그 유족, 二. 4.19의거 상어자, 三. 4.19의거 사망자의 유족, 四. 월남귀순자.

30) 1966년 12월 15일 법률 제1852호 제9조(월남귀순자에 대한 정착수당)에서 “귀순자에게는 그 공적에 따라 1급부터 5급까지 등급을 정하여 정착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녀의 교육보호와 본인의 교육보호, 월남상이자의 가료등보호는 1968년 공포된 법률 제2029호에서 추가되었다. 1977년 공포된 법률 제3028호에서는 월남귀순상이자의 운송시설 이용권리가 추가되었으며, 정착지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1977년 11월 21일 공포된 대통령령 8754호 제18조(월남귀순자의 정착수당액)에 1급 500만원, 2급 350만원, 3급 250만원, 4급 150만원, 5급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대통령령은 애국지사에 대한 연금의 액을 월 31,200원, 생계보조수당으로서 월 12,400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탈북주민의 정착수당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없는 수준이었다.

1978년 제정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은 남한의 경제성장과 함께 체제안정을 위한 탈북주민의 활용가치의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위의 법률은 1980년 12월 22일 '월남귀순용사중 월남귀순상이자 이외의 자로서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에게는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규정된 구호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후 보상금의 금액이 일부 상향 조정되는 등의 변화를 겪으며 1992년까지 시행되었다.

#### ④ 사회복지차원 수용시기 (1993-1996)

탈북주민에 대한 기존의 특혜적 성격<sup>31)</sup>의 지원은 남한내 영세민과의 형평성 문제, 급증하는 탈북주민으로 인한 예산의 한계 그리고 체제안정으로 인한 탈북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재검토되었다. 이러한 결과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은 1993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개정되었다.

이 법은 탈북주민에 대한 혜택을 감소시키고 그 주무부서를 국가보훈처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인한 구체적인 변화는 보상금과 보로금의 실제 지급금액 인하와 임의 규정으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또한 생활보호, 주거지원, 취업알선, 교육보호, 의료보호 등 대부분의 지원항목들이 이전의 '지원한다'는 규정에서 '지원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탈북주민에 대한 정책이 과도한 특혜를 주는 일시적 보상접근법에서 사회복지차원의 장기적 생활안정 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통일대비적 차원의 수용시기 (1997- )

기존의 정책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탈북주민들의 유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비판에 따라 장기적 생활안정대책의 수립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up>32)</sup>. 이러한 비판에 따라 통일대비적 성격을 갖는 새로운 법안

31) 김상근, "점검과 지향: 우리의 수용태세와 장기방안", 『북한탈출동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94), 47~48쪽. 김상근은 "이법은 체제선전등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며, 남파간첩 북한탈출 군인 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는 과도한 보상금 등 특혜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제정되었다.

199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탈북주민들에 주어지는 제반 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으나, 사회적응훈련과 직업훈련 등 구체적 보호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현재로서는 평가하기 어렵다.

## 2.2.2 탈북주민 정책의 담당기관

탈북주민에 대한 정책이 여러 차례 변경됨에 따라 그 담당 부서도 함께 변경되어 왔다. 특히 어느 기관이 주요 담당부서가 되는가 하는 점은 그 정책의 성격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탈북주민에 대한 정책은 그 담당기관의 변천을 통해서 그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남한정부의 탈북주민 담당기관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2-2> 탈북주민 담당기관

	1962년 이전	1962년	1963년	1978년	1984년	1993년	1997년
주무기관	군보안 기관	원호처	원호처	원호처	국가보훈처	보건사회부	통일원
심사위원회 명칭 (소속기관)		국가수호자 특별원호 심사위원회 (국방부)	월남귀순자 원호심사 위원회 (국방부)	월남귀순용 사원호심사 위원회 (국방부)	월남귀순용 사보상심사 위원회 (국방부)	귀순북한동포 보호위원회 (보건사회부)	북한탈출 주민대책 협의회 (통일원)
심사위원장		국방부차관	국방부차관	국방부차관	국방부차관	보사부차관	통일원차관

<표 2-2>에 나타나듯이 최초 탈북주민에 대한 정책은 국가 보안업무의 일종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1962년 원호처 설립 이후 원호대상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왔다. 하지만 1962년부터 1992년까지 탈북주민의 귀순 인정과 지원수준 결정 등 탈북주민에 대

32) 제성호, “북한탈출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북한연구』 가을호, (서울: 대륙연구소, 1994), 128쪽.  
최평길, “선택과 대응: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남북한 관계,” 『북한 탈출동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94), 35~36쪽. 김상균, 앞의 논문, 48쪽.

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방부 차관이 계속하여 맡아 왔다는 사실은 여전히 탈북주민에 대한 시각이 경직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93년 이후는 사회복지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 통일원으로 그 주무기관이 변경되면서 탈북주민은 통일대비적 시각에서 그 적응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 2.2.3 현재의 탈북주민 적응정책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물질적 지원을 주로 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탈북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등이 병사되어 있다. 그 특징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3)</sup>

첫째, 구체적인 사회적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탈북주민은 정착지원시설에서 1년, 거주지에서 2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sup>34)</sup>, 이를 위해 정부는 탈북주민을 보호하고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정착시설을 건립 중에 있다. 이들에 대한 보호관리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세부적인 적응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둘째,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그리고 취업알선을 명시하였다. 탈북주민은 보호기간 동안 연령·성별에 따라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회적응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재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sup>35)</sup> 또한 보호대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직업상담·직성검사의 실시, 직종소개·근로조건·고용동향 등 직업정보의 제공, 각종 기능자격 검정안내, 그리고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sup>36)</sup>

셋째,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과 자격의 인정이다.<sup>37)</sup> 탈북주민은 북한 또는

33) 박종철 외,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13-16쪽.

3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35) 위의 법률, 제15조, 시행령 제30조.

36) 위의 법률, 제16조, 제17조, 시행령 제32조, 제33조.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과 자격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선택이 용이해져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제고될 것이다. 더구나 자격인정을 받기 위해 보수교육과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 그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sup>38)</sup>

넷째,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탈북주민에 대한 모든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행한 보호업무의 비용은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그 과부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도록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규정하고 있다.<sup>39)</sup>

이러한 규정에 따라 거주지로 전입한 탈북주민에 대한 보호관리와 그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개월마다 이들의 정착실태를 내무부장관을 거쳐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탈북주민에 대한 정책은 남한정부의 재정상태, 탈북주민의 활용가치 그리고 탈북주민의 발생 수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책적 기조 또한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 3. 탈북주민의 적응 단계별 프로그램

#### 3.1 적응 프로그램을 위한 전제

##### 3.1.1 전제의 필요성

탈북주민들의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sup>40)</sup> 이는 탈북주민에 대한 정책이 활용가치에 따른 일시적 경제보상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생활안정대책은 물론이고 심리적 차원의 서비스나 직업훈련, 자본주의 사회교육 등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라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 더구나 탈북 시기에 따른 주민들간의 혜택의 차별로 인한

37) 위의 법률, 제13조, 제14조.

38) 위의 법률 시행령, 제29조.

39) 위의 법률, 제29조.

40) 각주 10) 참조.

상호간의 갈등 그리고 부적용 사례들에 대한 제반 서비스의 미비로 인해 재탈출이 시도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탈북주민 정책은 남한주민들의 국민적 합의를 통한 결정이 아니라 각 시기별 정책적 필요에 따라 결정된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탈북주민들에 대한 수용여부와 그 적정 보호수준에 대하여는 국민적 합의의 결여로 인해 논란이 제기되었다. 특히 반국가적 반민족적 행위자들에 대한 수용과 국내 저소득층의 사회보장 수준을 능가하는 탈북주민들에 대한 보호수준은 남한 내의 일부 계층에게 저항감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탈북주민에 대한 정책은 많은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라 볼 수 있다. 이는 탈북주민 정책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일관된 정책 집행의 미비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탈북주민은 계속하여 증가될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예상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은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서 그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볼 때 탈북주민 정책의 목표 설정과 구체적 계획 수립 그리고 집행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몇 가지 사항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한 대전제로서 인도주의, 국제협력, 국민적 합의, 형평성, 효율성, 민족통합이라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 또한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은 관련 전문가들의 세미나, 공청회, 여론조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책일지라도 정부는 계속하여 이를 검토·보완하여야 하며, 남한 내의 주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뒤따라야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 3.1.2 인도주의 원칙

탈북주민 정책의 근간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인도주의 원칙은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박애주의 사상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유입된 탈북주민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다. 탈북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 원칙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남북한 관계를 국제관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내관계

로 볼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 ① 인류에 차원

유엔에 동시 가입된 남북한 관계를 국제관계로 보면 탈북주민들은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난민에 관한 기본 조약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과 1967년의 동 의정서(Protocol)이다. 위의 난민조약에 따르면 남한정부는 탈북주민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전원 수용 보호하여야 한다.<sup>41)</sup>

### ② 동포에 차원

1992년 2월 19일 남북한간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서문에 남북한 관계를 특수관계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의 관계는 국제법의 적용과 함께 동포 내부의 문제로 간주될 수 있는 양측면을 함께 갖고 있으며, 특수관계로 보는 시각에서는 난민과 달리 동포에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 ③ 기본권 보장 차원

탈북주민들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들이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이들의 기본권이 정치적 선전 차원에서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존 탈북주민 정책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탈북주민에 대한 활용가치였으며, 관계법령 또한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sup>42)</sup> 이로 인해 탈북주민들은 상당한 기본권의 침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 및 보호기간의 설정과 이를 시행하는 기관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신상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언론에 의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41) 1951년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 대상은 ① 현재 외국에 체류하면서, ② 귀국하게 되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정치단체 소속을 이유로 박해가 예상되어, ③ 국적국(country of nationality)인 본국의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보호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 ④ 종전의 상주지(former habitual residence)였던 국가에로의 귀환이 불가능 또한 귀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42) 김상균, 앞의 논문, 47~48쪽.

### 3.1.3 국제협력 원칙

탈북주민은 북한 탈출 방법, 경로, 규모, 성격 등에 따라 국제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탈북주민 문제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의 세 관계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 ① 국제사회의 책임

탈북주민은 민족 분단의 산물이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냉전 구조의 산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주민의 남하시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지야 하며<sup>43)</sup> 남한정부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정부는 유엔을 비롯하여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 세계식량기구(WFP),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국제적십자사(IRC)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② 주변국과의 외교적 협력

북한주민의 탈출은 현실적으로 육로와 해로 그리고 제3국을 경유하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변국과의 협력의 문제는 남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경우보다 타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중요성을 갖는다. 군사분계선을 통한 유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북한 탈출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도시인 단둥, 집안, 장백, 로파, 삼합, 도문과 근접해 있는 북한의 신의주, 만포, 해산, 무산, 회령, 남양 등의 육로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외교적 협력체제가 요구된다. 이러한 협력체제는 탈북주민들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국제관례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 3.1.4 국민적 합의 원칙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sup>44)</sup>. 탈북주민 정책은 그 방향과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43) 이러한 견해는 타국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윌리스 오칼레에 인구·난민·이민 담당 차관보는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점을 제기하였다. 서울신문, 1996. 12. 21. 12쪽.

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주민들의 반발과 시행착오로 인해 탈북주민들의 적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탈북주민의 수용과 적정보호 수준의 결정은 국민적 합의가 요구된다. 탈북주민의 수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선별 수용에서 전원 수용으로 그리고 다시금 선별 수용으로 선회하였다. 이와 같은 잦은 방침의 변경은 정책의 혼선을 가져와 탈북주민들로부터 강한 불신과 반발을 사고 있다. 더구나 현재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000여명의 탈북자는 국제사회의 미아가 되어 가고 있다.<sup>45)</sup>

또한 탈북주민들의 적응을 위한 지원수준의 결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탈북주민 자신들은 정부의 지원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재정적 부담과 국내 저소득층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수준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3.1.5 형평성 원칙

탈북주민 정책은 남한의 여타 정책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 등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계층과의 형평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사할린 영주 귀국자와 같은 해외교포 귀국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더구나 잦은 법령의 개정으로 탈북 시기에 따른 지원수준에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탈북주민 상호간의 형평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① 탈북주민간의 관계

현재까지도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있다. 이들

44) 실제로 정책 수립과 시행은 현실적인 문제로서 정책결정자의 정책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은 국민과의 협조에 의한 공동생산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영, 『정책학신론』 (서울: 학현사, 1997), 106쪽 참조.

45)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도 정부는 선별 수용에서 전원 수용으로 그리고 다시금 선별 수용으로 정책 기조를 변화시켜 왔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떠돌고 있는 탈북주민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남한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인원이다. 특히 해외공관에 귀순을 신청한 탈북자들은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북한 국적이 확인된 상태로, 국내유입에 따른 국내적 장애 요인은 없는 상황이다.

중 상당수는 한국 대사관에 귀순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즉 남한정부는 활용가치가 높은 인사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유입된 탈북주민들에 대한 지원수준도 서로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탈북주민들의 지원수준은 탈북 시기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993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 적용되기 이전의 탈북주민과 그 이후 탈북주민간의 지원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탈북주민간의 갈등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② 남한주민과의 관계

탈북주민의 지원수준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과 관련하여 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탈북주민은 1962년 이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왔고, 1978년부터 1992년까지는 국가유공자에 비해 오히려 풍족한 혜택을 누리 왔다. 그러나 1993년 이후 그 혜택이 대폭 감소되어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탈북주민의 적정 보호수준은 계속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내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절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sup>46)</sup>

### ③ 해외교포 귀국자와의 관계

탈북주민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 지역 귀국 희망 교포들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 지역 동포들도 탈북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민족 분단의 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민족의 분단으로 귀국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다수의 동포들이 남한으로의 영주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sup>47)</sup> 또한 일부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그리고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 귀국하여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탈북주민과 영주귀국 해외동포의 지원수준은 함께 고려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남한정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 그리고 일본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할린 교포들을 제외한 중국·러시아 지역 동포들의 영주귀국을 제한하고 있다.

46) 박기갑, "북한탈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대한적십자사·대한국제법학회 공동 주최, 제15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발표논문, (1996. 11. 22), 20쪽.

47) 사할린 한인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할린 지역의 경우 1992년 당시 영주귀국 희망자는 현지 태생 2.3세를 포함하여 1만3천4백84명 이었다. 한국일보, 1997. 5. 22. 1쪽.



이로 인한 반발과 문제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탈북주민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이 정해진다면 중국·러시아 지역 동포들의 영주귀국을 제한할 명분도 상당 부분 희석될 것이다. 그것은 곧 영주 귀국자들의 증가로 연결될 것이다.

### 3.1.6 효율성 원칙

정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많은 자원과 인력 그리고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정부 정책은 적정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탈북주민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민관협동의 수준 그리고 담당부서의 선정 등에서 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효과 증대를 위한 방안과 비용의 경제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① 효율적 집행

탈북주민 정책의 기획 주체와 집행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는 효과성, 경제성 그리고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그리고 그 혼합형 이 세 가지의 유형을 제시해 볼 수 있다.

#### ② 효과성

탈북주민 정책의 효과성은 탈북주민 적용 프로그램이 구체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기획·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탈북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탈북주민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안정대책이라 볼 수 있다. 장기적인 생활안정 대책 없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책은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 ③ 비용의 경제성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소요되는 자원의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 그 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자원에 대한 규모와 조달 방법이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탈북주민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은 남한주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탈북주민에 대한 비용을 전액 국가의 부담으로

명시하고 있다.<sup>48)</sup> 그러나 인간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는 민관협동형 모델이 비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1.7 민족통합 원칙

탈북주민은 민족분단이라는 우리 민족의 암울한 역사가 가져온 산물이다. 그러나 이들은 민족통합의 시급성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수 십년을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단절된 생활을 해 왔던 남한주민들은 탈북주민들로 인해 극히 부분적이거나 서로를 느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탈북주민 정책은 민족통합과 통일을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탈북주민 정책은 통일 과정에서 대량 유입될 북한주민들에 대한 참고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통일 후 북한주민들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탈북주민은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 민족 화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들의 자립 기반은 통일 후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 가족들의 자립과 직결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탈북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이는 통일비용의 절감이라는 또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탈북주민에 대한 정책은 민족통합, 민족화합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 3.2 단계별 시행을 위한 기본방향

### 3.2.1 정착의지 제고

탈북주민 적응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나누어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 기본방향은 적응을 위한 전제조건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의 단계별 시행을 위해서는 탈북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착의지를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과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탈북주민 자신의 정착의지 제고, 남한정부의 적극적 정책의지 그리고 남한주민들의 이들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탈북주민들의 적응의지를 제고하기보다는 역기능적 요소를 갖는 부분이

4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비용의 부담).

있다. 이것은 탈북주민과 여타 주변적 요인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주가 되고 있다. 먼저 탈북주민 상호간의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과 불만은 정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고위직 출신 탈북주민은 정착금과 보로금 그리고 취업에서 월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반면에 일반 노동자나 하류층 출신 탈북주민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원을 받게 되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북한에서 상류층은 탈북 후 남한에서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북한에서 일반 노동자나 하류층은 여전히 열악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 상류층 생활을 했던 고학력의 고위 탈북주민은 남한에서도 강연, 저술, 호조건의 취업 등으로 생활환경이 좋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탈북주민은 강연 기회가 적고 취업도 어려워 여전히 생활환경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일부 탈북주민들은 동일한 정착금의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초 정착시 동일한 정착금을 지급하더라도 고학력의 고위직 탈북주민은 생활 수준이 쉽게 향상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의 탈북주민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활 수준의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다.<sup>49)</sup> 이와 함께 국내 저소득층과 보훈가족 그리고 사할린 영주귀국자의 경우처럼 분단으로 귀국하지 못했던 해외 귀국자와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sup>50)</sup>

### 3.2.2 제반 여건과의 조화

탈북주민의 제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는 제반 여건의 조화가 필요하다. 제반 여건은 탈북주민 적응 프로그램의 실행주체, 시설, 비용, 그리고 민간의 참여

49) 정보나 휴대물품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한 보로금 제도는 폐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제성호, “북한귀순자 보호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1호, (통권 제25호, 1996. 봄호), 79쪽. 탈북주민에 대한 보호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란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허만형, “남북통일에 대비한 북한난민의 적정보호 수준에 관한 연구,” 『국회보』 (1994. 9) 참조.

50) 탈북주민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 지역 귀국 희망 교포들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 지역 동포들도 탈북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민족분단의 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민족의 분단으로 귀국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다수의 동포들이 남한으로의 영주귀국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일부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그리고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 귀국하여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주민과 영주귀국 해외동포의 지원수준은 함께 고려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 현재 해외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영주귀국 정착금은 3천5백만원 수준이다.

수준 등을 의미한다. 탈북주민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차원에서 정책집행 주체가 선정되어야 하며, 관련시설은 경제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탈북주민의 적응 프로그램과 관련한 시설은 크게 기존 시설의 사용과 독립된 시설의 사용 및 보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각 단계의 여건에 따라 신축성있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군과 정보기관의 시설을 사용하여 왔으나, 탈북주민을 위한 수용시설이 이미 건설 중에 있다.<sup>51)</sup> 또한 유사시 탈북주민의 대량 유입을 대비해 군시설, 대한적십자사 시설, 공공시설의 활용 및 현재 증가하고 있는 폐교 활용 방안<sup>52)</sup> 등이 제시되어 있다.

탈북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제반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관계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탈북주민의 증가는 이러한 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비용의 부담과 조달에 대한 남한사회의 의견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sup>53)</sup> 따라서 적절한 비용의 산정과 조달방법 그리고 민간의 분담 정도가 적절히 제시되어야 한다.

### 3.2.3 단계별 특성화

탈북주민의 적응 프로그램을 각 단계별로 세분화한 것은 각 단계의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을 갖추기 위함이다. 교육내용과 그 교육목표는 심리적 갈등 해소기와 사회 적응기 그리고 사회 통합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탈북주민들의 심리적 상

51) 탈북주민 수용시설은 1998년 완공되어 1999년부터 탈북주민을 수용할 예정이며, 수용규모도 최초 100이명에서 500이명으로 늘어 나갈 방침이다. 조선일보, 1997. 5. 13. 2쪽.

52)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교육청은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폐교를 유사시 북한 난민 수용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교육청은 공익 또는 공공용, 주민 복리사업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폐교에 대한 배각을 금지시키는 공문을 일선교육청에 발송하였다. 매일신문, 1997. 3. 27. 1쪽, 1997. 3. 28. 25쪽. 일선 학교의 교실은 25평 규모의 콘크리트 건물로 상수도, 전기 등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유사시 탈북주민을 수용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53) 탈북주민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어 그 비용 조달방법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통일원은 「북한탈출주민 보호기금」(1조원 규모)의 신설을 주장하였으나 제정정계원은 이러한 기금의 신설을 반대하여 부산되었다. 제정정계원은 대규모 탈북 사태시 이는 비상상태로서, 이러한 상황은 국가제정으로 감당해야 하며 기금으로서의 곤란하다는 견해이다. 이로 인해 탈북주민 관련 비용의 조달은 정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론화되어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1996. 8. 19. 5쪽.

태와 교육내용의 습득정도에 따라 그 교육내용이 다르게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업훈련, 생활법률, 교육체계 등은 각 단계에 따라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각 단계별 교육 목표들이 각 단계에서 완성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교육내용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sup>54)</sup> 또한 적용 프로그램을 각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실시하는 것은 탈북주민들의 흥미를 유도하여 참여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따라서 탈북주민의 각 단계별 적용 프로그램은 그 대상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탈북주민들의 의견이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교육기간도 개인별 능력과 성취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sup>55)</sup>

### 3.2.4 대상별 분류

탈북주민의 발생배경과 개개인의 연령, 성향, 능력 그리고 적성과 관심사항 등에 따라 단계별 실시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즉 탈북주민의 여러 배경들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을 분류해야 한다.

분류의 기준은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출신지역, 출신배경, 적성, 관심사항, 가족 구성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교육 대상의 분류는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단계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족단위, 연령, 경력, 적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가족단위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용 프로그램도 개별 탈북주민과 가족단위 탈북주민으로 나누어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가족단위의 교육은 독일의 경우에서도 효과적이었음이 밝혀졌다.<sup>56)</sup> 가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우리 민족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의 채용은 유용성이 크다고 본다.

54) 이금순·송정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방안,”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81쪽.

55) 위의 책, 81쪽.

56) 독일의 바이에른주는 이주민들을 가족단위로 언어, 학교 그리고 직업교육을 총괄적으로 실시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가족단위의 교육 프로그램은 이주 초기 이주민 가족의 심리적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어 이에 대한 호응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정우·김형수,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82쪽.

탈북주민 적응 프로그램의 대상을 분류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연령일 것이다. 즉 각 세대에 따라 대상을 분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본다. 세대에 따라 북한에서의 사회화 과정에 차이가 있으며, 남한에서 소속하게 될 집단과 그 활동영역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대이론가들은 청년기에 갖게 되는 중요한 역사적 경험에 따라 형성되어진 기본적인 정치적 가치관이나 정향은 나이가 든 뒤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청년기의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20대, 30대, 40대 등의 단순한 연령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경우에도 전전 세대와 전후 세대의 비교를 통해 두 세대간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57)</sup> 또한 세대별 태도와 행태에 관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세대적인 접근방법의 유용성을 뒷받침하고 있다.<sup>58)</sup>

세대별 분류는 취학전 세대, 취학세대(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경제활동세대, 비경제활동세대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 비경제활동인구(주부 등)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에서의 사회화 정도에 따른 분류이며, 이와 함께 남한의 사회구조와 현실적인 사회집단들의 분류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적응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도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현 탈북주민 정책도 탈북주민들을 각 지방으로의 분산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 3.3 적응단계의 구분

#### 3.3.1 단계 구분의 필요성

탈북주민의 발생은 남북한의 관계와 북한정세 그리고 국제정세에 따라 그 성격과 규모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탈북주민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역시 차이를 보일

57) Chung, Jin Min and John Nagle, "Generational Dynamics and the Politics of German and Korean Unification," *Western Political Quarterly* 45 (December, 1992), pp. 851-868.

58) 이러한 접근방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경험적 연구들은, Glenn, Norval and Ted Hefner, "Further Evidence on Aging and Party Identific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36 (Spring, 1972), pp. 31-47. Barnes, Samuel and Max Kasse,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Beverly Hills: Sage, 1979). Inglehart, Ronald, *The Silent Revolut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7). Inglehart, Ronald,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0). Abranson, Paul and Ronald Inglehart, "Generational Replacement and Value Change in Six Western European Societ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 (January, 1986), pp. 1-25. 을 들 수 있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은 남북대치상태에서의 탈북주민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과 남북자유왕래상태 그리고 통일상태에서의 탈북주민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은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대치상태에서 발생하는 탈북주민의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남북대치상태에서 발생한 탈북주민의 적응 프로그램과 그 적응성과는 남북자유왕래상태와 통일상태에서 발생한 탈북주민들의 적응에 크나큰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탈북주민의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단계는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구분하고 있으나 제 단계를 거쳐야 함은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질적인 사회에 대한 적응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점은 이미 이민과 난민 등 여러 사례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다.

각 단계별 구분은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되기도 한다. 탈북주민들은 탈북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적응 프로그램도 그 변화 과정에 따라 단계를 설정할 필요가 생겨난다. 왜냐하면 각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적응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단계별로 특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3.3.2 적응단계의 설정

현재 정부는 탈북주민 처리과정을 크게 3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발생입국단계, 보호관리단계, 배출정착단계로 나누고 있다. 이미 관계법규에 따라 각 단계별 정부 부처간 업무범위와 책임과 권한을 확정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59)</sup>

#### ① 발생입국단계

- 초기조사와 신변안전조치 등 보호신청과 송환교섭- 안기부와 외무부
- 보호결정-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와 안기부(예외적 경우)
- 입국시기, 방법 결정과 발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 입국심사- 법무부

59) 서울신문, 1997. 1. 24. 2쪽. 조선일보, 1997. 1. 24. 4쪽.

## ② 보호관리단계

- 소양교육 등 정착준비과정- 통일원, 교육부, 내무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학교교육,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등을 담당

## ③ 배출정착단계

- 취업알선- 노동부,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
- 생활 · 의료보호- 보건복지부
- 교육지원과 거주지보호- 통일원, 교육부,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 분담

이와 같이 그 업무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어 있으며 이들의 전체적인 관리업무는 통일원이 맡고 있다.<sup>60)</sup> 정부는 탈북주민 처리과정을 3단계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정부부처간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적응 프로그램으로 볼 수는 없다.

최근 들어 구체적인 탈북주민 적응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연구성과도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개별연구자들의 전공영역에 따라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즉 심리적 차원, 정신의학적 차원, 사회복지 차원, 사회적응 차원 등 특정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심리학자인 한 연구자는 탈북주민의 적응단계 모형을 사회적응 단계와 심리적응 단계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사회적응 단계는 ① 이질사회 충격 단계 ② 기초취업 준비 단계 ③ 생활정착 단계 ④ 재사회화 단계 ⑤ 문화 사회적 통합 단계의 5단계로 분류하였으며, 심리적응 단계는 ① 환경인식 혼란기 ② 자기효능 갈등기 ③ 생활장면 대처기 ④ 대인관계 동화기 ⑤ 새 정체성 확립기의 5단계로 분류하였다. 특히 이를 실제적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그 구체적인 과정별 내용까지 마련하였다. 그 과정별 단계는 도입과정, 용해-조정과정, 정리-통합과정, 적응-종결과정, 추수과정으로 나누어 12마당 36시간으로 구성하였다.<sup>61)</sup> 그는 탈북주민의 사회적응 과정을 재사회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다.

60) 통일원의 직제상 탈북주민의 정책및 사후관리, 보호시설 관리 등 탈북주민에 대한 업무는 인도지원국이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지원국내 지원1, 2과 담당이다.

61) 구체적인 내용은 이장호, "북한출신 주민(탈북자포함) 심리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성곡논총』 제 28집 4권, (서울: 성곡학술문화재단, 1997) 참조.



또한 사회복지전공의 한 연구자는 탈북주민들의 심리사회적 상태의 변화에 따라 적응단계를 다음의 4단계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① 심리적 갈등기(1-3개월) ② 직업훈련기(6-12개월) ③ 사회적 적응기(6-12개월) ④ 사회적 통합기(6-12개월)로서 적응에 소요되는 기간은 19-25개월이다.<sup>62)</sup> 이외에도 별목공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연구에서는 ① 심리안정기(약1개월) ② 직업훈련 및 생업을 위한 준비기(3-12개월) ③ 사회정착기(취업에서 첫아이 출산시까지)의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sup>63)</sup>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탈북주민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사회적응 측면과 심리적응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탈북주민의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은 이론적으로는 여러 측면으로의 분류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측면들이 모두 탈북주민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적 적응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해서는 탈북주민의 적응과정을 시계열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단일한 적응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을 크게 사회적 적응단계와 심리적응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① 심사시기, ② 심리적 갈등 해소기, ③ 사회 적응기, ④ 사회 통합기로 구분한다. 이는 탈북주민들의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적응과정의 문제점들을 통해 구성한 것이다.

또한 탈북주민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은 탈북주민 발생전 제반 여건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적응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서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준비시기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62) 김동배,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발표논문, (1996. 5. 21), II-13쪽.

63) 김상균, "우리의 수용태세와 장기방안," 『북한 탈출동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94. 4. 26), 50-51쪽. 이외에도 탈북주민의 적응과정을 단계별로 설정한 연구로는 윤양중, 『탈북·귀순자 수용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5)가 있다. 여기에서는 ① 심리적 안정기 ② 생활정착기 ③ 생활지도기 ④ 자기개척기 ⑤ 자기발전기의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 3.4 적응단계

### 3.4.1 준비시기

탈북주민 적응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여건들이 성숙되어야 하며 그 세부적 사항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큰 혼란이 야기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탈북주민 적응 프로그램 시행 전 선결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보호기준

남한정부는 탈북주민을 수용함에 있어 자의적 판단기준을 적용시켜 왔다. 관계법규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의한 수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활용가치, 관련국과의 관계 등 정치적 판단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의 탈북주민에 대한 원칙이 선별수용→전원수용→단계별 선별수용→전원수용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탈북주민은 인도주의와 민족에 차원에서 전원수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한적으로 선별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남한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할 경우 수용은 하되 일반 탈북주민과 달리 그 지원수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이 인도주의적이라 본다. 또한 현재의 관련법규는 보호기준을 명시하여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sup>64)</sup>, 이들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 수용은 하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하지 않는 방안이 요구된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사례

6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보호이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을 말한다(시행령 제14조). 1.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압호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자 2. 북한의 노동당·정무원·군사회안전부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자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자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 기타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 또한 보호결정의 기준(제9조)과 관련하여 다음의 해당자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항공기 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이탈협약자 4.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5. 기타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에 대해 시행령 제16조는 '보호결정시 정치·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의 중대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는 수용은 하되 기본적인 지원은 교회와 같은 민간단체가 전담하는 형태로 해결하였다.

탈북주민에 대한 수용 여부는 탈북주민의 적응을 위한 첫단계이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세부적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② 보호시설

탈북주민의 발생 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군 및 정보기관의 시설이 이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정보사(대성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과정을 마치고 기본적인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직업훈련 등을 위해 일부는 민간시설에 위탁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군 및 정보기관의 시설을 사용하여 왔다.

1990년 이전 탈북주민의 발생 수는 매년 10여명 내외였으며, 1994년 이후 50여명으로 급증하였으나 이러한 소규모의 발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용시설로써 가능하였다. 그러나 점차 그 발생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군 및 정보기관에서의 생활이 탈북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용시설의 건립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현재 500여명 수용규모의 전용시설이 건립 중에 있다.

하지만 대규모의 탈북주민 발생에 대비하여 전용시설 이외의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군 및 공공시설, 대한적십자사의 시설, 학교시설, 전용시설 추가건설, 폐교 활용, 사회복지관, 전문직업훈련원, 대학시설, 종교시설, 민간연수원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민간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수용시설의 문제는 심사시기에서부터 사회에 진출하여 생활하는 모든 시기에 걸쳐 있는 문제이므로 각 단계별로 유기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안이 요구된다.

## ③ 전문인력

탈북주민들을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적응시키는데는 여러 전문인력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탈북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갈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상담심리전문가, 법률적 지식을 조언해 줄 법률 전문가, 사회복지, 취업, 의료, 조사 및 분류 등 각 분야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이들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까지는 정부 내 유관부처의 관계자가 전담하였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

고 있다. 특히 소홀히 다루어졌던 상담 서비스, 법률 서비스, 직업상담 등은 민간 전문가의 지원이 절실한 분야이다. 이와 함께 초기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모두 군·경 및 정보기관 소속원들이어서 탈북주민들이 이에 반감을 갖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이들에 대한 조사와 분류단계에서 부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민간과 정부 관계자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며, 이들 인력의 발굴 및 육성이 요구된다. 더구나 대량 탈북사태를 대비하여 장기적인 전문인력 확보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④ 공개기준

탈북주민들에 대한 공개적 기자회견은 이들의 적응에 중요한 심리적 부담을 가져다 준다. 탈북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의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자신으로 인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탈북주민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고민을 외면하고 있다. 이로써 탈북주민들은 가족에 대한 죄의식으로 큰 고통을 감내 하며 생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지역의 탈북자 중 국내유입을 꺼리는 원인의 대부분은 자신의 국내 입국이 가족들에게 가져다 줄 피해를 우려한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탈북주민에 대한 신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원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언론공개 방식은 이들의 적응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이들을 활용가치로 판단하는 정책의 산물이었다. 더구나 이들에 대한 신원공개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노출시켜 불미한 사건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sup>65)</sup> 또한 탈북주민의 지나친 강연활동도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주어 적응에 애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66)</sup> 따라서 탈북주민의 신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인 공개기준도 엄격히 마련해 두어야 한다.

65) 김정일의 전치 성해립의 조카로 알려진 이한영은 그 신분을 고려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성해립 탈북과 관련하여 언론에 공개된 직후 폐살되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탈북주민들은 신원의 위협으로 고통을 받았다. 조선일보, 1997. 2. 26. 37쪽.

66) 전우태·민성진,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탈북자의 삶』 (서울: 오름출판사, 1996), 37쪽.

### ⑤ 지원수준

관련법규는 연령, 세대구성, 학력, 경력, 자활능력, 건강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67)</sup>

탈북주민에 대한 지원수준은 남한의 경제사정과 적응력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수준이 높았던 1993년 이전 탈북주민에 비해 그 지원수준이 축소된 이후의 탈북주민은 그 적용 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3년 이전 탈북주민의 지원수준은 국내 저소득층 지원수준과 비교해 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sup>68)</sup> 더구나 탈북주민간에도 탈북 시기에 따른 지원수준의 차이로

6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68) <생활보호대상자 현황과 선정기준>

대상자 현황		(단위: 천명)					
구분	년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계		2,246	2,176	2,001	1,902	1,755	1,506
인구비례(%)		(5.2)	(5.0)	(4.5)	(4.3)	(3.9)	(3.3)
거택보호자		338	338	338	320	307	296
시설보호자		82	83	83	81	78	76
자활보호자		1,826	1,755	1,580	1,501	1,370	1,134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1996년 기준)					
구분	법정요건	기준(소득·재산)		보호내용	금액		
거택보호자	65세이상, 18세미만,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인으로서는 근로능력 및 부양가족이 없는자	소득(1인당월평균) 2십만원이하		백미, 정맥,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월1인당평균 106,541원		
시설보호자	노인, 아동등의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재산(세대당) 2,500만원 이하		백미, 정맥,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월1인당평균 92,102원		
자활보호자	근로능력이 있으나 실업, 생계수단의 상실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자	소득(1인당월평균) 21만원이하, 재산(세대당) 2,700만원이하		학비지원, 생업자금융자			

출처: 보건복지부, 1996년 『보건복지백서』, 440-41쪽. 재구성.

위의 자료를 살펴보면 탈북주민은 자활보호자에 준하는 범위에서 지원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월 평균지급액은 최저생계비의 80% 수준에 해당된다. 정부는 1997년 최저생계비의 90%, 1998년에는 100%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휴대장비나 정보에 따라 지급하는 보로금 제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즉 북한에서의 상층계층은 많은 보로금 지급으로 인해 남한에서도 여전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일반 노동자 출신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sup>69)</sup> 따라서 보로금은 폐지되어야 하며, 정착금도 그 액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생업자금융자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보호수준을 설정해 두어야 한다.

⑥ 정착지 배정기준

전용시설에서의 숙소배정은 가족단위, 성별, 연령, 성분별, 출신지 등 동질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또한 정착지 결정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보호내용별 비교표>

내 용		생활보호대상자			탈북주민
보호분야	보호종류	시설보호	거택보호	자활보호	
생계보호	주거지원	○	X	X	○
	생계비지원	○	○	X	○
	정착금	X	X	X	○
	취로사업	X	○	○	X
자립보호	직업훈련	X	X	○	○
	취업알선	X	X	○	○
	생업자금융자	X	X	○	X
의료보호	의료보호	○	○	○	○
교육보호	학비지원	○	○	○	○
기타지원	장제보호	○	○	○	X
	해산보호	○	○	○	X
	경조비	X	X	X	*○

출처: 허만형, "남북통일에 대비한 북한난민의 적정보호수준에 관한 연구," 『국회보』 (1994. 9), 114쪽.

\* 탈북주민에 대한 경조비 지급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 생일 등에 2-3만원씩 지원해 주었으나 최근 재정상의 이유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에 나타나듯이 남한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및 거택보호대상자는 생계보호 중심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자립보호는 받지 않고, 자립보호대상자는 자립 중심의 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생계보호는 받지 않지만 탈북주민은 둘다 보호받고 있다.

69) 보로금의 지급대상은 전체 탈북주민 중 소수에게만 해당되고 있다. 전부기 조종사, 고위급인사 등 휴대물품과 정보가치를 가진 자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업의 경우 기본 정착금은 일반 탈북주민과 같은 액수를 받았으나 그 정보가치를 인정하여 보로금은 상한가인 2억5천만원이 책정되어 함께 3억여원을 지급 받게 된다. 조선일보, 1997. 10. 2. 2쪽.

러나 이러한 기준은 부분적인 소규모의 배정 원칙일 뿐이다. 전체적인 정착지 결정은 분산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탈북주민의 분산은 그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으나, 탈북주민의 집단 거주 및 집단세력화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의 분산 수용이 요구된다.<sup>70)</sup> 또한 수용시설, 직장알선 등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지방분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탈북주민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으로의 분산이 불가피하다.

지방으로의 분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산업구조, 위치, 인구, 탈북주민의 희망, 이산가족의 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분산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위의 기준에 준하여 기초자치단체별로 재분산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각 지방자치단체별 배정기준은 수용시설 등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⑦ 비용조달

탈북주민 적응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탈북주민 관련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였다. 그 형태에 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탈출주민 보호기금」과 같이 기금의 신설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국가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떠한 형태이든 탈북주민에 대한 비용은 통일비용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즉 통일비용을 미리 지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보호기금의 형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대규모 유입을 예상할 경우는 국가예산의 형태가 현실적인 유용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국가의 비용부담 원칙 아래 민간의 비용 부담율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⑧ 안내책자 및 참고교재

탈북주민 적응 프로그램에는 각 단계별로 다양한 안내책자와 교재 그리고 참고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참고교재는 북한전문가, 교육학자 등이 분야별로 집필하여 적응

70) 집단 수용의 문제점은 팔레스타인 난민수용소의 사례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독일도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각 주의 인구규모와 경제사정에 따라 분산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프로그램 실행 담당자들과 협의 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자에는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관련 실무자용 그리고 남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다양한 안내책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sup>71)</sup>

#### ⑨ 남한주민의 포용교육

탈북주민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적응의지와 정부의 효율적인 적응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남한주민들의 탈북주민들에 대한 태도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탈북주민들을 초기에 직접적으로 접하는 적응 프로그램 실행 인원들의 태도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태도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남한 생활이 어려운 이유를 탈북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위의 무관심과 냉대(36.8%), 친척이나 친구가 없음(23.7%)으로 나타나 남한주민들의 이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sup>72)</sup> 이러한 결과는 남한사회에 대한 부적응으로 연결되기 쉽다. 따라서 남한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탈북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포용적 자세를 갖도록 하는데 언론매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남한주민들의 태도가 먼저 변화되어 있어야 한다.

### 3.4.2 심사시기( ~7일)

심사시기는 탈북주민이 발생한 순간부터 기초적인 조사와 심사 그리고 분류작업을 마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탈북주민들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남한에

71) 독일 이주편을 위한 자료로는, 「동독으로부터의 탈출민 및 이주민을 위한 안내」(연방내무성), 「독일 연방공화국으로 이주 환영」(연방내무성), 「실업자를 위한 리프렛」(연방고용청), 「이주민을 위한 학업 프로그램」(Otto Benecke재단), 「이주민의 연금」(연방사부원보회청), 「청소년 이주자 안내」, 「초기 안내」, 「도로방 및 주소 리프렛」 등이 있다. 또한 해외이주자를 위한 자료로는, 「해외이주자 안내-독어-노어-폴란드어로 발간」(연방내무성),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이주 환영」(연방내무성), 「국적 및 이름 등록 문제에 관한 안내」(연방내무성), 「실업자를 위한 리프렛」(연방고용청), 「Langenscheidt 사전 <해당 언어-독어>」 등이 발간되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이외에도 각종 자선단체들이 제공하는 자료도 다양하다. 이들은 사회복지, 학교교육, 직업교육, 취직, 정착지원 등 주로 실질적인 생활안내에 중점을 두었다.

72) 박종철 외, 앞의 책, 78쪽.



대한 첫 인상을 결정하는 시기이므로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더구나 심사시기는 주로 관계규정에 따라 조사와 분류작업을 하는 단계이지만 차후의 적응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와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중요한 자료를 축적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이 시기는 신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적으로 7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진행속도에 따라서는 그 기간을 단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는 기초적 자료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 기간은 짧게 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시기에 유의할 점으로는 탈북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깨뜨릴 수 있는 언행은 삼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탈북주민들은 관계 기관의 조사 보호기간 동안의 인권침해에 대해 저항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강요당하면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불만스러워 하고, 출소·관리·심문·활용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강한 저항감을 표출하고 있다. 탈북주민들의 선별을 위한 과정에 이들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이들과 관련된 용어도 저항감을 줄일 수 있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사시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므로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주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탈북주민들이 북한에서의 교육 때문에 군 및 정보기관 요원들에 대해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어 첫 조사에서부터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탈북주민들은 군 및 정보기관 시설에서의 조사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탈북주민들의 성격에 따라 조사장소와 방법도 신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당·군·정보요원과 일반 탈북주민은 분리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의 내용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신원, 탈북배경, 숙소배정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 서비스와 간단한 건강진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와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탈북주민들에게 먼저 안내책자를 배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안내책자에는 앞으로의 일정과 지원내역, 남한사회 소개, 상담 서비스 제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후 조사항목이 담긴 서식이 있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이 시기 적응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 3-1>과 같다.

<표 3-1> 심사시기 프로그램 내용

내 용	주 체	장 소	방 법	소요기간	비 고
신원 -성명,성별,생년월일,출생지,거주지,가족관계,출신배경,탈북일	운영위원회	전용시설, 특별시설	면담, 서류심사	첫째날	우선순위 안내책자
학력 및 경력 -학력(세부전공),사회경력, 문경력,자격소지	"	"	"	입국 10일 이내	자격인정 여부확인
직장경력 -직업,직무,근무경력,이직	"	"	"	"	
탈북배경 -탈북동기,탈북경로	"	"	"	첫째날	위장귀순선별
적용여건 -직성,가족구성,희망직업,희망거주지,이산가족,소유재산,사상성	운영위원회, 전문기관 의뢰	적성검사 전문기관, 전용시설	면담, 서류심사, 정밀검사	연장가능	이산가족확인, 사상검토
건강진단 및 기초치료	"	의료기관	관련규정	관련규정	안내책자
특이사항 -범죄경력,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전용시설 특별시설	면담, 서류심사	연장가능	건의사항 조사
보호여부 및 보호장소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	관련규정	10일 이내	전원수용 분산원칙
공개여부	"	"	"	"	비공개 원칙
자원내역	심사위원회	"	"	"	평등원칙
일정 및 지원내역소개	운영위원회	전용시설 특별시설	서면, 주제발표	"	안내책자
남한사회소개	"	"	강의,방문, 사칭각	"	"
상담서비스	"	"	면담,서면	계 속	"
입시신원증명서발급	"	"	직접발급	10일 이내	"
숙소배정	"	"		첫째날	

심사시기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 원

탈북주민의 신상을 파악하는 부분이다. 항목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가족관계, 출신배경 등이다.

## ② 학력 및 경력

탈북주민의 학력, 사회경력, 군경력, 자격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학력의 경우 유치원, 인민학교부터 최종학력까지 조사하며, 세부전공과 학교생활 중 특이사항, 즉 상벌과 교외활동 등도 포함한다. 군경력이 있을 경우 복무기간, 계급, 근무부대, 병과 등이 포함된다.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남한에서의 인정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자격취득 여부도 확인한다.

## ③ 직장경력

탈북주민의 북한 생활시 직업유무, 근무경력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구체적인 직무를 파악한다. 또한 전직의 경험이 있을 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 ④ 탈북배경

가장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항목은 탈북동기이다. 탈북동기는 위장 탈북주민을 선별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파악하는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경유한 탈북주민이 증가하면서 북한의 특수목적을 가진 위장 탈북주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원인은 정착지 분산과 구체적 적응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한 주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탈북 경로도 파악해 두어야 한다. 위장 탈북주민에 대한 선별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져야 하므로 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이 주도하여야 한다.

## ⑤ 적응여건

탈북주민의 적응력 제고를 위해 파악하는 항목들이다. 여기에는 탈북 시의 가족 구성 여부, 희망직업, 희망거주지, 이산가족 존재 여부, 휴대물품 및 소유재산, 적성, 사상성 등을 파악한다. 사상성은 공산주의 이념과 북한체제에 대한 지지 수준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체적 적응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

## ⑥ 건강진단 및 기초치료

탈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외상의 정도를 파악하며, 특히 전염병의 보유 유무를

확인하여 적리 여부와 치료기간을 결정한다. 이는 군 및 공공의료기관 그리고 지정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대규모 탈북을 대비해 민간의료기관 중 선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⑦ 특이사항

프로그램의 실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범죄경력,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요구사항을 검토한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하며, 그 결과는 통지한다.

#### ⑧ 보호여부 및 보호장소

정부유관부처와 민간단체 그리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 운영위원회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사안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전원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위장 탈북주민은 선별하여 별도 조치한다. 또한 보호장소는 보호시설의 사정에 따라 분산을 원칙으로 한다.

#### ⑨ 공개여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 운영위원회는 기준에 따르며, 사안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⑩ 지원내역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탈북주민들에 대한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어야 한다. 지원내역은 모든 탈북주민에게 동등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지 가족 구성 여부, 연령, 건강 등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⑪ 일정 및 지원내역 소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내역을 설명하며, 추후의 일정을 설명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이는 안내책자를 통해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 ⑫ 남한사회 소개

기본적인 남한사회에 대한 소개를 한다. 강의보다는 시청각과 현지견학 방법을 사용한다. 이 시기의 말기에 1-2일 정도 산업체, 대학 캠퍼스, 박물관, 문화유적, 백화점, 시장 등을 견학한다. 견학장소는 남한의 경제발전을 인식할 수 있는 장소, 문화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 ⑬ 상담 서비스

탈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심리, 정신의학 전문가로 하여금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을 담당하도록 한다.

#### ⑭ 임시신원증명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을 기재한 임시신원증명서를 발급한다. 임시신원증명서는 보호시설 내에서 사용하며, 관리의 편의를 위해 제작 사용한다.

#### ⑮ 숙소배정

숙소배정은 가족단위, 성별, 연령, 성분별, 출신지, 희망사항 등 동질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이와 함께 탈북주민간의 마찰 방지와 보호관리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배정한다.

### 3.4.3 심리적 갈등 해소기( ~2개월)

심리적 갈등 해소기는 이질적인 사회체제로 인한 혼란과 신변불안, 장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친척들에 대한 죄의식 등으로 심리적 갈등과 불안이 유발되는 단계이며, 또한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며, 초보적인 남한사회 실상과 그 적응방법을 교육함이 이 시기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심리적 갈등 해소기에는 적응을 위한 심리적 제반 서비스와 행정·법률적 서

비스 그리고 초보적인 남한사회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 운용 기간은 운영위원회가 탈북주민의 발생 규모에 따라 신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탈북 이후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와 함께 각 프로그램 내용들의 우선 순위와 일정 및 시간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리적 갈등은 발생 초기에 해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탈북주민은 그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탈북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sup>73)</sup>과 갈등을 일으키므로, 이 시기는 전원 전용시설에서의 교육과 생활이 요구된다.

심리적 갈등 해소기는 탈북주민들의 적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심리적 안정이 확보되는 단계이므로 실질적인 남한사회 적응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심리적 갈등 해소기 동안의 성과가 이들의 적응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전원이 전용시설에서 생활하여야 하며, 모든 프로그램의 운용은 지역사회내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심리적 갈등 해소기의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표 3-2>와 같다.

<표 3-2> 심리적 갈등 해소기 프로그램 내용

내 용	주 체	장 소	방 법	소요기간	비 고
상담서비스	전문요원	전용시설	면담, 서면	계속	시설내상주
법률서비스	"	"	"	"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	"	"	"	
의료서비스	의료기관	관련시설	방문, 의뢰	"	시설내상주
이살가족제회	전문요원	지정시설	방문, 면회	"	
진로선정 신로상담, 직업상담, 직업적 성검사, 작종소개, 직업선정, 취업정보, 기능자적시험안 내, 영농정착소개, 진학지도 등	유관기관협 조(노동부, 교육 부, 동원수산부 등), 전문요원	전용시설	면담, 검사, 안내문, 현장방문	기간한정	우선순위는 운영위원회 결정, 기존탈 북주민활용

73) 탈북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은 정신병리적 측면에서 볼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에 기인한다고 한다. 이는 '극심한 위협적인 사건(예를 들어, 강간, 폭행, 전쟁,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경험한 다음에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이라 정의되고 있다(이정관, 「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1994). 탈북 후에 나타나는 정서적인 불안정은 이러한 충격이 심리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장호, 앞의 논문, 751쪽.

내 용	주 체	장 소	방 법	소요기간	비 고
취학·진학및직업훈련 안내 -훈련필요여부,훈련기관알선, 훈련과정소개,영농교육과정	"	전용시설	면담, 안내문, 현장방문	"	
거주지선정 -거주시설,정착지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사,발표	최종순위	
기본생활교육 -교통,우편,통신,금융,교육 체계,가치관,언론,생활에 절,행정구역,생활체육, 여가생활 등 자본주의생활양식 -화폐가치,재산관리, 소비행태 등	운영위원회	전용시설 관련시설	안내문,강 연,시청각, 현장실습	기간한정	
동질성회복 -역사,언어,전통문화, 국가상징 등	"	"	"	"	
민주시민교육 -자유민주주의이념, 제도,실태 등	"	"	"	"	
정치제도 -선거관리위원회,정당, 국회,감사원 등	"	"	"	"	
종교생활	"	"	안내책자	"	종교별안내
운영및생활수칙 -전용시설 운영과 생활수칙	"		안내문,강 연,시청각	우선순위	
적응수준평가	"	전용시설	평가기준	상시평가	미비점보완

심리적 갈등 해소기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상담 서비스

심사시기를 마치고 전용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 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상담 및 정신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 팀이 개별 또는 집단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전용시설에서의 일정과 그 이후의 진행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신변안전과 장래에 대한 불안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탈북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이들의 경험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유용할 것이다. 상담전문가와 기존 탈북주민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특히 상담전문가는 시설 내 상주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 서비스는 지역사회내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하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sup>74)</sup> 이 시기 탈북주민은 신변에 대한 불안감,

74) 상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전문가 양성체제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전문가 확보와 이를 위한 양성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은 물론 대학원에서도 상담을 집중

북한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이 주로 나타나며, 애로사항의 창취를 통해 이를 세밀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 ② 법률 서비스

법률 서비스는 국적취득, 호적취득, 신분보장 그리고 남한사회에서의 법률 상식에 대한 내용을 주로 제공한다. 특히 북한 법률과의 대비를 통해 이해를 쉽게 해야 하며, 법률지식 부족으로 탈북주민들이 겪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 서비스는 대한변호사회, 지역변호사회 등 지역사회의 법률전문가 단체와 법률 전공 대학교수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 각 지역 조직을 갖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 본다.<sup>75)</sup>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의 전용시설 근무도 가능한 방법이 될 것이다.

## ③ 사회복지 서비스

국민에게 주어지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적 회복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지역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남한의 사회복지제도와 그 지원수준, 형태 등을 교육해야 한다. 또한 그 이용방법과 탈북주민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을 우선 알려주어야 한다. 지역 사회복지기관으로서 대표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은 전국적으로 312개소에 달하는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을 들 수 있다. 각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7-8명씩 근무하고 있다. 이들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전용시설 근무가 필요하다.

## ④ 의료 서비스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시되는 의료보험제도는 역시 자격취득의 요건이 갖추

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해도 관련과목이 많지 않아 전문가 양성과정으로서의 미비하다는 평가가 많다. 상담학은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아동학, 신학, 정신의학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75)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 47개의 지부·출장소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배치되어 상당 부분 무료 변론을 맡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은 농어민, 월평균 수입 1백만원이하 근로자 및 영세민, 국가보훈대상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등이다. 또한 민사·가사·사건만이 아니라 형사사건도 구조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어져야 한다. 이 시기의 의료 서비스는 전적으로 국가의 부담이다. 이 시기에는 남한의 의료체계와 의료보험제도 그리고 지원수준과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간 내 지속적인 건강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며,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이산가족재회

탈북주민들과 남한에 있는 가족들과의 재회는 인도주의적 차원을 떠나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이산가족과의 만남은 심리적 안정을 가져와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이산가족들의 경제적 물질적 지원을 통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산가족이 없는 탈북주민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재회의 시기와 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심리적 갈등 해소기가 지난 이후 남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들의 요구와 탈북주민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탈북주민을 이산가족에게 인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⑥ 진로선정

심리적 갈등 해소기에는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종소개, 직종선정, 취업정보제공(근로조건,고용동향 등), 기능자격 시험 안내, 영농 정착 소개, 진학지도, 학업 적성검사 등을 실시하여 진로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노동부, 중소기업청, 전경련, 교육부 등에서 전문인력을 지원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남한에 정착 생활하고 있는 기존 탈북주민의 사례 발표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진로선정은 크게 취업과 취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연령, 적성검사 결과와 경력, 교육수준, 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진로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산업 및 영농 시설을 견학한다.

### ⑦ 취학·진학 및 직업훈련 안내

진로선정 단계에서 취학·진학이 결정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지도과정을 안내해야 한

다. 취업이 결정되었을 경우 직업훈련 필요 여부 결정, 훈련기관 알선, 훈련과정 소개, 영농교육 과정 소개 등을 하여야 한다. 직업 훈련 기관을 방문하여 그 과정을 직접 체험케 한다.

#### ⑧ 거주지 선정

진로 결정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거주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거주지 선정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그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여기에는 이산 가족의 희망, 본인의 희망, 세대구성, 직장, 지방배분의 원칙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⑨ 기본생활교육

남한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관공서, 교통, 우편, 통신, 금융, 교육체계, 가치관, 언론, 생활에절, 행정구역, 생활체육, 여가생활 등에 대한 소개와 이용법을 교육한다. 그 방법으로서는 안내책자, 강연, 시청각, 현장 견학 등을 이용한다. 특히 TV 드라마를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다. TV 드라마는 현재 남한의 생활 실태를 꾸밈없이 보여주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탈북주민들의 교육 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기존 탈북주민들도 TV 드라마를 통해 남한사회 실상의 많은 부분을 배웠다고 한다<sup>76)</sup>. 이러한 방법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시청 후 진행자와의 토론을 통해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탈북주민들은 남한생활 초기 화폐가치, 재산관리, 소비행태(의식주) 등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분야이므로 적응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대한 지식 미비는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 또한 영화나 TV 드라마 등 시청각 자료의 이용이 효과적이며, 은행, 증권사, 국세청, 백화점, 시장 등에 대한 현장 견학이 필수적이다.

76) 탈북주민 김용은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보면서 나는 남조선 사회의 질반을 배웠다. 현대 도시인들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이러는지, 남편과 아내의 역할 관계, 그리고 점차 드세어져 가는 여성들의 압김이 그 속에 잘 드러나 있었다'고 적고 있다. 김용, 『머리를 빼는 남자』 (서울, 자작나무, 1993), 307쪽.

### ⑩ 동질성 회복

남북한은 50년 넘는 단절 상태로 제 분야에 대한 이질감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탈북주민들은 남한주민들과 쉽게 동질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질감을 해소하고 동질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언어 그리고 전통문화를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라 본다. 단일민족은 단일한 역사와 언어, 그리고 전통문화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역사와 언어 그리고 전통문화에서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면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질성 회복을 촉진시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남북한 언어의 차이뿐만 아니라 탈북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한문과 일상적인 외래어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와 애국가, 무궁화 등에 대한 유래와 의미를 소개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 ⑪ 민주시민교육

탈북주민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이념, 제도, 실태, 그리고 민주시민의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 제 분야에 대한 견학도 필요하다. 즉 탈북주민에 대한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적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적응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부정책 방향이다. 즉 특별관리 차원에서 건전한 시민육성 차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sup>77)</sup> 독일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사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고 하겠다.

### ⑫ 정치제도

남북한은 정치제도와 그 운영원리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생활을 소개하고 그 주요 기관들을 견학한다. 특히 정당, 국회, 지방의회,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경찰서, 감사원 등을 견학하고 그 기능을 인지하도록 한다.

77) 김석우, 앞의 글, 7쪽.

### ⑬ 종교생활

탈북주민들에게 종교는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종교단체가 탈북주민들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탈북주민들도 종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종교생활은 탈북주민들의 적응력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북주민들에 대한 종교생활은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 종교단체와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특히 특정 종교에 편중되어서는 안되며, 지나친 포교활동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 ⑭ 운영 및 생활수칙

운영위원회는 전용시설 내 생활수칙을 마련하고, 외출, 면회, 외박 등 여가생활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생활수칙은 탈북주민들의 의견청취 과정을 통해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각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과 전문요원을 선정하는 등 제반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⑮ 적응수준 평가

심리적 갈등 해소기의 전과정을 통해 수시로 이들의 애로와 특이사항은 파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과정의 최종 단계에서는 이들의 적응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비비한 탈북주민과 지원자에 대해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심리적 갈등 해소기의 소요기간은 8주의 일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정서적 안정도모와 진로선정, 그리고 기본생활교육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교육단위를 세대별, 성분별, 가족단위 등 신속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청각 교재와 현상 진학 방법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기능과 업무가 특히 중요성을 갖는 시기이다. 특히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성과 진행을 맡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심리적 갈등 해소기를 마치면 독립생활이 가능하다. 특히 이산가족 동거 가능, 취학, 단순직종 취업, 자영업, 비경제활동인구 등 직업훈련과 보수과정, 심화과정 등을 받지

않는 탈북주민들은 개별 정착지에서 생활할 수 있다.

#### 3.4.4 사회 적응기( ~14개월)

사회 적응기는 직접적인 남한 생활을 하면서 남한사회에 적응해 가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 남한주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시작하게 되며, 남한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실제 운영원리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과 직업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사회 적응기에는 주거문제와 희망직업이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진로와 희망직업에 대해서는 탈북주민의 교육수준과 가족구성, 기술습득수준, 적성, 적응수준 그리고 국내의 제반 사정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준비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시기부터는 정착지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가족구성세대, 단순 노무직 등 취업자, 자영업자, 취학연령자, 비경제활동인구, 남한측 이산가족의 주거지원자 등은 개별 정착지로 주거지를 결정하고 전용시설을 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원, 보수교육기관, 취학예비학교 등에 입소할 자들 중 개별 주거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는 전용시설이나 직업훈련원 주거지 등에서 사회 적응기를 맞아야 한다. 즉 사회 적응기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희망자, 자격인정자 보수교육, 취학예비학교 대상자, 심화과정 대상자 그리고 희망자 등에게 주로 적용된다. 그밖에 전용시설 이외에서 개별 거주를 시작한 탈북주민들은 제반 서비스는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접촉증대 프로그램 위주로 적용된다. 즉 직업훈련, 이산가족재회, 보수교육, 예비학교 심화과정, 종교생활 등은 전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자와 희망자에 한해 적용된다.

사회 적응기는 탈북주민 발생으로부터 14개월 이내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소요기간의 산정은 직업훈련기간과 기초적인 남한 생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즉 직업훈련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 과정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 과정이 1년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은 직종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취학자를 위한 예비학교는 그 운영기간과 내용을 학기 시작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격인정자들을 위한 보수교육도 각 자격종의 종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관련단체에 의뢰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사회 적응기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 3-3>과 같다.

<표 3-3> 사회 적응기 프로그램 내용

내 용	주 체	장 소	방 법	소요기간	비 고
행정법률절차	운영위원회	관계기관	직접,대행	제2단계수료후	전문가 지원
상담서비스	전문요원	진용시설, 상설기관	방문,면담, 서면	계 속	
법률서비스	"	"	상담,대행, 빈문	"	행정법률 절차대행
사회복지서비스 -실업보험,국민연금, 의료보호,생계보호, 자립보호,교육보호 등	관계기관	"	방문,면담, 서면	"	사회복지 제도편입
의료서비스 -의료보험,의료보호	의료기관	"		"	"
이산가족재회	전문요원	"	통신,면회	"	
직업훈련 -직업결정,직업훈련,양동 기술,직업윤리교육 등	관계기관 의뢰	"		직종별 결정	
보수교육 -자격,민회,경력	"	"		종류별 결정	군인출신 포함
예비학교 -취학전,초중고대	"	"		개학시기와 연계	
정착지보호	"	정착지		특이상황, 본인희망	안권침해 없는 범위
주거지원	운영위원회	지방분산	임대지원	정착자 결정후	특립생활 우선지원
접촉증대	운영위원회	관련시설	직접참여	본인희망	민관협동 신청수용
심화과정	"	"	"	운영위원회 결정	적용수준별 편성
종교생활	본인희망				질문추진
적용수준평가	전문기관	진용시설	평가기준	상시평가	중요시점 재평가

사회 적응기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행정법률절차

탈북주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적 갈등 해소기 과정을 이수하면 남한주민들과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탈북주민은 국적, 호적, 주민등록증 등 법률

행정적 제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후 독립적 생활을 시작하는 탈북주민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착지원금과 지원물품을 받을 수 있다.<sup>78)</sup> 이러한 과정은 법률전문가의 지원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상담 서비스

이 시기의 탈북주민들은 독립적인 정착 생활을 시작한 경우와 직업훈련이나 독립적인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해 여전히 전용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남한주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증가하므로 이들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갈등의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들은 업무 능력, 교육수준 등의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과 그로 인한 좌절감 등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족을 갖지 못한 탈북주민은 외로움을 더욱 느끼게 되며, 북한에 가족이 남아 있을 경우 심각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세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탈북주민들의 거주지가 지방으로 분산되므로써 각 지역 전문기관과의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탈북주민들에 대한 개별적 방문을 통한 서비스도 가능할 것이다.

## ③ 법률 서비스

탈북주민들은 법률 지식의 미비로 인해 겪게 되는 피해가 상당히 많음을 호소하고 있다.<sup>79)</sup> 그러나 이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더구나 탈북주민들은 법률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사례 발생 시 그 구제수단의 이용방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직접적인 구제수단으로서의 변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탈북주민들의 국적, 호적취득 등 행정 법률적 절차에 대한 지원과 대행도 맡아야 할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각 지역별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무료이용이 가능하므로 탈북

78) 정착지원금은 현물의 형태가 주가 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은 가족구성, 연령,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정착지원금은 형평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하며, 일시금보다는 분납이 효과적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또한 형평성과 적응력 제고를 위해 직업훈련, 보수교육, 예비학교, 심화과정을 이수 중인 탈북주민에게도 일정액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79) 조선일보, 1996. 12. 26. 11쪽.

주민들의 법률적 지식의 미비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사회복지 서비스

공적부조, 생활보호대상자 제도, 실업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복지보장제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이용방법을 설명한다. 이 사기의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는 남한주민과 같은 체제에 편입되어야 한다. 단지 경제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반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인 부담분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태는 실제 생활 속에서의 체험을 통해 의타심을 버리고 독립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탈북주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제도는 생계보호(주거지원, 생계비지원, 정착금), 자립보호(직업훈련, 취업알선, 생업자금융자),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탈북주민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정착금의 지급보다는 생업자금융자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단 국내 기존 보호대상자들과의 형평성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관련기관과 각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별로 할당하여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 ⑤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는 남한주민들과 동일하게 의료보험제도와 의료보호제도<sup>80)</sup>에 편입된다. 단 개인 부담분은 경제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가 부담한다. 또한 의료체제와 그 이용방법을 실습을 통해 습득하도록 한다.

#### ⑥ 이산가족제회

이산가족에 대한 제회는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산가족제회는 경찰청, 내무부, 이북

80) 의료보호는 의료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복지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자력으로 의료분체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국가제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이다. 의료보호대상은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그리고 탈북주민 등이 포함되나 그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을 선정해 두고 있다. 1996년 현재 보호대상자는 전 인구의 3.8%인 174만명에 이른다. 보건복지부, 1996년 『보건복지백서』, 235-36쪽.



5도민회,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산가족 존재시 이들 가족내에 탈북주민이 수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산가족이 탈북주민의 주거지원 등을 담당하게 되면 적응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재정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단시일에 탈북주민을 남한내 가족과 친인척에게 인계한다.

### ⑦ 직업훈련

직업결정, 직업훈련 실시, 영농 기술교육, 직장생활(직업윤리)안내 등이 이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전 단계에서 결정된 직종에 따라 직업을 선정하고 그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직장생활의 안내뿐만 아니라 올바른 직업윤리도 습득케 한다. 직업훈련은 각 지역별로 분산 실시되어야 하며, 그 지역의 산업구조와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직업훈련은 국가 직업훈련기관과 민간 직업훈련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⑧ 보수교육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과 면허는 관계규정에 따라 인정하되 남한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 군인, 공무원, 교원 등의 경력을 가진 탈북주민에게도 보수교육의 기회를 주어 자신의 경력이 남한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보수교육은 관련단체 및 관계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교육기간은 교육의 내용과 과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⑨ 예비학교

취학대상 탈북주민에게는 학교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해 예비학교를 운영한다. 예비학교는 그 해당 인원에 따라 각 지역별 또는 전용시설 내에 취학전, 초등·중고등·대학반<sup>81)</sup>으로 나누어 개설한다. 개설기간은 개학시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한다.

81) 탈북주민의 교육지원 수준은 국내 저소득층과 연계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국내 생활보호대상자의 교육 지원수준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취학연령기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가난이 세습되지 않고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학비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979년에는 중학생까지 대상이었으나 1987년부터는 거택보호자와 면지역 이하에 거주하는 자활보호의 실업계 고교생까지 확대되었다. 1990년에는 전 지역의 실업계 고교생으로 확대되었고 1996년부터는 인문계 고교생(성적상위 30%이내)까지 확대되었다.

### ⑩ 정착지 신변보호

사회 적응기에는 전용시설을 떠나 개별 정착지에서 생활하는 탈북주민과 여전히 전용시설 또는 직업훈련소 등에서 생활하는 탈북주민으로 나뉘게 되어 이들의 신변보호는 더욱 어렵게 된다. 남한내에 있는 이산가족에게 인계된 경우 이들의 보호는 그 가족원과 관계기관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협적인 상황이 전개되거나 본인과 가족의 요구 사이에는 경찰과 관계기관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⑪ 주거지원

탈북주민은 전용시설에서 사회 적응기를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지원, 직업의 종류, 세대구성, 연령 등에 따라 개별적인 정착지가 결정된 경우 주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먼저 이산가족과 해당 기업체 그리고 사회봉사단체와 종교단체 등 각종 민간단체들의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부족할 경우 국가는 주거지의 지역,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거주지를 임대하여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주거지원 내역은 심사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주거생활을 위한 각종 물품의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이 역시 민간단체의 지원이 요구된다.

### ⑫ 접촉증대

탈북주민과 남한주민들간의 접촉증대를 통해 일체감을 형성하고 적응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수행한다. 특히 거주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참여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지역 사회의 많은 단체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단체나 기관으로서는 대학, 박물관, 언론사, 사회교육원, 봉사단체, 조기축구회, 산악회, 연극단 등의 취미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이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최근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sup>82)</sup>

82)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체제적응연구센터는 8주과정으로 「남북통합교실」을 개설하고 있다. 「민족통합교실」은 남한의 분야별 전문가와 탈북주민이 2인 1조로 강의를 진행하며, 수강생 또한 남한주민과 탈북주민이 혼재되어 있다. 현재 3기생의 교육이 진행중이며, 2기까지 남한주민 49명, 탈북주

그러나 지역 사회의 다양한 단체와 행사 등에 대한 참여는 적응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그리고 개개인의 적응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선별적으로 유도하는 이유는 적응수준과 지역사회 행사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⑬ 심화과정

심리적 갈등 해소기에 실시한 적응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분야별 심화과정을 운용한다. 심화과정은 희망자와 심사위원회의 권고자가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구체적 교과내용은 대상자들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둔다. 심화과정의 교과내용은 크게 기본생활교육(관공서, 교통, 우편, 통신, 금융, 교육체계, 가치관, 언론, 에티켓, 생활체육, 여가생활 등의 내용과 이용법 등), 동질성 회복(역사, 언어, 전통문화, 국가의 상징 등), 민주시민교육(자유민주주의 이념, 제도, 실태 등), 자본주의 생활양식(화폐가치, 재산관리, 소비행태 등), 정치제도(선거, 정당, 국회, 법원, 경찰, 감사원 등), 심리적 안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효과는 어떠한 교육방법과 소재를 사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독일은 시청각 교재의 활용으로 큰 효과를 보았다. 한국의 경우에도 문화적 이질성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서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TV드라마는 현재 남한주민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남한사회의 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시청각 교재로 사용될 수 있다.

### ⑭ 종교생활

종교선택은 자유이지만 탈북주민의 적응력 제고에 종교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종교생활을 권장한다. 또한 종교단체와 각 탈북주민간의 결연을 추진하여 탈북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안정도 갖도록 한다.

---

민 20명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적 과정이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면 이러한 기관에 위탁 교육을 의뢰할 수도 있을 것이다.

### ⑮ 적응수준 평가

단계별 적응수준의 평가는 다음 단계의 세부적인 교과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사회 적응기가 마치면 탈북주민은 남한사회에서 남한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적응수준을 재평가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 3.4.5 사회 통합기( ~24개월)

사회 통합기는 탈북주민들이 남한사회의 일원으로서 남한사회에 통합되는 시기이다. 탈북주민들이 이방인, 소외자로 남게 된다면 이는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통합기는 직장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그 구성원들과 갈등 없이 조화를 이루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즉 자신에게 적합한 직장을 갖게 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자세를 갖도록 해야 한다.

사회 통합기는 탈북주민 발생으로부터 2년간의 시기를 선정할 수 있다. 이는 사회진출 후 1년여의 시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사회진출은 언령, 경력, 희망직업 등에 따라 그 시기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입국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은 대부분의 탈북주민들이 남한주민들과의 생활을 적어도 1년여 정도 경험한 시점이 된다. 또한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현실적 기간도 고려되었다. 더구나 외국의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과 난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도 대부분 24개월을 넘지 않았다는 것도 참고되었다.<sup>83)</sup> 사회 통합기는 특히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와 접촉의 증대를 통한 일체감 형성이 요구되는 단계이다. 지역사회의 학교, 시민단체, 종교단체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직장 내의 친목단체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동화될 수 있도록 한다. 사회 통합기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 3-4>와 같다.

83) 미국의 경우 월남전 이후 많은 동남아 지역 난민들을 수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특별보호를 해왔다. 그 기간은 초기 3년에서 18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12개월로 줄어났다. 이러한 보호기간의 단축은 정부의 지원수준이 높아 이것만으로도 본국의 생활에 비해 만족감을 느낀 난민들이 근로의욕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Mann Hyung Hur, *Economic Self-Sufficiency: A Study of Southeast Asian Refugees in Colorado*, University of Colorado, Ph. D Dissertation, 1990, p. 3, Paul J. Strand and Woodrow Johnson, Jr., *Indochinese Refugees in America: Problems of Adaption and Assimilation*, Durham, North Carolina: Duke University Press, 1985 참조.

&lt;표 3-4&gt; 사회 통합기 프로그램 내용

내 용	주 체	장 소	방 법	소요기간	비 고
상담서비스	전문요원	상설기관	방문,면담,서면	계속	지역전문 기관연계
법률서비스	"	"	상담,변론	"	"
사회복지서비스 -실업보험,국민연금, 의료보호,생계보호, 자립보호,교육보호 등	관계기관	"		"	사회복지 제도편입
의료서비스 -의료보험,의료보호	"	의료기관		"	"
이산가족재회	"			"	세대구성
취업지원	"	관련시설		"	민관협동
영농정착지원	"	농어촌	우선지원		영농후계자
학교생활지원	교육기관		상담,지원	수준별	특별학급
주거지원	관계기관	지방분산	임대	정착즉시	이산가족 지원유도
정착지보호	"			기간 한정	
종교생활	본인희망				적극유도
일체감형성 -집촉중대,남한주민교육	관련단체	관련시설	참여,견학 등	계속	적극유도
통일대비교육	"	"		"	사명감 고취
적용수준평가	전문기관	"	평가기준	기간 설정	
특별프로그램	전문기관	"		"	해당자 한정

마지막 단계인 사회 통합기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상담서비스

이 시기의 탈북주민들은 개별 정착지에서 생활하며, 직장과 지역사회에 편입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남북한 사회의 이질적인 요인들로 인해 탈북주민들은 심리적으로 여전히 외로움, 죄책감, 열등감, 좌절감 등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 더구나 이 시기는 직장이나 지역사회내에서 많은 교류와 접촉을 하게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주된 상담내용은 직장 내 애로사항, 전직상담, 가족문제, 애정관계, 결혼, 청소년 문제, 자녀 교육, 가정교육, 진로고민 등이 될 것이다. 탈북주민들이 각 지방에 분산되어 생활하고 있으므로 상담 서비스는 각 지역 전문기관의 협조 하에 직접 방문, 통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법률 서비스

탈북주민들은 법률 지식 부족과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법률 서비스는 법률상담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해줄 수 있도록 직접적인 변론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후원 및 자원 변호사 단체의 결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회 각 지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면 실질적인 구제와 저비용의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사회복지 서비스

탈북주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제도는 생계보호(주거지원, 생계비지원, 정착금), 자립보호(직업훈련, 취업알선, 생업자금융자),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보로금 제도의 폐지와 정착금의 축소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은 생업자금융자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sup>84)</sup>

탈북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 사회복지제도에 편입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이들은 이미 국적을 가진 지역사회의 주민이므로 지역주민들 특히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북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은 본인에 한해 고등학교 과정까지 지원하며, 대학과정은 민간단체와의 결연을 통해 지원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심적인 역할은 관계기관의 전문인력과 지역사회종합복지관 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 역시 의료체계에 편입되어야 한다. 즉 그 직업과 소득수준 등에 따라 의료보험제도와 의료보호제도에 편입되어야 한다. 의료 서비스 역시 민간 관련단체들의 지원을 통해 의료보호제도의 비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관련 민간단체로서는 각 지

84)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알선 외에 이들에게 소규모의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자영업을 권장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정부에서는 1982년부터 재정자금특별회계에서 매년 50억원을 확보하여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을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200만원 한도로 연리 10%, 2년지치 3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해 주었다. 1987년 이후 사업비 및 용자한도액을 계속 확대 인상하였으며, 조건도 연리 6%, 5년지치 5년 상환으로 조정하였다. 1995년에는 한도액 9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한 세대수는 4,989세대로 1989년 9,322세대보다 감소되었다. 한도액은 1996년부터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역 약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병원협회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지역 보건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 ⑤ 이산가족재회

남한에 이산가족이 있는 경우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는 측면을 떠나 취업과 거주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이북5도민회, 대한적십자사 등이 상설부서를 두어 전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북한 지역에 남아 있는 탈북주민의 가족들에 대한 연락과 재회, 지원 등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역할을 대행하는 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sup>85)</sup>, 탈북주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탈출시켜 입국시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⑥ 취업지원

사회 통합기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취업여부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적응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계기관, 특히 노동부,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 그리고 전경련,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모든 관계기관들이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취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취업을 위해서는 정확한 직업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취업의 경우 직업훈련 실시 이전부터 탈북주민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적성과 희망을 파악하여야 하며, 남한의 경제구조에 따른 산업분류와 직업분류가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sup>86)</sup> 이를 참고로 탈북주민들의 북한에서의 직업과 희망직업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남한에서

85) 최근 민간단체인 「한겨레 상봉회」는 조선족을 통해 실향민 25명의 소재를 확인하였으며, 이들 가족의 중국에서의 상봉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7. 9. 12. 31쪽.

86) 한국 표준 산업분류에 따르면 ㉠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건설업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등으로 대분류되며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재분류를 하고 있다. 또한 한국 표준 직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는 ㉦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전문가 ㉨ 기술공 및 준전문가 ㉩ 사무직원 ㉪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 장치,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단순노무직 근로자 ㉯ 분류불능자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의 직장을 알선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 탈북주민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혜택을 제시하여 이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 ⑦ 영농정착지원

탈북주민의 지방분산 원칙과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고령화 등 낡은 농촌의 사정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으로의 정착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현행 농민후계자 제도를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현행 관련법규<sup>87)</sup>에도 규정하고 있으나, 농협, 축협, 농촌지도소 등의 지원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탈북주민 중 농어민 출신이 없었다<sup>88)</sup>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로서는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특히 탈북주민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곳에 왔는데 여기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식도 상당 수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토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과 통일 이후 영농기술자로 북한 지역의 농촌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욕을 가진 탈북주민<sup>89)</sup>도 있어 농촌지역으로의 정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간단체의 주도로 시범적 차원에서 탈북주민의 농촌 정착이 추진되고 있다.<sup>90)</sup>

### ⑧ 학교생활지원

예비학교를 마치고 개학과 함께 학교생활을 시작한 탈북주민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학교별 또는 지역별로 특별학급을 편성하거나 상담교사, 전담교사 등의 선정을 통한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 필요성과 기간 등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한다.

8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88) 통일원,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 (서울: 통일원, 1994), <표 3> 귀순자의 직업별 분포.

89) 한민족복지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지역의 탈북주민 정착촌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탈북주민과 필자와의 면담내용임.

90)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민족복지재단은 순수민간단체로서 탈북주민들에게 영농기술과 사회 적응 훈련을 시킬 농촌형 정착마을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입야 11만 4천 2백평을 매입하여 올 9월경 20여명의 탈북주민을 입주시킨 예정이다. 또한 그 규모를 100여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도 갖고 있다.



### ⑨ 주거지원

사회 통합기에는 모든 탈북주민이 직업과 분산원칙에 따라 각 지역으로 분산된다. 이에 따라 주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주거지원은 탈북주민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그리고 근무 기업체 등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 그 구체적 기준과 절차 등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⑩ 정착지보호

탈북주민들은 그 특수한 신분상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정착지에서의 신변보호가 뒤따라야 한다. 사회 통합기 동안은 본인의 희망과 현지 사정에 따라 주의 깊은 관심이 요구되나 그 이후는 일반 치안체계에 편입되어야 한다. 현재 경찰이 담당하는 2년여의 거주지보호는 그 성격상 보호와 지원의 성격보다는 관찰과 감시의 성격이 더 크다고 하겠다. 24시간 동행해야 하는 현재의 보호방식은 지나친 경찰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잦은 탈북주민과의 갈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탈북주민에 대한 위협이 상존해 있고, 이들의 지방분산에 따라 가장 직접적인 보호활동이 경찰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의 보호업무를 폐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여 심사위원회의 특별보호 결정이나 본인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⑪ 종교생활

종교활동은 개인의 자유선택에 의한 개인활동이다. 그러나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종교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소개하고 종교단체와의 결연을 통한 각종 지원활동을 펼친다. 이미 각 종교단체들은 탈북주민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지나친 선교위주의 활동은 오히려 적용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 ⑫ 일체감 형성

사회 통합기는 탈북주민들과 남한주민들이 같은 지역 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서로의 활발한 교류와 접촉을 통해 이질감을 해소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관계로 정립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탈북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언론사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들은 연극단, 산악회, 조기축구회, 봉사활동, 종교활동, 생활체육, 시민강좌, 대학 부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탈북주민들을 적극 포용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 언론, 시민강좌 등을 통해 탈북주민들에 대한 포용적 자세를 남한주민들에게 함양시켜야 탈북주민들의 적응을 제고시킬 수 있다.

### ⑬ 통일대비교육

탈북주민들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은 통일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을 예비적으로 실행한다는 측면을 갖고 있다. 또한 탈북주민들이 통일 역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들에게 이러한 사명감을 심어 주어 적응의지를 높여 줄 필요가 있다.

### ⑭ 적응수준 평가

직정 수준의 적응이 이루어지면 그 지원수준을 축소하거나 적용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적 운용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법규는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sup>91)</sup> 그러나 위의 규정은 제도적·경제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심리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원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도 상담 서비스 등 지원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응수준 평가결과 부적응 사례가 발생할 경우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그 원활한 적응을 도와야 한다.

### ⑮ 특별 프로그램

적응수준 평가결과 적응수준이 현저하게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와 희망자에 대해서는

9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시행령」 제48조.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획한 경우 6. 5급이상 공무원·영관급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7. 교수·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8. 모로금을 포함하여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추가적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 통합기 프로그램 실시 과정 중과 기간 종료시 등에 실시하는 평가결과에 따른 특별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과 기간 등은 심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사회 통합기는 탈북주민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시기임을 의미한다. 즉 이 시기 이후의 탈북주민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 한정된다. 그러나 탈북주민에 대한 지원내용과 그 기간은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최장 지원기간은 24개월로 설정하되 그 기간 이내의 근로소득과 적응수준 등을 고려한 정기적 평가결과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지 않고 자발적 적응의지를 고양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 지원수준을 줄여 나가야 한다.

적응평가 결과 사회 통합기 이후에도 자립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는 사회복지체계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하여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sup>92)</sup> 탈북주민 적응 프로그램의 지원기간과 지원내용은 탈북주민의 안정된 정착과 자립의지의 확립이라는 기본방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지원은 탈북주민들의 안정된 정착을 저해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재정적 부담은 물론이고 탈북주민들의 의타심을 높여 주며 적극적인 자립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 통합기 이후의 모든 제반 서비스는 사회복지체계에 편입되어야 하며 그 비용도 원칙적으로는 수혜자 부담이 되어야 한다. 단지 신변보호와 심리적 서비스 등은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 외의 지원체계는 종교, 사회단체 등 민간단체들과의 자발적인 결연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운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탈북주민들의 집단세력화를 경계해야 한다. 탈북주민들의 정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들은 잠재적 불만세력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들이 조직적인 집단세력화를 꾀한다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92) 허만형, “남북통일에 대비한 북한난민의 적정보호수준에 관한 연구,” 『국회보』 (1994. 9), 120쪽.

## 4. 탈북주민 적응 프로그램의 단계별 실행주체

### 4.1 실행유형 분류

탈북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모델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탈북주민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은 정부 관계기관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정부의 배타적 운영과 민간의 참여 배제로 인한 문제들이 야기되면서 그 실행주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가장 효과적인 적응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가장 경제적·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적응 프로그램의 기획, 집행, 비용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는 효과성, 경제성, 그리고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탈북주민 남한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실행유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효율성 보장, 전문인력의 확보, 비용부담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적응 프로그램은 적정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고려될 수 있는 유형으로는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그리고 민관협동형이 있으며, 이들의 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효과적인 적응 프로그램의 구성을 들 수 있다. 탈북주민 정책의 효과성은 탈북주민 적응 프로그램이 구체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기획,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탈북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탈북주민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안정대책이라 볼 수 있다. 장기적인 생활안정 대책 없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책은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과 적성·능력에 맞는 직업의 알선이 요구된다. 직업교육은 남한 내의 경제상황과 연계되어야 한다. 그 사회의 경제 메커니즘을 무시한 직업교육은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탈북주민의 적성, 교육수준, 희망 그리고 남한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직업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농촌지역으로의 정착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이 최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 채택되어야 한다.

셋째,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 그 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에 대한 규모와 조달방법이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탈북주민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은 남한주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탈북주민에 대한 비용을 전액 국가의 부담으로 명시하고 있다.<sup>93)</sup> 그러나 탈북주민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정부부처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sup>94)</sup> 이로 인해 적정비용에 의한 최대 효과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간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는 민관협동형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주민에 대해 소요되는 재원은 통일비용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현재 통일기금의 조성·사용 등 여러 방안들이 제기되어 논의되고 있다.

탈북주민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의 실행유형은 크게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그리고 그 혼합형인 민관협동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유형의 장단점과 남한사회의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탈북주민 적응 프로그램의 실행유형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단계별 실행주체는 정부주도형, 민간주도형, 민관협동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관협동형에 따르고자 하며, 더욱 구체적으로는 '정부주도 민간보조형 모델'에 따라 구성되었음을 밝힌다.

#### 4.1.1 정부주도형

정부가 기획과 집행 그리고 비용을 전액 담당하는 형태이다. 정부주도형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왜곡되지 않은 채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정부주도의 적응 프로그램의 수행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심사시기 이후 관계기관의 요원들에 의해 실시되어 왔던 기존의 사회적응교육은 비효율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sup>95)</sup> 그 이유로서는 첫째, 신분조사 기관이 적응교육을 담당하므로써 교육의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탈북주민들로부터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주체가 전문교육기관이 아닌 관계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어려웠다.

9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비용의 부담).

94) 정부는 99억원의 예산을 들여 1998년까지 500여명의 탈북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 시설을 위해 1997년 예산에 33억4천만원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예산협약과정에서 재정경제원은 통일원이 신청한 시설 건립비용 46억 4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나, 국회에 관련법률이 상정된 이후 위의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이처럼 정부부처간 의견을 달리할 경우 재원확보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95) 이금순·송정호, 앞의 논문, 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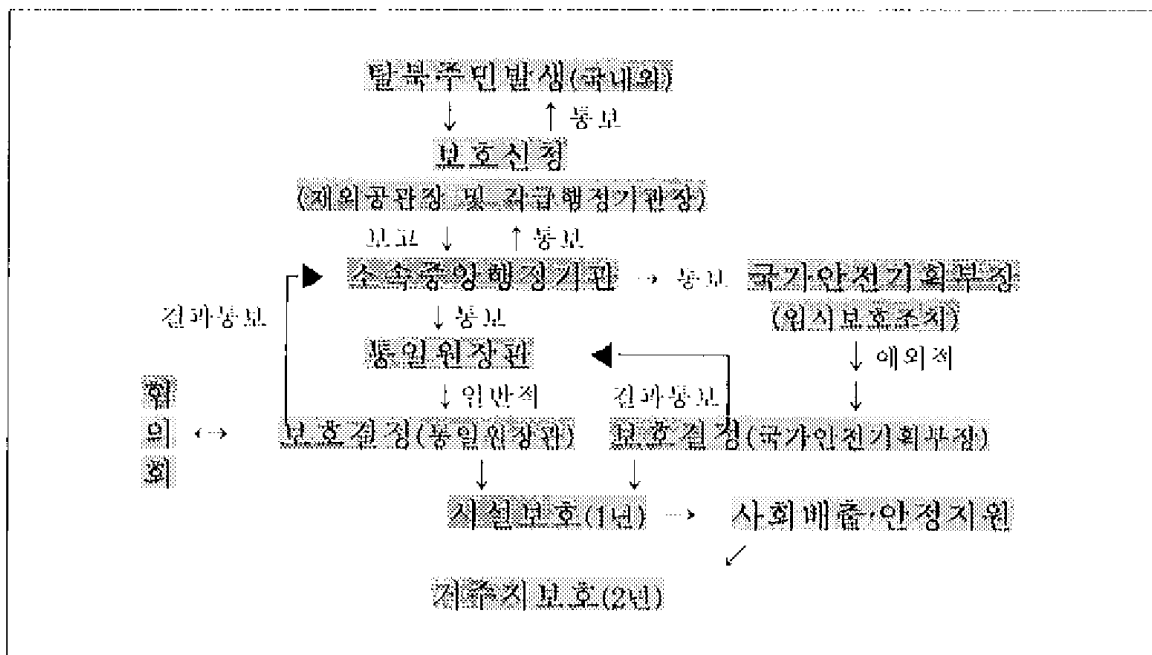
셋째, 교육과정의 폐쇄성으로 인해 민간의 참여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탈북주민들의 희망과 요구사항 등이 반영되지 못하는 획일적 운영방침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주도형 모델은 비용부담과 전문인력의 부족, 남한주민들과의 접촉기회 차단 등으로 일체감 형성이 지연되어, 결국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주도형은 탈북주민의 규모가 소수이고 탈북주민들이 개별적 특수한 입장을 갖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뿐 탈북주민의 규모가 증가하고 이들의 출신배경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는 많은 문제를 표출하게 된다.

정부주도형은 지방정부의 역할 정도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형과 지방정부 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독립된 전담기관의 존재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한의 현재까지의 탈북주민에 대한 정책은 정부주도형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탈북주민에 대한 정책은 탈북주민의 발생에서부터 안정된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 부문을 국가가 전담하고 있으며, 단지 일부의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각 단체의 성격에 따라 극히 보조적인 역할을 하여 왔을 뿐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탈북주민 지원 체계도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4-1> 탈북주민 지원 체계도



탈북주민 지원체계를 밝힌 위의 <그림 4-1>은 정부의 지원체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에서 나타나듯이 탈북주민의 보호신청에서부터 거주지보호까지 제 단계가 국가에 의해 주도되도록 되어 있다. 민간의 참여는 단지 거주지보호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 4.1.2 민간주도형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형 모델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민간주도형은 정부의 공식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로서 각종 민간단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민간주도형은 국가의 정치적 부담, 재정부담, 전문인력 부족, 시설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지의 반영이 곤란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의 고유한 목적이 우선적으로 개입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통일적인 집행의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인 체계를 조정하고 관리할 능력의 부족이 나타나게 된다.

더구나 종교단체들의 경쟁적인 참여는 선교를 의식한 주체측의 무리한 요구들로 인해 마찰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또한 탈북주민들 상호간의 지원수준에 격차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고 이는 부적응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민간의 참여 범위는 부분적 제한적 범위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특히 탈북주민의 문제는 정부유관부처의 협력과 통일대비 차원이라는 정치적 의미도 함축된 것으로서 민간의 주도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 4.1.3 민관협동형

##### 4.1.3.1 민관협동형 특징

민관협동형 모델은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의 혼합형으로서 그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이다. 정부주도형의 단점에서 나타나듯이 탈북주민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민간단체의 참여는 심리적 안정 확보, 인력지원, 재정지원, 시설지원 그리고 탈북주민들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이해 증진이라는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민관협동형은 민간과 정부의 협동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탈북주민과 관련해서 정부는 전체적인 기획과 비용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탈북주민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민간단체가 주로 담당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탈북주민의 참여의지, 심리적 안정, 실질적 지원효과 그리고 국민들의 호응도, 정체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탈북주민 정책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판단된다. 특히 탈북주민 정책에 민간단체가 참여하게 되면 이는 곧 탈북주민들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고 더구나 정부주도로 인한 탈북주민들의 심리적 거부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sup>96)</sup>

탈북주민들이 남한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관심(호의, 사랑, 연민), 수단적 도움(재화, 용역), 주위환경에 대한 정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의 내용을 내포하는 대인적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sup>97)</sup>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민간단체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기존 남한정부는 정부주도형 모델에 따라 탈북주민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적 기조는 민관협동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남한의 탈북주민 적응 프로그램은 민관협동에 의해 실시될 전망이다. 즉 향후 정책의 영역은 정부가, 지원의 영역은 민간이 상호 역할 분담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sup>98)</sup> 정부는 번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기구로서 16개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통일원차관이 주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정책의 기본 구조로 설정하였다. 정부는 민간 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

96) 탈북주민들의 수용과 그 지원수준에 대해 남한 내의 일부 계층은 저항감을 갖고 있다. 특히 국내 저소득층의 반발을 야기시킬 수 있으나 민간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한주민들의 냉소적인 태도가 이들의 적응과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조사와 심사과정에서도 강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 주체가 정보기관이라는 점과 그 조사과정이 포로 심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점에 있다. 민간단체가 참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심리적 저항감도 상당 부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97) 사회적 지지에 대한 논의는 J. S. House,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 A.: Addison-Wesley, 1981) 참조.

98) 김석우, 앞의 글, 7-8쪽.



장하고 있으나 민간단체의 활동을 조직화하고 활성화시키는 주된 역할을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탈북주민정책은 정부주도 민관협동 모델이라 할 수 있다.

#### 4.1.3.2 민관협동형의 종류

민관협동형은 정부와 민간의 협동과 역할 분담의 정도에 따라 정부주도 민간보조형과 민간주도 정부보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99)</sup> 그러나 그 구체적 역할분담의 내용은 정부의 재정상태, 시설확보,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민간단체의 현황과 민간의 참여의지 그리고 국민정서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의 방침은 정책의 영역은 정부가 담당하고, 지원의 영역은 민간이 맡아 상호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체적인 기획과 프로그램의 조정은 정부가 담당하지만 민간은 비용분담, 시설제공, 전문인력 제공 등을 통해 탈북주민의 심사시기에서 사회 통합기까지 전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형태이어야 한다. 따라서 구분을 한다면 핵심적 사항인 전체적인 기획과 프로그램의 조정역할을 정부가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주도 민간보조형 모델'이 탈북주민 적응정책에 필요하다고 하겠다.

#### 4.1.3.3 총괄기구

탈북주민에 대한 정책은 그 사안의 성격과 통일대비적 차원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국가의 주요 시책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정책상의 전체적인 기획과 조정업무를 맡아야 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총괄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탈북주민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는 통일원이 맡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정부 내 16개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가 맡고 있다. 민관협동형 모델에 따라 기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관련 민간단체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탈북주민대책협의회」의 형태로 확대 개편하여 총괄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이다. 또한 필요한 기준들을 마련하기 위해 「탈북주민심사위원회」를 「탈북주민대책협의회」 내

99) 김동배, 앞의 논문, II-19-21쪽. 탈북주민 정책 모델과 관련하여 정부주도형을 최선으로 밝혔으며, 차선으로 반관반민의 형태를 주장하였다.

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주민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효율성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 내에 별도의 총괄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비용과 인력의 재배치, 그리고 한시적 기관으로서의 한계 등의 문제 때문에 별도의 기관 설립보다는 현재와 같이 통일원 중심의 협의체제 형태의 운영이 바람직할 것이다.<sup>100)</sup> 협의체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여, 기획 업무는 통일원이 담당하고 이의 집행은 각 지역별 하부조직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sup>101)</sup> 협의체에는 통일원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노동부, 교육부, 국가안전기획부, 경찰청 등 정부 관련부서와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단체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탈북주민에 대한 정책은 국민 대통합, 일관된 정책기조,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해 총괄 기구가 필요하며, 총괄기구는 전체적인 기획과 관련업무의 조정역할을 맡게 되므로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된 상태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 4.1.3.4 집행전담기구

탈북주민에 대한 정책은 그 성격상 정부 내 많은 유관부처의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많은 참여 민간단체들간의 협력체제와 민관의 협력관계 등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그 집행과정에서 집행력 부족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난민들의 미국 정착 시 정부기관, 종교기관, 비영리단체, 영리단체 등 많은 구호기관들이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간의 정보·물자교류 없이 상호경쟁적인 관계가 조성되면서 큰 혼란이 야기되어 정착지원에 많은 혼선이 제기되었다.<sup>102)</sup>

100) 1996년 12월 통일원의 직제 개편에 따라 탈북주민 관련 업무는 인도지원국이 담당하고 있다. 인도지원국내에는 이산가족문제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도 1·2과와 탈북주민정책 및 사후관리·보호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지원 1·2과가 있다. 또한 탈북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지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두고 있다.

101) 총괄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종훈, "탈북 북한주민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통일정책 대토론회 발표논문, 1996. 11. 1. 11-12쪽. 이는 통일원의 하부조직과 유관조직 미비에서 오는 집행기능 부족을 지적한 것이다. 정책총괄기관과 집행기관을 구분함으로써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102) 베트남 난민들의 미국 정착에 관한 자료는 Finnan, C. R., Cooperstein R. *Southeast Asian Refugee Resettlement at the Local Level*, Menlo Park, Calif: SRI Internation, 1983. Gold, S. J., "Dealing With

그러므로 적응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민관협동 체제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단, 지원단 등의 조직형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탈북주민정책과 관련된 조직을 살펴보면 총괄기구와 집행기구를 구분하지 않은 채 통일원이 전담하고 있다. 단지 통일원의 전문인력 부족과 정보 부족 그리고 하부조직과 시설부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내 16개 유관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갖고 있다. 그러나 통일원이 탈북주민의 적응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총괄기능은 대통령 직속 하에 통일원이 맡고 그 집행기능은, 전문인력과 하부조직을 갖춘 보건복지부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집행기능과 관련하여 집행기관 내에 기획단과 지원단 등의 실무 집행조직을 두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sup>103)</sup> 이러한 형태는 신속한 집행기능과 전문인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유용성을 갖는다고 본다.

#### 4.1.3.5 민간단체의 참여범위

민관협동형 모델은 민간의 참여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참여는 효율성, 비용분담, 전문인력 지원, 시설지원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민간단체들의 통일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요구가 한층 증대되면서 탈북주민들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합리적 관계와 역할분담이 모색되고 있다.<sup>104)</sup>

탈북주민에 대한 자원과 관심을 보이는 민간단체로는 크게 통일관련 단체, 인권단체, 대학과 시민단체, 지역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을 들 수 있다. 남북 통일에 관심을 갖고

frustration: A study of interactions between resettlement staff and refugees," in *People in Upheaval* (ed.), by S. Morgan, E. Colson, New York: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1987, pp. 108-128. *State Plan for Refugee Assistance and Services, Federal Fiscal Year 1983*, Sacramento, Calif. : State Dept of Social Services, Office of Refugee Services States Int. Migrat. Rev. 20, 1982. pp. 405-427. 참조.

103) 이종훈은 기획단 형태의 탈북북한주민지원단의 발족을 주장하고 있으며, 김동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탈북주민 100명 기준으로, 직원 15명, 위원 14-17명으로 구성되는 사회복지지원단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종훈, 앞의 논문, 14쪽; 김동배, 앞의 논문, II-23쪽.

104) 조민, "통일과정과 민간단체의 역할," 한국정치학회 통일문제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1996. 9. 21), 2쪽.

있는 많은 연구기관들과 대학 부설연구소, 언론사부설 연구소 등 통일문제 관련 민간단체들은 전국적으로 250여개가 있으며, 통일원에 등록된 단체도 40여개에 이른다.<sup>105)</sup> 이러한 단체들은 제도권 단체들과 비제도권 단체들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특히 비제도권 단체들의 경우 이념적 성향에 따라 선별할 필요가 있다.

대학부설연구소와 인권단체, 봉사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경우 전문인력과 경험 그리고 적극적 참여의지 등을 갖추고 있어 가장 효과적인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sup>106)</sup> 또한 지역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봉사단체, 대학의 평생교육원, 청소년 대화의 광장 등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탈북주민의 지원에는 각종 종교단체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sup>107)</sup> 현재 많은 종교단체들은 탈북주민들을 조직적·개별적인 자매결연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영농정착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종교단체로는 개신교의 북한선교회, 천주교 북한선교위원회,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남북협력위원회, 불교방송, 평화방송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언론기관의 역할을 들 수 있다. 현재 종교방송국과 극동방송 등이 탈북주민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남한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언론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탈북주민의 적응정책에 대한 주체는 정부주도형의 문제점을 보완한 민관협동형 모델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협동·분담하는 형태가 적합할 것이다. 민관협동형은 그 협동과 분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적응정책 프로그램에서는 재 단계에 따라 그 역할분담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즉 정부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 비용과 시설제공 그리고 민간단체의 역할 조정 등을 주로 맡게 되고 민

105) 통일관련 민간단체들의 현황에 대해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의 민간단체』, (서울: 정실련 통일협회·동아일보사, 1994) 참조.

106) 대표적인 민간단체로는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하여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체제적응연구센터, 북한주민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시민연합, 북한탈출동포돕기운동본부, 자유의 새싹들지원 범국민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을 들 수 있다.

107) 종교단체는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종교단체간 선교경쟁이나 지원 대가로 종교불 강요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박종철 외, 앞의 논문, 113쪽.

간은 비용의 분담과 함께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집행을 맡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단계별 실행주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2 적응단계별 실행주체

### 4.2.1 준비시기

탈북주민 적응 프로그램의 각 단계별 실행주체는 그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민관협동형 모델 더욱 정확하게는 정부주도 민간보조형 모델에 따라 구성하였다.

탈북주민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준비시기의 철저한 준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준비시기는 탈북주민의 입국 전 단계로서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앞서 제기했듯이 보호기준, 보호시설, 전문인력, 공개기준, 지원수준, 정착지 배정기준, 비용조달, 안내책자 및 참고교재 개발, 남한주민 포용교육 등을 마련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사항들의 구체적 실행주체는 다음과 같다.

#### ① 「탈북주민대책협의회」

「탈북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탈북주민과 관련된 총괄적인 사항들을 처리한다. 협의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며, 그 운영은 통일원장관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협의회는 탈북주민 관련 중요사항들을 결정하는 최고 기구로서 정부유관부처의 대표와 민간단체의 대표로 구성된다. 정부유관부처는 현재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구성을 참조할 수 있으며, 민간대표로는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협의회 대표 등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협의회는 보호시설 확충, 전문인력 확보, 비용조달, 안내책자 및 참고교재 개발, 남한주민 포용교육 등에 관해 그 기준과 방법 그리고 의뢰기관 등을 선정한다. 또한 협의회 내에 「탈북주민심사위원회」를 두어 제반 기준과 운영의 원칙을 마련토록 한다.

## ② 「탈북주민심사위원회」

「탈북주민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는 준비사항들 중 보호기준, 공개기준, 지원 수준, 정착지 배정기준 등을 제정한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정부유관부처 관계자 및 학계, 법조계, 사회복지 등 전문가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제반 적용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교체 및 참고교재의 유용성 그리고 운영위원회 운영요원들의 선정기준 등도 마련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전문위원회를 두어 각 분야별 문제점과 운영상의 특이사항에 대해 심사하고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탈북주민 적용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이다. 적용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관련 사항들을 준비하는 내용을 맡는다. 각 단계별로 필요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민관협동으로 구성되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을 담당한다. 운영위원회는 각 전용시설과 지역별로 구성이 필요하며, 각 관련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전용시설의 규모와 목적 그리고 성격 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상담심리전문가, 법률전문가,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전문가, 통일교육 전문요원 등은 필수요원이며, 기존 탈북주민 중에서도 일정 인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4.2.2 심사시기

관계기관의 행정 절차에 따라 심사와 분류작업이 진행되며, 기본적인 남한사회 소개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심사시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조사요원과 상담전문가 그리고 운영위원이다.

심사시기는 탈북주민의 신원을 파악하고 탈북배경 그리고 특이사항 등을 조사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는 단계이므로 관계기관의 전문요원들이 주로 담당하지만 조사단계에서부터 민간 전문요원들의 참여가 보조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탈북주민들은 軍과 정보기관원에 의한 조사에 반감을 갖는 경우가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인

권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전문요원의 활용이 필요하다.

### ① 조사요원

탈북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처음으로 접하는 인원은 신원과 탈북배경 그리고 적응여건 등을 조사하는 조사요원일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요원에 대한 탈북주민의 인상은 초기 남한사회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조사요원은 관계기관의 전문요원들이 담당해야 하는 전문적 과정이다. 특히 위장귀순자를 식별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 남한사회에 이러한 전문요원은 관계기관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대규모의 탈북주민 유입 시 많은 전문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인원은 군 심리전 요원 중 직접 북한인과 대면을 벌이는 대면요원일 것이다.<sup>108)</sup> 군 대면요원은 매년 위관장교급을 포함하여 50여명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② 상담전문가

심사시기의 탈북주민들은 탈북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 충격과 이질적인 문화로 인해 심리적 갈등과 불안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상담심리 및 정신의학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은 관련기관과 대학, 그리고 전문연구소 등에서 충원될 수 있을 것이다.<sup>109)</sup>

### ③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보호여부, 지원수준, 공개여

108) 군 심리전 요원 중 대면요원은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북한주민들과의 면접 및 심리과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대부분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역 후 단기간의 보수교육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109) 「청소년 대화의 광장」이 발간한 「전국 상담기관현황조사 편람」에 따르면 1996년 기준 상담전문기관은 437개로 나타나 있다. 또한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으나 소년원, 지방노동사무소의 상담 관련 기구가 494개, 부녀복지관, 경찰청 산하 민원실 등 잠재적 상담기관이 1967개, 그리고 각 대학과 중고등학교 부설 상담실까지 합치면 전체 상담실은 모두 6,294개에 이른다. 수적인 증가와 함께 전문분야도 세분화되고 있으나, 대부분 상담소의 경우 일정 기간 상담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전문가의 양성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부, 거주지 선정, 숙소배정 등을 결정하고 프로그램의 구체적 일정과 계획, 그리고 담당 요원을 선정한다. 프로그램 진행 시 구체적 내용의 우선순위와 세부사항은 전용시설의 규모와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유관부처 전문인력과 심리전문가, 법률전문가, 사회복지사, 의료요원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되며, 기존 탈북주민도 일부 포함하여야 한다. 그 구성인원과 운영은 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한다.

### 4.2.3 심리적 갈등 해소기

심리적 갈등 해소기는 전용시설에서 생활하며, 남한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적응교육을 받는 단계로서 각 분야의 전문요원이 대거 참여한다. 특히 민간단체 전문인력의 지원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전체적인 운영원칙과 일정 그리고 전문요원의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진행은 대한적십자사, 종교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전문가, 직업 및 진학상담전문가, 법률전문가, 북한문제전문가 등 민간 전문인력과 관련 직종 공무원들이 역할을 분담하며, 월남 이산가족, 기존 탈북주민 등이 부분적으로 담당한다. 이 시기 특히 주요한 분야는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자원봉사자 그리고 진로 및 진학상담 등을 들 수 있다.

#### ① 사회복지사

탈북주민의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사회복지 전문인력은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의 사회복지사 양성과정과 대학(전문대학과 대학원 포함)의 사회복지 관련학과에서 매년 3,000여명이 배출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은 연간 3,000여명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5년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1급 9,490명, 2급 3,850명, 3급 5,246명으로 전체 18,586명이며, 남여의 비율은 1 : 2로 여성이 많다. 자격증 소지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사회복지 수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는 1,700여명에 이른다.<sup>110)</sup> 현



제의 전문인력 상황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통한 탈북주민의 적응 프로그램 수행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복지행정체계의 개선을 위해 1987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왔다. 이들은 현재 서울 336명, 부산 209명, 대구 152명, 인천 69명, 광주 103명, 대전 97명 등 대도시에 966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경기 277명, 강원 165명, 충북 121명, 충남 221명, 전북 302명, 전남 315명, 경북 300명, 경남 288명, 제주 45명 등 9개도에 2,034명이 배치되어 현재 총 3,000명이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sup>111)</sup>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주요 업무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생업자금융자, 직업훈련 알선 등 각종 자립자활시책 추진과 자립·자활 상담 및 취업알선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업무는 탈북주민 적응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유사성을 갖고 있어 전국 시도에 배치되어 있는 3,000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재교육 후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효율적이라 본다.

## ②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통하여 포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가정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1982년 이후 설치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지역사회의 실정과 주민의 요구 파악 및 평가, ㉡주민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통합의 매개 역할, ㉣지역사회 잠재자원의 발굴 및 활용, ㉤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의 매체 등이다.<sup>112)</sup>

각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전국적으로 3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도별 지역 사회복지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 89, 부산 41, 대구 19, 인천 11, 광주 16, 대전 15,

110) 『보건복지백서』, 260-62쪽.

111) 위의 책, 198쪽.

112) 종합사회복지관의 구체적인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가정복지: 취업상담, 생활보호제공, 직업훈련, 부업알선, 진료실 운영, ② 아동복지: 유아원, 기능교육, 독서실, 야간학교운영, 비행예방, ③ 노인복지: 노인학교 및 여가선용, 노인부업실 운영, ④ 장애인복지: 재활 서비스 알선, 조사 상담, ⑤ 지역복지: 주민교육, 자원봉사자의 양성 및 활용, 시설제공사업 등.

경기 29, 강원 10, 충북 9, 충남 10, 전북 17, 전남 11, 경북 16, 경남 16, 제주 3 . 1996년 이후 6개소의 사회복지관이 건설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생명의 전화」, 「사랑의전화」 등 5개소의 사회복지상담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상담시설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다발성과 복잡성에 따라 파생되는 인생, 종교, 자살, 청소년 비행문제 등을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능은 남한사회에 첫 진출하는 탈북주민에게 유익한 것으로써 이들에 적합한 내용과 상담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지역종합사회복지관이 이러한 기능까지 수행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 ③ 자원봉사자

탈북주민 적응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확보·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회복지분야 민간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활용·관리하기 위해 1994년 11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내에 '사회복지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1992년 이후 전국 15개 시도에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복지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을 활용하여 탈북주민과 자원봉사자가 연계된다면 탈북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④ 의료기관

탈북주민에 대한 진료는 자생적인 생활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국가의 부담으로 행해져야 한다. 즉 의료보호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더구나 탈북주민들의 지방분산이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체계적이며, 예방의학적인 진료체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보건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1996년 6월말 현재 전국의 보건소·지소·진료소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소 244개소, 보건지소 1,327개소, 보건진료소 2,039개소이며 이러한 시설에 배치된 의사 수는 총합의 10명을 포함하여 3,074명이다.<sup>113)</sup> 또한 공중보건의의 전용시설 근무도 필요하다.

113) 「보건복지백서」, 438쪽.

### ⑤ 진로 및 진학상담

탈북주민의 적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진학도 마찬가지이다.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과 진학을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관련 전문요원들의 지원이 요구된다. 각 지역 교육청을 통한 진학 지도 교사와 노동부 산하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전문요원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sup>114)</sup>

### 4.2.4 사회 적응기

사회 적응기는 일부의 탈북주민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첫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취업과 진학 그리고 주거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다. 전용시설 내에 있는 탈북주민들에 대해서는 시설 내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세부일정을 조정하며 진행한다. 그러나 각 지역으로 분산되어 생활하고 있는 탈북주민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 운영위원회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그러므로 각 지역 사회 관련단체들과의 연계체계가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각 지역의 상담요원, 법률전문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이산가족재회 지원단체, 직업훈련원, 각종 자격 관련단체, 각 지역 교육청, 종교기관 그리고 각 지방의 지역 사회단체들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직업교육과 남한사회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이므로 국립 및 사설 직업훈련기관과 대학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들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구직과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단계이므로 기업과 정부의 밀접한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시기 각 분야별 특성화 프로그램의 구성과 집행은 관련 민단단체들이 맡으며, 정부는 비용과 전체적인 프로그램간의 조화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114) 현재 상담과 관련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 자격증은 없다. 단지 심리학회에서 자체 발행하는 임상심리사 자격증과 상담심리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교사들은 교육부에서 일정 기간 자격연수 후 진로상담교사 자격증을 받게 된다. 진로상담교사의 대부분은 교육 경력 15-20년 정도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이들의 지원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4.2.5 사회 통합기

사회 통합기는 탈북주민들이 자신들의 직장과 거주지로 분산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지역주민들과의 일체감 형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 시민단체 그리고 직장 내의 친목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관련 국가기관들은 분야별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여 사후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사회 통합기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성과 조절은 각 지역의 운영위원회가 맡으며, 지역 사회의 각종 민간단체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각 지역 운영위원회는 민간단체들간의 지원과 활동수준을 조정하는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탈북주민들을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회 통합기는 서로의 활발한 교류와 접촉을 통해 이질감을 해소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상호이해의 관계를 정립하는 시기이다. 이를 위해 탈북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언론사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들, 즉 연극단, 산악회, 조기축구회, 봉사활동, 종교활동, 생활체육, 시민강좌,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이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기관, 언론, 시민강좌 등을 통해 탈북주민들에 대한 포용적 자세를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들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5. 결 론

탈북주민의 발생은 남한사회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과 인도주의적 입장을 고려하여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지만, 재정적 부담과 경제적 파급효과, 남한사회 부적응으로 나타나는 사회 혼란, 남한주민과의 갈등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발생은 우리 사회에 대한 하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따라서 탈북주민은 북한체제의 산물인 만큼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통해 이들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탈북주민들이 갖는 상징

성과 그 효과로 인해 이들의 발생을 장려하는 주장도 있으나 그 규모가 늘어날 경우 그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포용하되 유인은 않는다'는 표현으로 남한의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또한 제3국을 통한 탈북일 경우 이들의 현지 정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인권과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당사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현지 정착을 추진해 볼 수 있다. 현재 탈북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과 해외투자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당사국의 협조와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관계와 주변국의 정세를 살펴보면 북한체제 변혁을 통한 탈북주민 발생의 억제와 현지 정착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에 따라 정부는 탈북주민에 대한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으로서 통일정책의 연장선에서의 추진, 동포애와 인도주의 시각의 접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양성 등을 결정하였다. 또한 구체적 대책으로서 정부와 민간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민간단체의 탈북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이러한 민간의 참여는 그 범위와 역할의 정도에 따라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탈북주민의 효과적인 남한사회 적응의 문제는 정부와 남한주민 그리고 탈북주민 자신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일관된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재정 확보를 담당하여야 하며, 남한주민은 탈북주민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그들의 적응을 지원하려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려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탈북주민 자신들은 수혜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적응노력을 통해 사회에서 일체감을 형성하려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조화를 이룰 때 탈북주민들은 남한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통일시대를 맞는 시금석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탈북주민의 적응 프로그램은 탈북주민의 심리적 적응단계와 사회적응 단계 등을 고려하여 4단계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또한 탈북주민 프로그램의 실행유형은 정부 주도형, 민간주도형 그리고 민관협동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으나 현재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민관협동형-정부주도 민간보조형의 적용이 현실적인 모델로 보았다. 즉 탈북주민의 적응은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체제하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독일과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이주민 정책도 결국 그 사

회의 구성원들이 이루어 낸 산물이었다.

탈북주민 적응 프로그램의 연구는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빛 받침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와 같이 탈북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나누어 작성하여 봄으로써 관련기관의 실질적인 시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탈북주민들의 적응을 제고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의 적응 프로그램과 상호 비교를 통해 더욱 발전적인 모델을 채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구나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북한주민에 대한 표본적인 연구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 또는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한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김동배,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발표논문, 1996. 5. 21.
- 김상균, “접검과 지향: 우리의 수용태세와 장기방안,” 『북한탈출동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94.
- 김석우,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기본방향,”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산하 체제적응연구센터 주최 (특강자료), 1997. 3. 22.
- 김영수·정영국,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서울: 통일원 통일연수원, 1996.
- 김 용, 『머리를 빠는 남자』, 서울: 자작나무, 1993.
- 내외통신사, “탈북·망명자 속출에 당혹과 분노,” 『내외통신』 1073호, 1997. 9. 4.
- 동용승, “탈북자 증가현상에 대한 분석,” 『삼성경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2.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97-05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7.
- ,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통일정세분석 94-11,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박기갑, “북한탈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대한적십자사·대한국제법학회 공동 주최 제15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발표논문, 1996. 11. 22.
- 박종철 외,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변시민, 『사회학개론』, 서울: 박영사, 1988.
- 보건복지부, 「1996년 보건복지백서」
- 선한승, 『북한근로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5.
- 송의호, “귀순자들의 내면세계 그리고 남한사회 수업,” 『월간중앙』, 1995. 1.
-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논

문, 1995.

윤덕룡·강태규,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 탈북자들의 경제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발표 논문, 1997. 5.

윤양중, “탈북 귀순자 수용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5.

윤여상, “남한의 귀순동포에 대한 정책 연구,” 『영남정치학회보』 제5호, 대구: 중문출판사, 1995.

——,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이남순·송정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방안,”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이장호, “북한출신 주민(탈북자 포함) 심리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성폭논총』 제28집 4권, 서울: 성폭학술문화재단, 1997.

——, “남한이주자(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 접근,” 『탈북자 지원을 위한 대책과 과제』 크리스찬 아카데미 남북관계 대화 모임 발표논문, 1996. 9. 20.

이정진, 『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1994.

이정우·김형수,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이종석, 『북한의 경제난 실태와 전망』 정책과제보고서 96-01, 성남: 세종연구소, 1996.

이종훈, “탈북 북한주민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통일정책 대토론회 발표논문, 1996. 11. 1.

이해영, 『정책화신론』, 서울: 학현사, 1997.

전우택·김명세·박중규,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 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발표논문, 1997. 5.

전우택·민성길,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탈북자의 삶』, 서울: 오름출판사, 1996.

제성호, “북한귀순자 보호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1호 보호, 1996.

——, “북한탈출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북한연구』 가을호, 서울: 대륙연구소, 1994.

조 민, “통일과정과 민간단체의 역할,” 한국정치학회 통일문제 특별학술회의발표논문, 1996. 9. 21.

최평길, “선택과 대응: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남북한 관계,” 『북한 탈출동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94.

통일원,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 서울: 통일원, 1994.

허만형, “남북통일에 대비한 북한난민의 적정보호수준에 관한 연구,” 『국회보』, 1994. 9.

홍승목 역, 『사회심리학』, 서울: 박영사, 1984.

## 2. 외국문헌

Abramson Paul and Ronald Inglehart, “Generational Replacement and Value Change in Six Western European Societ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 January, 1986.

Barnes Samuel and Max Kasse,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Beverly Hills: Sage, 1979.

Chung Jin Min and John Nagle, “Generational Dynamics and the Politics of German and Korean Unification,” *Western Political Quarterly* 45 December, 1992.

Finnan C. R., Cooperstein R. *Southeast Asian Refugee Resettlement at the Local Level*, Menlo Park, Calif: SRI Internation, 1983.

Glenn Norval and Ted Hefner, “Further Evidence on Aging and Party Identific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36 Spring, 1972.

Gold S. J., “Dealing With frustration: A study of interactions between resettlement staff and refugees,” in *People in Upheaval* (ed.), by S. Morgan, E. Colson, New York: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1987.

House J. S.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 A.: Addison-Wesley, 1981.

Inglehart Ronald, *The Silent Revolut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7.

———,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0.

Lazarus P. S., *Patterns of Adjustment and Human Effectiveness*, N. Y.: Macgrow Hill Book, 1967.

Mann Hyung Hur, *Economic Self-Sufficiency: A Study of Southeast Asian Refugees in Colorado*, University of Colorado, Ph. D. Dissertation, 1990.

*State Plan for Refugee Assistance and Services, Federal Fiscal Year 1983*, Sacramento, Calif, : State Dept of Social Services, Office of Refugee Services States Int. Migrat. Rev. 20, 1982.

Strand Paul J. and Woodow Johnson, Jr., *Indochinese Refugees in America: Problems of Adaption and Assimilation*, Durham, North Carolina: Duke University Press, 1985.

### 3. 기타

『생명과 인권』 분호 No. 3, 서울: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1997.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의 민간단체』, 서울: 경실련 통일협회·동아일보사, 1994.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아일보, 매일신문, 서울신문, 자유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 〈부록 I〉

## 권 별 수 록 논 문 일 략 표

권별	논 문 제 목	연 구 자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제고 방안 - 대학생들의 의식조사 연구결과를 중심으로</li> <li>○한반도 통일시 위기관리 방안 연구 - 독일의 난민, 탈주민 및 재이주민대책 사례를 중심으로</li> <li>○통일 후 북한기업의 사유화 방안 - 동유럽 국가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사유화 정책구상</li> <li>○남북한 통합시 북한 국공채의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 국제법상 국가채무의 승계문제를 중심으로</li> <li>○통일원 「전자 상황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li> <li>○민간통일운동의 주요 논의 동향과 통일 정책 수용여부에 관한 연구</li> </ul>	<p>金永夏(경북대 강사)</p> <p>金世淵(인재대 전임강사)</p> <p>金學民(순천향대 조교수)</p> <p>申性秀(한국사회통일연구원 연구위원)</p> <p>宋裕旻(부경대 강사)</p> <p>朴燦奭(안양전문대 강사)</p>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li> <li>○중국 경제개혁의 북한수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li> <li>○중국의 對한반도 기본전략 - 북한의 위기시 예상되는 중국의 반응을 중심으로</li> <li>○독일통일 후 과거청산에 관한 논쟁 연구</li> <li>○북한 정보통신 시장의 이행경제적 전망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li> <li>○한국교회의 통일논의에 관한 연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li> </ul>	<p>鄭俊杓(영남대 조교수)</p> <p>鄭煥禹(외교안보연구원 연구원)</p> <p>金永鎭(숭실대 사회과학 연구원 연구원)</p> <p>高相斗(연세대 사회과학 연구소 연구원)</p> <p>李 雄(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원)</p> <p>池忠楠(서강전문대 강사)</p>

권별	논 문 제 목	연 구 자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주택실태와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li> <li>○ 김정일체제하 북한군 및 군엘리트 연구</li> <li>○ 해방직후 북한의 교육·문화실태 일연구 - 소련의 대북한 문화정책을 중심으로</li> <li>○ 북한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li> <li>○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전환과 구조적 제약</li> <li>○ 북한사회의 풍자적·은어적 담론분석을 통해 본 체제안정도 문제</li> </ul>	<p>尹惠楨(평택대 전임강사)</p> <p>金秉租(국방대학원 조교수)</p> <p>姜仁求(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p> <p>鄭基仙(성균관대 강사)</p> <p>盧炳喆(서울대 강사)</p> <p>吳有錫(전남대 강사)</p>
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남북한관계 변화 전망</li> <li>○ 남북한 친족구조의 비교 - 남북한 가족법의 문화인류학적 접근</li> <li>○ 남북한 가족의 가족중심의식과 사회통합 가능성의 모색</li> <li>○ 일본기업의 북한투자, 대만·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으로부터 본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진출 전략</li> <li>○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연계 가능성</li> <li>○ 남북한 당국간 회담유형과 남북한 관계변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정치·경제, 사회·체육분야의 회담유형을 중심으로</li> </ul>	<p>崔龍燮(광주보건전문대 조교수)</p> <p>申仁澈(영남대 강사)</p> <p>崔妍實(상명대 전임강사)</p> <p>徐錫興(부경대 부교수)</p> <p>李鉉勳(강원대 부교수)</p> <p>盧光石(동국대 강사)</p>
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모형 개발</li> <li>○ 가치교육 기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교수 프로그램 개발</li> <li>○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통일정책의 적극적 홍보</li> <li>○ 통일 후 북한주민 재교육을 위한 인터넷상의 가상대학 구축 방안</li> <li>○ 남북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li> <li>○ 탈북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li> </ul>	<p>秋秉完(서울대 강사)</p> <p>金信君(경상대 강사)</p> <p>李眞根(경남전문대 조교수)</p> <p>權奇泰(강릉대 부교수)</p> <p>金容逸(한국해양대 전임강사)</p> <p>金鎮潤(한국정치발전 연구 원 책임연구원)</p>

## 〈부록2〉

### 최근 연도별 연구과제 목록('95~'97년)

'95년

####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실태 분야〉

- 북한사회주의의 경제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사회주의 경제의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
- 사회주의체제 전환에 있어서 개인, 사회구조, 국가의 논리
- 북한의 권력구조 및 권력엘리트 변화에 대한 연구
- 북한의 자립적 발전전략의 정치경제
- 북한의 자립적 발전노선에 관한 연구
- 북한사회주의 중앙 - 지방관계의 변화유형 예측
- 북한 지방행정 체계의 구조와 활동방식
- 북한의 도시정책
- 북·일수교과정 및 수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북한의 대외무역변화와 전망에 관한 연구
- 북한의 노동정책

#### 〈통일정책 및 협상전략 분야〉

- 북한체제의 변화시나리오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통일을 대비한 한민족 여성공동체 조성방안을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 대북한 핵억제정책과 합리적 선택
-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 〈남북교류·협상 분야〉

- 남북한 교역에서 준국제사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자유경제 부역지대 진출을 통한 남북경협 발전 전략
- 남북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른 이산가족문제 해결대책
- 나진-선봉지구 경제협력에 따른 남북경제 공동위 가동 전략소고
- 남북한 여성교류 활성화 방안
- 남북한의 환경 및 에너지에 관한 교류협력 방안연구
- 남북교류협력 법·제도 보완 및 발전 방안연구

#### <통일이후 대비 및 이념문제 분야>

- 통일후 예상되는 북한주민들의 통일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
- 국민들의 통일비용 지불의사 추정(II)
- 통일대비 교육을 위한 정보통신매체의 이용실태와 활용방안 모색
- 통일이후 간도지역 회복에 관한 법적 연구
- 통일을 전후한 시기의 한국영역 및 국경에 관한 연구
- 북한 도시계획의 특성분석과 통일후의 계획 패러다임의 정립에 관한 연구
- 통일비용과 통일기금에 대한 의식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접근
- 통일한국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자유민주주의 원리

#### <통일환경 및 통일교육 분야>

- 북·일국교 교섭과 일본의 대북정책
- 북한-일본 국교정상화 교섭
-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대북심리전 향상방안
- 통일교육의 교수, 학습 준거설정에 관한 연구
-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개입의 합법성 및 그 방법

'96년

#### <통일정책 분야>

- 탈북귀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제고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김정일정권 붕괴시나리오와 한국정책 대응모형
- 통일대비 교포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통일헌법의 성립절차에 관한 연구

- 러시아한인들의 민족정체성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인식 연구
- 남북한 군비경쟁의 계량모형 분석

####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분야>

- 북한출신 남한이주자의 국내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모델 개발
-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 교육방안의 모색
- 통일시대를 위한 정치교육방안 연구
- 통일후의 바람직한 기업구조 연구
- 북한의 정치교육 효과성에 관한 연구
- 통일이후 남북한 법체계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통일에 대비한 북한기업소들의 발전적 해체 및 사유화 방안에 대한 연구

#### <남북교류·협력분야>

- 남북한 신뢰구축
- 통일에 대비한 한국항공정책의 과제와 방향
- 북한의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환거래 및 금융협력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과 대북투자의 법적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북한실태 분야>

- 중국농촌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북한의 진로
-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
- 북한정치체제 변혁의 역동성
- 북한 “인민”생활세계 연구
- 북한의 화법(話法)연구
- 3차원적 문화구조를 통해본 북한주민의 가치 정향 연구

#### <통일환경 분야>

- 한·중관계발전이 남북관계 및 한반도 안정에 미치는 영향
- 미북협상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 북한의 대미협상전략의 효율성과 한계성

- 동북아 평화체제구성과 전망에 있어서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의미와 역할
- 북한의 대미접근과 한국의 대응방안
- 아시아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97년

#### <통일정책·통일환경 분야>

-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제고 방안
- 한반도 통일시 위기관리 방안 연구
- 통일 후 북한기업의 사유화 방안
- 남북한 통합시 북한 국공채의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 통일원 「전자 상황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
- 민간통일운동의 주요 논의 동향과 통일정책 수용여부에 관한 연구
- 4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방안
- 중국 경제개혁의 북한수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중국의 對한반도 기본전략
- 독일통일 후 과거청산에 관한 논쟁 연구
- 북한 정보통신 시장의 이행경제적 전망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 한국교회의 통일논의에 관한 연구

#### <북한실태 분야>

- 북한의 주택실태와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 김정일체제하 북한군 및 군앨리트 연구
- 해방직후 북한의 교육·문화 실태 일연구
- 북한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 북한 사회주의체계의 전환과 구조적 제약
- 북한사회의 풍자적·은이적 담론분석을 통해본 체제 안정도 평가문제



### <교류협력·인도지원·남북협상분야>

-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남북한관계 변화 전망
- 남북한 친족구조의 비교
- 남북한 가족의 가족중심의식과 사회통합 가능성의 모색
- 일본기업의 북한투자, 대만·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으로부터 본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진출 전략
- 「환동해경제권」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연계가능성
- 남북한 당국간 회담유형과 남북한 관계변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통일교육·홍보분야>

-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 가치교육 기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교수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통일정책의 적극적 홍보
- 통일 후 북한주민 재교육을 위한 인터넷 상의 가상 대학 구축 방안
- 남북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탈북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統一教育·弘報 (V)

---

인 쇄 : 1997. 12. 22

발 행 : 1997. 12. 24

발행처 : 정보분석실 조사관리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154-1  
광화문우체국 6층(☎ 730-7013~4)

인쇄처 : 덕성문화사 (☎ 274-5916)

---

독자문의전화  
120-22222  
이동통신  
901-7000